

# 日本の國際的 役割増大と 東北亞秩序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Ⅱ) —

1992. 10.

**吉埏宇**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金永椿** (國際研究室 研究委員)

**余仁坤**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全東震**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崔春欽** (國際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國際研究室

## 서 문

1990년대 동북아시아는 脫冷戰過程에 있으나 냉전이후의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역내 국가간 역학관계가 재정립되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러시아연방의 쇠퇴와 미국의 전략구조 재조정은 역내 세력균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부 국가들은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전략조정과정에서 추진되는 경제력에 상응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모색은 유엔평화유지활동 및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 노력, 외국원조계획 확대, 지역분쟁조정 에 적극 참여 등을 통하여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력 증대가 동북아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하에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및 미·중·러의 대응을 검토하고, 역내 주요강국간의 力學關係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재편에 미칠 영향을 분석·전망하였다. 또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하여 일본의 대남·북한정책을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민족통일연구원이 1991년 출간한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에 이은 1990년대 동북아질

서 예측 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본 연구가 1990년대 동북아질서 및 통일환경 변화의 예측에 도움이 되고 통일정책 입안에 기여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1992. 10.

민족통일연구원

국제연구실

요

약

## I. 서 론

세계적인 脫冷戰化 추세에 따라 1990년대 동북아에도 화해와 협력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역내 국가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제정세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간의 대폭적인 핵감축, 러시아연방의 서방경제체제로의 편입 및 미·러 동반자관계 구축 등으로 안보·경제 양면에서 냉전구조가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쇠퇴 및 미국의 전략구조 재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세력균형의 변화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부 역내국가들은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대일 방위분담 및 방위력 증강요구에 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바탕으로 장래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분쟁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통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외국원조계획(ODA)을 확대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안의 통과를 통하여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을 통하여 일본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는 일본의 대외정책 구상의 전개과정에서 노정되는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민족통일연구원이 1991년도에 출간한 「소련의 동북아 정책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에 이은 1990년대 동북아질서 예측 과제의 연장으로 일본의 경제력에 근거한 국제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및 이에 대한 미·중·러의 대응 분석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에서는 첫째, 일본의 대외정책 구상을 정책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특히 정치·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전개되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을 대내외적 촉진요인과 억제요인 분석을 통하여 구명한다. 둘째, 역내 이해관련국인 미국·중국·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 구상과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외정책 가운데 각국이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요인과 견제하려고 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중·러의 대응책을 정리한다. 셋째, 일본을 포함한 역내 주요국가들의 대외정책 분석에 근거하여 1990년대 동북아질서 변화를 예측한다. 넷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남·북한정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 제1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정책

### II. 일본의 대외정책: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 1. 冷戰以後시대 대외정책環境과 정책構想

최근 일본의 대외정책 基調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구체적 목표는 첫째,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역할 확대, 둘째, 러시아연방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셋째, 중국에 대한 협조와 견제, 넷째, 한반도의 안정, 다섯째,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여섯째, 아·태지역의 경제주도 등이다.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의 일본의 안보역할 확대는 미·일관계가 세계적 차원의 동반자 관계로 조정되고 있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의 경제력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 일본은 소련의 붕괴와 미국 영향력의 상대적 약화로 초래될 수 있는 동북아지역의 세력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자신의 안보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둘째,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연방 극동군의 존재는 일본에게 엄연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러시아정책은 러시아연방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일본의 경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된다.

셋째, 또한 일본은 지역안정을 위하여 중국과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고 있으나 강력한 중국을 원하지 않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對中 경제지원도 중국의 개방과 개혁의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지원의 수준을 넘지는 않을 것이다.

넷째,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현상유지를 통한 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본은 남·북한통일 협상과정의 진척정도에 따라 「2+4」의 구도 등 다자간 협의를 통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다섯째,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이란 일본의 외국원조계획을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것이다. 일본의 外國援助計劃(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자국의 수출확대와 자원확보를 위하여 수행되어 왔는 바, 최근 들어 일본의 개발도상국 개발원조는 경제·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여섯째, 아·태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목표는 이미 이룩해 놓은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에 대비하면서 이 지역에서 자원과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1990년대 들어 일본은 「환동해(일본해)경제권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목표는 다시 군사·안보와 경제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군사·안보정책의 기본적 원칙은 미·일동

맹체제 유지,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非核3원칙, 정책운용상의 융통성이다. 미·일동맹체제 유지의 긍정적 측면은 동 체제가 동북아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갈등 및 위협가능성에 대한 억지와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 불식 등 폭넓은 전략적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이다. 향후 미·일동맹체제는 미국 군사비의 전반적 삭감, 해외주둔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일본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를 점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일방적 관계에서 쌍무적 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적 역할의 지역화에 따른 지역방위론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개년간의 방위력 증강계획인 56중기 업무계획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해상안보에 대한 일본 책임구역의 확대가 내용의 골자를 이루고 있다. 일본의 1,000해리 방위는 소련의 극동해군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중국의 서태평양진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최근 일본 방위군은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2차 新 中期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22조7천5백억엔을 들여 호위함 현대화, 핵무기 탑재가능 최신예 미사일 도입, F-15 국산화 등 전진방어능력을 제고시키고 있다. 핵정책과 관련, 일본은 핵을 「갖지 않으며, 만들지도 않고,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토마호크 미사일이 장착된 미군함의 일본기항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의 핵정책은 상당한 융통성을 갖고 전개되고 있다.

일본 대외경제정책의 기초는 경제발전 우선 견지, 미·일 경제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에 의한 비교우위 확보 등이다. 미국의 안보우산하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요시다(吉田) 독트린」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전략의 근간으로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미·일 경제 마찰해소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 업계, 기업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일 양국정부는 무역마찰이 국내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간의 이견조정애 노력할 것이다.

## 2. 일본 대외정책 전개추이: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질서에 대한 일본의 정책구상은 국제적 변화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첫째, 소련·동구체제의 붕괴, 둘째, 걸프전 이후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 강화, 셋째, 유럽공동체(EC)를 비롯한 지역통합 추세, 넷째, 이에 따른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재편 등이다. 구소련 및 동구의 자본주의체제 편입문제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통합에 따른 갈등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질서가 태동하고 있다는 인식이다.

일본은 최근 동북아질서의 다원화현상과 미국의 아시아지역 병력감축계획에 의한 세력공백이 역내의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한 방위력증강과 방

위지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현행헌법의 고수 및 미·일안보체제유지가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본방침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신보수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미·일동맹의 성격 재조정 및 개헌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 역할증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론은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는 경제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과거 대동아공영권 구상하에서는 군부가 깊숙이 개입하여 영토확장을 기도하였던 반면, 최근의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등에서 나타나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노력은 戰前의 황국사관이나 군국주의 부활과는 달리 신보수주의자들이 주도하는 군사대국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외무성은 1997년경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엔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유엔의 제도적 장치안에서 자국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으며 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국제통화기금, GATT, 서방선진7개국회의 등 무역·금융부문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경제대국의 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일본은 자유무역 수호를 위한 미·일·독의 3국체제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활동의 세계화, 국제금융, 자본이동의 활성화, 서비스무역의 확대, 통신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의한 3국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켜 세계경제를 안정·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1990년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를 촉진시키는 요인과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촉진요인중 대내적 요인은 일본의 경제력 강화, 신보수주의의 대두, 유엔평화유지활동관련 각 정당·단체의 입장, 일본의 군비증강 추세지속, 첨단기술의 발전 등을 통하여 살펴 볼 수 있다.

나카소네 등 新보수주의자들은 자민당의 金權政治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방향을 모색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구체적 대안으로 대내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책임있는 보수양당제의 도입,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역할의 증대를 표방하고 있다. 나카소네는 특히 일본의 국민통합과 권위안정 유지를 위하여 천황제의 강화를 역설하였다. 일본의 보수주의자들은 정당, 관료, 재계는 물론 매스미디어까지 동원 신보수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조성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관련 집권자민당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정책의 일환인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의 1992년 6월 15일 중의원 통과를 강행, 정식법안으로 성립시켰다. 자민당은 1992년 7월 26일 실시된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68석을 확보함으로써 대국화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국제적 역할증대 필요성과 미국 및 러시아연방의 국내문제 치중으로 인한 역내 세력균형 변화에 대처하

기 위하여 자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2000년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6백조엔(6조달러)에 달하게 될 것이며, 그 중 1%를 방위비에 투입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는 10 대 1(1990년 기준)의 수준에서 3 대 1의 수준으로 그 격차가 좁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은 2000년도에 25만 규모의 육·해·공군력을 갖추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일안보체제의 보조적 기능에서 탈피하여 독자적 구상에 의한 군사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군사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촉진하는 대외적 요인들로는 미·일동맹 재조정, 동북아 세력균형의 변화, 걸프전 당시의 좌절감, 영토문제 미해결 등을 들 수 있다. 미·일관계 재조정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지위·이미지 격상, 일본식 경제모델 확산, 미국과의 책임분담,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의 경제갈등, 일본의 대러시아·중국 관계에서 미·일간에 빚어질 수 있는 갈등 가능성 증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의 책임분담문제를 본다면, 현재 국제 및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안보문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태지역에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서 상정해 볼 수 있다. 첫째,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여 그 기능의 부분적 역할을 일본이 맡을 경우, 둘째,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아 이곳을 해군기지화하여 해군력을 급속히 확대하려할 경우, 셋째, 대만 독립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경우, 넷째, 南沙群島를 둘러싸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간 분쟁이 확산될 경우, 다섯째,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이 야기될 경우 등이며, 이 경우 미·일안보체제에 의한 세계적 동반자관계가 강조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동북아지역에서도 최근 한·중 수교와 미·중 및 일·러 관계의 악화 등 정세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바, 일본은 자국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한 한·중의 공동전선 모색 및 중국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대하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약하는 국내적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는 바, 평화헌법 9조를 들 수 있다. 1991년 11월 「朝日新聞」이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헌법학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1%가 「애당초부터 위헌」이라고 답하였다. 일본인들이 유엔평화유지활동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戰前과 다른 전후세대의 평화주의적 사고방식에 기인하고 있다. 국제적 자유경제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채택할 경우 경제의 구조적 한계 즉, 자원 및 시장의 해외의존도 심화는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대국화를 추진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진에 있어 국내적으로 가장 큰 제약요인은 바로 경제구조적 한계라고 판단된다. 또한, 일본은 지도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문화적 보편성과 정통성을 결

여하고 있다. 일본은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성 있는 정치 철학, 이념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제약요인가운데 대외적 요인으로는 미·일동맹체제유지, 동북아의 군축분위기 대두, 주변국의 우려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은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미·일조약을 통하여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서 미국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노력의 방패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체제가 양국간 갈등요인이라기 보다는 긍정적 측면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여 현체제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다.

동북아의 군축분위기 또한 일본의 군사역할증대의 억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미국과 러시아연방이 대규모 핵감축 등 군축에 합의함으로써 전세계에 군축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지출은 1989년 3,398억달러(1990년 기준)에서 1991년 3,082억달러로 감소되었으며, 구소련 역시 1991년 국방예산을 14%이상 감소하였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하여 전망하자면, 일본은 국방비 증액, 군비 현대화, 군장비 국산화 등을 통하여 군사분야에서의 국력강화를 부단히 추구하고 있는 바, 동북아의 역내국가 및 아세안 제국의 견제와 우려로 인하여 군사력에 근거한 역내 패권추구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획득 이전까지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국내·국제적 제약요인 제거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향후 국제 및 동북아정세 변화추이, 미·일동맹관계 조정을 통한 쌍무적 관계 지향,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통하여 정치·군사대국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향후 미·일관계는 균등한 쌍무적 관계를 지향하여 일본의 지위·이미지 격상, 미국과의 책임분담을 중심으로 조정될 것인 바, 일본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 있어서 2000년까지는 미국의 우위가 유지된 상태하에서 미·일 양두체제를 근간으로 역내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1990년대 일본의 동북아정책 전망: 국제적 역할의 확대와 한계

1990년대 일본의 동북아정책 전망에 있어서 양자관계는 미·일, 러·일, 중·일, 한·일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일동맹관계는 최근의 재조정예 의한 미·일 역할분담론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유지된 가운데 경제면에서 미국이 일본의 양보와 지원을 구하는 한편, 일본은 미국의 지원하에 정치·군사적 역할의 증대를 추구하는 형태의 양두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러·일관계는 러시아연방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본의 경제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연방간의 협상이 진행중이며 북방영토반환문제는 1990년대말까지는 진전의 계기를 맞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1990년대 對中관계에 있어서 경제면에서의 제한적인 협력과 군사면에서의 견제라는 이중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과 계속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일환인 일·북한 수교회담에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그들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한국으로 경사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남북한 통일협상과정에 있어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자간 접근방식인 「4+2」의 구도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자관계는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일본방위청은 자국의 방위력 증강을 위하여 현재 다자간 안보신뢰구축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1990년대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 안보협력회의를 위한 다변적 안보·경제협력회의의 場으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한편, 일본의 미야자와 수상은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식 다자간 신뢰구축방안을 제기함으로써 동 구상과 관련 일본의 역할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가 주창한 아시아 자유통상지역(AFTA)을 지지하고 있다. 일본은 역내국가들간

의 경제협력 증대와 타지역에서의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협력기구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일본의 경제협력체 구상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자임함으로써 최근 대두되는 경제블럭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 제2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중·러연방의 대응

### Ⅲ. 미국의 대응

#### 1. 미국의 동북아정책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기초는 안전보장, 민주주의제도 정착, 자유무역주의 확립 등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안보구조의 개편,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역내국가들의 민주화추세 촉진,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경제통합을 위한 틀의 모색 등이 강조되고 있다.

냉전이후시대 地經學的 국제관계가 중시되는 상황에서 뚜렷하고 공통된 “敵”의 부재에 따라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안보전략이 논의되게 되었으며 전략상의 공백을 억제함으로써 지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화하

여 지역내 분쟁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전의 여지를 확보, 유지한다는 것이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주된 목표가 되고 있다.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일본과의 강력한 안보동맹관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장기적 안정과 역내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중추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미·일관계가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대한 참여의 초석이며 조화롭고 생산적인 미·일관계는 역내 안보와 번영에 중추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탈냉전체제의 효율적 운영의 기반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 따른 심각한 무역마찰로 인하여 전통적 상호의존관계의 득실을 再考하고 있다.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와 일본 경제력의 확대에 따라 냉전이후시대 새로운 동북아환경에서 모색되고 있는 미·일간의 역할 재조정은 안보면에서 역내방위에 대한 일본의 책임분담 확대와 주일미군 유지비용의 부담증대라는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바, 군비 현대화를 통한 일본 자위대의 방위력 증강 및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통한 일본 자위대 역할의 국제화 현상은 양국간의 안보역할 재조정 과정의 산물이라고 이해된다.

경제면에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심화과정에서 문제해결 방안으로서 도출된 1988년 종합통상법에 의한 Super 301조

협상과 거시경제적 문제해소를 통한 무역불균형해소 차원에서  
의 구조조정협약(SII) 등이 미국의 대일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미국의 세계전략 구현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대가로서 국제적 주요사  
안 논의에 일본의 참여 및 역할을 지원한다는 구상하에 규정  
된 양국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 러시아연방 및 동구제국의 시장경제 편입 지원, 환경,  
마약, 난민 등의 비전통적 불안요인에 대한 전략적 지원 요구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의 대일 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하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안보와 경제분야에 있  
어 용인과 견제의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나타나고 있다. 정치  
·안보적 측면에서 볼 때, 전통적 미·일 동맹관계는 미국의 동  
아시아 정책개진 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가속화된 일본정부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 노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확보와 유엔 평화유  
지활동에 대한 참여노력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바 미 행정부  
는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이 냉전이후시대에도 미국의 “정직한  
仲裁者” 역할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역량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가 대두되고 있으며, 미국의 세계전략 재조정의 필요에 따라 동 지역에서의 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게 될 경우 역내 안정유지를 위한 일본의 중요한 역할을 상정하는 미국내 논의는 역내 방위에 대한 일본의 실질적 책임분담의 정도에 따라 구체화 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도 미국의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일본의 간접적 재정지원은 미국의 대일관계에서 구조적 취약점이라고 인식되고 있으며, 일본의 대미투자 및 통화가치안정 협의에서 일본의 역할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경제력에 상응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을 존중함과 아울러 무역장벽 철폐와 공정한 국제무역관행에 충실한 교역국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는 양국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는 외국원조계획 등을 통한 세계경제질서 안정화에 일본의 기여를 확대함으로써 일본이 미국의 전통적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인정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하여 미국이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문도 있다. 즉, 군사, 안보분야에서 볼 때 미·일 안보동맹체제가 일본의 역할증대를 보장하여 온 반면, 일본의 안보에 긴요한 제도적 장치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본의 행동반경을 제어하는 효율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미 행정부는 군수산업과 불가피하게 연관된 미국의 첨단기술 이전과 유출을 방지 혹은 억제하는 정책을 점차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일본의 첨단기술 도입노력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행사될 미 행정부의 통제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에 실효성있는 견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4 회의」등 미국의 다자간 안보협약체 구상은 역내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일본을 일정한 제도적 장치에 귀속시킴으로써,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의 향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과 아울러 주변국들의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이해된다.

일본 경제력의 행사 향방과 일본의 군사력 증강노력 등에 대한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우려가 복합되어 미국 및 역내 국가들의 일본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바, 이와같은 현상 또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에 잠재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으로서 협상 결과에 치중한 강력한 대일조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미국내의 주장은 일본의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아울러, 역내 보호주의적 성격의 배타적 경제협력체 구상에 반대하는 미국의 입장은 일본의 적극적 역할을 상정한 지역 경제권 구상에 대하여 견제요인이 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

에서도 G-7 서방선진제국 회의 및 GATT 등을 통해 국제경제 사안 논의에 일본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일본의 독자적 구상에 의한 세계경제질서 조정 노력에 균형을 부여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일본의 역할증대에 대한 직·간접적인 견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안보와 경제분야에서의 일본의 역할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와 일본의 정책 간의乖離가 양국간 긴장의 근본적 원인인바, 대미의존 경향에서 탈피하여 자립외교노선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그 결과로서 초래될 역내국가들의 반발을 고려, 재조정될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효율적 방안의 일부가 될 것이다.

무역불균형이 양국관계의 긍정적 전개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균형 해소를 위한 미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장치를 통해 지속적으로 시도될 것이며, 미국 업계 및 의회를 중심으로 한 법적, 제도적 및 정치적 측면에서의 대일 무역제재 조치는 강도있게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미·일 양국은 상호관계가 경쟁적인 동시에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하에 협의와 절충을 통해 국제적 역할과 책임분담을 조정해 나갈 것이다.

냉전이후시대에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증시되는 세계체제의 운용과정에서 일본외교는 독립성이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미·일동맹체제에 바탕을 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역할이 역내 일본의 균형된 위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상당기간 그 실효성을 발휘할 것이다.

#### IV. 중국의 대응

##### 1. 중국의 동북아정책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정책 기조는 현대화를 통한 사회주의 체제강화를 가장 우선시 하고, 이를 위해 역내의 평화와 안정유지를 도모하여 경제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은 구소연방의 붕괴로 인해 미국주도하에 동북아질서 재편작업이 진행 중이며 미국의 전략재조정에 따른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고, 미·러연방간의 탈냉전으로 역내 국가간 경제력 경쟁과 협력이 심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미주도하의 동북아질서 재편노력이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강화라는 국가목표에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측의 판단에 근거하여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 군사·안보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은 평화공존과 선린외교를 추진하여 미국 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노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역내국가들의 대중국 패권행위를 억제하는 동시에, 지역불안에 대비하기 위

해 국방의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중국은 또한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노력이 적극화될 경우 역내안정을 위해 소지역 중심의 다자간 안보협의기구에의 참여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통해 자국의 국방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역내 핵확산 방지를 위해 1992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의한 북한의 핵사찰 수용을 설득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미·일·한의 전략적 협조관계를 견제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정착을 위하여 남북한 당사자간의 교섭 또는 북·미, 북·일간의 외교적 해결을 요구하며 북·일 수교와 북·미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바, 한·중수교는 이러한 중국의 외교노력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의 경제정책의 주요내용은 시장자본주의적 요소를 대폭 수용하는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을 과감히 추진하여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선 황해와 발해경제권 및 두만강유역개발 등의 소규모 경제권 구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중국이 주도할 수 있는 경제권을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미·일 전략재조정에 따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으

로 인하여 중국의 대일 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은 변하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의 대일 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은 일본의 대중 경제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면서도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모색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1990년대 중국의 대일 안보구상은 첫째, 전통적인 미·일 안보체제의 유지를 지지하고 미군의 일본주둔을 허용하여 역내에서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적 영향력을 억제하며, 둘째, 중국의 국방력 강화가 중·일간의 군비경쟁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억제하고, 셋째,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역내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대일 안보구상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해 선택적 견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선택적 견제는 일본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과 중·일간의 전통적인 경쟁관계라는 요인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일본의 정치적 역할증대 노력인 일본의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유엔헌장의 「舊敵國條項」삭제 요구, 역내분쟁 해결에의 참여 확대 등에 대하여 소극적인 견제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미군의 일본주둔을 전제로 한 전

통적인 미·일 동맹체제의 유지를 지지하고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노력을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국방능력 증장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공군력 강화를 중심으로 한 국방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핵무기보유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은 일본의 포괄적인 안보기구 구상과는 다르게 역내 국가들과의 협조를 통한 다자간 안보포럼 창설을 주장하여 일본의 역내분쟁 해결에의 참여를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적극적으로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정책은 중·미 전략적 협력 관계 조성의 어려움, 일본의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 등으로 인하여 성공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1990년대 중·일 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대일본 경제구상은 미국 및 서방의 경기침체, 중국의 인권문제와 정치개혁 지연으로 인한 서방의 대중국 투자 감소에 따라 지경학적으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일본을 중시하여 일본의 대중국 무역, 투자 및 원조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경제주도권을 억제함이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초부터 과감히 경제개혁을 확대하고 대외개방을 심화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의 개혁·개방을 지지하여 대

중국 투자와 경제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선진기술 이전에 일본은 주저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동북아경제권 구상인 「환동해(일본해)경제권」에 반대하고 역내국가와의 경협을 증진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중국의 용인요인으로는 일본과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중·일 협력을 통한 미「패권주의」 견제 필요성을 들 수 있다. 특히 일본과의 경협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역할증대 견제요인으로는 중·일간의 역사적 경쟁관계, 중국인의 반일감정 잔존과 중국의 역내 「반패권주의」기조 견지 필요성 등을 들 수 있다. 요약컨대, 중국은 일본이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한 일본으로부터의 경협확보를 위해 일본의 정치적 역할증대 노력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용인하되 군사적 역할증대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중국은 대미·러 선린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나 러연방의 대일 데탕트정책, 중·미간의 공통敵 부재 등의 이유로 중국이 일본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중국은 일본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국방태세와 군사기술 제고를 위해 국방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나 일본과의 직접적인 군사대결은 피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역내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견제

하는데 있어 대미·러 안보협력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은 유엔의 적극적인 참여와 다자적 접근을 통해 일본의 영향력 증가를 억제함과 동시에 역내안정을 도모할 것이다.

1990년대 중·일관계는 상호협력과 경쟁관계의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전개될 것이다. 일본의 적극적 역할증대에 따른 중·일간의 안보협력관계의 부재로 인하여 안보관계에 있어서 중·일간 마찰의 소지가 尙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양국간의 경제관계가 제약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1970~80년대 존속되어 왔던 중·일·미 안보협력관계는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 및 미·러연방의 대탕트, 러연방의 대일위협 감소 등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 중·일관계는 중·장기적으로 점차 경쟁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의 국방능력 강화와 경제력 증강에 따라 중·일 안보관계가 대립관계로 까지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제분야에서의 중·일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동시에 수반한 관계이나 상당기간 협력의 측면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경학적으로 일본을 중시하여 일본의 대중국 무역, 투자 및 원조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양국간 경제협력관계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동시에 동북아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주도권 모색을 견제할 것이다. 중국은 대일 경제의존도의 심화를 우려하여 대외 경제협력을 다변화할 것이나, 일본의 대중 투자확대와 경험

증대로 인하여 향후 중국의 대일 경제의존도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일간 안보·경제관계의 전개방향은 전통적인 중·일 경쟁 관계가 존속되고 있다는 중국지도층의 인식, 일본의 대중국 경제협력 확대 여부 및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속도와 폭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중·일간의 협력과 경쟁은 적어도 1990년대 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다.

## V. 러시아연방의 대응

### 1.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

1991년 12월 舊소련의 11개 공화국에 의한 독립국가연합의 창설과 더불어 소연방을 법적으로 계승한 러시아연방은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 확립, 대외적으로는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역안정화,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장기적으로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을 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 기조는 고르바초프 시대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구소련의 정책들과 구별된다. 이는 소연방의 붕괴와 러시아연방의 급진개혁정책이 대내적 정책결정요인으로, 또한 소연방의 붕괴로 인한 동북아지역 세력균형의 변화가

대외적 정책결정요인으로 각각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현재 이념보다는 지정학을 중시하고 “전술적 신축성”(tactical flexibility)과 “실용주의”(pragmatism)에 기초한 동북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은 군사·안보분야에서는 역내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 확대 및 지역군사데탕트 모색, 경제분야에서는 역내국가들의 경험유도와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로의 편입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자국 주변에 善隣地帶를 설치한다는 전략의 틀에 입각, 동북아지역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존 우방국들과 정상적 관계를 유지하여 안보를 확고히 하는 한편, 기타 역내국가들과의 협조관계 발전도 아울러 모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1992년 11월 열린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 한국과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동북아지역의 안정화를 위하여 지역군사데탕트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지역군사 데탕트를 위하여 역내 군축 및 군비통제와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 회복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미·일·한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적극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자국이 세계공동체로 완전히 편입될 때까지는 국내안정과 시장경제를 가진 민주사회로의 발전이라는 대내적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유엔 개발계획(UNDP) 등 아·태지역 경제공동체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

러시아연방의 대일관계 구상은 안보면에서 방위비 증액과 장비현대화를 통한 일본의 군사잠재력 강화가 1990년대의 동북아지역 군사균형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군사균형에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라는 인식하에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견제하는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 전력강화를 바탕으로 한 군사대국화 가능성은 현재 러시아 극동군사력과 관련하여 대두되고 있는 바, 러시아연방은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 「機動防衛」 전략, 대일 신뢰구축 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중국과 남북한 등 동북아지역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미·일·러·중·남북한이 참여하는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효율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견제력에 기대하면서 미·일안보조약의 지속과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면에서 러시아연방은 일본을 자국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이며 원조국으로 간주하고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침체상태에 있

는 국내경제를 회복·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극동지방의 자원개발과 일차상품 가공, 경공업, 기계공업 부문 등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환동해(일본해)경제권 구상」, 「북태평양 경제개발구상」 등 일본이 주도하는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공동체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경제면에서 일본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과 관련하여 정치·경제면에서는 미·일동맹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일본으로부터의 경험유도의 필요성 때문에 일본의 역할증대를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현재 군사보다는 경제가 더 중시되고 있는 신국제질서하에서 미·일관계가 군사·정치동맹으로부터 무역·경제 라이벌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미·러, 러·일관계의 개선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미·일 동맹체제가 종전과 같은 정도로 러시아에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택하지 않는 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의 자위대 파견 등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증대는 용인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경제 혼란을 극복하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신속히 개발해야 하는 러시아연방은 경제대국인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대규모 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면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군사·안보면에서는 일본과의 역사적 적대관계 및 역내패권국가의 등장 견제라는 측면에서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를 억제하고 있다. 러시아와 일본은 금세기 전반에 1904~5년의 러·일전쟁, 1918~22년 러시아 내전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출병 및 제2차세계대전을 통해 세 차례 전쟁을 치렀다. 또한 구소련과 일본은 서로를 가상적국으로 간주하고 군사력을 증강하여 왔다. 이와 같은 양국의 역사로부터 러시아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세계무대에서 군사적으로 역할을 증대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러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동북아지역을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간주하고 어느 한 강대국이 역내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아·태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이익과 배치되어 왔다고 보는 러시아연방은 일본이 군사력을 기초로 지역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러시아연방은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에 입각, 군사력의 전반적인 감축 및 「신속배치군」의 창설을 통한 「機動防衛」 전략 등으로 자국의 안보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동북아지역 차원에서 러시아연방은 지상군의 대폭감축을 추진하고 미·중·남북한 등 역내국가들과의 공동군축이나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하려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억제하고 일본의 경험과 원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현재 대일관계에서 “敵國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린우호관계 및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러·일 양국은 평화조약에 기초한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나 북방영토문제가 여전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자국 주변에 선린지대를 설치한다는 전략과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과 기술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제반관계를 확대·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러시아연방의 노력은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성패에 달려 있다. 러·일 양국이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어 북방영토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1992년 9월로 예정된 엘친대통령의 방일계획은 영토문제로 연기되었고 양국간의 감정은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4개 섬에 대한 완전주권을 부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연방 정부의 태도, 서방측의 이양압력, 러시아연방의 경제난 등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러·일간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협상타결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러·일 양국이 이미 금세기 말까지 북방영토문제와 평화조약 체결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은 1990년대에 자국의 군사정책, 역내국가들과의 공동협력, 대일 신뢰구축을 도모하는 한편, 미·일 안보조약하에서의 미국의 견제역할에 기대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지원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군사대

국화로 발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용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제3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한반도

#### VI. 동북아질서 변화전망

##### 1. 정치·안보질서 변화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유일강대국 지위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된 국제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및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분담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일간 역할분담에 따라 일본이 미군주둔비용을 분담하고 지역 국가들이 지역안보를 위한 미군주둔 필요성을 인정하는 한, 자국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전진배치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안정을 위한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1990년대 동북아에서는 세계적 동반자관계에 있는 미·일간의 정치·안보·경제분야에서의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을 안정유지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지역안보부담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 면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러시아연방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서구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을 모색하고 있는 바, 과거 역내안정 위협세력이었던 두나라 모두 동북아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보다 유연한 외교적 자세를 견지할 것이므로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추세 증대 및 군축분위기 확산 등 역내 국가간 화해무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의 상대적 쇠퇴에 따른 세력공백을 메우려는 일본과 중국간의 군비경쟁과 동소평과 김일성 사후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혁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냉전 종식에 따른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냉전체제 하에서 잠재되었던 민족, 종교, 영토문제에 기인한 지역분쟁의 발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역내 불안정 가능성에 대비하고 지역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국가들간에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창설 구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1990년대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과 주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의 국제적 공존관계가 남북한간 국내적 공존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도 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대서방 관계 개선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신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서

방자본 유인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보이나 이 과정에서 국내적 동요를 최소화하는 데에 정책적 우선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통한 대북 경제지원으로 남북한에 공히 영향력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역내국가들이 과거보다는 국내문제, 특히 경제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분쟁개입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도 경제적 초강대국인 일본의 영향력이 아·태지역에서 신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경제질서 변화

1990년대 동북아 경제질서는 군사력보다도 경제력이 중시되는 냉전이후시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가간 경제적 경쟁과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통의 경제·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인접국가들 간에 국경을 넘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경제블럭화 형성을 위한 지역주의가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국가들은 그들의 최대시장인 미국이 폐쇄적인 지역적 경제블럭을 반대하고 있어서 개방적인 지역협력체 구성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일 등은 역내경제문제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를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지역협력기구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상설적인 사무국 설치를 시작으로 경제개발기구(OECD)와 같

이 아시아·태평양국가들 사이에 다변적인 정책조정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대 동북아지역에서는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와 러시아연방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노력을 통한 양국의 경제발전 모색은 역내국가들간의 경제협력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러시아연방 및 중국의 경제발전 정책과 냉전이후시대의 경제중시추세는 자본, 노동, 자원 및 기술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타지역에서의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한 동북아지역 경제권 논의의 활성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역내국가들간의 자본과 기술의 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경제강국인 일본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경제의존도 심화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의 경제적 주도권 확대현상과 역내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치·안보 및 경제질서 변화를 종합해 볼 때 동북아 4강간의 관계는 미국을 頂点으로 하면서도 미·일·러·중의 4강구조로 정착되는 다극화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관련, 미·러·중은 일본의 정치·경제 면에서의 역할증대를 용인하면서도 군사력 강화 등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는 선택적인 대응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역내국가들을 자극하면서 급격한 군사력을 증대하기 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영향력 증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와 같은 과도기에서 4강간의 세력균형 변화가 역내국가간에 상호경쟁을 유발시켜 지역 불안정을 조성케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탈냉전무드의 확산으로 역내국가간 화해와 협력추세가 심화될 경우 4강 구조는 지역안정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Ⅶ.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대한반도정책

일본은 냉전종식의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초강국으로서의 부상을 배경으로 전세계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1. 일본안보와 대한반도 인식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일본은 우선적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둘째,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정부가 등장하는 것을 반대하며, 셋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최대한 확대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두개의 한국」이라는 평화 공존상태의 유지가 일본의 이익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통일노력과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대한반도 인식이 보장되는 선에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일본은 전후 미·일 안보조약에 의하여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도 미국정부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의 틀 안에서 전개되었다. 일본은 자신의 안보가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한 안보문제에 있어서 남한과 공동보조를 취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같은 일본의 남한우선정책 기초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회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전체를 고려하는 대남북한 等距離外交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양지역에 대한 영향력 유지를 모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소 및 한·중 수교는 일·북수교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적극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일·북한 관계개선

북한은 反帝反美主義 및 일본군국주의에 대한 경계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의 분단 및 새로운 전쟁위험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그러나 공식적인 대일적대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미·일간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 이완 및 선진 자본·기술 도입을 목적으로 비정치적 분야에서 인적·물적 교류증대를 추구하는 등 대일접근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일·북한 수교협상은 1992년 5월까지 모두 7차에 걸쳐 회담이 열렸으나 뚜렷한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일·북한 수교협상은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문제와 전후시기에 대한 보상문제 등의 두가지 주요 의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과거 자신의 핵피폭 경험과 더불어 미국의 압력에 따라 일·북한협상에서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수락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상호사찰 까지를 수교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북한 수교협상 난관의 裏面에는 막후 조정자로서 미국의 영향력이 작용하였는 바, 미국은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력수단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일본에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아시아전체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북한 수교협상이 북한의 핵문제와 배상문제 그리고 한국 및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북한 국교정상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한·중수교는 일·북 국교정상화 촉진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이 핵문제의 해결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일·북한 국교정상화는 급속히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4.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전망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통일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여 왔으나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일본정부는 공산주의 통일한국의 등장과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력분쟁 등 한반도의 불안정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더욱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인의 노력으로 실현될 경우에도 통일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성취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은 한국의 통일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첫째,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 둘째, 한국의 통일이 국제안전보장의 틀 속에서 핵 및 생화학 무기의 폐기와 총병력의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루어지며, 셋째, 주한미군이 통일이행기의 혼란 및 전쟁발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계속 주둔하고 통일후에도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 당분간 주둔하기를 바라고 있다.

## VIII. 한국의 대응

### 1.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이 미국 및 유럽의 지원아래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단지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가 급격한 군사적 영향력 증대 및 지역패권주의로 발전되지 않도록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견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회와 한·미·일 정책협의회를 통해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미국 및 일본에 주지시키고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 통일한국을 상정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구상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의 동북아지역에서의 세력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총체적이고 자주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적으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등 과거 일본의 침략대상국이었던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非군사적이고 인도적인 분야에 국한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유엔기구내에서도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유엔의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지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이와 병행하여 다자간 안보체제를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구상할 수 있다. 첫째, 일본과 쌍무적인 경제관계의 심화를 통하여 일본이 동북아 경제번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역내 중진국과 개도국의 대일 의존심화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진국인 한국과 개도국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동북아지역 역내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아·태경제협력 각료회의(APEC)를 지역내 안보 및 경제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일본의 역할증대가 역내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일본은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 증대를 위하여 남북한 등거리정책 혹은 分割管理(divide and rule)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남북한 등거리정책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북한 수교이전에는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해 일본의 대북접근을 한국과의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도록 촉구하고, 일·북한 수교협상을 진행시킴에 있어 한국이 제시한

5개 조건의 성실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한·미·일간 정책협업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일·북한 수교 이후에는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 증대에 대비하여 정치·안보면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수교후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한·미·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둘째,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는 일본의 독자적 대북 이니셔티브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의채널 및 우호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에서 일본의 독자적 안보역할 증대를 견제하고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동북아국가들 사이에 다자간 안보협업체를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넷째, 통일문제와 관련, 한국은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하고 북한이 남북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북 경제원조를 북한의 개혁·개방 및 남북한 관계진전과 연계시켜 줄 것을 일본에 요구, 관철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대응과 관련하여, 한국은 일본이 경제적 영향력을 토대로 독자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에 대비하여 일본과의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한국경제의 대일 의존도 완화를 위하여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기술협력의 다원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미·중·

러 및 유럽과의 교역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이니셔티브에 대한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목 차

서 문

요 약

I. 서 론 ..... 1

## 제1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정책

II. 일본의 대외정책: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 7

1. 冷戰以後시대 일본의 대외정책環境과 정책構想 ..... 7

가. 일본의 대외정책 環境 ..... 7

나. 정책 構想 ..... 10

(1) 정책 목표 ..... 11

(2) 정책 ..... 19

2. 일본 대외정책 전개추이: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 33

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 33

(1)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역사적 배경 ..... 33

(2) 정치·안보분야에서의 역할증대, ..... 36

(3) 경제분야에서의 역할증대 ..... 53

나. 국제적 역할증대의 방향: 정치군사 역할증대

가능성 ..... 63

(1) 촉진요인 .....	63
(2) 제약요인 .....	95
(3)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전망 및 평가 .....	107
3. 1990년대 일본의 동북아정책 전망: 국제적 역할의 확대와 한계 .....	110
가. 양자관계 .....	110
(1) 미·일관계 .....	110
(2) 일·러관계 .....	111
(3) 일·중관계 .....	113
(4) 한·일관계 .....	114
나. 다자관계 .....	116
(1) 안보적 측면 .....	116
(2) 경제적 측면 .....	119
 제2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중·러연방의 대응  	
Ⅲ. 미국의 대응 .....	125
1. 미국의 동북아정책 .....	125
가. 정책 基調 .....	125
나. 정책결정 요인의 변화 .....	128
(1) 대내적 요인: 미국의 位相 및 역할조정 논의 .....	128
(2) 대외적 여건 .....	134

다. 정책 內容	137
(1) 군사·안보분야	137
(2) 경제분야	146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	154
가. 미국의 대일정책환경 변화	154
나. 미국의 대일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	157
(1) 미국의 대일안보관계 구상	157
(2) 미국의 대일경제관계 구상	169
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입장	176
(1) 역할증대 容認요인	181
(2) 역할증대 牽制요인	192
3. 미국의 대응방안과 미·일관계 전망	214
가. 미국의 대응방안	214
(1) 안보분야	214
(2) 경제분야	217
나. 미·일관계 전망	220
 IV. 중국의 대응	 224
1. 중국의 동북아정책	224
가. 정책 基調	224
(1)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체제 강화	224
(2)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226
(3)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증대 모색	227

나. 정책결정 요인의 변화 .....	228
(1) 대외적 요인 .....	228
(2) 대내적 요인 .....	232
다. 정책 內容 .....	234
(1) 군사·안보 분야 .....	234
(2) 경제분야 .....	246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	252
가. 중국의 대일 정책환경 변화 .....	253
나. 중국의 대일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 .....	254
(1) 안보구상 .....	254
(2) 경제구상 .....	265
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입장 .....	273
(1) 역할증대 容認요인 .....	273
(2) 역할증대 牽制요인 .....	275
3. 중국의 대응방안과 중·일관계 전망 .....	277
가. 중국의 대응방안 .....	277
(1) 안보분야 .....	277
(2) 경제분야 .....	281
나. 중·일관계 전망 .....	284
(1) 안보분야 .....	284
(2) 경제분야 .....	285
V. 러시아연방의 대응 .....	287

1.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 .....	287
가. 정책 基調 .....	288
(1) 지역안정화 .....	288
(2)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	289
(3)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확립 .....	292
나. 정책결정요인의 변화 .....	293
(1) 대내적 요인: 소연방의 붕괴와 러연방의 급진 개혁정책 .....	293
(2) 대외적 요인: 지역세력균형의 변화 .....	296
다. 동북아정책 .....	298
(1) 군사·안보분야 .....	298
(2) 경제분야 .....	308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 ..	314
가. 러연방의 대일정책환경 변화 .....	314
나. 러연방의 대일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 .....	316
(1) 러연방의 대일안보 구상 .....	317
(2) 러연방의 대일경제관계 구상 .....	323
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입장 .....	326
(1) 정치·경제적 역할증대 容認요인 .....	326
(2) 군사적 역할증대 抑制요인 .....	330
3. 러연방의 대응방안과 러·일관계 전망 .....	334
가. 러연방의 대응방안 .....	335

(1) 「合理的 充分性」의 군사독트린과 「機動防衛」 전략 .....	335
(2) 역내국가들과의 공동군축 또는 지역안보체제의 형성 .....	338
(3) 대일 신뢰구축 .....	340
나. 러·일관계 전망 .....	343

### 제3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한반도

VI. 동북아질서 변화전망 .....	349
1. 정치·안보질서 변화 .....	350
가. 미·일의 세계적 동반자관계와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	350
나.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와 集團的 介入정책 .....	352
다. 미·러간 동반자관계 구축 및 러시아연방의 서방 경제에로의 편입 .....	353
라.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와 아·태지역국가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	355
마.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추세 .....	357
바. 군축 필요성 증대 .....	358
사. 역내 안보협력회의 창설 가능성 증대 .....	360
아. 미·일·중·러 4강구조 정착 .....	362
2. 경제질서 변화 .....	364

가. 자유무역체제속의 개방적 지역경제협력체 형성	364
나. 양자적 경제관계 강화와 사회주의권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366
다. 소지역적 경제권 대두와 일본의 지역경제 주도권 확보노력 강화	367
<b>VII.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대한반도정책</b>	369
1. 일본안보와 대한반도 인식	369
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372
3. 일·북한 관계개선	378
가. 북한의 대일입장	378
나. 일·북한 수교교섭의 현황 및 전망	382
4.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전망	391
<b>VIII. 한국의 대응</b>	398
1.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한국의 대응	398
2.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403
<b>참고문헌</b>	407

## I. 서 론

세계적인 脫冷戰化 추세에 따라 동북아에서도 화해와 협력 추세가 심화되고 있으나, 1990년대 동북아질서는 단기적으로는 역내 국가간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제정세는 미·러 정상회담을 통한 양국간의 대폭적인 핵감축, 러시아연방의 서방경제체제로의 편입 및 미·러 동반자관계 구축 등으로 안보·경제 양면에서 냉전구조가 종결되었다. 이에 따라 동북아에서는 러시아연방의 쇠퇴 및 미국의 전략구조 재조정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와 같은 세력균형의 변화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불안정과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일부 역내국가들은 전략적 우위를 선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의 대일 방위분담 및 방위력 증강요구에 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정치·군사적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를 바탕으로 장래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시도하고 있으며 지역분쟁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보를 통하여 동북아 및 한반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외국원조계획(ODA)을 확대하고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의 통과를 통하여 캄보디아에 자위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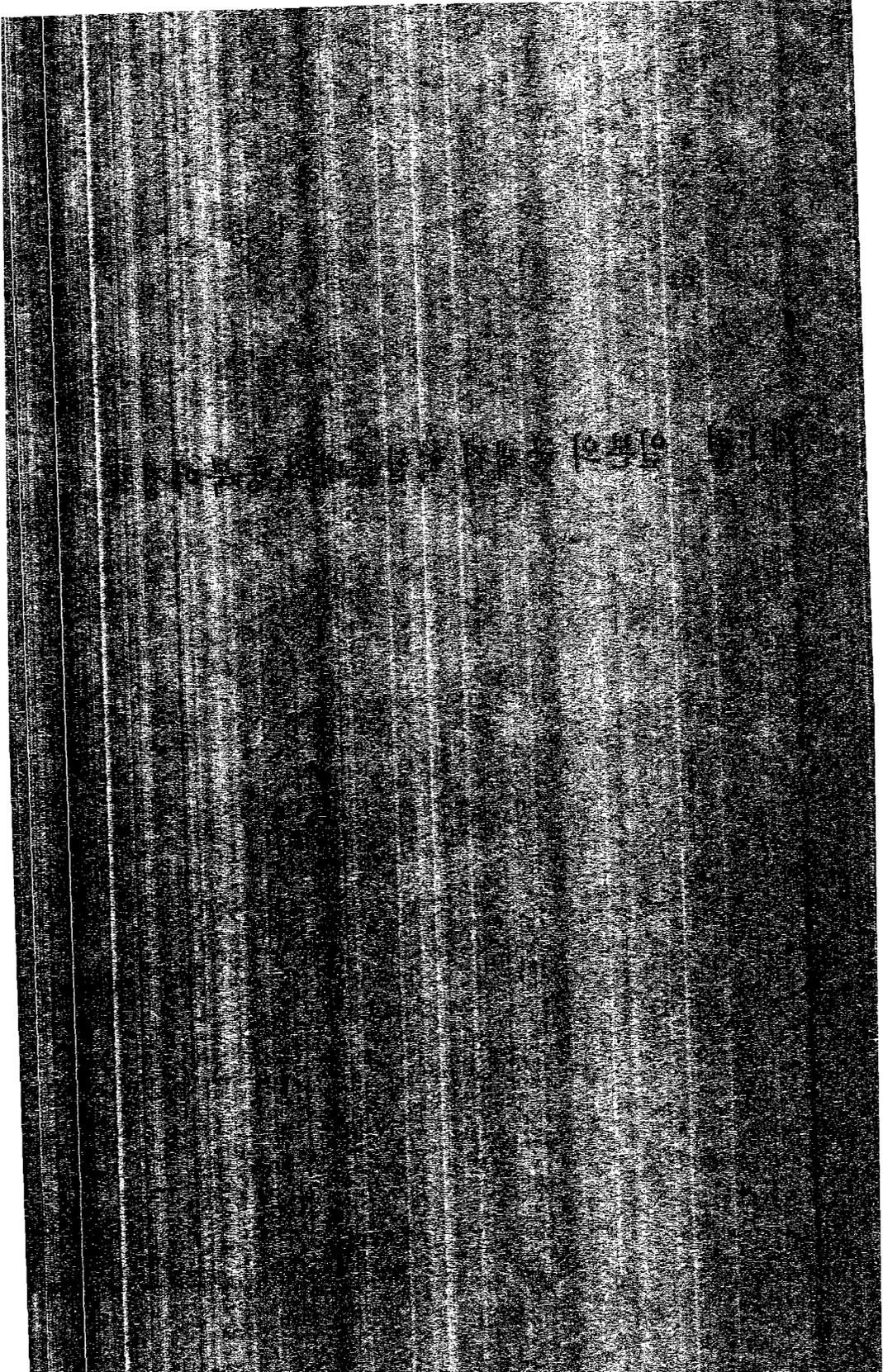
이와 같은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을 통하여 일본은 동북아 질서 재편과정에서 자신의 발언권을 확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본 연구는 일본의 대외정책 구상의 전개과정에서 노정되는 구체적 사례분석을 통하여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아울러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영향력 증대가 동북아질서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인식하에 주변국들의 정책적 대응과 상호 力學關係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역내 국제질서를 예측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본의 대외정책 구상을 정책 목표와 구체적 정책내용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특히 정치·안보 및 경제분야에서 전개되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을 대내외적 促進요인과 抑制요인과 연계하여 분석한다. 둘째, 역내 이해관련국인 미국·중국·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 구상과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이들 국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대외정책 가운데 각국이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요인과 견제하려고 하는 요인들을 분석한다. 또한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중·러의 대응방안을 분석한다. 셋째, 일본을 포함한 역내 주요 국가들의 대외정책 분석을 통하여 1990년대 동북아질서 변화를 예측한다. 넷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한반도 통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일본의 대남·북한정책을 검토하고 이와 관련 한국의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민족통일연구원이 1991년도에 출간한 「蘇聯의 東北亞政策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에 이은 「1990년대 동북 아질서 예측」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빈 면

## 제1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정책



## 제1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동북아정책

### II. 일본의 대외정책: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 1. 冷戰以後시대 일본의 대외정책環境과 정책構想

##### 가. 일본의 대외정책 環境

미·일·중·소와 남북한관계의 대립구조가 지배하던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남방3각관계와 북한·중·소 북방3각관계 간의 복잡하고 첨예한 갈등관계가 1980년대 중반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1985년 5월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개혁정책이 시작된 이후 파급·확산된 사회주의권의 대변혁, 중거리핵전력(INF) 폐기협정(1987), 몰타정상회담(1989), 베를린장벽의 붕괴에 이은 독일통일(1990. 10. 3), 유럽안보회의(CSCE)에서의 냉전종식선언(1990), 소연방의 해체와 독립국가연합(CIS)의 발족(1991. 12) 등과 같은 일련의 사태진전과 함께 국제질서는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는 이데올로기적 대립이 완화되면서 구조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바, 그 기본성격은 냉전체제에서 국제적 위상정립의 결정요인이었던 군사력과 이념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경제적 실리 추구가 강조되는 질서로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럽에서 시작된 국제질서의 변화 움직임은 아·

태지역에도 파급되어 동북아정세에도 탈냉전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sup>1)</sup> 냉전기의 동북아질서는 미·소 양극체제라는 세력 균형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양자적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던 동북아질서는 최근 미·러연방의 상대적 국력쇠퇴로 미·러·중·일 관계에 변화를 보이면서 다원화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화된 미국, 구소련에 비해 상당히 약화된 러시아, 독자적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중국, 그리고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증대를 모색하는 일본의 4강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그러나 냉전이후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국가간의 협력 및 대립구조가 4강체제로 다원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힘의 배분이라는 차원에서는 동북아질서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동북아에 아직 군사전략적 대치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중·소국경지대, 한반도 이외에 극동의 오호츠크해를 중심으로 한·미·러·일의 대치상태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동북아의 다원화 현상에 대하여 각국은 동북아의 세력균형 및 군사균형의 변화가 자국에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군비증강추세도 보이고 있다.

냉전체제의 붕괴로 빚어진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국제적 역할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1) 한·소수교, 중·러화해 무드, 한·중수교, 남북한 UN 동시가입과 남북 고위급회담, 일·북한 수교회담, 미·북한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접촉 등은 동북아정세가 전환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실례들이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은 국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제문제에 주력할 여유가 없다. 따라서 일본은 미국의 동반자로서 자국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의 방일(1992. 1. 7~10)을 계기로 미·일 양국정상은 「도쿄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 양국은 냉전체제 붕괴후 세계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기 위해 ‘세계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기반으로 21세기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는 동서냉전 종결과 소련·동구의 변혁으로 세계질서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미·일 양국이 대등한 책임을 지고 역할분담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소련·동구 및 제3세계의 개혁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일본의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는 한편, 미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은 일·러시아연방간 현안인 북방4개도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참가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

미국은 향후 역할분담의 증대를 요구하면서 일본의 정치·안보적 역할의 점진적 증대는 용인할 것이나 일본의 독자적 외교정책 추구 등 脫美현상은 억제해 나갈 것이다. 미국정부가 일본의 평화헌법과 미·일안보체제의 유지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극동전략의 거점으로서 일본을 미국의 안보우산 하에 계속 묶어 두겠다는 의도라고 해석

될 수 있다. 이점에 대해 일본의 공식입장도 미국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일본은 동남아시아의 해상수송로 안전확보, 한반도와 중국의 불안정, 그리고 소련의 잠재적 위협 때문에도 미·일안보체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동북아 4강구도의 다원화현상과 미국의 아시아지역 병력감축계획에 의한 세력공백이 역내 정치적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비하여 방위력 증강과 방위지역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일본에서 현행헌법의 고수 및 미·일안보체제유지가 기본방침을 이루고 있지만, 최근 신보수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미·일동맹 성격의 재조정 및 개헌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제적 역할증대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 나. 정책 構想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의 정책구상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 소련·동구체제의 붕괴, 둘째, 걸프전 이후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 강화, 셋째, 유럽공동체(EC)를 비롯한 지역통합 현상의 대두, 넷째, 이에 따른 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의 강화 등이다. 즉, 구소련과 동구의 자본주의체제 편입문제 및 각 지역의 통합에 따른 갈등양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새로운 안보·경제질서를 수립한다는 것이다.

## (1) 정책 목표

## (가) 지역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안보역할 확대

냉전이후시대에 국제정치는 종래의 군사력 위주의 高位政治(high politics)에서 경제력 위주의 下位政治(low politics)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경제초강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과의 협력 아래 세계 및 아·태지역에서의 안보문제에 관한 발언권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미·일동맹관계를 동북아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치·경제적 동반자관계로 조정하려 하는 등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국제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의 경제력을 활용하고자 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역할(PKO 등)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향후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국제정치·경제질서는 미국의 우위가 유지된 상태하의 미·일 「兩頭體制」로 안정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sup>2)</sup>

2) Steve Chan, *East Asian Dynamism : Growth, Order, and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Boulder, Colo. : Westview Press, 1990), pp. 102~104 ; Takeshi Inoguc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88/89).

## (나) 러시아연방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역사적으로 구소련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다. 1970년대에 미국, 중국, 일본이 구소련을 가상적으로 한 3각 안보협조체제를 형성함에 따라, 구소련은 이에 대응하여 동북아지역에 군사력을 증대시켜 왔다. 이와 같은 구소련의 군사력 강화에는 미·일·중의 전략적 협력관계에 대처하는 한편, 북방도서 문제를 둘러싼 향후 대일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도 작용하였다.<sup>3)</sup>

최근 독립국가연합(CIS)의 국내정세를 볼 때, 독립국가연합이 과거에 비하여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극동군의 존재는 일본에게 엄연한 군사적 위협으로 상존하고 있다.<sup>4)</sup> 따라서 이에 대한 일본의 경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sup>5)</sup>

3) Harry Gelman, "Continuity versus Change in Soviet Policy in Asi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4, no. 2 (Summer 1985), pp. 3~18.

4) 1990년 일본 「防衛白書」는 소련을 「잠재적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지는 않으나 극동소련군의 군사력에는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다. 防衛廳編, 「防衛白書 1990」, p. 46 & 49; 「防衛白書 1991」, p. 49.

5) 1990. 9. 18 「朝日新聞」은 「防衛白書」는 소련의 잠재적 위협을 언급하였으나 가이후수상이 일·소 우호분위기를 위해서 잠재적 위협 문구를 삭제하였다며 이것은 정치적 판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는 북방 4개도서 반환 교섭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의도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일본방위당국은 아직도 소련을 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잠재적 위협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다른 이유는 미국이 소련의 해군력 감축제안을 태평양지역 해군력의 열세만회의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군축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 (다) 중국에 대한 협조와 견제

일본은 1972년 중국과 외교정상화를 이룩하고 1978년 평화 우호조약을 체결함으로써 1931년 이래의 적대관계를 공식적으로 청산하였다. 동 조약은 1979년 미·중 국교정상화와 미·일안보조약과 더불어 미·일·중 안보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대소전략의 협조체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미·일·중 3각협조체제하에서 일본의 대중정책은 구소련의 잠재적 위협에 대하여 양국이 공동대처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한반도문제에 있어서도 역시 일본은 역내의 정치·군사적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의 갈등상황을 억제하는데 일·중의 공동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은 여전히 지역안정을 위하여 중국과 지속적인 관계개선을 추구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대두는 결코 바라지 않고 있다. 동북아 전략구도에 있어서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중·일 양국의 경쟁은 불가피하다. 더구나 일본은 1986년 중국해군의 대규모 기동훈련이 서태평양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1,000해리 해상방위영역인 유황도에서 양국이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양국간에 센가쿠열도(釣魚台)를 둘러싼 새로운 영토분쟁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은 중국의 군사력증강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sup>6)</sup>

6) 이에 따라 일본은 고도의 첨단기술을 中國에 이전시키지 않고 있다.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高坂正堯, “90年代 日本の 防衛構想,” *Voice*, September 1990, p. 131.

향후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일·중영토분쟁 등 갈등요인은 협상과 협조로 해소해 가면서 적절한 경제적 협력은 지속하게 될 것이다. 즉, 일본은 중국의 현대화계획과 관련하여 중국경제의 급속한 성장이나 붕괴는 지역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중국의 개방과 개혁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제지원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의 잠재적인 군사안보상의 위협 가능성을 고려 첨단산업기술 및 고도군사기술의 對中이전은 통제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일본의 외국원조계획(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은 자국의 수출확대와 자원확보를 위하여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up>7)</sup> 외국원조기금은 1957년 태국, 말레이시아의 식민지보상책으로 배상대신 田차관으로 지불한 것이 그 시초이다. 1977년 후쿠다(福田)가 일본은 군사대국을 지향하지 않고 全方位外交(multi-directional policy)에 역점을 둔다고 선언한 이후, 외국원조기금은 동남아에서 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확대되었다. 또한 아프가니스탄사태(1978년) 이후 신냉전체제에서는 파키스탄, 터키 등을 지원하는 등 전략

7) Koji Taira, "Japan'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Japanese Perspectiv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3 (January 1991), p. 68.

적 원조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sup>8)</sup> 1981년 8월 노신영 한국의 무장관이 한·일외상회의에서 안보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결부시켜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1982~87)의 추진을 위해 요청하였던 60억달러의 정부차관 가운데 40억달러도 외국원조 기금이였다.

일본정부는 1977년부터 1981년까지 외국원조 기금으로 14억달러를 책정하였고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이전까지의 경험규모보다 2배 정도 많은 경제지원을 하였다. 1988년에 수립된 대외개발원조(1988~93 5개년 계획)의 규모는 500억달러로 동남아국가연합제국과 중동제국 등 저개발 아시아국가에 지원하고 있다.<sup>9)</sup> 이는 일반적으로 동 국가들에 대한 일본의 수출확대 및 미국의 안보전략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한 최근 일본의 대외경제 지원은 경제블록화 추세에 대한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개발도상국 개발원조는 경제·정치적 발언권과 영향력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일본이 유엔평

8) 大外 宏, “日本のODAと國際政治,” 五十風武士 編, 「日本のODAと國際秩序」(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0), pp. 25~51.

9) Xiaming Zhou,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Asian Survey*, vol. 321, no. 4 (April 1991), pp. 341~50; Dennis T. Yasutomo, “Why Aid?: Japan as an ‘Aid Great Power’,” *Pacific Affairs*, vol. 62, no. 4 (Winter 1989/90), pp. 490; Tsuno Akaha,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31, no.4 (April 1991), pp. 324~40.

화유지활동(PKO)의 일환으로 해상자위대를 중동에 파견할 당시 국내적으로 자위대의 제3국 寄港問題가 대두되었는데, 대부분의 기항지가 대외개발원조의 수혜국으로 결정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sup>10)</sup> 향후 대외개발원조와 평화유지활동은 상호연계되어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마) 한반도 안정

한반도를 보는 일본의 시각은 한반도가 북방삼각체제(북한·중국·러연방)와 남방삼각체제(한국·일본·미국)의 이해가 교차되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주조를 이루었다. 따라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목표는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통한 동북아시아의 안정된 세력균형의 유지였다. 1960년대 일본은 중국과 북한을 위협세력으로 간주하였으며, 1964년 중국의 핵실험 등으로 동북아시아의 불안이 증대되자 한국, 대만, 미국 등과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71년 닉슨의 방중에 따른 미·중관계 개선으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데탕트의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7·4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을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함에 따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남북

10) 일본은 군사적 역할확대를 위하여 막대한 개발원조를 필리핀(6.47억달러)과 파키스탄(1.97억달러) 및 중동의 터키(3.24억달러) 등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防衛廳 編, 「防衛白書」(東京: 防衛廳, 1990), p. 94; 「朝日新聞」, 1990. 10. 6.

한간의 등거리외교를 강화하여 정경분리원칙에 따른 비정치 분야에서의 대북한관계를 개선하였다.

일본의 남북한 등거리외교는 1970년대 중반이후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일시적으로 후퇴하였다. 1970년대 중반 베트남전쟁의 양상이 공산게릴라에 유리하게 전개되자 당시 미키(三木)내각은 베트남의 공산화가 아시아의 공산화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한국방위에 적극적 관심을 표명하였다. 1980년대에는 구소련군사력이 극동아시아에 집중배치되고 구소련군의 작전해역이 동해(일본해)까지 확대되자 일본은 한국안보가 일본방위에 직결된다는 인식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남·북한관계 개선으로 인한 한반도통일의 가능성이 증대되자 경제·안보적 차원에서 자국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남·북한 통일협상 과정에 있어서 「2+4 구도」 등 다자간 협의에 적극 참여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대한 발언권 강화를 통해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모색할 것이다.

#### (바) 아·태지역의 경제주도

아·태지역에서의 일본의 경제목표는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지역화추세에 대비하면서 동 지역에서

자원과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일본은 에너지 자원, 주요원자재 등 자원확보가 일본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첨단산업분야에서의 비교우위를 바탕으로 아·태지역의 경제권 주도를 기도하는 것이다. 아·태지역의 경제권 형성에 참여하고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일본의 노력은 일본의 경제력 즉, 첨단기술을 통한 생산력 향상, 기업의 국제화를 통한 막대한 무역흑자, 그리고 전세계 유동자금의 40% 장악 등이 그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아·태지역에 지역경제협력체를 주도적으로 창설함으로써 최근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1966년 고지마(小島清) 교수는 유럽경제공동체를 모델로 하여 「태평양자유무역지대」(PFTA)를 주창한 바 있으며, 오히라(大平) 수상은 1979년 아·태경제권 구상의 일환으로 「환태평양연대구상」을 제안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일본은 「환동해(일본해)경제권 구상」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sup>11)</sup>

---

11) 「毎日經濟新聞」, 1992. 7. 11.

## (2) 정책

### (가) 군사·안보분야

#### 1) 미·일 동맹체제 유지

일본은 미·일동맹을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미국의 방위비 분담요구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공고한 동맹체제를 확립하고 있다. 일본이 미·일안보조약체제를 유지시키려는 것은 재군비를 통하지 않고도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안주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보장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안보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상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전으로 승전국들에 의하여 교전권을 박탈당한 일본이 이를 명문화한 평화헌법 9조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일본은 한국전쟁과 중국혁명의 여파로 인한 사회주의혁명세력의 확산에 직면하여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미국의 군사적 보호를 필요로 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일안전보장조약(구안보조약)이 1951년 조인되고 1952년 발효되었다. 동 조약은 동등한 쌍무관계의 조약이 아니라 미국이 후견인적 입장에서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형태를 띤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일방적 성격의 기존조약의 개정을 제의하여 1960년 1월 워싱턴에서 「미국과 일본국 간의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 즉 신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미·일안보조약에 의하면 미국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을 때에는 일본방위의 의무를 지고 있지만, 일본의 관할권하에 있는 영역 이외의 장소에서 미국이 공격을 당하면 일본은 미국을 방위할 의무를 지지않게 되어 있다. 이 점은 일본의 헌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데 연유하고 있다.

1960년대 후반이후 일본의 경제력이 증대됨에 따라 미국은 일본에게 자체 방위력을 강화하도록 꾸준히 압력을 가했다. 미·일안보관계는 1969년 「닉슨독트린」을 계기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닉슨은 동 선언에서 동맹국들이 방위를 위해서 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은 동맹국에 대한 핵억지력과 군사지원은 계속 유지할 것이나 병력의 제공은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하였다. 또한 이러한 정책에 입각해서 미국은 일본의 방위비증액을 요구하고 「無賃乘車」를 비판하기 시작하였다.<sup>12)</sup>

미·러시아연방의 화해, 중·소관계의 정상화(국경문제해결), 한·소수교, 일·북한 수교회담 및 한·중수교 등으로 현재 동북아시아지역에 있어서 안보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동북아시아지역의 불안정에 대비하고 역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미·일동맹조약을 강화하려 할

12) 일본이 GNP 세계 제2위가 된 1968년을 전후하여 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 문제(섬유문제 등)가 야기되었으며, 1970년 이후 미국은 일본의 안보무임승차에 비판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비판하에서 일본은 경제력 증대에 따라 방위비를 증강했으며, 1980년대에는 專守防衛에 地域防衛 개념을 추가하는 해상교통로 1천해리 방위를 결정하였다.

것이다. 미·일조약의 강화에 따른 긍정적 기대효과는 첫째, 동북아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갈등 및 위협가능성에 대한 억지, 둘째, 러시아와의 북방영토 반환협상에서 일본 주도권의 확보, 셋째, 일본의 군비증강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 불식 등 폭넓은 전략적 역할이 가능하다는 점이다.<sup>13)</sup>

향후 미·일동맹체제는 미국 군사비의 포괄적 삭감, 해외주둔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라 일방적 관계에서 쌍무적 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국제정치에 있어서 궁극적인 군사안보의 보장자로서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나, 일본에게 경제력에 상응하는 안보책임을 분담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를 위한 일본의 정치적 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은 지역강대국으로서 경제력에 걸맞는 군사력의 증대요구를 수용하고 미국과의 협조 아래 정치·군사적 역할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sup>14)</sup>

## 2) 군사적 역할의 廣域化

일본은 공산권의 붕괴로 야기된 소·중·북한의 국내정세 불안 이용하면서, 또한 미·소의 군사력감축에 따른 힘의 공백을 메우면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 군사대국으로 도약하고 있다.

13) Hidenori Ijiri, "동북아에서의 탈냉전체제의 등장," 「統一問題研究」, 제2권 3호 (1990 가을), pp. 48~67;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April 29, 1991.

14) Chan, *East Asian Dynamism* (Boulder: Westview Press, 1990). p. 104.

지역방위론은 1983년부터 1987년까지 5개년간의 방위력 증강계획인 56중기 업무계획에서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내용은 해상안보에 대한 일본 책임구역의 확대였다. 해상방위론의 대두는 1981년 레이건 집권 이후 미·소간의 신냉전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의 해상운송로 확보에 취약성이 노정되는 상황에서, 종래의 안이한 대미의존적 군사소국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군비증강론자들의 주장에 기인한 것이다. 專守防衛에서 지역방위로의 전환은 1981년 종전의 200해리(본토서남) 해상방위에서 탈피하여 “1,000해리 해상교통로(sea lanes)방위”를 선언한 스즈키수상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되었다. 1983년 일본 「防衛白書」는 해상교통로방위를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광역초개, 선박의 호위, 해협 방비 등 각종 작전편성에 따른 누적효과에 의해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카소네수상은 1982년 1,000해리 해상교통로의 범위를 괌~동경, 대만해협~오오사카로 명시하고, 1983년 일본 주변의 3개 해협(소야, 쓰루가, 쓰시마) 봉쇄를 단행하였다. 3개 해협 봉쇄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모항으로 하는 오호츠크海의 구소련해군력을 동해(일본해)에 묶어두고 구소련해군의 태평양진출을 억제하며 미 제7함대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구소련의 백파이어 전폭기의 진로를 일본 방공망으로 차단시키는 것이다.<sup>15)</sup> 구소련은 3개 해

15) Paul Langer, “Soviet Military Power in Asia,” in Donald Zagoria,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 256. 소련

협 봉쇄로 태평양진출을 봉쇄당한 반면 일본 역시 해상을 통한 연간 6억톤 이상의 물량수송에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sup>16)</sup> 따라서 1,000해리 해상교통로 방위정책은 종합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의 원유시장의 확보라는 사활이 걸린 정책이며 경제 규모가 확대될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일본의 1,000해리 방위는 구소련의 극동해군에 대한 견제 뿐 아니라 중국의 서태평양진출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원양작전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모함 건조, 해병대 창설, 공군조종사의 함재기 임무부여 등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1986년 5월 중국해군은 처음으로 연안을 벗어나 일본 유황도 부근의 서태평양까지 진출, 대규모 해상작전훈련을 시행하였다.<sup>17)</sup>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현재의 해상전략을 유지하면서 해역을 확대할 경우 일본과 중국 사이에는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있다.

해상방위의 강화를 목표로 한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의 1차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86~90)에는 자위대의 공격능력을 강

---

은 1978년부터 백파이어 전폭기를 극동에 배치시켰다. 1983년 대마도 해협을 통과한 소련함정은 165척이었으며, 이외에도 소야해협 205척, 쓰루가해협은 60척이었다. 佐藤和正, 「てれか “日本の 防衛隊た”」(東京: 講談社, 1983), p. 26.

16) 佐藤和正, 「てれか “日本の 防衛隊た”」, p. 12.

17) 이 훈련에는 산둥반도의 靑島를 기지로 한 6척의 구축함 및 H-6 폭격기 외에 잠수함이 동원되었다. 김달중, “동북아 해상교통로를 위요한 4강의 해상전략” 김달중 편, 「한국과 해로안보」(서울: 법문사, 1988), pp. 161~64.

화하여 영해 뿐만 아니라 원양에서의 작전능력을 제고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의 총예산은 18조 4,000억엔으로 동 기간중 국민총생산의 1% 한도를 초과하였다.<sup>18)</sup> 일본 정부가 1987년 1월 방위비는 「국민총생산의 1% 이내」라는 상한선을 철폐한 직후 키신저는 일본의 군비증액은 범세계적인(global) 세력균형 유지에 불필요하다며 군사력의 강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언급하였다.<sup>19)</sup> 그러나 1987년 미국의회는 일본의 방위비가 국민총생산의 3%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하는 등 오히려 일본보다도 적극적인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였다. 일본은 1991년 예산에서 방위예산(2차 신증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5.8% 증액시켰고 1992년도 방위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5.38%가 늘어난 4조6천2백20억엔으로 책정하였다. 일본의 방위청은 1993년도 방위예산 요구액을 1992년보다 4% 증가한 4조7천 1백71억엔으로 책정하였다. 일본이 1993년도에 도입하려는 주요 正面裝備(전투용장비)에는 해상자위대의 경우 대공미사일탑재 최신예호위함인 이즈스함 1척(도입비용 1천 3백49억엔)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육상자위대는 다연발로켓시스템(MLRS) 9량, 90식 전차 23대를, 항공자위대는 F15전투기 8대, 패트리엇 미사일 1세트

18) 前田哲南, “軍事費1%構突破の構造,” 「世界」(1985年 1月). 1976년에는 상한선을 GNP 1% ‘이내’로, 1987년에는 다시 GNP 1% ‘정도’로 방침을 수정하였다.

19) *Daily Yomiuri*, January 1987, p. 5.

등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다.<sup>20)</sup> 일본의 방위비는 현재 세계3위로 국민총생산의 1.5%에 이르고 있다. 일본 방위청은 1991년에서 1995년의 2차 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22조7천5백억엔을 들여 호위함 현대화, 핵무기 탑재가능 최신에 미사일 도입, F15 국산화 등을 추구하고 있다.<sup>21)</sup>

일본정부는 걸프전을 계기로 1991년 4월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을 중동에 파견한데 이어 9월 19일에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방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이를 통과시키는(1992. 6. 15) 등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실현 가능케 하였다. 일본은 군사역할의 확대(PKF 파병)를 위한 해상자위대의 寄港(연료 및 보급품의 공급)을 위하여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파키스탄에 막대한 정부원조정책을 펴고 있다. 1991년도에 일본은 필리핀(6.47억달러), 스리랑카(1.76억달러), 파키스탄(1.93억달러), 터키(3.24억달러)에 막대한 개발원조를 제공하였다.<sup>22)</sup> 일본정부는 아시아지역내 개발원조 대상국을 자국이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핵확산금지과 군비통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것이다.<sup>23)</sup> 일본의 이러한 의도는 안보·경제적 차원에서의 전략적 사고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 「讀賣新聞」, 1992. 8. 16.

21) 日本防衛廳, 「防衛白書 1991」(東京: 防衛廳, 1991), p. 130.

22) 「朝日新聞」, 1991. 10. 6; 「政府開發援助(ODA)白書」(1991年版).

23)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10, 1991, pp. 67~68.

### 3) 비핵3원칙과 운용의 융통성

일본의 핵정책 논쟁은 1964년 핵실험 성공으로 중국이 다섯번째의 핵국가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일본의 핵전문가들은 일본에 대한 중국의 핵위협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의 「핵우산」보호아래 억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핵무장 옹호론자들은 일본의 비핵3원칙과 핵확산금지조약 가입에 반대하고 있다.<sup>24)</sup> 이들은 이러한 원칙과 조약으로 일본이 미국의 영원한 핵종속국이 되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에너지자원 개발기술 및 원자력 이용기술이 美·蘇의 독점하에 있기 때문에 일본이 명실상부한 초강국으로 등장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의 핵정책은 핵무장주장과 비핵화의 주장을 절충한 소위 「N-t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핵무기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핵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할 수 있는 「N-th정책」과는 다른 「N-t핵정

24) 일본은 핵을 「갖지 않으며, 만들지도 않으며,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을 명분상의 국시로 견지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기제조나 보유는 원자력기본법의 규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1976년 6월 핵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 비준으로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취득하지 않는다는 의무를 지고 있다. 이와 함께 1967년 사토수상이 중의원 예결위원회에서 언명한 무기금수 3원칙에 의해 공산권국가, 유엔결의에 따라 금지된 국가(南阿共), 분쟁당사국 등 위협이 내재하는 국가에는 무기를 수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책」을 일본이 택한 이유는 핵무기 개발 바로 전단계까지의 모든 분야의 핵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이것이 에너지자원 개발 등을 위한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을 가질 수 있고 군사적으로 필요할 때 핵무기에 전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sup>25)</sup>

또한 방위적 측면에서도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경우, 미·일안보조약이 폐기되거나 일본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이 철회되고 미국과의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이 핵무장금지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다. 일본은 독자적 핵무장이 대중국관계를 악화시키고 중국과의 핵무기경쟁을 야기시켜 양국은 심각한 갈등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방위청은 국방의 지나친 대외의존성을 경고하고 일본이 국제정치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방위상의 융통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다. 즉 방위에 있어서 자주성과 융통성의 양면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위청의 시각은 최근 일본국민의 「핵알레르기」반응이 약화되고 있고 「신보수주의」, 즉 보수右傾化 경향이 확산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sup>26)</sup>

25) Masataka Kosaka, "Japan's Nuclear Option," in G. Kemp, R. L. Pfaltzgraff, Jr., and U. Ra'anan, eds., *The Superpower in a Multinuclear World*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4), pp. 94~95.

26) 「朝日年鑑 1978」, p. 584. 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이 앞으로 핵무장을 하게 될 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50 대 50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핵정책은 상당한 융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유사시 핵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F-4E 팬텀기(핵폭탄 탑재), F-3C 대잠초계기(핵탄두 부착) 등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본자위대의 항공기도 핵무기 탑재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27)</sup>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에서는 핵무기라도 방어적인 것일 경우 그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개진된 바 있다.<sup>28)</sup> 둘째, 일본정부는 요코쓰카, 사세보 등 항구에 기항하는 미국의 군사용 선박들의 핵 탑재여부를 불문에 부쳐왔다. 1988년 핵을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미태평양함대에 배치되면서 이러한 함정이 일본에 기항할 경우 비핵3원칙 중 세번째 「반입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일 양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60년 교환한 공문에서 지상반입에 대해서는 「不可」라고 규정했으나, 기항이나 영해통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탑재함정의 기항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자민당의 일각에서는 반입금지원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견해가 대두

27) 佐藤和正, 「これか “日本が 防衛隊た”」, pp. 78~80. 최근 일본의 과학기술청이 우주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로케트도 핵탄두를 부착할 경우 準중거리 미사일로 사용가능하다.

28) J. Van de Velde, “Japan’s Nuclear Umbrella: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or Jap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7, no. 4 (Winter 1988), p. 19.

되고 있다.

요약컨대, 일본은 최근 논의되는 「비핵지대화」보다는 비핵 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의 핵우산유지로 안보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1991년 9월 27일 부시 미대통령의 핵감축선언에 대하여 일본의 이케다(池田)방위청장관은 환영할 만한 선언이라고 언급하였다. 현재 일본의 비핵3원칙의 실제운동은 상당한 융통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N-t정책을 향후에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되나 군비현대화의 일환으로서 핵탑재가능 최신예 미사일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핵을 대체할 수 있는 첨단 재래식 무기의 중요성을 걸프전에서 인식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도 가속화할 것이다.

## (나) 경제분야

### 1) 경제발전 우선 견지: 「요시다(吉田) 독트린」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경제부흥에 총력을 경주하였는 바, 이의 근간이 되는 것이 「요시다독트린」이다. 미군점령 당시 일본의 총리였던 요시다 시게루(吉田 茂)는 경제부흥을 이룩하기 위해 국력을 경제발전에 집중시키는 「경제제일주의」를 채택하고 이를 위해 친미노선을 추구하였다. 이의 핵심은 미·일안보조약(1951)을 바탕으로 일본에 미군사기지의 설치 및 미군의 주둔을 허용하여 일본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일본의 재무장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론분열을 회피해야 한다는 것이다.<sup>29)</sup> 미국의 안보우산하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한다는 요시다의 노선은 전후 일본의 경제성장전략의 근간으로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 2) 미·일 경제마찰 해소

일본은 교역구조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통한 무역흑자가 정착됨으로써 미국과 통상마찰을 야기시켜 왔다. 통상마찰은 1960년대 저임금과 신상품을 배경으로 한·미·일섬유마찰을 시작으로 하여 1970년 이후에는 철강, 텔레비전, 자동차 그리고 첨단반도체 등 하이테크상품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미·일간의 경제마찰은 근본적으로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일본이 나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회사(Japan Inc.)가 되어 공격적인 수출국이면서 방어적인 수입국으로서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국내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용하여 유통구조를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30)</sup>

29) 요시다는 현대전쟁에 있어서 어느 국가도 단독방위가 불가능하며 집단안전보장이 가장 바람직하나, 유엔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아직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세계최강국인 미국의 비호를 받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주장하였다. 五十岡武士, 「對日講和と冷戰: 戰後 日米關係の 形成」(東京: 東京大學校出版會, 1986), pp. 156~60.

30) Steven D. Cohen, *Uneasy Partnership: Competition and Conflict in U.S.-Japan Trade Relations*, 山田進一 譯, 「日米經濟摩擦: アメリカの 主張」(東京: ティーピーエヌブリタリカ, 1985), pp. 10~11.

이와 같은 미·일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취해져 왔으나 불균형은 쉽사리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며,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심화에는 상호간의 불신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sup>31)</sup> 일본은 무역불균형 시정노력으로 주일미군의 경비부담 증대, 대외경제지원 증대 및 대미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에 대체적으로 순응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무역, 기술이전, 방위분담 등 제문제에 있어서 안보와 경제를 연계시키자는 주장이 강화되고 있다.

미·일간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조정협약(SII)은 일본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시장개방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일본은 미국의 재정적자감소와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어 양국간 무역마찰은 상호내정간섭으로 비화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첨단기술 이전문제에 있어서는 미·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전투기(FSX)의 기술이전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기술공유를 조건으로 재협상을 요구하는 등 이견조정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미국 첨단기술의 제공보다는 일본의 기술을 공유하는 선에서 해결되고 있다.<sup>32)</sup>

31) 1991년 일본의 무역흑자는 약 800억달러로 추산되며, 이는 수출시장의 다변화로 인하여 미국, 유럽, 아시아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일본 통산성은 지난 5년간 수입액이 250억달러 증가하였다고 언급하고, 이와 같은 수출입 균형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Asian Wall Street Journal*, September 13, 1991.

32) Bernard K. Gordon, "Asia-Pacific Rim: Success at a Price," *Foreign Affairs*, vol. 70, no. 1 (Winter 1990/91), pp. 155~56.

양국간의 경제마찰 해소를 위해 양국 정부는 최근 무역, 투자, 수입 등에 대한 경제정책 조정 뿐만 아니라 의회, 연구기관을 통한 상호불신을 조정하는 작업(SCHI)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sup>33)</sup> 특히 냉전이후시대에 세계적 차원에서의 정치경제적 동반자로서 미·일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본은 방위비 증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호의적 대응 및 미·일 상호간의 기술협력 강화 등으로 미국의 불신을 점차 해소함으로써 양국의 경제갈등을 완화시키려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양국은 정부, 의회, 기업 등 다각적인 차원에서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일 양국정부는 국내정치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정부간의 이견조정애 노력할 것이다.<sup>34)</sup>

### 3) 수출 및 첨단산업주도에 의한 비교우위 확대

일본은 현재 경제초강대국의 지위로 부상하였다. 1960년 이후 10여년 동안 일본의 국민총생산(GNP)은 연12%의 실질 성장을 이룩하였다. 1988년말에는 일본의 1인당 국민총생산이 2만여달러를 기록하였고, 국제수지면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796억달러에 달하는 등 대외경쟁력을 과시하였다.

33) Jimmy Carter and Yasuhiro Nakasone, *Ensuring Alliance in an Unsure World: The U.S.-Japanese Global Partnership in the 1990s*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eptember 1991), p. 4.

34) Ibid.

일본은 부존자원의 부족과 협소한 국토로 국제환경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유시장체제에 입각한 국제협력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수출주도정책은 경제순환 면에서 해외로부터의 원자재수입→생산·수입대체→수출의 순환을 의미한다. 즉, 전후 일본은 정부주도로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수입원자재를 가공, 중화학 공업제품과 첨단정밀제품을 수출하는 패턴이 정착되었다. 이러한 대외무역정책은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하여 수입의 확대를 통해 상대국과의 마찰을 조정하는 한편, 첨단기술투자에 주력함으로써 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 차원에서 비교우위체제를 확립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 2. 일본 대외정책 전개추이: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 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

#### (1)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역사적 배경

최근 자민당의 중진의원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는 “지금이야말로 대동아공영권을 부활시킬 때”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그는 “현시점에서 군사행동의 필요성은 없으며, 다만 아시아의 인근제국들이 일본의 평화유지군 파병에 저항할 경우 기술 및 경제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하였다.<sup>35)</sup> 이와 같은 일본내 지도층인사의 발언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복고주의적 일본인들은 대동아공영권 구상을 정당화하려 하고, 이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다.<sup>36)</sup>

戰前 일본의 역할증대정책인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1930년 대 말 일본이 아시아 주요지역에 진출할 당시 구상되기 시작하였다. 1940년 8월 1일 마쓰오카(松岡洋石) 당시 외무장관은 세계평화를 실현하고, 동아시아 민족국가의 공존공영을 위해 지리적·인종적·문화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아시아의 지역블럭을 창설하자고 주창하였다. 당시 일본은 「식민지없는 제국주의」를 구상하였다. 이러한 발상의 이면에는 일본의 정치·군사적 진출을 위하여 동남아시아의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중국을 남방침투를 위한 거점으로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일본의 남진정책은 성공을 거둬 1940년 9월 나치 치하의 프랑스정권으로부터 북부 佛印진출의 허가를 획득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대동아공영권 선언은 영토확장을 정당화하고 군사력을 위한 자원공급지를 확보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대동아공영권 구상에 대하여 미키(三木)는 「동아공동체」의 개념이 외부의 공격에 대하여 동아시아 제민족을 단결시키고, 서구 자본주의의 침투가 불러 일으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의 주도 아래 아시

35) *Newsweek*, November 25, 1991, p. 31.

36) *Ibid.*

아제국들을 서방제국주의에 대항시키기 위한 책략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동아시아 공동체는 관세정책, 방위정책, 외교정책 등에서 구성 각국의 폭넓은 자치를 인정하고, 일본은 지도국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다.<sup>37)</sup> 고노에(近衛)수상은 동아시아질서 개념을 일본·만주·중국의 상호원조와 협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질서의 구상으로 규정하고, 그 목적을 공산주의에 대한 공동방위, 경제협력 증진, 그리고 신동아문화 창조 등에 두었다.

일본은 1940년 여름부터 「동아신질서전략」을 실질적으로 추진하여 수세에 몰린 구프랑스령, 구네덜란드령 식민지를 대동아공영권에 편입시키고, 그 범위를 필리핀, 말레이시아, 버마, 태국에까지 확장시켰다.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경제적 측면에서 식민지의 천연자원을 이용하면서 식민지의 시장을 독점하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었다. 또한 정치적인 측면에서 이 구상은 당시 대두되었던 민주주의이념과 제도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戰前의 식민지체제와는 다른 식민지없는 정치·경제공동체를 모색하였다.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明治維新때부터 논의된 서구로부터의 충격(Western Impact)에 대한 위기의식에 대한 자

---

37) James B. Crowley, "Intellectuals vs Visionaries of the New Asian Order," in James B. Morly, *Dilemmas of Growth in Pre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pp. 327~30.

구책인 동시에 자원과 시장의 확보를 위한 군부의 영토확장 욕구의 발로라고 볼 수 있다. 전전의 대동아공영권과 최근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정책을 비교해 볼 때 일본은 아직도 외부의 충격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아직도 제분야를 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자원과 시장확보정책은 전전부터 지금까지 자원빈국인 일본이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일관된 정책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현재 일본은 동남아제국의 자원과 시장의 확보에 의한 산업적 재배치와 세계적 지역블럭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경제공동체 구상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려 하고 있다.

과거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군부가 깊숙히 개입하여 영토확장을 기도하였지만, 최근의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등 국제역할 증대정책은 전전의 皇國史觀이나 군국주의 부활과는 다른 신보수주의자들의 일본 정치·경제적 위상증대를 위한 군사대국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현상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과거와 달리 서구의 경제적인 압력요인이 없으며, 패전의 쓰라린 기억이 잔존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군국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 (2) 정치·안보분야에서의 역할증대

### (가) 국제정치에서의 역할

#### 1)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

일본정부는 자위대 해외파병의 정당성을 1991년 「防衛白書」에 처음으로 명시하였다. 이 백서에 의하면 걸프전쟁과 관련하여 페르시아만에 부설된 기뢰를 제거하기 위해 해상자위대의 소해정부대를 파병했다고 기술하였다. 다시말해 무력행사의 목적이 아닌 파견은 해외파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으로써 해외파병을 정당화하면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강한 참여의사를 표명하였다. 해상자위대의 파병계획을 처음으로 피력했던 정치가는 나카소네였으며, 이는 1987년 이란·이라크 전쟁의 부산물인 기뢰의 제거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본은 1991년 4월 걸프전으로 인한 이라크의 기뢰를 제거하기 위하여 걸프만에 6척의 해상자위대 소해정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세계평화를 위해서 일본에게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하며 일본의 참여를 고무시켰다. 미국의 의도는 세계 주요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국의 주도 아래 일본의 지지와 협력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일본은 PKO법 제정의 배경을 국제적 공헌, 특히 인적 공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군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제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지난 걸프전 당시 일본은 126억달러라는 막대한 전쟁비용을 지불하고도 서방국가들로부터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았을 뿐 아니라, 전쟁비용의 부담에 있어서 미국의 요구를 거의 수용해야만 했다.

1991년 「防衛白書」에 의하면 일본은 최근 평화유지군 파견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 국력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해와 평가를 얻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일본 국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찬성 45.5%, 반대 37.9%로 긍정적 평가가 내려져 있는 상태이다.

미야자와(宮澤喜一)는 총재선거를 앞두고 오자와(小澤) 전 자민당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의 개헌론을 용인하였다. 이는 유엔군에 자위대가 참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 9조도 개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미야자와가 자민당의 뉴리더로서 유엔평화유지군 참가에 대한 정책구상을 발표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위대의 해외파병(캄보디아 등)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포함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은 1991년 12월 3일 중의원을 통과한 후, 1992년 6월 9일 참의원을 거쳐, 동년 6월 15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으로 최종 성립되었다. 현재 자민당의 가네마루, 오자와 등 신보수주의세력이 유엔평화유지군 참여를 꾸준히 주장하고 있으나, 법안의 참의원 통과과정에서 캄보디아의 자위대파병은 주력부대(전투부대)의 파병이 아닌 후방부대의 공병, 병참, 통신업무 등에 국한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파병에 있어서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평화유지군의 주요 임무(전방업무)

참여를 보류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3년 후 완전 재검토하기로 한 점 등이다. 이는 자민당이 공명당과 민사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이밖에도 파견대상지역에 휴전이 성립되어 있을 것, 분쟁당사자들이 자위대 파견에 동의할 것, 중립적 활동을 할 것, 무기사용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칠 것, 그리고 휴전이 깨질 경우 즉각 철수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평화유지군 5원칙이 수립되었다. 이는 군사적 색채가 짙은 조항을 제외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 반응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판단된다.

최근 일본은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미국의 상대적 약화와 소련의 붕괴로 생긴 동북아의 힘의 공백을 자신의 정치, 군사력으로 메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는 1991년 12월 12일 히요시 아키라 방위청장관이 “미국이 (태평양)전선에 배치한 군사력을 축소한다면 일본은 미국 군사력이 수행해왔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수준으로 국방비를 증액시켜야 한다”고 언급한데서도 드러난다.<sup>38)</sup>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일본 자위대는 러시아해군의 위협이 사실상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잠수함무기를 현대화하고 이지스구축함(720t)을 취역시킬 예정(1993. 3)으로 있는 등 군사력 강화를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戰前의 군국주의로 복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강력

38) 「朝日新聞」, 1991. 12. 13.

한 군사국가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한편, 일본의 평화유지군 파병은 미국의 역할분담요구에 의한 것이었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이 신세계질서를 수립하는데 있어 보조적 역할을 하는데 그 영향력이 한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군사평론가 마루야마 히로유키(丸山活行)는 “현재의 유엔이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기구이므로 일본이 평화유지활동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수행이 테두리내에서 행동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sup>39)</sup> 따라서 일본 내에는 독자적인 평화유지활동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미국과의 협조 속에 점진적으로 영역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 2)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 시도

미야자와 수상은 1992년 2월 1일 유엔에서 일본 정부의 영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은 1997년경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목표로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sup>40)</sup> 일본은 최근 일곱번째로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피선되었다. 일본은 1970년대부터 인도, 브라질 등과 함께 상임이사회의 개편을 주장해왔다.

39) 「東亞日報」, 1992. 6. 14.

40) 「朝日新聞」, 1992. 2. 1.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지역분쟁 해결에 있어서 유엔기능의 중요성을 인식, 유엔의 제도적 장치안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아시아지역 내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 차민당의원은 상임이사국 지위확보의 가장 큰 이유로 정세변화를 예로 들었다. 즉 상임이사국 가운데 하나인 소련이 소멸되었기 때문에 유엔체제는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또한 소련 뿐만 아니라 중국도 일본으로부터 거액의 원조를 받는 개발도상국 수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타국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세계 2, 3, 4위의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독일, 이탈리아가 정치대국이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언급하였다.<sup>41)</sup>

이를 위하여 기존 5강이 적으로 싸웠던 일본, 독일,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핀란드 등에 대한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이른바 「敵國조항」(유엔헌장 제53조)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이 이 적국조항을 처음 거론한 것은 1991년 9월 나카야마 다로(中山太郎) 외상의 유엔총회연설에서인데, 그는 공개적으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이른바 같은 적국인

41) 鈴木宗男, 「世界が變わる, 日本が變わる」(東京: 講談社, 1992), pp. 190~91.

독일, 이탈리아 등에 공동보조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독일은 이에 반대하였다. 독일은 1990년 통일로 민족적 염원을 이루었으며, 헌장개정 주장으로 주변국의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도 대부분 “이해는 가지만 비현실적”이라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은 일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1991년 12월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미·소외무장관회담에서 세바르드나제 당시 소련 외무장관이 “적국조항을 무효로 할 것을 양국 성명에 포함시키자”는 제안을 하였다. 일본의 경제원조 획득을 목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이 같은 소련측 제안에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법적 효과가 의문”이라며 일단 거부하였다. 러시아는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려고 희망하고 있는 것은 세계의 세력균형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였다.<sup>42)</sup> 이는 최근 일본과 러시아의 북방영토협상의 난항때문이며 양국의 협상이 원만히 진전될 경우 러시아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위획득에 대하여 지지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이 적국조항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표면적 이유는 유엔에 대한 일본의 분담금과 관련되어 있다. 1991년 일본의 분

42) 러시아의 「라보타야 트리브나」 신문 보도, 「朝日新聞」, 1992. 9. 23.

담금은 1억 5백만달러로 미국의 2억 7천2백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인데 유엔에서 적국취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일본의 적국조항 삭제의도는 현존 안보리 상임이사국체제를 와해시켜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막강한 경제력을 구축한 일본은 냉전구조의 붕괴와 함께 주요 국제문제에서 유엔의 역할이 점차 증대되는 점을 감안, 적극적인 유엔공약을 통해 자국의 국제적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같은 일본의 주장은 지난 1977년 카터 미대통령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은 바 있으며, 1991년 6월 28일 일본을 방문한 멀로니 캐나다총리로부터도 “일본은 상임이사국 자격이 충분하다”는 발언을 얻어냈다.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국조항 삭제는 유엔의 평화수호목적에 합당하지 않으며, 영국, 프랑스 등을 자극하고, 상임이사국을 추가할 경우 비동맹국에서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최근 일본의 상임이사국 확보에 대하여 이것을 일본의 영향력 증대로 보고 있어 여타 국가들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볼턴 미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1992년 3월 25일 하원의외교위원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생각”이라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참가를 위해 유엔헌장의 적국조항을 개정한다면 다른 많은 조항의 개정요구도 나올 우려가 있다

고 지적, “일본의 상임이사국 참가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지에 대하여 현재로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 참여에 의한 인적 공헌과 자금 동원을 통하여, 중·장기목표로서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추구하고 있다.

#### (나) 지역분쟁 해결에의 참여

냉전체제가 붕괴되면서 위상이 높아진 유엔은 세계의 지역 분쟁에 평화유지군을 잇달아 파견하는 등 세계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43)</sup> 유엔은 걸프전 이후 1991년 쿠웨이트, 이라크, 앙골라, 엘살바도르 등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으며, 1992년 2월 21일에도 민족간 내전을 벌이고 있는 유고슬라비아에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로 한데 이어, 2월 28일에는 캄보디아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유지군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20여개국이 참가한 총 2만 2천명 규모의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군은 유엔 캄보디아 과도행정기구(UNTAC)라는 명칭으로 캄보디아에서 총선이 실시되고 민간 정부가 수립될 1993년 5월까지 18개월 동안 캄보디아를 잠정 통치하게 된다.

유엔은 1991년 1월 31일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정상회담에서 “지역분쟁에 강대국들이 개별적으로 개입, 간섭하는 대

43) 「外交靑書」(日本外務省 平成3年版, 1992年), p. 70.

신 유엔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로 일단 입장을 정한 바 있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군 협력법안을 통과시킴으로 유엔의 분쟁해결 역할 속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함과 동시에 아시아지역(캄보디아)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프놈펜정권의 훈센총리는 1992년 3월 22일 와타나베 일본 외상에게 자위대파병을 요청한데 이어 미야자와총리에게도 같은 주문을 하였다. 캄보디아 지도층은 일본 자위대의 파병이 卍차관과 정치후원세력 확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캄보디아가 일본에 지원을 요청한 배경은 우선 역사상 일본 지배기간이 길지 않아 반일 감정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점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내전을 겪는 동안 취했던 일본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주요 강대국들이 내전중 어느 한편이나 양쪽을 선택, 무기제공을 해왔던 것에 비해 일본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더구나 일본은 캄보디아전쟁부흥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관심의 초점은 캄보디아측보다 일본측에 있다. 유엔캄보디아 잠정행정기구를 이끄는 대표에 일본인 아카시 야스시(明石康)가 취임했다. 아카시는 캄보디아로 가기전 본국에 전쟁부흥분담금을 요구했으며, 일본국회에 출석하여 자위대 해외파병을 합법화하는 유엔평화활동 협력법안의 조기통과를 요청하였다. 일본정부는 「캄보디아 국제부흥회의」의 동

경개최를 제창하였으며, 캄보디아에 약 40억엔의 대외개발원조를 제공할 것을 결정하였다.<sup>44)</sup> 일본기업들은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 투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에 투자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이같은 움직임에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시아를 우리 편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미야자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일면을 발견할 수 있다.<sup>45)</sup>

#### (다) 미·일안보관계 재조정

##### 1) 일본의 방위개념 변화

최근 미·일안보관계는 양국의 공동의 적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미·일 군사동맹체제는 그 존재 의의가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세계질서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군사안보 및 경제협력, 즉 세계적 동반자관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탈냉전과 미국 경제력의 약화 및 일본 경제력의 확대상황에서 새로운 동북아질서에 적응하기 위하여 모색되고 있는 미·일간의 역할재조정문제는 안보면에서 일본자위대의 국제적 역할증대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의 방위정책은 전후 일본 및

44) 「朝日新聞」, 1992. 1. 24.

45) 「日經新聞」, 1992. 5. 16.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고려하면서 미국의 주도 아래 구상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52년 맥아더의 점령정치에서 벗어난 이후 근 40여년간의 일본의 안보태세는 크게 두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1970년대까지로 일본열도방위 지향적인 「요시다독트린」의 전수방위방침이 주요 안보정책을 이루었으며, 둘째는 1970년대말 이래 소련의 극동병력(해군) 증강과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형성된 신냉전체제에서 미·일 안보협조체제를 근간으로 일본의 방위정책이 구상되어 온 시기였다.

專守防衛는 일본방위의 기본방침으로서, 상대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국한되며 또 보유하는 방위력도 자위를 위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그러한 전수방위의 기조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일본의 경제력 향상, 그리고 미국 국력의 상대적 약화에 따라 지역방위에 대한 자신의 안보역할을 확대하여 왔다. 이러한 점진적 방위력 증강정책에 따라 일본은 전후 네 차례에 걸친 방위력 증강방침을 채택, 제1차 방위력 3개년계획(1958~1960), 제2차 방위력 5개년계획(1962~1966), 제3차 방위력 5개년계획(1967~1971), 제4차 방위력 5개년계획(1972~1976)을 실시하였다.

4次防의 추진상황이 차질을 빚자 방위청은 防衛大綱을 결정한 후 53·56중기업무계획을 세우고 이를 발전시켜 59중기

업무계획(1986~1990)을 구상하였다. 4次防과 1976년 防衛大綱에서 상정한 자위대의 전력은 일본정부가 위협대상으로 인식하는 ①핵공격, ②통상병력의 대규모 공격, ③통상병력에 의한 사전에 계획된 소규모 공격, ④통상병력에 의한 우발적 소규모 공격, ⑤불법적(영공·영해) 군사행위, ⑥간접침략(소요) 중에서 어느 선까지 대처하느냐에 의해 차이가 있었다. 4次防에서는 자위대의 전력은 ④⑤⑥까지를 대상으로 삼았고, ①②는 미국에 의존하기로 결정하였다. 반면, 1976년의 大綱에서는 ①②③은 미국전력에 의지하고 일본은 ④⑤⑥까지만 담당한다는 것으로서, 4次防 보다 대상을 한단계 낮춘 것이다.<sup>46)</sup> 일본정부가 1976년에 이와 같이 「비둘기의」 大綱계획을 세웠던 것은 동북아정세가 데탕트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이러한 방위태세는 1978년 소련이 미·일·중 3각전력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북방도서를 군사기지화 하고, 아프카니스탄을 침공(1979년)함으로써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스즈끼(鈴木) 수상은 해상교통로인 1,000해리 방위를 선언(1981)하였는 바, 이는 전수방위에서 지역방위개념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그리고 1983년 나카소네(中曾根) 수상은 일본 주변해협의 3개 해협(소야, 쓰루가, 쓰시

46) 길승흠, “미·일안보의 변화와 일본의 선택,” (대한정책개발연구소 세미나 발표 논문, 1990. 10. 30).

마)의 봉쇄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해협봉쇄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노력책의 일환으로 유사시 소련 태평양함대를 동해(일본해)에 묶어놓고 미국은 태평양의 制海權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미국의 대소봉쇄전략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가담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방위정책은 미국과의 동맹체제내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동북아 안정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나카소네 내각이 채택한 중기방위력 정비계획(1986~90)은 일본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으로서, 장비나 무기는 군수방위용을 넘어 공격용으로도 전환이 가능하고, 영해뿐만 아니라 해상 攻防能力까지 강화하고 있다. 이 계획의 총경비는 18조 4천억엔으로 이 기간중 GNP의 1% 한도를 초과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일본은 1991년 예산에서 방위예산(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5.8% 증액시켰고 1992년도 방위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5.38%가 늘어난 4조 6천220억엔으로 책정되었다.<sup>47)</sup> 또한 방위청은 1991년에서 1995년까지의 신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총 22조 7천5백억엔을 들여 호위함 현대화, 핵무기탑재가능 최신예미사일 도입, F-15 국산화 등을 서두르고

47) 그러나 최근 일본정부는 중기방위력증강계획 기간중(1991~95) 1천억엔의 방위비삭감계획을 밝혔다. 이는 일본이 걸프전비용 분담금으로 미국에 1백26억달러를 지급하면서 국민에 공약한 삭감액이다. 자위대병력과 방위비삭감은 냉전붕괴 이후 일본에서 최초로 논의되는 것으로 「방위족」의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朝日新聞」, 1992. 1. 29.

있다.<sup>48)</sup>

일본정부는 걸프전을 계기로 1991년 4월 해상자위대의 소해정을 중동에 파견한데 이어 1992년 6월에는 유엔평화유지 활동 협력방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등 자위대의 해외파병 실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해외파병은 자신의 방위개념을 「전수방위」에서 「지역방위」로 전환한데 이어, 1990년대에는 세계적 차원인 「전진방어」전략으로 전화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sup>49)</sup>

## 2) 미·일 안보협력관계 재조정

지난 반세기동안 일본의 동맹국이었던 미국이 현재 자국의 경제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일본국민들의 신뢰감이 저하되고 있으며 이러한 신뢰감이 회복되지 않는 한·미·일관계는 새로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최근 일본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부시 미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도쿄선언」(1992. 1. 9)의 채택을 통해 미·일관계를 세계적 동반자관계로 천명하고 안보 및

48) 일본 자위대의 시쿠마 마코토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동시베리아지역의 러시아 해군 및 공군이 현대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호카이도(北海道)에 첨단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표명한 바 있다. 여기에 투입될 장비들은 1988년형 지대함 유도미사일 8기, 91년형 견착식 지대공 스텔저미사일 13기, 1990년형 탱크 20대 등이다. 「朝日新聞」, 1992. 1. 22.

49) 히요시 아키라(日吉章) 방위청장관은 미국이 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을 축소 내지 철수하는 경우 힘의 공백상태를 일본이 채워야 한다고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였다. 「朝日新聞」, 1991. 12. 12.

경제정책 전반에 걸쳐 상호협력을 강조하였다.

미국은 아시아지역 안보에 있어서 핵심세력인 일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안보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일본의 주일미군 경비부담의 확대에 대해서 합의하였다. 일본은 안보무임승차론에 대하여 최근 주일미군경비의 35~40%를 부담하기 때문에 미·일관계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쌍무적인 대등한 관계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50)</sup> 이러한 면에서 미국의 전진배치 군사전략과 일본의 재정기여도에 따라 미·일 양국관계가 새로운 동반자차원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제시되었다고 보여진다.

*The New York Times*는 1992년 3월 8일 미국방부의 이른바 「국방계획지침」이 냉전체제의 붕괴 이후 미국을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패권주의」 추구를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특히 동 문서는 일본과 독일 등 지역강대국이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질서에 도전하는 것을 허용치 않고, 일본과 독일을 미국이 이끄는 집단안보보장형태의 체제로 끌어들이며, 유엔의 활동을 인정하되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미국무부는 1992년 5월 24일 일본과 독일의 부상을 견제하면서 세계유일 강대국의 위치를 확고히 하려던 냉전 이후의 신세계질서전략안을 수정했다고 언급하였다.<sup>51)</sup> 체니

50) 「世界週報」, 1992. 3. 10.

51) *New York Times*, May 5, 1992.

미국방장관이 승인한 신국방계획지침은 미래의 모든 잠재적 경쟁국의 부상을 막는다는 당초의 목표를 수정하는 대신, 분쟁해결을 위한 유엔활동 강화를 강조하였다. 이는 국내여론, 국방비 삭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보다 균형잡힌 전략계획을 수립한 것이나, 기존 미국의 이익보호를 위해서는 단독군사 행동을 계속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미국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제고 및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모색하는 것은 유럽의 경제적·정치적 통합과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정치적 독립추세(일본의 독자안보론)에 대한 견제필요성이라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맞물려 있다고 이해된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감안하여 일본에 대한 전진배치를 유지하면서도 이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방위비 분담요구를 확대할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해로안보정책과 유엔평화유지군 파병과 같은 활동에 대하여 지지를 보냄으로써 일본의 보조적 역할의 확대를 도모하되 그에 대한 정책적 리더쉽은 계속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일본이 군사대국화 내지는 핵강국이 되려 할 경우, 인접국가인 한국, 중국, 러시아 및 아시아제국과 유럽의 반발 내지는 견제가 강하게 대두될 것이므로 미국은 일본을 상당기간 자신의 안보 우산에 묶어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미·일관계의 재조정에서 있어서 미국과 책임분담, 일본식 경제모델의 확산, 아·태지역에서의 경쟁 및 중·러관계에서 미·일갈등 가능성 증대 등에 대하여 폭넓은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미국은 향후

세계질서를 자신의 주도 아래 유지한다는 구도 아래 일본의 요구를 부분적 점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00년대의 아·태지역의 국제질서는 미국의 우위가 유지된 상태하의 미·일 兩頭體制(bigemony)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3) 경제분야에서의 역할증대

#### (가) 세계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최근 일본은 유럽공동체를 비롯한 지역경제 블럭화 추세, 구소련 및 동구의 자본주의체제 편입문제 등 세계적 차원의 신경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신세계경제질서의 변화와 관련, 일본은 유엔과 국제통화기금 등 국제기구가 사실상 미국의 관리하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sup>52)</sup>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정부는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같은 주요 국제금융기관에서 미국과의 협력하여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경제 성장 감소추세를 치유하기 위한 경기부양의 기관차 역할을 주로 일본과 독일에게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sup>53)</sup> 예를 들면, 미국은 서방선진7개국들에 240억달러에 달하는 국제통화기금의

52) 伊藤誠, “新世界秩序のなかの國際貢獻,” 「世界」(1992年 7月), p. 199.

53) 미국은 독일이 통일비용 조달에 따른 인플레이 억제에 대해 가장 높은 이자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국제통화기금을 내세워 이자율 인하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 원조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일본은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를 북방영토문제와 연계시켜 자국의 입장을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일본은 「잠정의정서에 관한 합의」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가트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보호무역주의 압력에 대처할 수 있는 「세계무역기구」로의 전환을 희망하고 있다.<sup>54)</sup> 일본은 첫째, 자유무역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을 필수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둘째, 가트의 법적 측면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인세, 보조금제도 등을 도입하고 「구조조정기금」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이것이 보호무역 또는 관리무역의 필요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전제하에 일본은 국내적 규제, 행정절차 등 제안법률을 국제적 기준에 조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넷째, 일본은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하여 폐쇄적이 아닌 개방적인 자유무역이 행해져야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협력하여 기술과 자본의 제공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55)</sup>

현재 일본은 국제통화기금, 가트, 서방선진7개국회의 등 무역·금융부문에서 경제력에 걸맞는 경제대국의 역할을 행사하

54) 船橋洋一, 「日本戰略宣言：シベリアン大國をめぞして」(東京：講談社, 1992), p. 276.

55) 위의 책, pp. 287~88.

려 하고 있다.<sup>56)</sup> 이와 관련 나카소네 등은 선진7개국이 「신자유무역헌장」을 제정하여 강대국 중심의 무역협력체제를 수립할 것을 주장한 바 있으며, 반면 「朝日新聞」 편집위원 후나바시(船橋) 등은 후진국과 개도국의 상황을 감안한 세계적 무역체제를 주장하였다. 일본은 자유무역의 수호야말로 자본주의체제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협조를 통한 미·일·독 3국체제의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3국체제는 기업활동의 세계화, 국제금융, 자본이동의 활성화, 서비스무역의 확대, 통신정보기술의 발전 등에 의한 3국의 상호의존도를 심화시켜 세계경제의 안정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는 것이다.<sup>57)</sup>

#### (나) 지역경제에 있어서 일본의 역할

##### 1) 대외원조 및 투자확대

일본의 무역흑자는 최근 구조면에서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이상적인 무역확대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1991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한국과의 거래에서 73억 4천9백만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일본전체의 무역흑자 782억달러 가운데 33%인 258억달러가 아시아국가와의 교역으로 인

56) 일본은 1990년 부터 IMF에서 미국 다음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The Koji Taira, "Japan, an Imminent Hegem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3 (January 1991), p. 160.

57) 日本貿易振興會, 「ジェトロ白書: 世界と日本の貿易」(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1). pp. 92~94.

한 흑자이다.<sup>58)</sup> 1951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의 대외직접투자의 구성비는 북미 40.3%, 유럽 16.2%, 아시아 17.3%이었다.

일본은 최근 연간 약 100억달러에 달하는 개발원조의 대부분을 아시아 및 중동국가에 제공하고 있다. 일본의 개발원조는 쌍무적 개발원조 형태로 60% 정도가 직접차관이며 40% 정도는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의 증여이다.<sup>59)</sup> 일본정부는 개발원조를 국민총생산의 0.3%에서 0.7%까지 증액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 원조대상국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1992년 일본 개발원조계획의 중점은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놓여 있으며 「아시아중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베트남 개발원조가 실시될 경우, 일본과 베트남과의 관계는 1978년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 이래 14년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또한 일본은 캄보디아에 개발원조를 제공하여 캄보디아경제 부흥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오카자키 히사히코(岡崎久彦) 駐태국 일본대사는 일본의 새로운 대아시아전략은 “일본경제의 산업 재배치”라고 언급하였다. 기존의 투자지역이었던 동남아국가연합제국으로부터 새로운 투자지역, 즉 캄보디아와 베트남으로 일본 산업을 재배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는 경제·정치적 역할확대를 위한 전략적 사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58) 「中央日報」, 1992. 2. 5.

59) アン・テイ・バク・チェエット, “日本の對外援助直接投資とアジア諸國の經濟發展,” 「世界經濟評論」(1992年 6月), p. 62.

## 2)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축 노력

일본은 1960년대 관세동맹(태평양자유무역지대, 1966)을 시작으로 하여 아·태지역경제권 형성에 대한 구상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왔다. 1966년 고지마(小島 清)교수는 유럽경제공동체(EEC)를 모델로 하여 「태평양 자유무역지대」(Pacific Free Trade Area)안을 구상하였다.<sup>60)</sup> 이 구상은 태평양지역 선진제국인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를 가맹국으로 하는 관세통합안이었으나 다른 나라들의 거부로 실행되지는 못하였다.

고지마안의 대안으로서 오오히라(大平) 수상은 1979년 11월 14일 동아·태경제권 구상의 일환으로 「環太平洋連帶構想」을 발표하였다.<sup>61)</sup> 오오히라의 「환태평양연대구상」은 일본이 전후 처음으로 제시한 자원·에너지 정책을 포함한 포괄적 총합경제전략인 동시에 안보전략의 핵심구상이었다.<sup>62)</sup> 이러한

60) Kiyoshi Kojima,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 A Proposal," paper publish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Australian Committee of the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September 1976); Bernard K. Gordon, "Japan and the Pacific Basin Proposal," *Korea and World Affairs*, vol. 5, no. 2 (Summer 1981); 安清市, "태평양지역 협력 체제 구상에 대한 주요 당사자들의 입장과 이해관계," 「제5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서울: 한국정치학회, 1983), pp. 433~34.

61) 「韓日經協」(1991년 4월), pp. 2~20; 尹正錫, "大平정권의 권력구조와 일본 외교과제 우선순위," 「政策研究」(1979년 1월), pp. 39~51.

62) Tsuno Akada,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XXXI, no. 4 (April 1991), pp. 324~27.

구상은 아·태국가와의 경제적 유대의 결성을 통하여 소련의 아시아진출과 동남아지역에서의 공산화 파급을 저지하고 동 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아시아경제연구소와 소련동구경제연구소 등에서 「환일본해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sup>63)</sup> 환일본해란 일본, 북한, 한국을 주요 구성국으로 해서 일본해를 공통의 內海로 하고 있는 지역이다. 소련의 극동지역(특히 연해주, 하바로프스크지방, 사할린주, 아무르주), 중국의 東北三省(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이 중심지역이 되는 「환일본해경제권」은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경제권에 속한다.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은 현재 아시아의 육지면적중 약 20%, 전인구의 약 10%(약 2억 9천만명), 약 3조달러에 달하는 국민총생산액이 집중되어 있는 대경제권이다.<sup>64)</sup> 「환일본해경제권」은 일본이 이 지역에 있어서 자국의 고도기술과 자본, 한국의 기술과 자본, 소련 극동의 풍부한 천연자원(석탄, 천연가스, 비철금속, 목재, 수산물), 중국의 농산물과 노동력, 북한의 광산물과 노동력을 상호보완하여 互惠의 원칙 하에 협력과 국제적 분업을 확대발전시키기 위해 제안한 것이다.

63) “環日本海經濟圏における國際經濟協力,” 「ソ聯東歐貿易調査月報」(1990年 4月), pp. 22~29.

64) 「韓日經協」(1991年 4月), p. 3.

동 구상은 역내에서 냉전이 종식되고 긴장이 완화됨으로써 실현가능성이 점차 제고되고 있다. 고르바초프 전 소련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 연설(1986. 8)에서 소련이 아시아·태평양 국가임을 선언하고, 소련 극동지방의 경제발전을 일본을 필두로 하는 태평양 제국의 거대한 경제력과 연계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동경을 방문하여 「동북아시아협력지대」의 창설을 제창하고, 이 협력지대가 태평양지역 경제통합의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이 의도하는 지역경제권형성 구상은 경제블럭화 추세에 따라, 특히 유럽공동체의 통합이 가속화될 경우 급속히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이 그들의 의도대로 지역경제권을 창설하기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견제와 의구심을 극복할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통해서 역내의 자유로운 무역과 투자를 전제로 한 「자유무역경제권」을 주창하였다.<sup>65)</sup> 이와 관련 일본은 최근 말레이시아가 제안한 바 있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를 점진적으로 해체하여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와 달리 동북아시아

65) 와타나베(渡邊恒三) 통산성장관은 1991년 11월 12일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 연설에서 자유무역 및 투자 실현 등을 위한 지역경제권화를 주장하였다. 「朝日新聞」, 1991. 11. 12.

에서의 경제협력은 미국을 배제한 배타적인 지역주의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중국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 (다) 미·일경제관계 조정

##### 1) 미국의 무역 재정적자에 대한 간접지원과 직접투자 확대

부시 미대통령과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1992년 1월 9일 정상회담 후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일관계를 정리한 「도쿄선언」과 미국의 무역·재정적자 해소책인 「행동계획」(Action Plan)을 통해 미·일경제관계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를 연간 2만대 추가 수입하고(1991년 3만 5천대 수입), 자동차부품 현지구매량을 1994년까지 190억달러로 확대(1991년 70억달러)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자동차와 부품은 미·일 무역불균형의 상징으로, 일본 자동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이 30%를 넘는데 비해 미국자동차의 일본시장 점유율은 0.5%에 불과하다. 1990년 일본의 무역흑자 635억달러 중 380억달러가 대미무역흑자이고 그 가운데 305억달러가 자동차수출로 인한 것이다. 미·일이 190억달러의 증액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309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자동차부문 대일무역적자는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에 종이,

판유리, 컴퓨터, 반도체, 금융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였다. 이 밖에 일본은 미국의 개도국 수출지원을 위해 50억달러 규모의 수출보험을 개설하고, 차량수입기준 질차간소화와 미국의 초전도 초대형입자가속기 건설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마찰문제 해결은 양국간의 마찰 해소일 뿐 아니라 국제경제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은 구조조정협약(SII)를 통해서 지속적인 의견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일본의 수출에 있어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6년 38.9%로 가장 높았으며, 1990년에는 31.7%를 기록, 감소추세에 있다. 1989년 말 일본의 해외 직접투자액은 총 2,400억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미국에 대한 투자는 1,000억달러 이상이다.<sup>66)</sup> 최근 일본의 해외투자는 미국을 비롯, 유럽과 아시아 등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다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00년경 미국 제조업의 20%가 외국기업에 의하여 소유될 것으로 보고, 미국 수출의 25%는 일본기업의 제품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미국내 일본계 고용자는 현재 30만명에서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sup>67)</sup> 이와 같이 일본은 대미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미국경제에 또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66) 船橋洋一, 「日本戰略宣言」, p. 133.

67) 위의 책, p. 18.

## 2) 구조조정협약(SII)

1989년 부시 미대통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미·일 구조조정 협약은 다섯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1990년 6월 최종보고서가 도출되었다. 협약 초기 일본은 미국의 구조조정 요구가 일본 사회, 문화, 가치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내정간섭이라고 반박하는 입장을 취하기도 했으나, 통상법 301조를 내세운 미국의 공세에 밀려 협약에 응하는 대신 미국경제 역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대응논리를 전개하였다.<sup>68)</sup>

미국은 그간 대일 무역불균형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으나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그 개선폭이 미흡하다고 판단, 미·일 구조조정협약의 확대 및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은 지금까지의 일괄적인 협의회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주로 이행사항을 확인하는 실리위주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미국의 대일 요구사항은 공공투자 확대, 유통상 규제완화, 배타적 거래관행 제거 등이며, 일본의 대미 요구사항은 재정적자 축소, 저축률 향상, 수출 드라이브정책 확대, 대일무역의 정부규제 완화 등이다. 최근 미·일 양국은 「도쿄선언」을 채택, 양국의 무역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조정협약의 확대 운용은 물론 구체적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일본은 미국

68) 최근 미국은 일본이 불성실한 정책을 수행할 경우, 통상법 301조를 발동시키겠다고 위협하였으나, 현재까지 일본은 미국에 맞대응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Jagdish Bhagwati, "Jumpstarting GATT," *Current Views*, vol. 11, no. 3 (1991), pp. 38-48.

과의 구조조정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유럽공동체의 팽창에 따라 미·일 양자간의 협의에 의한 구조조정문제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하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통한 다자적 구조협약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된다.<sup>69)</sup>

#### 나. 국제적 역할증대의 방향: 정치군사 역할증대 가능성

##### (1) 촉진요인

##### (가) 대내요인

##### 1) 일본의 경제력 강화

1991년 9월 일본정부의 월례경제보고 각료회의에서 경제기획청은 1986년 12월부터 시작된 호경기가 종래의 전후 최장기간 호경기였던 「이자나기경기」(1965. 11~1970. 7)의 57개월 기록을 깨고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작년 4/4분기 중 일본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기록했다는 사실이 1992년 3월 19일 경제기획청의 월례보고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 기간중 일본경제는 前期대비 0.042% 마이너스성장을 하였는데 이는 2년 6개월만의 마이너스성장이었다.<sup>70)</sup>

전반적으로 기업도산건수도 1991년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그 가운데 1980년대 부동산투자를 위해 은행융자를 받았던

69) 「산업경제정보」, 제1337호 (92-27), p. 8.

70) 「朝日新聞」, 1992. 3. 20.

중소기업들의 도산이 두드러졌다.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곳은 증권업계이다. 1989년 4만엔대까지 육박했던 동경 증권거래소 1부 평균주가가 1992년 3월 16일에는 2만엔대로 하락하였다. 지난 1989년 이래 동경 주식시장의 주가는 50%나 하락, 일본경제의 종말에 대한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 2백 25종의 니케이 지수(日經平均株價)가 연일 하락하고 있는 것은 값싼 자본과 대대적인 자본투기에 의해 조장된 일본의 이른바 「거품경제」가 최근 스스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니케이 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은 무절제한 경제운영의 결과라기보다는 일본정부관리와 기업인들의 일본경제에 대한 외국의 증대되는 영향력 행사와 비판으로부터 일본경제를 격리·회생시키려는 의지의 반영이라고 보여진다. 즉 일본인이 출자한 해외자본이 국내로 회수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관리가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주가의 하락은 일본의 거품경제를 위축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일본의 대외방어력의 강화를 의미한다.<sup>71)</sup> 일본경제연구센터의 가나모리 히사오(金森久雄) 회장은 오일쇼크와 엔고 때도 일본경제가 위기를 겪은 적이 없듯이 일본경제는 높은 적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 동경주가 폭락, 마이너스

---

71) 그러나 일본이 해외투자자본을 회수하고 일본경제에 참여하는 외국기업들을 배제 혹은 제재하는 폐쇄적인 사회로 계속 나간다면 일본은 장기적으로 세계기업들의 질서의 대상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일본의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경제성장 등의 경기후퇴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1988년 전년대비 16.8%, 1989년 14.6%, 1990년 12.1%로 증가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991년 1월부터 10월까지 일본의 무역흑자 총액은 7백 28억달러이며 이중 33%인 2백58억달러가 아시아지역의 무역흑자이다.<sup>72)</sup> 즉 미국의 비중이 줄면서 대아시아·유럽 무역흑자가 급증하기 때문인데, 이는 특정지역에 치우치지 않는 무역구조를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991년 4월부터 1992년 2월까지 일본의 무역흑자 누계는 1천 5억달러로 당초 일본정부가 추진했던 1992년 3월 결산까지의 1년 무역흑자액 9백85억달러를 1개월 앞당겨 달성했다.

이런 면에서 최근 일본의 경기후퇴가 경기의 순환 그리고 거품경제의 해소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 일본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2) 「신보수주의」의 대두

신보수주의는 기존의 보수지향적 맥락에서 정치·경제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동시에 민족주의 강화를 통하여 국제적 역할증대(PKO 파병 등)를 모색하려는 1970년대 말부터 비롯

72) 1951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의 대외투자 구성비는 북미 40.3%, 유럽 16.2%, 아시아 17.3%이었다. 植松忠博, 「日本の選擇」(東京: 同文館, 1990), p. 298.

된 새로운 사조이다.<sup>73)</sup> 이러한 신사조 형성에는 나카소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최근에도 그는 다케시다, 가네마루 등과 함께 신보수주의의 확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가) 정치개혁적 新思考

최근 나카소네 등 일본의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정치가들이 모색하는 방향은 자민당의 구조적 현상인 금권정치(金權政治)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1970년대 말부터 비롯된 신사조였다고 보여진다. 1970년대 중반 자민당은 다나카(田中) 총리가 정치부정사건(다나카 금맥사건, 1974)에 연루되어 사임하였으며, 또한 미키(三木) 총리 당시 자민당은 록히드사(洛克希드社) 사건으로 해체위기에 맞았기 때문에 정치淨化(政治淨化)를 위한 정치개혁안이 대두되었다. 자민당은 요시다와 이케다의 고도성장정책의 성공을 기반으로 유지되어 온 여당의 지위를 지키는 것이 최선의 과제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수동적이라는 약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자민당은 국민의 정치적 토론의 장을 확대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특정이익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구도하에서 자민당은 과감한 개혁은 커녕 일본정국을 소극적으로 이끌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73) 오오다케 히데오(大嶽秀夫)는 신보수주의를 경제적 자유주의(laissez faire liberalism), 대외적 전통주의(nationalism), 사회적 자유주의로 보았으며, 여기에 나카소네의 일본의 국제화국가의 의지를 추가시켰다. 大嶽秀夫, “中曾根政治のイテオロキーとその國內政治的背景,” 「同人誌レウアイアサン特輯: 新保守主義の擡頭」(1987年 第1號), pp. 73~91.

일본의 보수와 혁신 양대세력은 1955년 사회주의진영 좌우 양파의 사회당통합과 이에 자극받은 보수주의진영 자유당과 민주당의 합당이 추진되어 소위 「55년체제」의 양당제도로 정착되었다. 보수합당의 또 다른 요인은 재계의 압력이었다. 일본 經團連 등 재계가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사회당의 통합과 노동운동에 대처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수정권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55년체제의 사회당은 사회주의의 이념적 논리에 기반하고 있으나 자민당은 현실적 「이익정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민당의 정치사상은 중용의 정신, 국가주의, 민주주의 옹호, 자본주의와 복지국가의 지향 등이다. 이러한 55년체제는 1950년대의 保·革葛藤과 국민통합, 1960년대에는 소득증대와 안보소동, 1970년대의 록히드스캔들, 다니카금맥사건 등과 국제적으로는 신냉전기류에 따른 국제적 경쟁의식의 고조에 의한 「일본주식회사」적 경제대국의 민족주의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보수주의는 戰前의 보수주의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전전의 보수주의는 富國強兵, 滅私奉公 등을 내세워 모든 이익과 가치는 국가와 집단을 위한 것이며 개인적 권익의 존중은 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후 민주주의는 이러한 전전의 가치체계를 붕괴시켰다. 평화헌법의 제정, 재벌해체, 민주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을 수행했던 자민당은 민주주의를 지향한 이익 정치의 보수정권이었다. 특히 1960년대의 이케다정권은 국민

소득 배증정책의 슬로건을 걸고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하였다. 국민들 역시 고도성장으로 이념적인 문제보다는 현실적인 경제적 이해와 관심을 우선시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보수정치는 다나카수상 재직시 이익정치의 부정적 측면인 금권정치가 지탄을 받게 되자 지속되지 못하고 자민당에 대한 국민적 인기는 하락하였다.

이러한 면에서 나카소네 등 신보수주의자들은 자민당의 금권정치를 극복하고 새로운 정치개혁의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의 구체적 대안은 대내적으로는 소선거구제와 책임있는 보수양당제 도입과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역할의 증대인 것이다.<sup>74)</sup>

#### 나) 경제적 新思考

일본의 신보수주의자들은 향후 보다 폭넓은 자유주의적 경제원칙 준수를 위하여 경제면에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경제위주로 전환시키되 기업의 국제경쟁력은 유지하면서 대외경제마찰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보수주의사조에 있어서 경제적 자유주의는 일본의 막대한 재정적자(100조엔 초과)를 극복해야 한다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일본은 재정과탄을 극복하기 위해 「작은정부」를 지향하고 거대하고 경

74) 中曾根康弘, 佐藤誠三郎, 村上泰亮, 西部邁, 「冷戰以後」(東京: 文藝春秋社, 1992), pp. 347~48. 이와 관련 최근 가네마루는 우파적 노선을 지향하고 있는 사회당의 도이(土井) 前당수, 다나베(田邊) 위원장 등과 보수양당체제를 논의하였다고 한다.

직된 관료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점에서 「민간활력의 활용」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목표 속에서 거대한 적자기업인 國鐵을 분할, 민영화하였으며, 그 근거에는 경영합리주의적 철학이 위치하고 있다.

나카소네는 1987년 국철개혁을 시발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국고보조기관의 적자를 해소하고 「작은정부원칙」에 따른 예산삭감 실행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능률향상을 기하는 등 경제적 신사고를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는 미국과의 경제마찰에 있어서도 「행동계획」(Action Plan; 1985년)의 채택, 경제구조의 조정을 통한 시장개방, 그리고 내수확대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을 제시하였다. 미국이 계획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어 문제의 해결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나카소네는 이와 관련 감세, 세제개혁, 높은 저축률의 변화 유도 등 새롭고 전향적인 입장을 표방한 바 있다.

#### 다) 교육, 사상적 新思考

나카소네는 최근 일본의 사상을 근간으로 한 「대중민주주의」를 주장하였다. 이는 일본의 경직된 집단성과 위계질서관을 신축적 집단주의로 전환시켜 이것을 자유민주주의에 접목시켜야 한다는 발상이다. 나카소네의 신보수주의적 교육이념은 교육에 있어서 뿌리깊은 획일성, 경직성, 비국제성을 타파

하고 인간의 존엄성, 개인의 존중, 자유와 자율, 자기책임원칙, 즉 개성중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인들은 전통적으로 집단적 충성심, 집단적 응집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도 위계질서가 강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75)</sup> 또한 나카소네는 “국가에는 최소한 종교에 준하는 상징적 의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헌법상 상징적 존재로 명시되어 있는 천황제에 정치·종교적 의미를 부여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sup>76)</sup> 대중민주주의의 국민적 결집을 위해 천황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나카소네는 일본의 전통문화와 민주주의를 접목시키는 것이 대중민주주의라 보고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점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통합과 권위안정 유지를 위하여 천황제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고 볼 수 있다.

#### 라) 국제정치적 新思考

오늘날 신보수주의가 일본의 지배적 사조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1982년 11월 나카소네내각의 성립이후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당시 나카소네가 쓴 「새로운 보수의 논리」라는 책에서 그는 “지금이야말로 일본의 정치는 국내경제본위의 타성에서 벗어나 보다 크고 활력이 넘치는 세계를

75) Wayne Wilcox, Leo Rose, and Gavin Boyd, *Asia and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Mass.: Winthrop, 1972), pp. 50~51.

76) 中曾根康弘, 佐藤誠三郎 外, 「冷戦以後」, pp. 54, 337 & 348.

향하여 전향할 시기이다. 이른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요청되는 시대라고 본다. 그것은 곧 보수통치의 부활이고 통치의 재구축이며 정치본래의 기능인 포괄적 의미에서의 민족동화와 발전을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일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나카소네가 주창하는 정치이념은 「전후정치의 총결산」인데 이는 전후 패배의식에서 탈피, 국제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새로운 일본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른바 신보수주의적인 사고를 태동시켰다고 보여진다. 나카소네는 특히 청년층의 보수화를 포함한 일본사회 전반의 보수화경향과 자신의 강력한 신국가주의적 정책노선에 대해 일본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 보여진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이 가능한 것은 유권자들이 보수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입국 일변도였던 일본의 보수정치에 이제 나카소네수상의 신보수주의 확산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나카소네는 1986년부터 5년간 매년 4%씩 방위비를 증액하기로 미·일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1983년 방미시 “일본열도는 不侵航母이다”라고 호언한 바 있다. 이렇듯 일본의 방위력 증강요인은 첫째, 잠재적인 대소위협요인, 둘째, 미국의 방위력 증강요청, 셋째, 신보수주의 사조의 등장이다. 1980년대 일본의 정치가들은 일본의 국제사회에 적극참여를 주장하였는데 이는 국제적 위상증대에 따른 대국의식의 표출로 간주되고, 신보수주의는 이와 같은 경향을 이론적으로 정당화해주고 있다.

일본의 국제역할 증대를 위한 자위대파병을 처음 거론한 정치가도 나카소네였다. 그리고 1989년 가이후총리가 이 문제를 재론한 바 있으며 미야자와총리가 현재 법안을 통과시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 3) PKO 관련 각 정당 단체의 입장

최근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 통과로 일본정치는 보수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의 각 정당, 매스미디어, 재야의 PKO와 관련된 입장을 살펴본다.

#### 가) 자민당

최근 미야자와(宮澤)가 일본수상으로 선출된 것은 다케시다(竹下)파와 고모토(河本)파의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미야자와는 군비에 관한 한, 요시다(吉田)→이케다(池田)→오히라(大平)→스즈키(鈴木)→나카소네로 이어지는 군비증강파와 대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미야자와는 최근 오자와(小澤) 전자민당 간사장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의 개헌론을 총재선거를 앞두고 용인하였다. 이는 자위대가 유엔군에 참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헌법 9조도 수정할 수 있다는 개헌론으로 미야자와는 자민당의 뉴리더들 중에 유일하게 유엔평화유지군 참가와 관련한 정책구상을 발표한 정치인이다.

최근 자민당의 이같은 보수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나카소네, 가네마루(金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등 防衛族(방위관계의원들)이 일본의 역할증대를 주창하고 있다.

자민당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정책의 일환인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을 1992년 6월 15일 중의원 통과를 강행, 정식 법안으로 성립시켰다. 이는 공명당의 이시다 고시로(石田幸四郎)위원장과 민사당의 오우치 게이고(大內啓伍)위원장의 협력 속에 실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주력부대의 해외파병이 아니라 후방지원업무만 관장하는 선에서 타결되었다. 일본 국내에서 평화유지활동에 따른 전투부대의 해외파병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자민당은 우선 이 법안의 폐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였으나, 3년후에 다시 재심하기로 하고, 자위대의 주력부대를 파병할 경우는 국회의 사전승인을 얻기로 공명, 민사당과 합의하였다.

자민당은 1992년 7월 26일 실시된 임기 6년의 참의원 선거에서 총의석 252석 가운데 3년마다 절반을 교체하는 127석(결원의석 포함)을 뽑는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는 68석을 확보함으로써 낙승하였다.<sup>77)</sup> 이번 선거의 큰 쟁점은 일본의 「대국화」문제였다. 선거결과를 보면, 대국화정책을 지향하는 공약을 내세운 자민당과 공명당(14석)이 국민의 지지를 획득한

77) 「讀賣新聞」, 1992. 7. 27.

반면, 대국화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사회당(22석)과 공산당(6석)은 지지획득에 실패하였다. 일본국민은 자민 공명당의 대국화정책을 지지하였고 기존의 보수정치체제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자민당의 신보수주의 정치가들은 소선거구제, 정치자금법안 등 정치개혁을 사회당의 우파인 다나베(田邊)당수와 막후에서 협상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나카소네는 최근 「共同研究 冷戦以後」라는 책에서 현행 헌법을 개정, 보수 양당체제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에는 최소한 종교에 준하는 상징예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 천황제의 정치·종교적 강화를 역설하였다. 나카소네는 또한 자위대의 해외파병 지지는 물론 서방선진7개국(G-7)이 신자유무역헌장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 강대국중심주의적 사고를 표명하였다. 이렇듯 최근 자민당내에서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적인 면에서 신보수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 나) 사회당

일본 사회당은 과거의 정책노선에서 크게 우회하여 미·일 안보조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위대와 일본의 방위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노선으로 전환하여 1986년 1월 사회당의 신선언을 발표하였다. 이는 당시 소련 및 동구의 변화와 일본국민의 보수화로 사회당이 단독정권으로 집권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연합정권으로 집권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정치의식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 전환의 결과였다.

사회당의 자위대에 대한 시각은 “세계의 조류인 군축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자위대를 축소해가는 일이다.” 사회당 자신은 최근 자위대 파병에 대한 헌법개정에 대하여 3분의 1의 호헌세력론으로 강력하게 맞서며 법안통과를 저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즉 사회당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하여 자위대파병이 아닌 경제적 공헌을 주장하며, 헌법상으로도 자위대가 군대로서 집단안전보장을 위한다는 명분 하에 해외파병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최근 사회당은 호헌론을 견지하고 있으나 과거와 달리 자위대, 방위정책, 그리고 미·일안보조약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정치의식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내정치의 보수화경향과 국제정치에 있어서 사회주의의 약화 등에 의한 사회당 내 우파의 승리에 따라 현실주의적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 다) 공명당

공명당은 종교단체인 創價學會를 모체로 하여 1964년 11월에 창당되었다. 1970년 6월 당대회에서 채택된 최근 강령은 「법민주주의」와 같은 구호를 지양하고 “인간존중의 중도주의를 지향하는 국민정당”임을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당 지지기반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보수성향의 유권자들이다.

공명당은 1991년 12월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을 중의원에서 민사당의 동참없이 자민·공명 양당만으로 통과시켰다. 공명당은 동 법안의 참의원 통과에서 평화유지활동조항 동결을 주장하였는 바, 자위대병력의 해외파병이 별도의 법률로 가능해질 때까지는 동결한 채 동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이 평화유지활동조항 동결협상은 자위대 파견시 주력부대는 파견하지 않고 후방업무지원부대의 파견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통과된 법안에 同 내용이 포함되게 되었다.

#### 라) 민사당

1960년 전후 일본의 최대현안이었던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둘러싸고 사회당 우파의 영수 니시오(西尾末廣)가 안보지지를 표방하자 사회당 좌파는 그를 추방하였다. 니시오는 당에서 자파세력을 이끌고 분가하여 1960년 1월 중도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민사당을 창당하였다.

민사당은 최근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에 대하여 국회 사전승인안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무장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국가적 중대사이므로 국회의 사전승인절차를 통하여 文民 통제하에 두자는 안이었다. 이러한 민사당의 입장은 자민·공명·민사 협력체제로 무조건 복귀해서는 정국 주도권을 공명당에 빼앗길 위험이 있으므로 자신의 안을 가지고 협상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면에서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은 자민·공명·민사당의 협조에 의하여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 마) 노동계

일본 노동단체들은 신보수주의적 사고가 대두됨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20년 이상 과격한 투쟁을 해온 노동계가 보수화되어 우파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總評 본부가 1992년 5월 12일 사회당의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 반대집회에 반대, 대회연기와 결의내용수정, 그리고 대안의 제시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2년반 전 일본 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 발족 이후 총평은 세력이 약화되며 보수화경향으로 선회하였기 때문이다.

최근 98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노조(自治勞)는 조합원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위대 인정이 55%, 해외파병 승인이 66%로 나타났다. 일본 우체국노조(全遞)도 1992년 가을 전국대회에서 기본정책을 수정할 계획이다. 즉 자위대 뿐 아니라 원자력발전소까지 인정하는 수정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日教組도 마찬가지로 현실적인 노선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 바) 매스미디어

산케이(産經)신문은 1992년 1월 1일 연두사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에 의한 자위대파병에 대하여 오자와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온 헌법개정과 해석변경을 지지하였다. 「朝

日新聞」은 사설을 통해 “자위대를 배제한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참여”를 주장하였다. 이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완곡한 반대 내지는 조건부 찬성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아사히신문의 사설은 오자와조사회의 보고서를 “일본을 비군사경제대국에서 군사적 역할도 맡는 보통대국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과거문제를 깨끗이 청산하지 않은 채 이러한 발상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라고 평하였다. 또 아사히신문의 제안은 의료, 건설, 수송, 통신, 그리고 선거대책 등 캄보디아 부흥에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국한하여 자위대가 아닌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되 대원으로는 정부나 자치체 등 공공기관 관계자를 주로 하고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다. 「讀賣新聞」은 ‘오자와조사회의 제언을 평가한다’는 사설을 통해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1991년 초 헌법연구회를 조직, 현행헌법의 문제점을 집중보도하였다.

이와 같이 현재 일본사회의 보수화경향을 대변하는 신보수주의는 전전의 「황국사관」과는 다른 일본의 「주체성」(identity)을 재정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핵심은 경제사상보다 정치사상에 있다. 즉, 전후 보수주의가 지나친 경제위주, 이권위주, 현실생활 위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소위 금권정치적 병리현상이 발생하였다고 보고, 일본의 국제적 위상증대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상 강화와 국민의식개혁 발상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카소네 등 보수주의자들은 신보수주의적 사고를 정당, 관료, 재계

는 물론 매스미디어까지 동원 국민적 합의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 4) 일본의 군비증강 추세 지속

일본은 냉전의 종결로 소련의 위협이 감소되었다고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력은 상존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동북아의 미·일·중·러 다원화현상에 의한 세력균형 및 군사력의 변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군축문제에 있어서 일본은 동북아에서 안보적 안전장치없는 성급한 군비삭감은 국가안보면에서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국제적 역할증대 필요성과 미·러시아연방의 국내 문제 치중으로 인한 역내 세력균형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위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 국내정치의 보수화경향은 이를 촉진하고 있다.

현재 일본 자위대관계자들은 세계3위의 방위비의 허상을 주장하고 있다. 즉 방위예산의 4할 이상이 인건비이며, 피복비와 행정비를 제외하면 장비구입과 훈련에 투입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타국과 비교하여 소규모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1%로 제한하고 경제성장율을 3~4%, 환율을 달러당 90~130엔으로 상정하더라도 여타 선진제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군비증강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 미 달러에 대한 환율 130엔대에서 1990년대 일본과 미국의 경제성장

율을 각각 4%, 1%로 가정할 경우 2000년의 미국과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각각 5조 8천억달러, 4조 6천억달러가 되어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미국의 80%에 달하게 된다.

〈표 1〉 미국과 일본의 국민총생산 비교

	1989년		1995년	2000년
미국(억달러)	52.008	1%성장시	55.208	58.024
일본(10억円)		2%성장시	58.569	64.665
	391.229	3%성장시	467.148	541.552
		4%성장시	495.029	602.279
일본(억달러)	1달러 =	3%	35.934	41.658
	130円	4%	38.097	46.329
	1달러 =	3%	38.929	45.129
	120円	4%	41.252	50.190
	1달러 =	3%	42.468	49.232
	110円	4%	49.503	60.228
	1달러 =	3%	51.906	60.172
	90円	4%	55.003	66.920

출처 : *Economic Report of the President, 1991*; 日本銀行調査統計局, 「國際比較統計 1990」

1990년 미국의 국방비는 2,868억달러로 국민총생산의 5.7%를 차지하였고, 일본의 방위비는 283억달러로 (3조 9,198억 엔) 국민총생산의 1.0%였다. 즉 일본의 방위비는 미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국방비는 1996년 2,228억달러가 되며 이는 1990년에 비해 23%가 삭감된 것이다. 2

천년 미국의 실질방위비는 1,831~1,922억달러 정도로 산출되어진다.

〈표 2〉 미국 국방비 증가추이

(단위: 10억달러)

	명목액(전기대비 %)	실질액
1990	289.8(4.1)	289.9
1991	287.5(4.3)	276.2
1992	283.0(3.8)	251.1
1993	279.1(3.6)	247.6
1994	273.3(3.5)	234.0
1995	274.6(3.4)	227.3
1996	278.5(3.3)	222.8
2000	278.5(3~4)	183.1~ 192.2

출처 :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Y 1992, Part Two*, pp. 184~

91.

반면 2천년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6백조엔(6조달러)이 되며 그중 1%를 방위비에 투입할 경우 미국과 일본의 방위비는 10 대 1의 수준에서 3 대 1의 수준으로 그 격차가 좁혀진다. 일본의 방위비가 미국의 3분의 1 수준에 이르는 것은 단순한 양적인 측면에서 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이 미국과 같이 정규항모를 건설할 경우 적어도 재정적으로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항모 또는 원자력함 건조를 진전시키는 데에는 헌법문제, 국내정치문제, 인원확보문제, 건조기술문제, 그리고 미국 및 인접국의 반대 등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그러나 일본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의 1%로 유지할 경우 2천년에 이르러서는 정규항공모함을 포함한 해군건설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일본은 2천년에 25만 규모의 병력과 명실상부 막강한 육·해·공군력을 갖추고 태평양지역에 있어서 미·일안보체제 하의 조수기능에서 벗어나 군사적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지역군사대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 5) 첨단기술의 발전

일본의 기술수준은 군사기술부문에서도 이미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 있다. 최근 일본은 미국과 공동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FSX)를 1993년부터 대량생산, 1996년부터 실전배치하기로 하는 한편, 개량 호크미사일의 후계인 차기중거리 지대공미사일 「新中 SAM」의 개발에 착수하기로 결정하였다.<sup>78)</sup> 해군 역시 호위함, 잠수함, 대잠초계기 P3C 등에서 최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초현대식 이지스(Aegis)급 구축함(720t) 1척이 1993년 3월 취역하고 1995년과 1996년에

78) 「日本經濟新聞」, 1992. 3. 11.

각각 1척씩 건조(1척당 약 10억달러)될 예정이다. 육군 군사 장비의 경우 육상자위대의 제3세대 탱크인 90식 탱크를 방위청 기술연구본부가 1977년 개발에 착수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이 생산하여 1990년 30량이 실전배치되었다.

현재 일본이 개발중인 장비는 차세대전투기 FSX, 원격조정 관측장치, 함재용 신사격지휘장치, 초고속 대잠수함 어뢰, 투기형전파방지장치 등이다. 또한 일본 방위장비의 국산화율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부문별로는 함정 99%, 항공기 89%, 탄약 87%, 그리고 총기류 83%의 국산화율을 보유하고 있다.

1990년 주요 방위장비 구입경비는 1조 5천687억 6천만엔으로서 방위산업총생산액의 62.4%를 상위 10대기업이 점유하고 있다.<sup>79)</sup> 예를 들면, 미쓰비시 중공업 28.1%, 川崎중공업 9.3%, 미스비스전기 6.4% 등이다. 이러한 면에서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대기업은 방위산업과 軍産복합체(Civil-Military Complex)의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대외요인

### 1) 미·일동맹관계 재조정

무로야마 요시마사(室山義正) 교수는 미·일관계의 재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이 조약은… 유엔의 조

79) 前田哲男, “日本の軍産複合體”, 「軍縮問題資料」, 1991年 10月號 (no. 131), pp. 38~41.

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실효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國聯안보가 복권하면 미·일안보는 그 사명을 완수한다”라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일안보조약 제10조에 따라 미·일관계가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재의 미·일안보체제는 일본이 군사적 독립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있어서 미국을 통한 간접적 공헌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인 반면, 일본이 걸프전에 126억달러를 지불한 것은 사실상 직접적 공헌이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 재조정의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이미 주일미군경비의 35~40%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미·일동맹은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내에는 냉전이후 미·일관계가 과거 20년간 경제마찰에 따른 마찰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재조정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미·일관계 재조정에 있어서 부각되고 있는 중요한 쟁점은 미국에 대한 지위·이미지 격상, 일본식 경제모델 확산, 미국과의 책임분담,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의 경쟁, 러시아·중국관계에서의 미·일 갈등 가능성 증대 등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가) 미국에 대한 일본의 상대적 지위·이미지 격상

일본은 자국의 지위 또는 이미지문제를 국제관계 운영의 측면에서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특히 미·일관계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2000년 일본의 국민총생

산은 미국을 앞서 세계 제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2000년 미국의 제조업의 1/5이 외국기업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으며 이 때 미국의 총수출액의 1/4은 일본계 기업의 제품이 될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미·일관계의 역전은 미국의 불안감을 야기시킬 것이지만 일본으로서는 과거와 달리 보다 격상된 지위와 이미지를 추구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일본식 경제모델 확산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미·일간의 자본주의적 경제발전모델로서 미·일간의 우열경쟁을 더욱 촉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일본모델은 아시아의 신흥공업경제지역(NIES)을 비롯, 아세안제국에 광범위하게 침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에 지역주의적 경향이 강하게 대두될 경우 미국과의 경제분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동구의 경제발전이 일본모델의 영향을 받아 일본과 경제관계가 긴밀해질 경우 모델경쟁은 이데올로기적 색채를 띠는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다) 미국과의 책임분담

미국이 1990년대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할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력·기술력의 비교우위를 점차 상실해 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군사·정치력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미국 주도의 신질서구축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일본의 경제력·기술력의 상호보완성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 주일미국대사는 미국과 일본은 “국제문제에서 공유하는 목적에 대하여 양국의 힘을 동력화”하는 세계적 동반자관계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안보문제가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아·태지역에서 다음의 경우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필리핀에서 미군이 철수하여 그 기능을 부분적으로 일본이 맡을 경우, 둘째, 중국이 홍콩을 반환받아 이곳을 해군기지화하여 해군력을 급속히 확대하려할 경우, 셋째, 대만 독립을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될 경우, 넷째, 센카쿠열도(南沙群島)를 둘러싸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간 분쟁이 확산될 경우, 다섯째,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중·일 영토분쟁이 야기될 경우 등이다. 이 경우 미·일안보체제에 의한 세계적 동반자관계 형성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미·일안보의 전략적 근거를 「대소위협론」에서 「지역안정론」으로 이행시킬 경우 리더쉽의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일본 방위청의 한 간부는 “금후의 아시아안정은 결국 「대동아공영권」과 미·일안보의 통합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미 해병사령관 헨리 스타크폴 소장이 “미국은 적어도 향후 10년은 일본에 주둔할 필요가 있다”(cap on the bottle)고 주장한 바와 같이 미·일관계는 이미

리더쉽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 등 갈등요인이 해소되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할 경우 일본은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의 최전방이 될 것이고, 무기의 事前集積基地의 성격을 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지역정세 변화에 따른 미·일 안보관계는 미·일 동맹을 보다 대등한 관계로 발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 라)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의 경쟁 및 갈등 가능성 증대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은 공산 자유진영이 대립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미·일동맹을 축으로 한 미국의 정책에 편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 지역을 둘러싼 미·일간 정책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소련방의 붕괴는 일본과 러시아간에 남아있던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하여 미국정부는 일관되게 일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부시 미대통령,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러시아에 조기해결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북방영토의 만족할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서방측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확대를 견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의 향후 정국, 즉 공산당정권의 존속여부, 인권문제, 무기판매 문제 등과 관련하여 미·일간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캄보디아문제의 평화적 해결, 베트남원조, 지역경제협력(EAEG, APEC, NAFTA)등에서의 정책적 차이가 그 실례라고 보여진다. 예를 들면, 일본은 베트남의 자원개발과 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강한 관심을 갖고 엔차관의 제공을 계획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MIA(행방불명 미군)안건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양국은 베트남재건을 둘러싸고 시각의 차를 노정시키고 있다.

일본은 세계적 동반자관계라는 측면에서 미국과 대등한 관계라는 심리적 차원도 포함된 새로운 관계조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세계적 동반자관계라는 차원에서 일본은 미·일간의 「진정한 대등한 관계」를 기대하고, 특히 국제 안보 및 경제문제에서의 발언권 강화 등 일본의 지위부상을 노리고 새로운 관계조정을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은 향후 정치·경제 군사의 다각적 차원에서 국제적 역할증대를 적극적으로 추구할 것이며, 이는 미·일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2) 동북아지역 세력균형의 변화

냉전기의 동북아질서 역시 양극체제라는 단순한 세력균형에 바탕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화된 미국과 구소련에 비해 형편없이 약화된 러시아, 그리고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중국과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적 역할을 시도하는 일본간의 4강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최근 소연방의 해체와 주요 국제관계에서의 러시아연방에 의한 구소련역할의 대치 등 초강대국 소련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질서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주요요인이다. 최근 한·소, 한·중 수교가 체결되었으며 미·북한, 일·북한관계도 핵사찰문제만 해결된다면 정상화관계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남북한 관계개선 움직임도 동북아질서 재편에 順기능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중 수교를 계기로 일본은 자국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한 양국의 공동대응 및 중국의 영향력 증대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이다. 북방영토의 반환움직임을 비롯한 향후 일·러관계의 개선가능성은 동지역에서 미·일의 대리봉쇄정책이라는 전략의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현재의 동북아관계는 양자적 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관계가 다원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다원화현상에 대하여 일본과 중국은 역내의 세력균형이 자국에 불리하게 될 것과 정치적 혼란과 갈등상황을 우려하여 군비증강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동북아 각국의 군사비 증감추세는 1989년 현재 미국과 소련이 각각 전년도 대비 10%, 14% 감소시킨데 반해, 중국은 1992년도 현대화계획에 따라 12% 증액시켰으며 일본도 1991년(신중기 방위력 정비계획 시작)과 1992년 방위예산을

각각 5.8%, 5.38% 증액시켰다. 따라서 1992년 현재 일본의 방위예산은 4조6천2백20억엔에 달하고 있다. 1971년부터 1986년까지 15년간 방위비 실질증가율이 미국 25%, 나토제국 31%인데 비하여 일본은 139%의 증가를 보였다.<sup>80)</sup> 이와 같이 탈냉전추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방위예산을 증대시키고 있는 것은 동북아에서 안전장치없는 성급한 군비삭감은 국가안보에 대한 신중성 결여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며, 또한 자국의 역할증대를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다.

### 3) 걸프전 당시의 좌절감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일본의 대외정책 기조는 미·일협력체제를 주축으로 한 「비군사적 경제외교」였다. 이러한 전통은 1970년대 이후 전방위평화외교를 지향함으로써 계속 유지되어 왔다. 걸프전에 있어서도 역시 이러한 대외정책의 영향으로 국회에서의 평화헌법논쟁과 여론을 통해 미국의 참전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고 전비 126억달러만을 부담하는 안이한 방법으로 대처하였다.<sup>81)</sup>

전쟁에의 참여를 금전으로 부담한다는 일본 특유의 논리가

80) 「朝日新聞」, 1991. 8. 24.

81) 전비부담 규모에 있어서도 최초 1천만달러를 제시하였으나,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10억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그후에도 30억달러가 추가되고 여기에 또다시 90억달러가 추가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이는 미국의 대일 여론의 악화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효력이 있었으나, 국제적으로는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 따라서 걸프전 이후 전승국들의 전후처리과정과 전쟁복구사업에서 일본은 소외당하였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걸프만에 소해정선단을 보냈고, 캄보디아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분쟁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또한 일본의 발언권 강화를 통한 국제적 역할 증대정책의 일환으로 발전되고 있다.

#### 4) 영토문제 미해결

일·러 관계개선의 가장 중요한 걸림돌은 북방4개도서 - 하보마이(齒舞)군도, 시코단(色丹), 구나시리(國後)섬, 에토로쿠(擇捉)섬 - 문제이다. 북방영토는 소련군이 1945년 8월 9일 對日선전포고 직후 남사할린(樺太)과 쿠릴 - 일본명 치시마(千島) - 열도 등 북방 4개도서를 점령하면서 소련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조인시 남사할린과 쿠릴열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및 청구권을 포기하였다.<sup>82)</sup>

전후 일본의 대소 외교정책은 두개의 기본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첫째, 북방영토의 반환이 일·소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이라는 것, 둘째, 일본은 미국의 대소전략에 의존 내지는 협력하면서 대소관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82) Wolf Mendl, "Stuck in a Mould :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viet Union," *Millenium*, vol. 18, no. 3 (Winter 1989), pp. 455~78.

일·소관계는 단순한 영토반환의 문제가 아니라 미·소의 대결이라는 맥락에서 고려되어 왔다. 일·소관계는 미·일 동맹관계 내에서 양국간의 시각이 조정되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일·소 삼각관계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소련붕괴 이후 美·러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이 증진됨에 따라 일·러관계도 역시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동북아지역에 있어서 러시아의 오오츠크해군 및 극동지상군과 미국의 태평양함대 및 주한·주일미군 사이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일·러관계의 개선은 미·러 사이에 군사적 조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 지역의 군사구조의 변화가 진정한 美·러의 화해를 가능케 하고, 일본과 러시아간의 북방영토문제 및 경제협력 관계의 증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일본은 대러 협상에 있어서 미·러관계, 북방도서문제, 그리고 경제지원이 복합적으로 연계된 「政經不可分」의 원칙을 러시아에 적용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공화국의 옐친대통령은 일본이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북방 4개도서에 대하여 종래의 5단계 해결론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조기해결을 시사하였다.<sup>83)</sup> 이러한 러시아의 입

83) 옐친의 5단계해결책은 ① 소련의 영토문제의 존재인정, ② 4도서의 자유 경제지역화, ③ 4도서의 비군사화, ④ 평화조약체결, ⑤ 4도서 귀속문제의 다음 세대 해결 등으로, 4단계까지는 약 15~2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경제원조는 먼저받고 반환은 다음 세대로 미룬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를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왔다.

장변화는 서방세계에 1천억 달러의 지원을 요청하는 등 자국의 당면한 경제난을 조속히 해소하려는 차원에서 이해되어진다. 일본의 소련동구무역회는 독립국가연합경제의 현단계를 “하이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규정, 시장경제론의 전환이 쉽지않은 만큼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sup>84)</sup> 이러한 일본의 영토반환요구와 러시아의 일본 원조필요성으로 양국의 이해가 조정되고 있으며 도서반환 댓가는 150억 달러 정도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sup>85)</sup>

그러나 영토문제에 임하는 러시아측의 입장은 국민감정을 바탕으로한 지도자의 정치적 입지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즉 엘친은 대내외적으로 4개도서를 돈을 받고 팔았다는 인상을 주지않기 위하여 먼저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은 후 점차적으로 북방도서 반환을 여론화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일·러 양국은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 1956년 국교정상화 공동선언에서 채택한 바 있는 시코탄, 하보마이 2개섬의 先返還問題로부터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5억달러의 대리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sup>86)</sup> 이에 대

84) 「한국일보」, 1992. 4. 29.

85) 그러나 1991년 3월 소련을 방문한 자민당의 오자와(小澤) 간사장은 북방 4개섬에 대해 일본의 주권을 인정할 경우 민간자금협력을 포함 모두 3조엔(180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및 원조를 제안했다. 「日本經濟新聞」, 1991. 3. 25.

86)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October 14, 1991.

하여 러시아는 북방4개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8천명의 병력중 3분의 1을 즉각 감축할 것이며 도서반환은 2000년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일본과 러시아의 협상은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국내정치의 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러경제협력 및 진출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이는 일·러관계 개선의 최대현안인 영토문제해결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sup>87)</sup>

한편 일·중관계에 있어서도 일본정부는 1992년 2월 25일 釣魚臺를 중국영토로 규정하는 중국의 영해법 통과에 대해 “센카구(尖閣)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즉각 항의함으로써 영토분쟁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은 1895년 정부의 결정으로 이 열도가 오키나와현에 편입된 이래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은 “많은 역사적 사실은 釣魚臺가 중국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국제법상으로도 중국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일본측의 항의를 일축하였다.<sup>88)</sup>

최근 아시아지역에서 이러한 영토분쟁이 점차 가열되어가고 있는 것은 냉전시대에 잠재되어 있던 영토분쟁이 냉전이

87) 최근 러시아는 일본의 경제협력과 북방영토 해결을 위하여 일본을 잠재적인 동맹국이라고 밝힌 옐친의 친서를 일본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이를 「대러시아 지원의 禮狀」이라고 해석하며 액면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서도 북방영토문제 해결의 좋은 조짐으로 인식하고 있다. 「朝日新聞」, 1992. 2. 29. 또한 러시아연방은 2개섬(구나시리, 에토로후)을 1992년 말까지 일본에 반환한다는 비밀각서를 마련하였다고 한다. 「讀賣新聞」, 1992. 7. 23.

88) 「朝日新聞」, 1992. 2. 27.

후시대를 맞아 경제적·전략적 이유에서 표출되었기 때문이다. 즉 경제적으로 볼 때, 센카구해역에는 석유·가스 등 많은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더구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깊은 바다에 묻힌 자원의 개발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각국은 영해의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전략적으로도 일본은 1986년 중국해군의 대규모 기동훈련이 서태평양에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일본의 1천해리 해상방위영역인 유허도에서 중·일 양국이 대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센카구열도를 둘러싼 양국간의 심각한 영토분쟁의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일·중 영토분쟁등 갈등요인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간에 적절한 경제협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 (2) 제약요인

### (가) 대내요인

#### 1) 평화헌법(제9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약하는 국내적 요인으로는 우선 평화헌법 9조를 들 수 있다.

일본헌법(1946년)은 제9조에 「전쟁포기, 전력 不保有 및 교전권의 부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군

국주의로의 행보를 방지하기 위한 「문민통제의 원칙」(1950년)을 방위정책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원래 일본이 독립국인 이상 헌법 규정이 주권국가로서의 일본 고유의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일본정부는 이와같이 자위권이 부정되지 않는 이상 동 권리의 행사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전력을 보유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며 전수방위가 일본의 기본방침임을 천명하였다.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에 관한 특별조사회」의 회장인 오자와 이치로는 최근 제안한 자민당의 안보정책 시안에서 「비무장중립론」을 배격하면서, 헌법 제9조 1항이 금지하고 있는 「국제분쟁 해결수단으로서의 무력행사」도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sup>89)</sup>

일본 헌법학자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대하여 일본의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는 위헌임을 주장했다. 1991년 11월 「朝日新聞」이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위헌여부와 관련하여 헌법학자 172명(회답자 8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81%가 「애당초부터 위헌」 또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실력보유를 초과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국제기독교대 교수 오쿠히라 야수히로(奥平康弘)도 최근의 자위대파병을 둘러싼 헌법논쟁은 헌법의 규범성을 경시한

89) 「朝日新聞」, 1992. 2. 21.

발상이라고 오자와의 해석을 비판하였다.<sup>90)</sup>

일본의 오자와같은 보수주의자들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계기로 헌법을 개정할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반면, 제 1야당인 사회당은 헌법9조의 개폐를 반대, 현행헌법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일본의 군사적 팽창주의를 억제하고 있는 평화헌법의 존재는 전후 정착된 민주주의와 평화주의의 바탕위에 견고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당, 공산당, 그리고 재야세력의 헌법개정 반대 뿐 아니라, 자민당내에도 구리하라(栗原) 헌법조사위원장, 고토(工藤) 내각법제국장관 등 중견의원들이 헌법개정에 반대하고 있어 국민적 동의를 얻어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2) 평화지향적 분위기

일본의 헌법학자 380명으로 구성된 전국헌법연구회(회장 시미즈(清水) 중앙대 교수)는 「PKF 동결, 국회의 사전승인」을 골자로 한 PKO 법안 타협안도 PKF 그 자체가 군사조직이므로 자위대가 이에 참가하는 것은 헌법 9조에 위반된다고 비판하였다.<sup>91)</sup>

또한 「일본은 이래도 되는가 시민연합」 등 동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일본시민단체들이 합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 「PKO 법안 찬반국민투표」에서도 총 투표자 13만 579명 가운데

90) Ibid.

91) 「朝日新聞」, 1992. 5. 17.

데 87%인 11만 4천 26명이 반대, 일본국민의 상당수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들이 PKO 파병을 반대하는 이유중 하나는 전전과 다른 전후세대의 사고방식의 변화에 기인한다. 즉, 전후 일본은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과거 40여년간 평화무드 속에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生活大國」(福祉國家)<sup>92)</sup>을 지향하는 등 특히 젊은 층(新人類族)을 중심으로 사고방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화지향적 분위기는 일본의 자위대 파병 내지는 군사대국화 추세에 장애요인이 되는 것이다.

### 3) 경제의 구조적 한계

일본은 자원의 부족과 협소한 국토로 인해 자원과 시장의 해외의존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도 공업용원료의 수입은 1,280억달러로 총품목별 수입액(2,348억달러)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다.<sup>93)</sup> 1990년도 석유수입액은 3,158억달러, 액화석유가스 253억달러, 액화천연가스 668억달러, 목재 747억달러, 철강 458억달러 등 원자재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sup>94)</sup>

92) 「朝日新聞」, 1992. 4. 16.

93) 日本貿易振興會, 「1991年 ジェトロ白書: 世界と日本の貿易」(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1), p. 406; Jonathan Morris, *Japan and the Global Economy* (New York: Routledge, 1991), ch. 2 & 3.

94) 日本貿易振興會, 「1991年 ジェトロ白書」, p. 406.

1992년 1월 모리타(禁田) 소니社 회장은 자위대 파병문제와 관련,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할 경우 미국, 유럽에 점증하는 보호무역주의와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일본은 세계무역의 이단자로 낙인찍혀 세계경제에서 소외될지 모른다고 경고한 바 있다.<sup>95)</sup> 1951~88년 일본의 대외직접투자비율은 북미 40.3%, 아시아 17.3%, 유럽 16.2%였다. 그러나 1991년 일본의 무역흑자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33%(258억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균형적 무역정책을 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자원과 시장확대 필요성으로 인해 성급한 군사대국화를 지향하는데 따른 경제적 견제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자유경제질서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이 군사적 모험주의를 채택한다면 국제적 상호의존 이익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이는 약 1조달러의 채권에 달하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것으로 일본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sup>96)</sup>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진할 때 국내적으로 가장 큰 제약요인은 바로 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가지는 심각성이라고 판단된다.

95) 「朝鮮日報」, 1992. 4. 9.

96) Barry Buzan, "Japan's Future : Old History versus New Roles," *International Affairs*, vol. 64, no. 4 (Autumn 1988), pp. 566~67.

## 4) 문화적 보편성 결여

즈비그뉴 브레진스키(Zbigniew Brzezinski) 前 미국대통령 안보담당특보는 일본은 초대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초대국의 필요조건으로 첫째, 세계적인 군사력, 둘째, 전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력, 셋째, 경제기술력, 넷째, 문화적 영향력을 들면서 일본이 현재 경제기술력을 통한 국제적 역할증대를 통한 정치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문화적 영향도에서는 미숙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sup>97)</sup> 일본은 서구 민주주의와 같은 보편성있는 정치철학, 이념이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sup>98)</sup>

일본의 문화적 보편성의 결여는 넓은 의미에서 외부와의 단절에서 오는 섬나라 특유의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지만 昭和憲法에서 유추해석을 할 수 있다. 즉 昭和憲法은 국가와 개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는 바, 개인 대 개인, 가족이나 지역과의 관계는 소홀히 다루어졌다. 또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있지 않다.<sup>99)</sup> 따라서 일본 헌법은 국제관계의 기본이념보다는 협소한 민족주의(narrow nationalism)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일본은 경제력에 걸맞는 정치·군사력 확보를 추진하

97) 「讀賣新聞」, 1991. 12. 6.

98) Yoichi Funabashi, "Japan and the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0, no. 3 (Winter 1991/92), p. 72.

99) 大前研一, 「平成維新」, p. 298.

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지역에서 조차 지도국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국의 식민지경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자세가 자격있는 지도국으로서 정통성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정통성이란 힘의 사용 없이도 지도국의 정책을 다른 나라들이 수용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세계적 차원에서든 아시아지역에서든 경제분야 이외의 제반분야에서의 보편성과 정통성 결여는 일본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도국으로 행세하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 (나) 대외요인

##### 1) 미·일 동맹체제 유지

쿠리야마(栗山)와 같은 보수적 평론가들은 미·일조약의 유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동북아의 다원화현상이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미·일조약은 억제기능을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일본은 비핵국가이므로 핵강국인 러시아연방 또는 중국과 갈등이 야기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미·일조약으로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군사대국화의 방패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미·일동맹체제가 갈등요인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미·일동맹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동북아의 다원화현상은 역내의 안보 불확실성을 유발시켜 지역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일 동맹관계는 동북아의 지역안정축으로 기능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조약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억제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비핵국가이므로 핵강국인 러시아연방 또는 중국과 갈등이 야기될 경우 미국의 핵우산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미·일조약으로 차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국을 군사대국화의 방패막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같이 미·일동맹체제가 갈등요인보다는 긍정적 측면이 더 많기 때문에 미·일동맹체제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최근 일본은 무역흑자 구조에서 북미, 아시아, 그리고 유럽과 균형잡힌 정책을 펴고 있으나, 아직도 미국은 일본의 거대한 수출시장이며 200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제조업의 약 20%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일본은 미·일동맹관계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국민적 합의를 이루고자 할 것이다.

## 2) 동북아의 군축분위기 대두

최근 미국과 러시아연방이 대규모 군축에 합의함으로써 전세계에 군축무드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국방비지출은

1989년 3,398억달러(1990년 기준)에서 1991년 3,082억달러로 감소되었다. 구소련 역시 1991년 국방예산이 14% 이상 감소되었다. 또한 1991년 부시와 고르바초프의 핵무기 감축제안에 따라 1991년 10월 초 미·소 양국에서 4천기 이상의 전략 핵탄두가 제거됨에 따라 최근에는 상대국의 핵공격을 제지할 수 있는 정도의 핵무기만 보유한다는 「최소억지」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

유럽에서 군축분위기가 고조되는 것과는 달리 동북아에는 중국이 군비축소를 거부하고 1992년 국방비를 전년대비 12% 증액하고, 일본 역시 1992년 방위비를 5.38% 증액하는 등 군비증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에 군비증강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미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은 다자간 안보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 주도에 의한 동북아의 다자간 안보기구의 형성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1년 11월 베이커 미국무장관이 한반도문제 접근에 있어서 「2+4 회담」을 제기한 바 있다.

1992년 7월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아시아에서 긴장완화를 주요과제로 삼는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는 다국간 안보회의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일본은 아시아판 안보협력회의(CSCA)가 기본적으로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으로 보고, 또한 미국 주도의 아·태안보기구의 형성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본의 역할증대 차원에서 「아시아포럼」 등 다자간 회의기구를 제안하였다. 이와 관련 미야자와 총리는 아·태지

역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국과 러시아도 참여하는 다국간 안전보장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sup>100)</sup>

이와 같이 일본은 향후 2000년대 동북아 균축분위기를 인식하고, 다자간 안보기구 설치 가능성에 대비하여 자국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키는 한편, 주변국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보기구 설치를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양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 3) 주변국의 우려

한국, 중국, 러연방 등 주변국들은 과거사의 청산없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하여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가 정통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일본정부의 자위대 파병에 대하여 비판적인 논평은 자제하고 있으나 완곡하게 거부감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사태이후 미·중관계가 냉각되고 국제적 고립상태에 빠진 자국을 일본이 가장 먼저 접근, 대중 봉쇄망을 뚫어준데 대하여 호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구나 1992년 4월 江澤民 총서기의 방일시 7,000억엔의 차관까지 제공받았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파병에 대하여 심각한 논평은 유보

100) 「朝日新聞」, 1992. 7. 2.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21세기초, 늦어도 2010년까지는 군사대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자위대 파병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역설하였다. 이와 관련,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는 1992년 1월 20일 보고서를 통하여 이미 일본은 1국 평화주의를 포기하기 시작하였고, 1990년대에는 평화헌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일 안보체제도 실질적으로 변화, 결국 일본은 군사대국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바 있다.<sup>101)</sup> 同 보고서는 이에 대한 중국의 대책으로 “주변제국과 연합, 절도있는 투쟁을 추진하여야 한다”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견제할 포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러시아연방은 아직 구소련해체의 진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나 유럽국가들과의 상호감군으로 동 지역에서 철수한 군사력을 우랄산맥 동쪽 즉, 아시아지역으로 이동시키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를 견제하고 있다. 또한 러연방은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통과와 군비증강이 방어적 군사태세로부터 이탈되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선제공격과 관련된 전략과 항공모함 건조 가능성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일본에게 세계평화를 위하여 국력에 상응하는 책임분담을 요구하여 왔던 바, 공식적으로 PKO 법안통과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의도는 세계 주요지역에서 일본을 안

101) 「朝日新聞」, 1992. 3. 2.

정유지세력으로 활용하되 독자적 군비확장은 저지하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 및 분담증대 역시 미·일동맹체제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은 스스로를 중·러·일을 연결하는 아시아 삼각의 균형자 또는 중재자로 자처하고 있으며 미국의 적절한 중재가 없을 경우 동 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기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북한도 일본의 자위대 파병 및 군사대국화 추세를 동북아의 불안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일본과의 수교회담을 의식하여 일본이 군국주의를 청산할 경우 양해할 수 있다는 자세를 취하고 직접적인 비난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를 억제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한국은 동북아국가들의 역사적 대일 경계심을 수렴하여 이를 미국에 인식시키는 한편, 미국을 통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지역균형자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상옥 한국외무장관은 최근 일본의 자위대 파병법안 및 군사대국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역내 국가인 중국·아세안국가들과 공동 외교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sup>102)</sup>

이와 관련, 최근 한국은 중국과 수교(1992. 8. 24)를 맺음으로써 유럽의 독일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을 일정한 틀 속

102) 「朝鮮日報」, 1991. 9. 19.

에 묶어 두고 역내국가들의 군비증강 추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역내국가들간의 다자간안보협력기구 등 신뢰구축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 (3)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 전망 및 평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군사대국화 주장은 나카소네등 보수화경향을 대변하는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신보수주의는 전전의 황국사관과는 달리 일본의 주체성(identity) 재정립에 주안을 둔 새로운 사조로, 경제사상보다 정치사상 즉, 국제적 위상을 고려한 국민의식개혁의 발상을 그 핵심이념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신보수주의자들은 냉전의 종결과 함께 소련의 위협이 감소되었다고는 하지만 러시아의 군사력은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또한 동북아의 미·일·중·러 다극화현상에 대한 세력균형 및 군사력 변화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중국이 2척의 대양작전용 해군함정을 건조하고 중국해군이 전술행동차원이 아닌 전략작전능력을 개발할 의지를 갖고 있다고 보고 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정세 변화에 대처, 미국의 종용, 국내의 보수화경향 등으로 인해 독자적인 군비증강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최근 「59중기방위력정비계획」은 지역방위에서 전진방어를 위한 공격적 성격의 방위로 변모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평화유지군에 의한 자위대 파병목적을 국제적 공헌, 특히 인적 공헌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캄보디아 파병을 계기로 외교적으로는 미국의 범세계적 역할수행의 책임분담을 통해 일본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지역적으로는 정치·군사대국을 지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아시아지역의 자원과 시장확대의 필요성으로 한·중·러 등 주변 관련국과 아세안제국을 자극시키면서 국제여론에 역행하는 성급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91년 일본은 아시아지역에 미국이 투자한 44억달러보다 거의 두배 가까운 87억달러를 투자하였다. 1986년부터 1990년까지 일본의 대북미 수출량이 전체수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4%에서 36%로 감소하였지만 대아시아 수출은 오히려 29%에서 34%로 증대되었다. 일본은 민주화 정착과 정치적 다원화 추세 등 국내정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급진적인 정치·군사대국화의 추구보다는 미국과의 협조속에서 방위영역범위 확대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파병한 캄보디아에서 내전이 격화될 경우, 또한 파견부대가 공격을 받아 일본군의 피해가 속출할 경우, 일본은 PKO법의 한계를 이유로 들어 이를 개헌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고 예상된다. 이러한 개헌문제 논의는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문제와 맞물려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이 실현될 경우 일본은 상임

이사국지위에 상응하는 적극적인 국제적 역할과 책임을 자임하기 위하여 평화헌법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유엔헌장의 敵國條項 개정은 독일·이탈리아 등과 공동보조문제, 그리고 기존의 상임이사국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도 단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의 입장인 바, 미국은 적절한 시기에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일본은 미국과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이것이 성취된다면 아시아지역내에서 명실상부한 정치대국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은 동남아제국의 자원과 시장확대 필요성 때문에 이 국가들을 자극하면서까지 성급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은 당분간 국제적 역할 증대를 위한 국내, 국제적 제약요인 제거에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국내적으로 1988년 리쿠르트 부정사건에 이어 최근 사가와큐빈(佐川急便) 사건 등 자민당이 정치적 난국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또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에서 보듯이 국민적 합의가 매끄럽게 조성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면에서 자민당은 대외적으로는 대미관계에 주안점을 두면서 국내적

으로는 소선거구제 도입, 정치자금의 건전화 등 정치개혁정책과 정치·군사대국 지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대략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확보와 맞물려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은 향후 국제 및 동북아정세 변화 추이, 미·일 동맹관계 조정,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획득을 통하여 정치, 군사대국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향후 미·일관계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와 이미지 격상, 미국과의 책임분담을 중심으로 조정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 있어서 2000년까지는 미국의 우위가 유지된 상태에서 미·일 양두체제를 근간으로 역내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1990년대 일본의 동북아정책 전망: 국제적 역할의 확대와 한계

#### 가. 양자관계

##### (1) 미·일관계

미국의 영향력 축소와 소련의 퇴조에 따라 미·일관계는 1990년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992년 1월 9일 미·일 양국은 「도쿄선언」에서 세계적 동반자관계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는 바, 향후 미·일관계는 일본의 지위·이미지 격상, 미국과의 책임분담문제, 아·태지역에서의 미국과의 경

쟁관계 등을 중심으로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일관계는 미·일동맹관계 재조정에 의한 미·일 역할분담론이 거론되고는 있으나 아시아에서는 미국의 우위가 유지된 가운데 미국이 경제면에서 일본의 양보와 지원을 구하고, 일본은 미국의 지원하에 정치·군사적 역할의 점진적 증대를 추구하는 형태의 양두체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미국에 대하여 자국의 유엔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위한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미·일협력체제는 기본적으로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일 무역마찰에 따른 양국관계의 변화는 보호주의 압력 등 미국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본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대미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일본은 「구조조정 및 협상방식」(SCH: Structural Coordination and Harmonization Initiative) 등을 통하여 양국간의 경제마찰, APEC 등 지역차원에서의 경제권 구상 및 세계적 차원의 경제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미·일안보조약을 미국 위주의 일방적 체제에서 보다 대등한 체제로 전환하는 수준에서 일본의 안보역할을 점진적으로 증대시킬 것이다.

## (2) 일·러관계

일본의 사쿠마(佐久間)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의장은 동시베리아지역의 러시아 해군 및 공군이 현대화하고 있다고 우

러(1992.1.20)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일본의 항공모함 건조가능성 등 군비증강 및 군사대국화 추세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1991년 10월 16일 일·소안보협의기구가 창설되었다. 동 기구는 아·태지역의 안전보장에 대해 일·소 양국의 외교와 국방 관계자들이 수시로 만나 안전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현재도 이 기구는 양국간에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양국 합의의 배경은 전술한 바와 같이 북방영토문제와 관련한 일본의 대소 경제지원 약속과 북방 4개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구소련군 병력(8천명)의 3분의 1 감축이 주요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러시아는 경제협력과 북방영토문제 해결 등을 고려하여 일본을 「잠재적인 동맹국」이라고 표방하고 일본은 이를 대러시아지원의 연장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일본은 북방영토문제 해결에 있어서 국민감정, 명분, 원조 및 경험범위 그리고 군사상황까지 고려하고 있다. 일본은 잠재적으로 북방영토를 러시아로부터 반환받아 북방지역을 소유함으로써 패전유산의 청산과 자국의 위상증대를 의도하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 국내정치의 안정이 이루어질 경우 대러 경제협력 및 진출에 적극성을 보일 것이며, 이는 일·러시아관계 개선의 최대 현안인 영토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최근 일본정부는 러시아의 심각한 경제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5억달러의 대러시아 지원대책을 발표하였으

며, 이에 대하여 러시아는 북방4개도서에 주둔하고 있는 8천 명의 병력중 1/3을 즉각 감축하고, 도서반환은 2000년대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1992년 9월 13일 부터 예정된 옐친 러시아대통령의 방일이 취소되었는데, 이는 북방영토의 반환에 대한 러시아군부, 민족주의세력 및 국민 여론(60%가 반대)의 반대와 양국간의 경험범위 등을 둘러싼 협상의 어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심각한 국내경제의 재건을 위해서 경제대국인 일본과 북방도서협상을 지속할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러시아연방의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일본의 경제지원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일본과 러시아연방간의 협상은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으므로 북방영토반환에는 1990년대 말까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일·중관계

안보적인 측면에서 미국의 상대적 국력약화와 러연방의 쇠퇴로 인하여 일본은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확대되어 양국이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서남태평양 해군진출이 자신의 해상교통로에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있으며, 향후 센카쿠열도의 영토분쟁도 야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러관계를 조정하고 있으며, 중국은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데

있어서 러시아연방과 경쟁관계에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연방은 대일의존도의 심화를 방지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킬 것이다.<sup>103)</sup> 또한 중국은 북한의 고립을 방지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의 대북한 수교교섭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중국시장과 자원확보를 바탕으로 일본의 경제역량을 증대시키고 중·일경제협력을 증진시켜 중국의 근대화 수행에 있어서 사안에 따라 제한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근대화는 군사력의 현대화를 수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일 군사대립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즉 일본은 1990년대 대중관계에 있어서 경제면에서의 제한적 협력과 군사면에서의 견제라는 二重政策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중국과 협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한·일관계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일환인 일·북한 수교회담에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을 통한 한반도의 현상유지가 그들의 국익과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한국으로 경사된 남북한 等距離外交路線을 견지할 것으로 보인다.

103)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은 수교를 맺었으며 최근 교역량은 58억달러(1991년)를 상회하였다.

일본은 남북한 통일협상과정에 있어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다자간 접근방식인 「4+2」의 구도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일본의 평화유지군 파병 및 군사대국화 추세가 동북아질서 개편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도 일본의 역할증대 추세에 대응,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캄보디아 파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의 가장 큰 현안은 사상 최고의 무역 불균형현상을 보이고 있는 대일적자로, 그 적자액은 한국 전체 무역적자의 90%가 넘는 88억달러(1991년)에 달한다. 이에 한국정부는 만성적인 무역적자 해결책으로 일본시장의 폐쇄성 완화, 무역장벽 철폐, 그리고 기술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시 한국측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언급하였으며, 기술이전문제는 실천계획사항으로 한·일 무역산업기술위원회 구성을 통해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같은 점으로 미루어 보건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해소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은 양국간의 무역불균형 해결을 위하여 산업구조를 대일의존적 가공무역체제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투자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한·일무역산업기술위원회를 이용, 무역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 대 정부차원의 노력은 물론

기업 대 기업차원의 노력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나. 다자관계

### (1) 안보적 측면

고르바초프는 1990년 4월 방일을 계기로 군축축진을 내용으로 하는 「동경독트린」을 제안하였다. 이는 우선 아시아지역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미·일·소간의 3국 회의를 개최하고, 안보와 경제협력 문제를 협의할 미·일·소·중·인도간 5개국 확대회의의 창설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최근 한국, 중국 등과 경제협력 강화를 원하고 있으며, 또한 아시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경제협력기구에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sup>104)</sup> 이러한 의도의 배경은 첫째, 아·태국가들간 협력을 통해 침체된 러시아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둘째, 러시아는 소연방의 해체로 인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아·태국가들의 역내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자간안보기구가 형성되리라는 것을 예측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日本은 구소련의 「동경독트린」에 대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왔다.

그 주요 이유는 일본은 구소련의 안보제안이 일본의 역할 증대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10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1, 1992.

소련군의 감축, 영토문제의 해결이 따르지 않는 구소련의 제안은 실현성이 결여되어 있는 선전용 제안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안보기구창설을 위해서는 미·러의 동북아전략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미·러 관계개선과 양국의 국내문제는 대동북아전략 변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구소련의 대변혁으로 인한 냉전의 사실상 종식, 둘째, 미국의 경제력 약화로 인한 군사력 증강의 한계, 셋째, 미·러의 상대적 국력약화에 따른 힘의 공백상태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우려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예상되는 미·러의 대동북아전략 변화에 대응하고 역내의 안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1991년 7월 동남아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회의(PMC)에서 아·태지역에서 새로운 안보협력기구(아시아 안보포럼)를 창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일본과 동아시아 지역국들은 세계경제의 불럭화현상과 미·러의 군축으로 인한 이 지역의 힘의 공백에 따른 지역불안의 증대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조짐은 동아시아국가들의 심리적, 실질적인 압박감을 주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남지나해의 영유권을 실력으로 확보하려는 의도와 아울러 이 해역의 해상수송로를 이용하는 주변국가들에게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국들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일본의 구상은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자국의 주도력을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 자민당의 하마다 다쿠치

로(田卓二郎) 중의원 의원은 1992년 3월 9일 한반도문제의 해결방식으로 「4+2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한을 4강의 종속적 위치로 격하시키는 지역안보구상을 주장하였다. 미야자와 수상은 1992년 6월 24일 아시아에도 미·중·러가 참여하는 다국간 안전보장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하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같은 기구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1991년 11월 베이커 미국무장관은 북한의 핵개발저지 및 동북아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다자간 접근을 주장한 바 있다. 이는 미국이 자국 주도하에 일본의 정치적 역할의 점진적 확대를 수용하면서 일본의 脫美현상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구상은 「한반도문제의 국제화」 추세를 우려한 한국의 반대로 북한의 핵개발저지와 관련된 다자간 접근방식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으나 지역안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베이커 국무장관이 주장한 역내 다자간 신뢰구축 및 군축의 실현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하여 일본방위청은 방위력 증강을 위해 현재 다자간 안보신뢰구축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1990년대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 안보협력회의를 위한 다변적 안보·경제협력회의의 장으로 확대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sup>105)</sup> 이러한 측면에서 일본은 자신의 다자간 신뢰구축방안을 제기함으로써 미국의 주도에 대처하려는 것이다.

## (2) 경제적 측면

일본은 세계경제의 지역화 추세에 대비하여 동북아경제권 구상에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목표는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있어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자원과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중·러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는 개방과 개혁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제관계는 상호보완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협력은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일·북한관계 역시 북한이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일본의 자본과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므로, 핵사찰수용 문제가 해결될 경우 북한과의 수교를 서두를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대중국, 러시아, 북한 경제협력의 촉진 요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이 심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과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를

105) Yoichi Funabashi, "Japan and the New World Order," p. 69.

포기하지 않고 있어 경제협력의 확대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고, 둘째, 역내 국가간의 경제발전 수준의 차이 때문에 수평적인 협력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며, 셋째, 일·러관계는 북방영토의 반환문제 때문에 일본의 정경불가분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동북아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고려되어야 할 뿐 아니라, 러시아, 중국, 북한의 국내정치 불안 등 일본의 대중국, 러시아, 북한 경협증대에 있어서 여러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으며, 넷째, 정치적으로 한·중관계는 수교를 이루었으나 아직도 역내국가간의 양자관계 (특히, 미·북한, 일·북한, 남·북한관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日本은 자신이 제안한 동북아 지역경제권 구상인 「환일본해경제권」 제안도 단기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 주도의 배타적인 지역경제권 형성을 반대하고,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중·러를 포함한 다른 역내국가들도 일본 주도를 경계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1992년 「通商白書」에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수상이 주창한 아시아자유통상지역(AFTA)을 지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의 성립과 대아세안제국과의 관계에서 유추할 수도 있으나, 일본은 지역국들간의 경제협력 증대와 타지역에서의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지역경제협력기구 창설을 주장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 기구는 곧 구체화된 모습을 띠  
것이며 그 추진방향은 배타적 지역경제협력기구보다는 개방  
적인 경제협력체의 형태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일본의 이와  
같은 1990년대 경제협력체 구상은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경  
제협력각료회의 활성화에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분담함으  
로써 최근 대두되는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전망된다.

빈 면

제2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중·러연방의 대응

정신의학의 발달과 정신병리학의 응용  
정신의학의 응용

## 제2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중·러연방의 대응

### Ⅲ. 미국의 대응

#### 1. 미국의 동북아정책

##### 가. 정책 基調

제2차 세계대전후 동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는 정치적 영역에서 역내국가들의 민주제도 정착과 책임있는 대의정부 수립과 발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과 시장경제체제 실현, 군사적 측면에서 지역내 안정유지와 특정 국가에 의한 패권행사 불원 등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사회주의 진영의 宗主國이었던 소련의 붕괴로 대변되는 냉전이후시대에 있어서도 커다란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대동아시아정책 전반에 걸친 재검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작년 말 이후 나타난 공식 또는 비공식 문건에서 발견된다.

부시 미 대통령은 1991년 11월 뉴욕에서 행한 아시아협회 (Asia Society) 연설에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근간을 밝힌 바 있다. 동 연설에서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정책 기조가 안전보장, 민주주의제도 정착, 자유무역주의 확립

등 세분야라고 천명됨으로써 전통적인 미국의 대동아시아정책이 재확인되고 있다. 기본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미국이 추구할 사항이 아울러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자유무역제도의 확립, 안전보장의 추구, 민주주의 제도와 인권의 강조, 교육과 과학분야의 쇄신, 환경문제의 중시, 다양한 문화적 유산의 중시 등이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sup> 이같은 미 행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은 1991년말 베이커 미 국무장관의 기고문에서도 표명되고 있다. 냉전이후시대의 아시아정책 기조로서 1) 변화된 전략환경에 적합한 「안보구조의 개편」(to define a renewed defense structure), 2)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한 역내국가들의 「민주화 추세」 촉진(to foster the trend toward democratization), 3) 자유무역주의에 근거한 「경제통합을 위한 틀」의 모색(to need a framework for economic integration) 등이 제시되었다.<sup>2)</sup>

첫째, 안보구조 개편의 필요성은 역내 우방국들의 공동의 敵이었던 소련의 위협을 전제로 형성되었던 한·미관계, 미·일관계 및 미·중관계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실질적으로 소멸

1) George Bush 대통령, The Asia Society 연설문, November 12, 1991, pp. 3~5.

2)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 3,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관하여 베이커 국무장관은 과거의 봉쇄정책 (Containment)으로 부터 集團介入 (Collective Engagement) 정책으로 전환할 것임을 천명하고, 미국은 집단개입정책 수행을 위해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원칙에 입각하여 계속 지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993회계연도 대외활동예산 관련 상원 외교위 청문회, February 5, 1992.

된 상황에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세계전략구상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들 국가들에게 공동의 안보를 명분으로 경제분야등에서 묵인 혹은 양보를 보여왔던 관행 또한 시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 아울러, 1세기 가까이 유지되어 온 지역내 최대의 미 군사기지인 필리핀의 수빅만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폐쇄하더라도 역내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역내 군사력 또한 새로운 안보개념에 따라 재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동북아시아 국가들에서의 민주화 추세와 가속화는 거시적 차원에서 미국의 전통적 외교정책 목표와 관련 큰 의미를 가진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 외교정책의 중심이 공산세력의 봉쇄와 나아가 공산체제 자체의 소멸에 두어지고 있었다면, 소련이 해체되고 동유럽의 공산세력이 와해된 상황은 미국 외교정책의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북한, 베트남 등 동아시아 공산주의 제국들이 비록 부분적으로 경제개방과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주의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정책 목표는 이들 국가들에까지 정치적 多元主義를 파급시켜 민주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인권문제는 이와같은 미국의 정책 구현과정에서 수시로 제기된다.

셋째, 경제력에 뒷받침되었던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지도

적 역할은 EC의 등장과 유럽공동체 형성 노력, 일본중심의 아시아경제권의 급격한 부상과 같은 외적 여건의 변화와 미국의 만성적 재정 및 무역적자, 생산성 저하 등과 같은 국내적 여건의 악화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GNP의 24%를 차지하는 경제규모를 지탱하면서 국제정치·경제질서 구축 및 운용과정에서 지도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역동적인 동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 미국의 교역량은 전통적인 유럽의 교역상대국들과의 교역규모를 3분의 1 이상 증가하게 됨에 따라 동 지역에서의 미국의 경제적 이익 또한 점증하게 되었다.

#### 나. 정책결정 요인의 변화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세계전략 및 동북아정책 재조정에는 미국이 인식하는 국내적 정황과 국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른 것이며, 냉전시대 미국이 담당해 온 '세계 경찰' 역할에 대한 재고와 함께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적절한 위상 논의와도 연계되어 진행되는 것이다.

##### (1) 대내적 요인: 미국의 位相 및 역할조정 논의

미국은 걸프전을 통하여 세계유일의 군사대국임을 입증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은 미국내에서 미국의 세계적 역할, 특히

군사적 역할에 대한 재검토와 심각한 논쟁을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소련과의 경쟁과 냉전상태를 거치면서 대외정책이 國際主義(internationalism)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데 폭넓은 합의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주의는 20세기 후반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관계, 해외 군대주둔, 경제 원조 및 정치적·군사적 활동을 통하여 세계 각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을 설명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으나 200여 년의 역사에서 미국이 대체로 孤立主義를 견지해 왔음을 상기할 때 오히려 예외적인 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냉전의 종식, 미국이 차지하는 경제적 위치의 상대적 하락, 세계 질서의 다원화라는 제반 여건의 변화상황에서 전통적 고립주의가 상당한 주목을 끌며 논의되고 있다.<sup>3)</sup>

#### (가) 고립주의적 견해

고립주의적 성향의 견해들은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냉전적 군사정책노선을 비판해 온 진보·좌파적 고립주의와 최근까지 진보적 고립주의자들과는 정반대의 견해를 갖고 있던 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되는 고립주의 견해 등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우선,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이들은 미국의 월남전 개입,

3) 한승주, “탈냉전시대의 한·미안보관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1. 10. 19, pp. 7~10.

제3세계 독재정권과의 동맹관계 유지와 그들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고 미국이 소련의 위협을 과장하여 군비경쟁에 막대한 재원을 소모하였으며 미국의 정치·사회·경제적 구조가 안보 부문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미국사회 내부의 복지문제와 외국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이념 및 인권 제고에 등한하였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소련과 동구권에서의 사회주의 몰락 이후 소련의 위협이 격감됨에 따라 미국의 군사동맹관계는 물론 미군의 해외주둔 필요성 또한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형태의 고립주의를 주장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소련을 주축으로 하는 공산세력을 세계문명과 평화를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간주하고 소련과 그 동맹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대결정책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미국 優先主義」를 고집하는 보수주의자들은 미국이 냉전의 종식과 미국의 상대적인 경제력 약화상황에서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을 최소화하고 국내문제에 몰두하는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sup>

4) 이들은 1차대전 이후 미국의 국제연맹 가입을 저지시킨 우익 보수주의자들의 後裔로서, 이들 가운데 커크패트릭 前 유엔대사는 미국이 “평상시의 정상적인 나라”로 되돌아 갈 것을 역설한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의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는 케이트 연구소(Cato Institute)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로부터 미군을 철수하고 군사적 유대를 정리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Jeane J. Kirkpatrick, “A Normal Country in a Normal Time,” *National Interest* (Fall 1990), pp. 40~44; Doug Bandow, “Leaving Korea,” *Foreign Policy* (Winter 1989/90), pp. 70~93.

## (나) 국제주의적 견해

이러한 고립주의적 성향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반세기 가까이 유지되어온 국제주의적, 개입주의 정책이 하루 아침에 반전될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국제주의적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들도 제각기 조금씩은 다른 모습으로 대변되고 있다.

그 하나의 형태로서, 세계질서는 구조적 특성으로 보아 패권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미국이 국제적 지도세력의 위치와 패권을 다른 나라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주의적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예컨대 하바드대학의 헌팅톤교수는 냉전이후시대의 세계질서를 「單極的多極體制」(uni-multipolar system)로 보고 그 안에서 미국이 일본의 경제적 도전에 적극 대응하면서 일본의 군사적 대국화를 방지하고,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사적 세력균형을 유지하며 제3세계에 있어서의 미국의 이익보호가 정책적 기초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5)</sup>

미국의 국제주의적 정책 유지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상주의 또는 도덕주의적 목표를 강조하는 견해도 있다. 미국의 외교정책 기조는 2차대전 이후 과거의 이상주의적 태도와 정책을 비판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을 취하자는 주장이 팽배함으로

5)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January/February 1991), pp. 3~17.

써 도덕성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정책에 있어 이를 도덕적 또는 이상주의적 근거를 들어 정당화할 필요성은 지속되어 왔다.<sup>6)</sup>

이상과 같은 미국의 국제적 역할 재조정 논의는 냉전시대 상존하여 왔던 외부세력의 가시적 위협이 격감하였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인 동시에, 1980년대 레이건 공화당 행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문제시되기 시작한 대외무역 및 재정적자와 지방정부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 삭감조치 등으로 초래된 실업률의 증가, 생산성 저하, 사회복지제도 및 교육제도의 문제점 노정 등 국내 제반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관심 제고를 통하여 심각하게 개선되고 있다.

다시 말해, 국제적인 주요사안에 미국의 개입과 간여도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기는 하지만<sup>7)</sup> 방위비 삭감을 통한 여타 사회복지부문

6) 최근 미국의 지식층에 각광받고 있는 크라우트해머는 소련의 몰락과 이에 동반한 세계적인 민주화, 자유화, 개방화의 바람을 가속화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밖에 없으며, 또 그것은 미국의 의무인 동시에 미국의 이익에도 합당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특히 미국이 세계사적으로 볼 때 지도력에 있어서 他의 도전과 경쟁을 허용하지 않는 唯一極的 時點(unipolar moment)에 와 있으며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미국의 부시행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신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근간인 주권의 불가침성, 법치, 협상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인권의 보장 이외에도 민주주의의 신장도 도모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Charles Krauthammer,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America and the World 1990~91* (1991), pp. 23~33; "Bush: Such Timidity, and Such a Bully Pulpit," *Washington Post*, September 23, 1991.

7) 1992년 1월에 시행된 갤럽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의 71%가 국제적 사안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였으며 이는 26년만에 가장 높은 숫자이다. *U.S. News & World Report*, February 3, 1992, p. 24.

재투자를 주장하는 소위 「평화 분담금」(Peace Dividend) 활용논의는 대통령선거의 해인 올해 상당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92년초 공화당의 보수적 성향의 부캐년(Patrick Buchanan) 대통령후보의 선거활동과정에서 재등장한 「미국 第一主義」(America First) 슬로건은 위에서 언급한 미국 외교정책의 고립주의로의 회귀뿐만 아니라 국내문제 해결우선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예로서 한때 부각되었다.<sup>8)</sup>

민주당 출신 대통령후보로서 1992년 7월 공식 지명된 클린턴(Bill Clinton)은 후보 수락연설에서 경제제일주의를 강조한 「새로운 盟約」(New Covenant)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국가로서 필요시 언제든지 무력을 행사할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군사비 삭감을 통한 국내 직업창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외교정책에 관한한 중도적 입장을 취하였다.<sup>9)</sup>

이상과 같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는 제나름의 비중을 가지고 미국의 정책구상에 반영될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정책 재조정과정에 또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유럽에서와는 달리 동북아지역에는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는 미국의 인식에 근거하여 미국 외교정책에 있어서의 국제주의적 개입정책은 동 지역에서 상당기간 지속

8) Patrick Buchanan, "America First - and Second, and Third,"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0), pp. 77~82.

9) *New York Times*, July 17, 1992.

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대외적 여건

냉전이후시대 국제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에서 국가간의 교역증대, 안보를 위한 공동노력의 기회확대, 인권 존중과 자유민주주의 확산 등 긍정적 추세를 십분 활용하여 국가안보와 경제발전을 보장할 항구적이고 안정된 제도장치를 구축하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주된 외교목표가 되고 있다. 질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세계를 보는 미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sup>10)</sup>

첫째, 국제사회의 단위체로서의 민족국가는 외부로부터는 상호의존적 세계에서 경제통합의 초국가적 성향과 함께 聯合政治(coalition politics)의 요구에 따라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으며, 또한 내부로부터는 국가권력의 분산을 요구하는 다양한 민족, 정치, 기업인 집단들의 압력에 의하여 변질되어 가고 있다.

둘째, 냉전시대 잠재되었던 영토, 종교 및 민족간의 알력이 국제사회의 정치구조가 이완됨에 따라 재연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선진무기로 무장한 엄청난 파괴력을 갖춘 세력들간의 마찰이 새로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10) Richard H. Solomon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관보, "From Cold War to Hot Economies: America and Asian Security in an Era of Geoeconomics," Pacific Rim Forum 연설문 (San Diego, California), 1992. 5. 15, pp. 2~3.

셋째,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은 새롭게 규정되고 있으며, 고전적인 군사균형에 대한 평가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 활력 요인, 환경에 대한 위협 및 난민의 이동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게 되었다.

넷째, 1991년초 걸프전 사태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서방세계의 안보에 대한 군사적 위협은 냉전이후시대에도 상존하고 있으며, 정치적 영향력 확대나 영토확대의 야욕을 갖고 있는 일부 지도자들은 과거와 달리 미사일과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들이 확산된 상황에서, 의지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무기들을 보유,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목표달성을 기도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하여 기존의 국제기구 및 조직들은 21세기의 새로운 세계를 대비하고 질서를 확립하며 분쟁을 중재할 새로운 규범을 행사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체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혼란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가지 분명한 추세는 다가오는 장래가 교역, 재정, 기술 등의 확산으로 새로운 시대의 정치와 권력의 판도가 규정되는 소위 地經學(Geoeconomics)의 시대에 돌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군사력이 여전히 국력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는 있으나, 기술과 통상분야의 역량이 오늘날 국력과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다.<sup>11)</sup>

11) Ibid., p. 3.

변혁의 과정을 걷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 근거하여 아시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 또한 재조정되고 있다.

냉전시대의 終焉은 동아시아 국가들간의 역학관계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중·소간의 화해, 한·소간의 수교, 한·중 수교, 몽골리아의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개혁안의 도입, 중국과 베트남의 화해 및 인도지나지역으로부터 강대국들의 철수 등이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변화양상들이다. 그러나, 냉전시대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반도의 분단과 군사대치상황 및 북방도서를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간의 알력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중국의 인권문제와 미·중간 무역불균형으로 인하여 양국관계의 전망 또한 불확실한 실정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아시아·태평양지역은 전세계의 경제활성화에 방향과 속도를 선도적으로 결정하는 위치(pace-setter)를 차지하여 왔으며, 미국과 동 지역간의 교역량은 1991년도 3천 1백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경제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아시아제국들이 미국에게 경쟁자로 까지 부상되면서, 미국은 이들 국가들의 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던 국제적 교역제도를 유지, 확대해야 할 책임 또한 이들이 함께 분담해야 하며, 미국의 아시아 교역상대국들의 국내시장 또한 미국과 상응한 정도로 개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도있게 전달하고 있음은 미국이 추구하는 대아시아정책의 변화방향을 예측하는 척도가 된다.

요약하면,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정세란 냉전시대에 비하여 훨씬 복잡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에 대한 뚜렷하고 공통된 적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전통 우방국들과의 경제적 마찰이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노정되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에 대한 미국의 일반적 인식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발전이 냉전시대 미국의 지역안보 유지의 틀 안에서 개방된 미국시장을 바탕으로 하여 가능할 수 있었던 까닭에, 이제 상당한 정도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에 상응하는 정치·경제적 역할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다. 정책 內容

##### (1) 군사·안보분야

냉전시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근간이었던 전진배치전략과 일본, 한국, 호주, 태국 및 필리핀과의 쌍무적 동맹관계가 지역안보와 역내국가들의 괄목할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지난 4세기동안 동아시아지역내 미국이 행한 역할은 세력균형자(power balancer), 仲裁者(intercessor) 및 안전보장자(security guarantor)로서의 역할이었다고 일컬어진다.

미국의 동아시아 주둔은 대소봉쇄라는 세계전략의 일부로서 유지되어온 바, 동 지역에서는 유럽과 달리 안보위협에 대한 공통된 인식 부재에 따라 공동의 안보협력체 구상이 실현

되지 못하였다. 냉전시대의 군사적 대립상황이 소멸되어감에 따라 전세계적 차원의 봉쇄정책 또한 의미를 상실해가고, 지역적 또는 소지역적 안보전략이 이를 대체하게 되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을 위한 안보상의 전략 및 정책의 명분 또한 변화되었다. 즉 지역내 세력균형을 부여하고 전략상의 공백을 억제하며,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공고화하여 지역내 분쟁발생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전의 여지를 확보, 유지한다는 목표가 냉전시대와는 달리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주된 명분으로 규정되고 있다.<sup>12)</sup>

동아시아 정세의 변화 및 역내국가들의 안보역량 증대가 미국내 국방예산 삭감요구등과 맞물려 미국의 동아시아전략 전반에 대한 재조정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1990년 4월 「21세기 아·태지역에서의 전략적 구상」(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다.<sup>13)</sup> 동 구상에서는 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에 수정을 가하는 데 있어 적용될 세가지 기준이 강조되고 있는 바, 이는 역내 미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분쟁 억지력을 유지하며, 우방과 동맹국들에 대한 미국의 안보공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것이다.

12) Ibid., p. 7.

13)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이하 미 국방부, *EASI Study*.

## (가) 쌍무적 동맹관계 유지

미국의 쌍무적 동맹관계 및 방위관계는 아시아안보의 핵심이 되어 왔으며, 미국은 탈냉전시대에도 쌍무적 동맹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안보전략에 근본적인 요소”라고 간주하고 있다.<sup>14)</sup>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쌍무적 동맹관계는 미·일 및 한·미간의 안보동맹체제를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바,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미·일 동맹관계만을 부연한다.

미·일 군사동맹은 1952년 구안보조약이 1960년 수정을 거쳐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 조약」(Treaty of Mutual Cooperation and Security)을 통해 정착되었는 바, 이는 전후 냉전시대 대소봉쇄를 동북아 안보정책의 초점으로 간주하던 미국의 고려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일본의 재무장을 추진해 오면서 유지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의 礎石(keystone)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서 미·일 군사안보관계는 소련이라는 공통의 잠재적 적국이 소멸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을 맞

14) Dick Cheney,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1991), p. 8, 이하 *DOD Annual Report 1991*. 쌍무적 동맹체제 유지의 필요성으로서 첫째, 변화하는 세계에서 위기에 대한 대처와 장기적 전략계획구상을 위한 효과적 안보정책 수립에 있어서 강력한 동맹체제는 필수적이며, 둘째로 많은 위협요인들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고, 안보전략 또한 변화되는 시대에는 세심한 주의를 갖고 동맹체제 관리에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다. 일단 훼손된 동맹체제의 재건에는 엄청난 부담이 따른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되고 있다. *Ibid.*, p. 12.

게 되고 양국간의 군사동맹체제의 성격을 재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재편될 국제체제에서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유지하는데 있어 일본의 군사안보 및 경제 통상면에서의 협조가 긴요하다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다.

탈냉전 기류의 확산과 일본 경제력의 확대 및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라는 새로운 동북아 환경의 조성에 따라 미·일관계의 재조정에 대한 필요성은 양국이 경제 및 안보분야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세계적 동반자관계」(global partnership)를 정립한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구상에도 반영되고 있다.<sup>15)</sup>

#### (나) 군사력의 점진적 감축 및 駐屯國의 방위분담 확대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재조정은 역내주둔 미군병력의 감축 및 주둔국의 방위분담 확대노력으로 구현되고 있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을 포함하여 해외주둔 군사력을 전반적으로 감축하고, 유지구조를 재편함으로써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시도하고 있다. 미 행정부는 변화하는 전략적 상황, 동맹국들의 이익 및 미 국방예산상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지만 또한 혁신적인(with caution and innovation) 구상을 가지고

15) 「세계적 동반자」관계는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Palm Springs에서 개최된 부시 미 대통령과 당시 일본의 가이후수상간의 정상회담시 미측에 의해 제시된 용어이다.

지역내에서 단계적으로 군사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6)</sup>

미국은 군사력 감축과 더불어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영향력 행사의 근간인 군사력의 유지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상군 중심의 기존의 전진배치전략은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보완책으로 해·공군의 기동력 제고와 미국 본토에 기지를 두고 유사시 분쟁지역에 병력을 급파한다는 迅速配置 위주전략 또한 구상하고 있다.

미 행정부의 군사비 절감노력은 동북아지역내 동맹국들의 방위분담을 확대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으로서 구현되고 있는 바, 구체적으로 주둔국의 미군주둔비용의 분담부분 확대 및 미국 지원하의 동맹국들의 군비 현대화작업을 통해 전개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군주둔비용 부담확대 요구는 특히 한·일 양국이 그러한 부담확대를 감당할만한 경제력을 갖추고 있다는 인식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미국은 일본의 경우 1995년까지는 주일미군의 인건비를 제외한 비용의 73% 이상을 일본에게 부담시킬 계획을 표명한 바 있으며,<sup>17)</sup> 한국에 대해서는 1995년에 이르러 약 9억달러에 달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한국측에 부담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16) 미 국방부, *EASI Study*, pp. 13~14.

17) Solomon 차관보, 미 하원 외무위 동아·태소위원회 증언, pp. 11~12.

있다.<sup>18)</sup>

탈냉전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 특히 공군력의 현대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현대화 작업을 미국의 주요 군수산업체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미 업체와의 합작생산 및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여 왔다. 이것은 미국의 대외군사판매활동(FMS: Foreign Military Sales)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요 동맹국들에 대한 이같은 대외군사판매 확대는 미국의 군사무기 체계의 단위당 생산가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무역수지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미행정부 자신이 강조하는 논리이기도 하다.<sup>19)</sup>

#### (다) 핵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억제

미국은 핵억지력(nuclear deterrence)을 통해 미국의 본토, 해외에 전진배치된 미군사력, 그리고 동맹국들에 대한 안보를 효율적으로 유지하여 왔다고 평가하고 있으며,<sup>20)</sup> 이러한 핵억지전략은 전례없는 핵감축의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에도 군사전략의 핵심으로 남아 있다.

1991년 9월 부시 미대통령의 전술핵 철수선언에도 불구하고

18) Robert W. RisCassi 주한 미군사령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증언, March 4, 1992, pp. 13~14.

19) DOD Annual Report 1991, p.11; 민족통일연구원, 「소련의 동북아정책 변화와 동북아질서 개편」(1991. 12), pp. 122~25.

20) DOD Annual Report 1991, p. 51.

고 공군용 전술핵은 계속 유지될 전망이며, 미국이 여전히 전술핵에 근거한 억지정책을 견지하고 있다고 이해할 때 이러한 핵전략에 따라 미국이 동북아의 육상과 해상에 배치한 전략 및 전술핵들은 두가지 기능을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우선, 일본과 한국 등 전통 우방국들을 역내 구소련, 중국 등의 핵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전략적 핵우산을 제공한다. 둘째로, 한반도를 포함해 동북아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국지적 분쟁에서 필요시 전술핵의 先制 사용까지를 배제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전하겠다는 의미 또한 갖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핵억지전략과 더불어 미국은 기존의 핵보유국들 이외의 다른 나라들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하여 핵확산금지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다. 이러한 핵확산 저지원칙은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 뿐 아니라 비적대적 우방국들에 모두 적용되어 왔는 바,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우방국들에 의한 핵개발을 금지하는 댓가로 이들에게 독점적인 핵우산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정치적 해게모니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핵무장화를 반대하고 일본을 미국의 핵우산아래 남겨두기를 원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핵개발 기도를 저지하여 왔다.<sup>21)</sup>

21) 한국정부가 1970년대말 독자적인 핵개발을 추진하려 했을 때 미국의 강력한

둘째,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 기도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저지하는 것을 미국의 대북한 정책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를 지역적 비상사태발생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으며, 북한이 핵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게 될 경우 그러한 위험성은 지극히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22)</sup> 따라서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개선 및 진행중인 일본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의 최우선 선결조건으로 북한의 핵재처리시설을 포함한 핵개발능력 완전포기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sup>23)</sup>

아울러 미국은 역내국가들의 미사일과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기술의 확산 또한 강력히 규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바, 특히 북한산 스커드 미사일의 대중동국가들에 대한 판매와 사정거리 1천km에 달하는 '로동 1호' 미사일 개발을 예의주시하면서 미사일 기술통제장치(MTCR: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의 가입과 규

---

반발은 알려진 바와 같다. Peter Hayes, "American Nuclear Hegemony in Kore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5, no. 4 (1988), p. 357.

22)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서 리스카시 주한 미군사령관은 92년 여름까지 북한의 핵물질 생산이 가능하며 빠르면 내년중 기폭장치를 개발하고 94년까지는 운반체계를 갖춘 완전한 핵무기체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RisCassi 미 상원 군사위 증언, March 4, 1992, p.5와 질의 응답부분 참고, 아울러 1992. 3. 6, *New York Times*가 보도한 미 국방부의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 참고.

23) Carl Ford 미 국방부 수석차관보, 미 하원 군사위 군사시설소위원회 증언, 1992. 4. 1, p. 7.

정준수를 촉구하고 있다.<sup>24)</sup>

#### (라) 역내 균형자역할 행사

미국은 앞서 설명한 전략을 바탕으로 하여 과거와 같은 대소봉쇄 일변도의 전략개념을 넘어서서 지역적 균형자(balancer)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동북아전략에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sup>25)</sup>

미국이 상정하는 균형자 역할은 동북아의 변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추구하는 세력균형전략의 또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바,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소련봉쇄에 주안점을 둔 세력균형정책과는 달리 지역내 4강사이의 복합적이고 유동적인 역학관계에서 비롯되는 불확실성에 대한 통제의 필요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둔 세력균형의 구도하에서 대두된 개념이라고 판단된다.<sup>26)</sup>

미국이 탈냉전 상황에서 여전히 균형자적 역할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 군사적 우위 유지정책을 견지하려는 것으로서 미국이 국제정치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적극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균형자적 역할론의 구체적 실천사항으로 미국은 기존의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전진배치, 동맹국에 대한 전략핵 중심의 핵우

24) Solomon 차관보, Pacific Rim Forum 연설문, p. 10.

25) 미 국방부, *EASI Study*, p. 10.

26) 민족통일연구원, 「소련의 동북아정책」, pp. 122~25.

산정책 견지, 지역적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機動軍의 전력강화와 같은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의 균형자적 역할론은 변화된 세계에서도 미국이 군사적으로 주도권을 유지함으로써 국제정치에서의 정치적 주도권 또한 지속적으로 행사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구상인 것이다.<sup>27)</sup>

그러나 과거 냉전체제와 다른 전략적 사고가 있다면, 미국이 과거 정책의 기본골격은 유지하되 규모와 운영방식에 있어 유지비용 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말해 미국의 새로운 전략구상은 미국이 주둔국의 방위분담확대를 적극 촉구함으로써 적은 비용으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 (2) 경제분야

2차대전후 세계적 차원에서 행사해 온 미국의 지도력은 미국의 경제력과 이에 뒷받침된 군사적 우위에 기반을 둔 것이었으며, 이러한 미국의 지도력은 동북아지역에도 그대로 투영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이후 세계정치의 운용에서

27) 1992. 3. 8, *New York Time*지를 통해 보도된 미 국방부의 「국방계획지침」에 의하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을 유지하는 것이 미 국방정책의 주된 목표였는 바, 이후 잇달은 국내외의 반발에 따라 미 국방부는 5월 발표된 최종안에서는 상당히 완화된 표현을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정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도전받지 아니하는 군사적 최강대국인 점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이해된다.

군사력의 효용성은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한편, 경제분야에서의 국가간의 갈등과 협력의 문제가 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서진영간 냉전적 대결하에서의 미국의 동북아 경제정책은 압도적으로 군사전략적 고려에 의해 수립, 운용된 것이었으며, 미국은 절대적 우위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국가들에 대한 대규모 경제원조와 개방된 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을 구사할 수 있었다.<sup>28)</sup> 그러나, 동아시아 지역내에서도 냉전적 대결이 점차 완화되어 가고, 일본과 한국의 경제발전이 두드러지게 됨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국의 경제적 주도권의 상대적 약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미국의 반응이 표출되기 시작하면서 쌍무적 교역에서의 마찰이 본격화되었다. 쌍무적 관계에서의 무역마찰은 미국의 재정 및 무역부문의 이중적 적자가 표면화됨과 아울러 일본이 세계 최대의 채권국으로 부상되고 한국의 대미무역도 흑자로 돌아서게 된 1980년대 중반이후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전통적 동맹국들과의 무역분쟁은 소련의 개혁과 개방이 본격화되고, 구소련이 붕괴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동북아 경제정책 수행에 있어 대소봉쇄라는 전략적 고려가 감소되는 현상과 맞물려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미국

28) 당시 미국 정책입안자들이 구상하던 경제정책의 기초는, Douglas Nelson, "Domestic Political Precondition of U.S. Trade Policy: Liberal Structure and Protectionist Dynamics," *Journal of Public Policy* (January/March 1989), pp. 96~97.

의 동북아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미·일 경제관계에 있어서 무역불균형 개선을 통한 미국의 경제적 주도권 회복은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의 주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다.<sup>29)</sup>

#### (가) 자유무역체제 확립

미국은 2차대전 이후 세계 자본주의진영의 무역질서를 규정해 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질서 재확립을 위해 현재 진행중인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경제정책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냉전시대의 終焉은 미국으로 하여금 교역확대와 경쟁력 제고전략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기회와 함께 도전 또한 안겨주고 있다. 냉전이후시대에 「평화 분담금」을 미 국내경제 진작에 활용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 한편, 일본을 포함한 서방세계국가들을 함께 결속시킬 수 있었던 냉전시대의 제도적 장치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이와같이 안보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퇴색된 상황에서 무역분쟁과 기타 경제정책을 둘러싼 동맹국들간의 의견대립이 심각하게 대두되게 되었다.

GATT체제의 주요한 지지국이며 아울러 자유무역체제를 이끌어 온 미국으로서는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29)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p. 9.

성공적 타결이 미국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GATT의 주요 역할이 국가간의 무역분쟁을 방지하고, 또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로서 작용한다는 고려에서 경제 현안중 가장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이 GATT규범을 보다 확대하여 기존체제에서 제외되었던 공업, 섬유 및 의류분야 까지를 포함시키고 규율, 서비스, 교역관련 투자조치와 지적소유권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다자간 무역협상의 기능을 보완하자는 것이기는 하지만, 1980년대 말 이래 미국의 통상정책을 살펴보면 공격적이며 일방적(unilateral) 성향을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국들이 GATT의 규율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거부감을 보이고, 세계적 차원에서의 거시경제적 불균형이 야기하는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압력등이 GATT체제에 대한 미국의 회의를 아울러 낳게한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미국의 회의는 1985년 여름 미 의회에 상정된 300여개의 통상관련 법안과, 수출확대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다분히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을 띤 정책들의 등장으로 대변되었다.

그러나, 국내법에 근거한 미국의 일방적 통상압력과 보복 조치는 1988년도 종합통상법안의 Super 301조 시행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GATT등을 통한 다자간 무역협상에서의 미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

다. 아울러, 미국내 학계, 업계, 정계 등에서도 GATT 다자간 협조체제의 이익이 양자관계에서의 무역압력 조치보다 우선한다는 견해가 활발히 개진됨에 따라 자유무역주의 정신에 입각한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방침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보이지는 아니할 것으로 예상된다.<sup>30)</sup>

#### (나) 쌍무간 무역불균형 해소

미국은 다자간 무역협상이 관련 당사국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입장의 차이 때문에 효율적으로 진척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별국가들을 상대로 쌍무적 차원에서 시장개방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하여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 한국, 대만 및 동남아시아국가들에 대해 자국의 개방된 시장을 주요 수단으로 하여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가장 큰 규모의 무역흑자를 기록해온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동아시아의 어느 나라와의 관계에서 보더라도 심각한 양국간의 긴장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의 대EC 제국들과의 물자교역 균형에 있어 1987년도 250억달러의 적자가 1991년도 200억달러 흑자로 전환된 반면, 대일무역에 있어서는 1987년도 당시 600억달러 적자에서 큰 폭으로 줄어

30) Trien T. Nguyen, Carlo Perroni, and Randale Wigle, "The Value of a Uruguay Round Success," *The World Economy*, vol. 14, no. 4 (December 1991), p. 359.

들었다고는 하지만, 1991년도 430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미·일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은 그 원인에 대한 미·일간의 視角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생산성 저하, 재정적자 등을 지적하면서 미국 자체내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는 한편, 미국은 무역불균형의 원인을 일본의 제도적, 정책적 차원의 보호주의적 장벽에서 찾고 있다. 이같은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국간에는 1989년부터 「구조조정협약」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논의를 계속하여 온 바, 동 장치의 효율성에 대한 양국의 해석 또한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GATT규정과 미 통상법 301조 적용등을 통해 일본시장의 개방에 적지않은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첩사리 해소되지 않는 미·일 양국간의 무역 불균형 현상이 일본의 의도적인 무역장벽에 근거하고 있다는 미국내 인식이 점점되고 있다.<sup>31)</sup>

미국은 대동북아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경제관계가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역내 미국의 국가이익에 심각한 도전이

---

31) Peter L. Gold and Dick K. Nanto, "Japan-U.S. Trade: U.S. Exports of Negotiated Products, 1985~1990" (Washington, D.C.: CRS,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1990); SII의 효율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Karel van Wolforen, "The Japan Problem Revisited," *Foreign Affairs* (Fall 1990), p. 45, Richard Holbrook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nding the Unequal Partnership,"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 47.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가면서 정책의 전환 또한 모색해나갈 것이다.

#### (다) 지역협력체내 주도적 역할

동북아경제권은 소련 사회주의 붕괴이후 동북아 자유시장 경제권의 활성화와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로 크게 팽창되고 있으며, 역내 미국의 전통적 이익과 더불어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증대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 및 중국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운용방식을 부분적으로 원용함으로써 교역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자국의 경제적 변영에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는 판단아래 아·태지역을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무역에 근거한 개방경제권으로 확립, 유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미국은 경제통합을 가속화하고 있는 유럽공동체와 아·태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의 팽창을 견제하고 자국이 적극 참여하고 폭넓은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개방적 경제질서 정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sup>32)</sup>

미국은 동아시아지역내 급성장을 보이는 국가들이 전통적인 미국의 정책, 즉 자유로운 국제무역제도의 활성화, 경제지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억제 및 세계최대의 교역국으로서의 미국의 경쟁력 확보 등을 구사하는데 도전세력으로서 점차로

32) Baker, "America in Asia," pp. 6~9; Solomon 차관보, Pacific Rim Forum 연설문, pp. 14~15.

부상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쌍무간, 다자간 협상 및 지역적 경제협력체 구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모색하고 있다. 특히, 경제지역주의 경향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GATT정신에 입각한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제도의 하부구조로서 지역내 자유무역협력체 구상을 지지하고 있다.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ASEAN Free Trade Area) 구상을 비롯하여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지지하며 동 구상에 미국의 적극적 참여와 지도적 역할행사를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장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경제구조에 투영된 미국의 정책목표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를 통해 구현될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동 지역에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민간차원의 경제교류에 상응하는 政府차원의 협의체로서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sup>33)</sup>

동아시아지역내 경제협력체 구상의 구현체로서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대한 미국의 의도는, 첫째, 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排他的이고 일방적인 경제적 지배를 견제하고, 둘째, 유럽의 경제통합에 대응하여 미국 주도의 아·태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향후 유럽경제공동체의 排他的 불력화를 저지 혹은 견제하며, 셋째, 동 지역내 일본 및 아세안제국등이 미국을 배제한 소경제블럭을 형성하려는 기도를 억제하는 동시

33) Solomon 차관보, Pacific Rim Forum 연설문, p. 18.

에 이들을 汎아·태지역경제권에 흡수하려는 것이다.<sup>34)</sup>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의 활성화등을 통한 미국의 역내 경제 협력체 구상이 전통적인 미국의 경제정책 기조인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유무역주의 확산과 질서정립이라는 기본구상과 정책목표를 근거로 한 것임은 물론이다.

##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

### 가. 미국의 대일정책환경 변화

미국이 인식하는 대일관계는 동아시아 및 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참여의 礎石이며 조화롭고 생산적인 미·일관계가 역내 안보와 번영에 중추적 요소일 뿐만 아니라 탈냉전체제의 효율적 운영의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미·일관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보다 균등한 관계로 발전되었고, 관계의 양상과 성격 또한 현실을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부단히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다시말해, 미국과 일본은 양국관계가 전후 동북아지역내 안정과 역내국가들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탈냉전시대 공동의 적의 소멸로 대표되는 국제적 여건변화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심화 및 이에따른 무역마찰은 양국이 상호간의 전통적 의존관계의 현

34) Baker 미 국무장관의 쿠알라룸푸르 아세안 연례외상회담 연설, *New York Times*, July 25, 1991.

상황을 재고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미·일 양국의 경제규모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선진민주주의국가로서 기본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상호의존관계를 통해 규정되고 있다. 과거 냉전시대에는 대소봉쇄의 주된 전략 목표 아래 미·일 동맹의 군사·안보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불균등한 책임분담이 용인되었으나, 안보문제의 경제적 차원이 점차 큰 비중을 갖게 되고 양국간의 경제마찰이 초래하는 정치적, 사회적 불화감이 증대됨에 따라 양국관계의 심각한 재검토와 조정의 필요성이 양측 모두에게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실업률 증가, 생산성 저하, 교육 및 복지부문 투자의 필요성 등 국내 경제, 사회적 문제들을 대외정책에 우선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으면서 정치적 압력으로 행사되고 있다.

미국의 국내적 어려움에 미·일간의 무역불균형이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주장과 이에 근거하여 미국내에서 일고 있는 일본배격(Japan-bashing)운동과 미국민들의 인식 변화는 미·일관계의 새로운 방향설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다.

워싱턴을 중심으로 하여 미국내 일고 있는 일본에 대한 비난은 1980년대 말 이후 이전보다 훨씬 강도높게 부각되었다. 그러나, 1991년 8월 소련의 군부쿠데타 실패와 이후 공화국의 분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의혹의 증대 등을 계

기로 부시 미 행정부의 일본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부각되게 되었다. 특히 199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방일기간중에 표명된 미 행정부의 대일관계 입장표명이나, 미·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돋보인다. 아울러 워싱턴에서의 대일관계 인식의 변화는 미국의 새로운 아·태전략 형성과정에서 포착되는데, 미 행정부의 미·일관계에 대한 재인식은 앞서 언급한 부시 대통령의 1991년 11월 아시아협회 연설 당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이같은 미 행정부의 인식전환은 국제적 차원에서 볼 때 미국의 대일태도가 미국 자신의 국제적 입지와 동·서관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표출되고 있다. 국제체제에서 미국의 입지가 약화되면 미·일간의 알력은 증대되며, 동·서진영간 대결이 심화되면 미국의 동맹국관계 결속의 필요에서 대일정책 또한 완화된 양상을 보이게 된다. 반대로 동·서간 긴장이 완화되면, 미국의 대일정책은 강경해진다.

대일정책을 최종 결정하는 대통령과 주변의 고위 인사들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이들의 정책결정 방식 또한 미국의 대일정책 방향수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걸프전 직후 일본에 대한 비난이 격렬하였을 때 미 행정부의 방관자세와 달리 1992년에 들어서 대일배격분위기를 자제시키려는 노력이 백악관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근자에 이르러 미·일관계에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것과 별도로, 1980년대 말 이래 미국내 대일본 여론을 선도해

은 대조되는 성향의 두 지식인 집단이 있다. 흔히 「수정주의자」(revisionist)로 불리는 일본 비판세력 혹은 경계세력<sup>35)</sup> 「菊花클럽」(Chrysanthemum Club)이라고 불리는 오랫동안 일본을 지지해온 세력이 그들이다. 미국의 대일본정책 재조정 조짐에 따라 새로운 「국화클럽」이 점차 득세하게 되는데,<sup>36)</sup> 이들은 일본이 미국과는 역사, 문화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갖고 있으나 優劣의 관계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2차대전 당시 미·일 적대관계는 일본의 노력과 미국의 기여로써 이미 해소된 바, 세계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양국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도록 양국이 각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구조적 재조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나. 미국의 대일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

### (1) 미국의 대일안보관계 구상

미·일안보관계는 서태평양에서의 소련 군사력 증강에 대응

35) Takashi Kawakami, "America's New Strategy toward Japan," *Policy Paper 78E*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March 1992), p. 6.

36) 이들 집단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는 미 국무부 경제 및 농업담당차관 켈릭 (Robert Zoellick),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국장이며 前 국방부 일본담당 특별보좌관이었던 패터슨(Tokel Patterson),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일본담당 연구관인 캘더(Kent Calder) 등이 있다. 일본주재 前 미국대사 라이샤우어(Edwin Reis-chauer)와 하바드대학의 보겔 (Ezra Vogel)교수 등이 이들 「新국화클럽」의 정신적 지주들이다.

이라는 미국의 주된 전략목표에 따른 일련의 전략구상에 의해 유지되어 왔으며, 일본은 미국의 요구와 청사진에 따라 군비를 증강하여 왔다. 지난 40년간 미·일간의 동맹관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역내 개입정책의 근간이 되어 왔다.

1990년이래 국제체제에 변화를 초래하는 일련의 사태가 발생되기 이전에는 일본이 지역 및 국제안보문제를 취급하는데 신중한 외교와 군사적 간여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외교적 사안에 대하여는 대개가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추종하여 왔다. 걸프전은 일본의 대외정책, 특히 군사, 안보정책과 전략의 독자성과 관련하여 일본내에 심각한 논의와 자각을 불러 일으켰다. 걸프전 당시 일본은 130억달러 상당의 기여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연합국들로 부터(특히 미 의회내에서), 명쾌하고 신속하지 못한 일본정부의 대처에 대한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난은 일본 행정부내에서 미·일 안보동맹체제에 전적으로 종속되어 미국의 대외정책에 附屬的(subsequent) 역할만을 수행하던 종래의 입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 계기가 되었다.<sup>37)</sup>

미국에는 안보분야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 노력에 대한 다

37) 미·일 안보동맹의 틀을 넘는 해외에서의 군사적 역할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거론은 1991년 7월 와타나베 외상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외무장관의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정례적 회합을 제기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양한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즉, 일본이 자체 방위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1980년대 주조를 이루던 견해가 상존하는 반면, 지속되는 일본의 방위력 증강과 군사적 역할증대가 장래에 동아시아의 지역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에게 군사적 위협으로 까지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새로운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1989년 FSX 차세대 전투기사업을 둘러싼 미·일간의 첨예한 의견대립 이래 부시 행정부와 미 의회는 일본이 미국산 군사장비를 공동개발하기 보다는 가능한 많은 규모의 완제품을 구입하는데 정책의 우선을 둘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자체 방위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장래 방위비부담을 감소시키고 독자적 안보정책을 수행하려는 일본정부의 정책과 상충되고 있다.

미·일 안보동맹관계는 양국간의 경제마찰이 관계전반을 악화시키거나, 북방 4개도서 문제등을 둘러싼 러시아의 대일본 정책변화가 서태평양지역에서의 미·일간 전통적 안보이해관계에 대한 심각한 인식의 차이를 야기시킬 경우 미국의 대일 안보정책의 변화를 초래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가) 미·일 안보동맹체제 유지

일본과의 상호보완적인 안보관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고 동 지역국가들과의 유대관계를 지탱하려는 미국의 태평양 전략의 中樞(linchpin)로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인식이다. 일본의 지원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진배치전략을 강화시켜주고 있으며 일본의 지원없이는 미국의 적정수준의 병력구조 유지, 역내국가들간의 주도권 쟁탈억제, 경제, 외교, 전략면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행사 등이 용이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표명되고 있는 미 행정부의 대일 안보구상의 주요한 부분을 이룬다.<sup>38)</sup>

미·일안보관계의 운용에는 실제로 명백한 역할분담이 따르고 있으며, 미국은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함으로써 잠재적인 대일공격에 대한 억제력을 제공하고, 일본의 자위대는 선진화된 육·해·공군체제를 통해 미국의 전략에 부응하여 추가적인 방위력을 행사함으로써 양국의 군사력은 다분히 군사작전상의 상호 보완성을 갖게 된다.<sup>39)</sup>

1990년대의 전반기가 소련의 붕괴로 야기된 세계체제의 변화가 계속되는 기간이 될 것이라고 상정할 때, 미국은 이러한 전환기에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새로운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의 군사·안보적 측면의 대강은 1992년 5월 확정된 미 국방부의 「국방계획지침」(Defense

38) Carl W. Ford, Jr. 미 국무부 수석부차관보, 미 의회 상원의교위 동아·태소위원회 증언, "United States Security Policy in East Asia," 1991. 10. 30, p. 8.

39) Zbigniew Brzezinski, "Selective Global Commitment," *Foreign Affairs* (Fall 1991), pp. 14~17. 논문에서는 소련의 위협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장래가 미·일 안보동맹관계의 결속을 요구하는 요인이라고 주장되고 있다.

Planning Guidance)을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sup>40)</sup> 특히 미국의 대일 안보구상은 1991년 중반이래 여러 공식문건을 통해 그 변화의 내용이 공표되기 시작하였는 바, 1991년 12월 일본의 진주만공격 50주년 기념과 1992년 1월 부시 미 대통령의 일본방문행사를 즈음하여 집중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미국의 학계와 연구기관들에서는 미·일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었다.<sup>41)</sup> 특히 미 행정부가 전달하고자 하는 미국의 아시아정책 속에서의 미·일관계에 관한 부분들을 공식문건등을 통해 분석해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부각된다.<sup>42)</sup>

40) *Washington Post*와 *New York Times*지는 5월 24일, 체니 미 국방장관이 국제 분쟁해결을 위한 유엔등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와 집단안보방침등을 골자로 하는 「'94-99 회계연도 국방계획지침」을 승인하였다고 보도함. 동 지침은 1) 미국의 전략목표가 미국에 대한 공격을 억제하고 우방국과의 공동방위체제를 확대, 강화하며 미국익에 중대한 특정지역에 대한 적대국가의 지배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2)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가 될 수 없으나 지역안보 위협에 대해서는 동맹국과의 책임분담원칙하에 선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해야 하며, 3) 미국의 전략핵무기는 START 발효 이후에도 구소련내에 존재할 핵무기의 사용억제를 위해 필수적이고, 4)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과 아울러, 한·일 양국이 보다 많은 안보책임을 분담토록 계속 고무할 것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New York Times*, May 24, 1992 참조.

41) 많은 정책보고서 가운데에서도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The Future of U.S.-Japan Relations"와 前 일본 수상 Yashuhiro Nakasone와 前 미국 대통령 Jimmy Carter의 "Strengthening the Global Partnership," *Special Report 69E*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1991)이 대표적으로 들보인다.

42) Takashi Kawakami, "America's New Strategy toward Japan," *Policy Paper 78E*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March 1992), pp. 3~4.

첫째, 미국이 '태평양국가'(Pacific Nation)임이 누차 강조되고 있다. 유럽에서의 새로운 안보체제 모색과 EC통합등의 역사적 전환을 목격하면서 미국은 대서양지역뿐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또한 정책의 주안점을 두려는 의지가 포착된다는 점에서 커다란 변화임에 틀림없다.

둘째,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가깝고 중요한 우방국의 하나라고 언명함으로써 미·일관계의 중요성이 누차 천명된다.

셋째, 미 군사력의 전진배치와 안보분야에서의 일본과의 협조가 미국의 아·태전략의 근간을 이룬다는 점이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미 군사력을 재편하는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일본이 동아시아지역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다시말해, 미국은 동 지역내 미 군사력의 전진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일본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내 새로운 질서의 형성을 이루어나갈 것임을 표명하고 있다.

넷째,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과정에서 미·일간에 책임이 공유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군사적 측면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均衡者」역할을 담당해왔으며, 미군의 전진배치 유지를 위하여 일본의 협조에 대한 기대가 명확히 표명되고 있다. 전략적 지원부문에 있어서 또한 미국의 지도력 아래 형성될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일본이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미국의 전략이 구현되는데 있어서 일본의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새롭게 조정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재인정받고 있으며,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주요한 미군기지 제공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본으로 하여금 주일미군의 유지경비에 대한 부담증대와 방위관련 기술이전 부문에서 양국간 균형을 이루도록 아울러 촉구하고 있다.

#### (나) 일본의 역내 방위분담 확대

미·일 안전보장조약하에서 미국은 일본방위에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는데, 1981년 레이건 행정부의 대일본 방위정책의 재검토과정에서 도출된 일본방위의 1차적 책임이 일본에게 있다는 결론은 미·일 양국의 안보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차대전 이래 미군사력을 배경으로 미·일 안보체제에 의한 미국의 핵우산아래 일본은 저렴한 국방비 부담에 힘입은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다시말해 일본은 평화헌법 제 9조에 의거하여 ‘安保無賃乘車’를 한 결과 경제성장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80년대 들어와 일본은 서방국가의 일원으로서 거대한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정치적 역할수행 노력과 함께 레이건 행정부의 대일정책 변화에 따른 자체 방위력 증강요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하였다. 미·일 양국간에 선진기술 교류

협력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대미 무기기술공여 결정이 1983년 1월 14일 일본 관방장관의 담화를 통해 발표되었고, 같은 해 9월 양국간 안보실무자 협의회 합의에 따라 海路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미·일 안보동맹체제하에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전략구상에 추종적 입장을 보일 수 밖에 없었던 일본이 부분적으로나마 미국과의 대등한 안보협력관계를 구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본의 경제력과 선진기술의 축적 등이 미국의 세계적 지도력 유지에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서 부각되었기 때문이었으며, 위에 언급한 레이건 행정부의 대일정책 전환도 이러한 여건에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미국의 대일정책은 안보관련 기술의 교류와 일본 방위력의 현대화 등을 통해 일본의 자체 방위력 증강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역내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안보역할의 분담추구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미·일 양국은 1987년 7월 「SDI 연구참여에 관한 미·일 정부간 협정」 및 이듬해 4월 「미·일 상호방위 원조협정에 의거한 일본에 대한 특정한 방위분야에 있어서의 기술상 정보공여에 관한 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안보기술분야에서의 양국간의 협력, 다시말해 역할분담이 본격화되었다.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일본의 독자적 방위기술개발 기도와 미국의 대일 무기수출계획 노력이 상충되어 나타난 FSX 차세대 전투기문제는 1988년 11월 29일 미·일 양국이 공동개발

에 관한 공문과 각서를 교환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1989년 3월 FSX 공동개발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대일공여 제약, 생산단계에서의 미국측 참여기업의 지분확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 보증 등에 관하여 사업의 실제이행 이전에 정부간 양해를 구하려는 부시 미 대통령의 의사가 일본측에 전달되고, 이를 일본측이 수용함으로써 사안이 일단락되었다.

탈냉전과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및 일본 경제력의 확대라는 새로운 동북아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모색되고 있는 미·일간의 역할 재조정, 일본의 역내방위에 대한 책임분담의 형태로 구현되고 있는 바, 앞서 설명한 대로 미국의 선진 군사장비로 무장한 일본 자위대의 군비현대화를 통한 방위력 증강과 더불어 일본 자위대 역할의 국제화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 자위대의 국제적 역할분담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일본 자위대의 소해정파전에서 처음으로 구체화되었고, 이어 일본 자위대의 유엔평화유지군(PKF) 참여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지지로 나타났다.<sup>43)</sup> 이 같은 일본의 역할분담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점차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될

---

43) 1991년 6월 5일 일본 참의원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이 통과된 직후(본 회의 통과는 6월 9일) 미 국무부는 현지시간 6월 4일 “미국 정부는 일본이 평화유지활동을 비롯해 평화신장과 인도주의 목적의 국제활동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논평하였다. 「한국일보」, 1992. 6. 6.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미·소 중심의 양극체제에서 운용되어 왔던 미국의 세계전략이 미국 중심의 전략으로부터 탈피하여 다극화된 체제를 상정한 전략으로 개편되지 않을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냉전이후시대의 새로운 상황에서 미국이 인식하는 위협에는 전통적인 군사위협이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닐지라도, 과거에는 크게 문제시되지 아니하였던 환경, 난민이나 마약 등과 같은 '非전통적 위협'(non-conventional threat)들이 포함되고 있다. 비전통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경제적 원조가 효율적인 대응책이 된다는 인식아래 일본의 기여가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걸프전에서 노정된 미국의 독자적 군사활동의 한계에 대한 미국의 인식에서 또한 일본등과 같은 선진 서방제국들의 참여가 강조되는 것이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역할분담 요구는 이상과 같이 군사적 작전수행상의 지원뿐 아니라, 전략적 분야에서의 경제원조등까지를 포함하여 폭넓게 개선되고 있는 바, 향후 미 군사력이 개입되는 실전에 일본의 병참지원이라는 새로운 요구사항이 아울러 대두될 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sup>44)</sup>

동아시아·태평양지역의 미국의 동맹국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해짐에 따라 자국의 방위에 보다 많은 책임을 부담하여야

44) Kawakami는 미국의 대일 방위분담 요구를 군사적 부문과 기타 전략적 원조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America's New Strategy," pp. 9 11.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전진배치전략하에서 미국 및 동맹국들의 이익을 보전하는데 따른 동맹국들의 책임분담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 미 행정부의 인식이다.<sup>45)</sup>

미·일 양국은 정기적인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정보수집, 군사작전계획과 군병력간의 상호조정과 협력을 긴밀히 유지해 오고 있으나,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5만명의 미군병력 유지를 위한 비용분담이 양국간 지속되고 있는 논의사항이며, 때로는 마찰을 야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미 의회와 행정부내에서는 경제적으로 부강한 일본의 방위를 위해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의 유지비용에 대하여 상당부분을 일본이 부담하도록 촉구하여야 한다는 주장 또한 대두되게 되었다. 1990년에 이르러 일본주둔 미군유지 비용은 70억달러를 넘게 되고 GNP의 1%에 불과한 방위비만을 부담하는 일본에게 미군주둔에 따른 지원분담 규모를 확대시키도록 하는 미 행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확대를 제한하는 평화헌법의 규제가 엄연히 존재함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의 민주주의가 약화되고 군국주의가 부활되기를 원치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현행헌법의 테두리안에서도 의지여하에 따라 세계의 평화와 안보에 공헌을 할 수 있는 방도가 여

45) Ford 부차관보,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증언, 1991. 10. 30, p. 4.

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미·일간의 방위비 분담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는 좋은 예가 1991년 1월 14일 조인된 駐屯國 지원협정인 바, 이에 따라 일본은 1995년까지 현재 50%에 불과한 현지 노동력 유지비용을 100%까지 부담하고, 현재 전혀 부담치 않고 있는 현지 시설 및 장비 사용비용도 100%까지 수용하게 되어 있다. 일본은 현재 미군주둔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건축설비 시공비용의 거의 전부와 미국노임의 50%이상을 부담함으로써 세계 우방국 도처에 전진배치된 미군사력의 유지비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주일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미군봉급을 제외한 전액의 일본측 부담까지를 상정하고 있다.<sup>46)</sup>

1991회계년도의 미 국방부 세출법안에는 일본이 주일미군 유지를 위하여 봉급을 제외한 직접경비의 전액을 부담치 아니하면 매년 5천명씩 주일미군을 철수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동 법안은 미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법안적용을 留保할 수 있는 권한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미·일간에 방위비 분담문제를 둘러싸고 향후 제기될 사안으로서, 주일미군이 점차적으로 철수함에 따른 미·일간에 병

46) 미 의회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수시로 대두되고 있으며, 미 행정부의 견해는 Carl Ford 부차관보의 미 상원 증언에서 표명된 바 있다. Ibid., p. 5.

참지원 협력체제 유지를 위한 일본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책임문제와 필리핀의 1992년도 수빅만 미 해군기지 폐쇄에 따른 일본내 군함수리 설비이용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들이 있다.<sup>47)</sup>

미 행정부와 의회의 분위기가 일본의 자체방위 분담증대, 전략적 대외 경제원조, 유엔 평화유지군 참여, 주일미군에 대한 주둔국 지원증대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보다 많은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바,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이 증가됨에 따른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아울러 확대된다는 사실에 대한 미 행정부의 공식적 견해 표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sup>48)</sup>

## (2) 미국의 대일경제관계 구상

### (가) 쌍무간 무역불균형 해소

미·일 양국간 경제관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무역불균형,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의 어려움, 서로간의 무역정책에 관한 견해 차이는 마찰을 야기하게 되었으며, 양국관

47) Larry Niksch, "Defense Cooperation and Burden Sharing with the U.S.," in *Japan-U.S. Relations: A Briefing Book* (Washington, D.C.: CRS,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1991), pp. 81~82.

48) James E. Auer, "Defense Burdensharing and the U.S.-Japan Allianc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roubled Partners in a Changing World* (Cambridge, MA: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1991) Special Report, p. 41.

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부각되게 되었다.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1982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최초로 경상수지 적자를 보인 해에 170억달러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한 이후 급속히 심화되어 1987년에 570억달러로서 최대폭의 적자를 기록하고 점차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1년에는 미국의 대일적자가 약 430억달러에 이르렀다(표 1 참조).

<표 1> 미국의 대일 교역(1982~1991)

(단위: 10억달러)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1982	20.7	37.7	-17.1
1983	21.6	41.2	-19.6
1984	23.2	57.1	-34.0
1985	22.2	68.8	-46.6
1986	26.6	81.9	-55.3
1987	27.8	64.6	-56.8
1988	37.4	89.8	-52.4
1989	44.5	93.5	-49.0
1990	48.6	89.7	-41.1
1991	48.1	91.6	-43.4

출처: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Trade

Net Data Retrieval System, 각 연도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의 확대와 함께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게 되었으며, 일본의 미국상품에 대한 관세 및 非관세 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이 비난의 표적으로 부각되었다.

대일 무역불균형의 원인과 해결책을 둘러싸고 미국내에서 많은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일본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초점을 맞추어 제시된 해결방안의 대표적 예가 1988년 「무역 및 競争力提高 종합통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이다. 동 법안이 일본의 시장개방만을 대상으로 제안된 것은 아니었으나, 법안의 주요골자라고 할 수 있는 소위 Super 301조와 같은 조항등의 포함과정에서 진행된 미 의회 내의 논란은 분명 일본을 주요 적용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편, 양국간 무역불균형이 미·일간의 거시경제적 여건의 불균형의 산물이며, 특히 미국의 재정적자와 일본의 높은 저축률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영하여 고안된 해결책은 1989년 5월 부시 행정부에 의해 제안되고 일본이 같은 해 7월 수락한 「구조조정협약」로서 대변된다.<sup>49)</sup>

상기와 같은 쌍무간 무역불균형을 둘러싼 논쟁 가운데 대일 규제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일본의 무역

49) 1989년 7월 파리에서 거행된 경제정상회담에서 당시 일본의 우노수상이 미국경제의 구조적 요인들 또한 SII 논의의 대상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미국의 제의를 수락하였다.

장벽에 대한 미 국내법에 의한 규제조치는 무역장벽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야기함으로써 무역양상을 왜곡시켜 양국간의 교역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무역장벽과 불공정 무역관행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된 미 업계 및 다양한 이익단체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문제로까지 비약되게 되었다.

무역불균형이 야기한 경제마찰이 정치문제화됨에 따라 양국관계 전반에 심각한 위협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쌍무간의 무역불균형 해소문제가 미국의 대일 경제관계 구상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sup>50)</sup>

이같은 미국의 구상은 1980년대 말 이래 대일 무역정책의 초점을 품목위주의 협상에서 교역과 투자를 저해하는 일본의 상행위 및 무역관행과 정책이라는 보다 근본적 문제로 이전시키면서 구체화되었다. 1989년 7월 시작된 양국간 「구조조정협약」을 통해 미국은 일본정부 및 업계의 의도적인 무역장벽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미 업계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제반 문제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제연합회, 토지사용정책 및 가격정책 등까지를 포괄한 폭넓은 사안에 있어서의 관행에 변화

50) 일본측에서 보는 미·일 경제마찰의 성격과 일본의 대응 및 양국 경제관계의 전망은, 花井 等, “日·美摩擦: 過去と 90年代の 展望,” 「海外事情」(1992 1), pp. 2~16; 長尾 悟, “日·美摩擦: 日本の 對應,” Ibid., pp. 17~30을 참고.

를 촉구하였다. 1990년 양국은 동 협의하에 각자의 경제구조에 있어 양국 교역증진에 근본적 장애가 되는 요인을 상호 예시하고 이에 합의함으로써 이들을 해소하기 위한 3년간의 제1차 시행과정에 있다.

#### (나) 세계적 동반자관계 유지

미국의 세계전략 구현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기대하며 이에 대한 댓가로서 국제정치·경제적 주요사안 논의에 경제력에 상응하는 일본의 참여와 역할을 인정 혹은 지원하겠다는 기본 인식하에 1990년 부시-가이후간 정상회담에서 미측이 제시한 개념이 소위 「세계적 동반자관계」이다.

용어 자체가 설명해주고 있듯이, 자본주의진영에서의 두 초경제대국인 미국과 일본간의 동반자관계는 단순히 쌍무적 관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간의 건설적인 협력관계를 통하여 보다 안정되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점이 명분으로 제시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미·일 양국간에 구소련과 신생연방들을 국제사회에 통합시키고, 지역분쟁을 억제하고 해결하며, 세계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3세계 국가들의 질서있는 발전을 지원하며, 세계환경문제에 대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제반 국제적

사안에 있어 동반자로서 협조할 수 있는 분야들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 마약, 난민 등의 세계질서유지에 비전통적 불안요인에 대한 일본의 전략적 지원등을 촉구하고 있는 바, 결국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인정과 더불어 미국이 주된 책임을 담당하였던 제반 국제적 사안에 대하여 적정수준의 일본의 역할분담을 촉구하는 미국의 구상이 미·일 양국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 강조로 표현된 것이라고 이해된다.

#### (다) 다자간 경제관계에서의 협조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대외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으며, 동 협상타결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는 유럽제국들의 농산물 보조금문제 논의에 있어 일본등의 미측입장 지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 의제가운데 서비스, 공업, 지적소유권 분야 및 교역교란 투자조치 규제 등 상당부분에 있어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으나 농업교역에 있어서는 일본의 쌀시장 개방문제와 관련 입장의 차이 또한 노정시키고 있다. 1986년 9월부터 시작된 GATT 우루과이라운드에서 행사되는 미국의 주도적 역할에 일본은 대체로 지원하는 입장을 취해 왔으며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 제한문제에서

또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반면, 쌀을 포함한 몇가지 농산품에 대한 수입장벽의 완전한 철폐에는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의 성공적 타결이 세계교역을 통제할 새롭게 개정된 규칙을 마련하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미·일 양국간 교역관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GATT 조치가 양국간 무역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게 되는 경우 장래 쌍무간 분쟁시 과거에 논란의 대상이 되어온 미 국내법 조치에 따른 규제조치에 덧붙여 다자간 해결방안 모색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계산이다.

미·일 양국간의 경제적 사안들은 단순히 쌍무관계 차원을 넘어서 지역적 및 세계적 동반자적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중국, 대만, 홍콩까지를 포함시킨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대변해 주는 다자간 경제협력체이다. 미국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의 기능을 확대, 활성화시키고 일본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한편, 동 지역내 배타적인 경제블럭의 형성에는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은 서방선진제국 7개국간의 정례적 회합인 G-7회의등을 통해 환율, 국제경제정책, 구소련 및 동구권제국에 대한 재정지원 및 환경문제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안을 논의하는데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와 경제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촉구함으로써 일본의 독자적 구상에 의한 국제경제정책 모색에 균형을 부여하려는데 또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 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의 입장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전통적 미·일 안보체제의 틀 속에서 가능하였던 바, 미국의 동북아정책 수행의 근간으로서 기존의 미·일 안보동맹관계는 유지하면서 일본에 대한 주일미군 유지 및 국제사회에서의 전략적 경비 등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방위비 분담증대를 요구하는 한편,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견제하려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다.

이러한 미국의 대일정책은 그 자체가 兩面性을 띠고 있는 까닭에 미·일 동맹관계의 중요성이 양측 모두에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재조정의 필요가 의회, 학계, 언론계를 중심으로 수시로 제기되고 있다.

양국관계가 과거와 다른 심각한 정도를 갖고 마찰을 보이는 이유를 분석해 본다.

첫째, 경제마찰은 단시일내에 해결책이 모색될 가능성을 보이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의 불균형은 1987~90년간 다소 해소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심각하다. 미국내에서는 일본시장의 폐쇄성에 대한 폭넓은 불만이 도출되고 있으며 점차로 대두되는 「技術民族主義」(techno-nationalism) 또한 양국 모두가 우려하는 현상이다. 미국민들

사이에서는 미국과 일본간의 경제력에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행사하는 경제게임의 규칙이 변화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둘째,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보다 큰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 개편과정에서 일본의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일본을 세계적 차원에서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 걸프전 당시 일본이 적지않은 재정적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에 있어 제한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게 됨으로써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와 실제 일본의 역할행사에는 乖離가 존재하고 있다. 미·일관계의 장래는 일본이 구가할 국제적 역할의 폭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셋째, 미·일 양국에 공히 상대방에 대한 감정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양국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고는 있으나, 때때로 부정적 감정이 상충되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일본을 경제적 위협으로 인식하는 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리스 여론조사가 1991년 3월에 행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민의 70%이상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보다 일본의 경제적 위협이 미국익에 심각한 것이라고 답하였다.<sup>51)</sup> 일본의 경제적 도전과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51) 1991. 3. 15~19간에 걸쳐 1,255명의 미국인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가운데서, 「미국의 장래에 심각한 위협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의 경제적 위협이 72%,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20%를 차지하였다.

함께 비교함이 합당치는 아니하지만 일본 경제력의 급증과 미국경제 침투에 대한 우려를 과소평가할 수 없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신뢰할만한 우방국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미국민들이 증가되고 있다. 갤럽조사에 의하면, 1989년에 29%를 차지하던 반응이 1990년에는 40%, 1991년에는 39%를 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2 참조).<sup>52)</sup>

### <표 2> 미국인의 對日 인식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이 미국의 신뢰할만한 우방국인가?」라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난 3년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뢰할 만함	신뢰할 수 없음
1989.1~3	50%	29%
1990.2	44%	40%
1991.1~3	44%	39%

반면에 미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 또한 다소 변화하고 있다. 1991년 3월에 실시된 니케이 여론조사에서 걸프전 이후 일본인들이 인식하는 미국이 신뢰할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반

52) Hiroyuki Kishino, *Managing the Japan-U.S. Allianc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November 1991), p. 7.

응이 32%를 차지함으로써 미국을 신뢰한다는 답변 22%를 증가하고 있다(표 3 참조).<sup>53)</sup>

### <표 3> 일본인의 對美 인식

1991. 3. 21~25간 「日本經濟新聞」이 6,147명의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결프전과 관련하여 미국이 예전보다 더욱 신뢰할만한 우방국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라는 문항에 대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신뢰도가 증가하였다.	22.0%
신뢰도가 저하되었다.	31.5%
별 차이가 없다.	39.5%

양국간의 서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미·일관계의 장래에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미·일간의 마찰가운데 많은 부분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양국이 공히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야기된 것이다.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국가로서의 역할수행을 주저하는 일본과 특히 통상협상에서 흔히 표출되는 미국의 일방적 문제해결 방식이 혼합되어 과도기의 미·일관계를 규정하

53) Ibid.

고 있다. 만약에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미 행정부내의 소위 '신고립주의자'(neo-isolationist)들로 부터의 비난과 압력이 가중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일본에 대하여 일방적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과 기타 우방국들 사이에 민족주의적 반응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 모두가 양국관계의 원만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현재로서는 主調를 이루고 있다고 판단된다.

미·일 양국관계의 장래를 결정하게 될 여러 요인들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양국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임에 틀림이 없다. 아울러 양국관계의 장래는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역할증대와 상대적으로 미국의 경제력 약화라는 현상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인 바, 40여년간 유지되어온 미·일 안보동맹체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일본의 역할증대에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답을 모색함으로써 가능해 진다.

일본의 정치·군사·경제면에서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에 대한 미국의 반응 혹은 대응을 일본의 정책 및 조치 가운데 미국의 긍정적 반응을 도출해 낼 수 있는 부분인 용인요인과 미국이 일본의 역할증대를 통제할 수 있는 견제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 (1) 역할증대 容認요인

## (가) 안보분야

## 1) 전통적 미·일 안보관계 유지

냉전이후시대에 불확실한 러시아의 국내정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봉쇄 혹은 억제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작전수행에 일본의 보완적 역할을 상정, 미·일 간 동맹관계 유지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이 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영향력으로 부터의 일탈을 모색할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다소 소극적 측면에서의 양국간 안보동맹체제 유지의 필요성 또한 미국은 인식하고 있다.

일본으로서도 40여년간 유지되어 온 미·일 안보동맹은 미국의 핵우산과 주일미군의 억제력을 바탕으로 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일본의 경제성장을 이룬 안전판의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비록 미국의 방위분담 요구와 군사기술 이전 등을 통한 대일영향력이 탈냉전시대에 있어 긍정하지 못하다는 불만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무간의 동맹체제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현재의 안보체제가 독자적인 군사안보전략과 재무장을 요구하는 일본내 일부세력의 압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본 상품의 미국시장 접근과 미국의

선진기술 이전을 보장하고 양국간 통상마찰이 야기하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협력의 틀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인식이다. 또한, 일본으로서는 미 행정부 및 의회의 권력 핵심부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명분으로서 양국간 동맹관계가 가지는 의미도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국익이 관련된 사안에서 미국의 협조를 도출할 수 있는 근거로서의 역할도 하고, 일본내 정국운동과 관련하여 적정 수준의 방위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완해 주는 제도적 장치 역할 또한 동맹체제를 통해 기대할 수 있다. 양국간 안보동맹은 일본의 무기체계를 질적 및 양적면에서 보강하며 일본 방위전략의 상당부분을 보완해 주기도 한다. 아울러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일본의 협상력의 중요한 보강책으로서 미·일 안보동맹은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균형을 부여하는데 활용되기도 한다. 미국으로서도 안보동맹체제가 일본의 독자적 계산에 의한 대중국과 러시아관계 진전 노력에 포괄적인 테두리로서 작용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일본과 미국의 인식은 쌍무적 안보동맹체제의 유지를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를 미국이 용인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 2) 유엔 평화유지활동 참여

미·일간 안보동맹체제가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내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양국이 공감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보 또한 동 체제하에서 효율적으로 보장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일본은 자국의 평화헌법을 준수하면서 양국간 안보동맹조약의 틀 안에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여 방위력을 꾸준히 증강하여 왔으며, 미국 또한 세계정치의 경찰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증용하여 왔다.

1990년대를 통해 미국은 변함없이 세계에서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존재할 것이며, 특히 군사면에서는 이에 상응할만한 국가의 출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걸프전사태에서 목격한 바와 같이 미국의 외교와 정치력이 군사력에 상응하지 못하였으며, 이 점이 일본의 역할증대와 관련하여 중국 및 여타 아시아국가들의 우려를 유발시키게 되었다.

걸프전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의 지역분쟁에 일본의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군사, 외교적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미국 및 서방제국들의 공공연한 의사가 표명되는 상황에서 일본정부는 국내의 심각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실전이 종결된 1991년 5월 페르시아만에 소해정을 파견함으로써 2차대전이후 해외파병의 첫 사례를 기록하였다.

걸프전에서의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지 못한 일본정부는 기존에 추구해 오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 노력에 대한 필

요를 절감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인식은 1991년 가을부터 본격화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노력과 더불어,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 참여 노력 등으로 표출되었다.<sup>54)</sup> 걸프전을 계기로 유엔의 역할이 재부각되는 여건에서 일본정부가 유엔기발 하에 세계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평화애호국으로서 일본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장차 논의될 상임이사국 지위문제와 관련 실질적인 기여에 대한 업적을 남기기 위한 목적에 또한 부합되는 일이라고 이해되고 있다.<sup>55)</sup>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포함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안은 1991년 12월 3일 중의원에서 통과된 후 1992년 6월 9일 自民, 共明, 民社 3당의 협력하에 참의원을 통과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유엔평화유지활동 법안 제정의 배경이 일본의 국제적 공헌, 특히 인적 측면에서의 공헌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 법안 제정은 일본이 경

54) 일본과 UNDP 공동 주관으로 34개국 및 12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2년 6월 20~22일간 동경에서 개최된 캄보디아 재건 국제회의에서 캄보디아 재건을 위한 소요경비로서 당초 각출 목표액 5억 9천만달러를 상회하는 8억 8천만달러를 확보하고, 향후 장기적 지원의 조정을 위한 캄보디아 재건 국제위원회(ICORC)를 설립키로 합의하였다. 특히 본 회의를 주관한 일본은 최대규모의 원조(1억 5천만달러)를 약속하고, ICORC의 의장직을 수행키로 하여 캄보디아 평화정착 사업에서 주도적인 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 수행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Christian Science Monitor* 사설, June 22, 1992.

55) Richard Holbrooke,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nding the Unequal Partnership,"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p. 51~52.

제력만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 행사에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 아래 추진된 것이라고 대체로 이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 행정부는 6월 5일 일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이 통과된 직후 국무부 논평을 통해 “일본이 평화유지활동을 비롯해 평화신장과 인도주의 목적의 국제활동에 폭넓게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sup>56)</sup>고 발표함으로써 지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캄보디아사태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일본의 유엔평화유지군의 활동은 향후 국제적 사안에 일본정부의 인적, 물적 참여를 예고하는 역사적인 시발점이 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원칙론적 차원에서의 환영 이외에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 3) 미군사력 감축에 따른 일본의 방위분담

결프전 당시 나타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괴리현상을 보면서 동아시아지역에서의 미국의 전통적인 균형자 역할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내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이 냉전시대 미·소 대결상황에서와 같은 차원에서는 아닐지라도 평화를 보전하기 위한 ‘정직한 仲裁者’(honest

56) 「한국일보」, 1992. 6. 6.

broker)로서 계속 존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누리던 경제와 기술분야에서의 지도력이 쇠퇴해감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역량의 지속성에 대한 회의가 대두됨은 오히려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이같은 현상은 전세계가 냉전이후 새로운 질서를 모색해가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될 다양한 도전을 고려할 때 심각하게 취급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조짐은 동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점증하는 영향력에 더욱 관심을 모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아마코스트(Michael Armacost) 주일 미국대사는 1991년 6월 동경 외신기자클럽에서 행한 연설에서 국제사회에서 미·일 양국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을 위해 상호간에 긴밀한 정책협의를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협조를 촉구하고 냉전이후시대 러시아의 위협이 소멸해 가는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익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부각되리라는 향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거시경제적 정책수립과 실천에 보다 긴밀한 협의를 촉구하였다. 이에 대한 댓가로서 미국은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한 국제적 역할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바, 이러한 노력은 국제기구에서 일본의 발언권 강화, 양국간의 상호협력과 안보조약등과 같은 정치·경제적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주변국들의 우려를 야기시키지 않고 일본의 국제적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 확립등을 통해 구현될 것이

라고 천명하였다.<sup>57)</sup>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일본과의 동반자 관계는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러한 동반자 관계가 미·일 안보동맹체제가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한 것이라면, 동북아지역을 넘어서는 포괄적인 동맹개념으로 재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미국이 일본의 방위를 책임지는 일방적 안보체제의 불균형은 재검토되어야 한다.

둘째로, 미군이 필리핀으로부터 철수하고 장래 한국으로부터도 점진적 철군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일본은 미군의 전진배치군의 유일한 작전기지로서 남게 되는 바, 역내 예기치 못한 분쟁 발생을 대비하여 막대한 군사장비를 일본에 비축해야 되는 결과를 초래, 결국 미·일동맹의 군사적 측면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셋째, 미·일 안보조약이 소련이라는 가상적이 소멸되는 상황에서 아시아의 안정유지에 전략적 주안점을 두게 될 때, 미·일간에 어느 국가가 역내 안보유지에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자위대 고위관리의 “아시아 지역의 안정은 일본의 역사적인 동아시아

57) Yoichi Funabashi, “Japan and America: Global Partner,” *Foreign Policy* (Spring 1992), pp. 30~31 재인용.

아 공영권의 개념과 미·일 안보조약에 의해 유지될 것이다.” 라는 발언은 일본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안보분야의 지도적 역할을 상정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심분 활용할 의지를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sup>58)</sup> 이러한 발상이 실천에 옮겨진다면 역내국가들의 반발은 물론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1945년 이전 미·일간에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적대감과는 대조적으로 2차대전 이후 양국은 역내에서 참여한 대립을 보인 적이 없는 바, 미국의 세계전략 재조정의 필요에 따라 동북아지역에서의 미군의 점진적 감축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미국은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세력으로서 일본을 상정하고 있는 사실은 비록 공공연히 천명되고 있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여타 가능한 대안을 고려할 때, 미국 내 정책입안자들간에 비중을 갖고 논의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일본정부 또한 걸프전 참전 당시에도 대국민 설득용으로 구사되었던 석유공급원과 수송로의 안전확보가 일본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긴요하며 이를 적극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를 미국에 대하여도 주장함으로써 일본경제의 취약점을 자인함에 따른 미국의 대일 경계심 완화효과와 함께 장래 야기될

58) Ibid., pp. 31~32 재인용.

수도 있는 역내의 안보 공백상태에 대비한 일본의 역할의 정당성을 지적해 두고 있다.

#### (나) 경제분야

##### 1) 미국의 재정적자에 대한 간접지원

1980년 기록한 일본의 전례없는 규모의 잉여자본은 저축과 투자관계의 국제적 전환현상과 결부되어 일본 자본의 해외 유출현상을 초래하였다. 특히 미국의 재정팽창과 이에 다른 미 연방 예산적자폭의 확대현상은 일본이 자국의 재정운용에 긴축정책을 취하고 해외자본투자의 완화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때를 같이하게 됨에 따라 많은 일본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되게 되었다. 미국의 국내저축률이 국내투자에 필요한 수준을 밑돌게 되고 이자율이 국내자본 수요에 따라 상승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 높은 이자율을 주요인으로 한 일본 자본의 미국내 유입은 필연적 결과였다.

그러나 1990년도에 이르러 일본의 재정흑자현상은 시련을 맞게 되었으며, 1년이 지나지 않아 일본의 증권시장의 총평가가치는 반감되었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침체는 일본의 재정분야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나타내게 되었으며, 그 결과 일본의 재정 및 투자업체들은 자본의 해외투자 폭을 감축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됨으로써 일본은 1991년도 상반기에 이

르러서는 자본수입국으로 전락되게 된다. 일본자본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간접적으로 보전해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 바, 미국으로서는 일본의 투자양상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본은 1989년부터 1991년에 이르기까지 미재무성 발행 장기채권 보유분의 3분의 1 정도를 매각하게 되었는데, 경기침체를 경험하게 된 미국경제가 해외자본 수요 감소를 야기하는 현상이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자본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소 감소시키는 결과로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1991년 하반기부터 미국의 경기가 침체상태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함에 따라 미국내 경제활동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외국자본의 필요성이 또다시 점증되기 시작하였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미국의 의존현상이 과거와는 달리 미국에게 훨씬 큰 부담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미국의 정책결정자들은 미국내 경제를 부양시키는데 자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의 저이자율에 근거했던 과거와는 달리 적은 규모의 잉여자본과 점증되는 미국내의 외국자본 수요가 복합되어 외국자본 유치가 미국내 이자율의 급작스러운 상승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 것이다. 이같은 자본시장의 경제논리는 미 연방준비은행(FRB: Federal Reserve Board)의 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자율 인하노력에 커다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일본의 대미투자 및 통화가치 안정협약의 과정에서 미국은 일본의 점증되는 역할을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 2) 세계적 동반자관계

미국의 입장으로 보아서는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기여를 주된 목적으로 한 「세계적 동반자관계」의 강조는 양국간의 경제문제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성숙된 경제대국으로서 역할함으로써 해소해 나가려는 의도와 함께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인정하는 측면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199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일본방문시 발표된 「도쿄선언」에서 이러한 양국관계는 재천명되었는 바, 동 선언에서는 쌍무간 경제마찰의 내재요인 해소를 위한 효율적 조치 시행에 가장 우선을 두고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였다. 동 선언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에는 우루과이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을 통한 GATT체제의 개혁완료, G-7 서방선진제국들간의 국제경제사안 조정의 협조, 양국간 경제정책 조정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는 지속적 성장유지와 저축신장 및 통화의 안정적 관리, 상호 균형적인 기술이전과 투자기회 확대, 긴밀하고 책임있는 정책논의를 통해 양국민들간의 의식대립의 확

산 억제 등 폭넓은 문제들이 포함되었는 바,<sup>59)</sup> 내용의 주조는 일본의 국제적 기여를 강조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누차 언급하는 전세계적 차원의 미·일간의 동반자 관계란 미국이 구상하는 세계전략에 부응하여 일본의 전략적 지원을 염두에 둔 관계를 뜻한다. 이와같은 전략적 지원은 일본의 외국원조계획(ODA)을 통한 지원과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서 지난 3년간 제3세계를 대상으로 가장 큰 경제원조국이었던 일본이 단순히 지역적 원조차원을 넘어서 세계적 영역에서 수혜국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始發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다시말해 이와같은 일본의 대외원조의 질적인 변화는 전세계의 외국원조계획 자금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일본의 원조가 계속됨과 아울러, 미국의 세계전략하에서 요구되는 자국의 책임분담 확대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제력에 바탕을 둔 점진적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는 선진제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 또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사실로서 부각되고 있다.

## (2) 역할증대 牽制요인

### (가) 안보분야

59) 김정우, 「부시 미국대통령의 아시아 4개국 순방결과 분석」, 민족통일연구원 통일정세분석 92-01 (1992. 1), pp. 3~10.

## 1) 미·일 안보동맹체제 유지

미국은 미·일 안보조약을 근거로 하여 일본에 군사력을 주둔시킴으로써 역내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현 동맹체제는 미국으로 하여금 태평양지역과 인도양에 이르기까지 미군의 작전에 주요한 병참지원과 군수물자 공급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현 체제하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는 보장되어지고 있는 반면, 미·일 안보동맹체제 자체가 일본의 안보에 긴요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일본의 행동반경을 제어하는 역할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미·일 동맹관계의 균열은 미·일 양국에 대하여 전통적 적대국으로 분류되어왔던 국가들에게는 역내 안보균형의 붕괴로 인식되게 됨으로써 역내 불안을 초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경우, 독자적 구상에 의한 일본의 군비증강이 가속화되고 역내 군비경쟁이 재연됨에 따라 긴장고조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균형에 지대한 변화가 야기될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운용에 심각한 장애가 된다는 인식하에 미국은 양국간 동맹체제의 지속적 유지가 상기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일본을 동 체제하에 결속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

둘째, 현 동맹체제가 동아시아지역에서 일본의 정치, 경제

적 역할증대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안전판이 되고 있다고 이해된다. 아울러 미·일동맹체제는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미 군사력 유지에도 긴요한 바, 동맹체제의 이완은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 긴장을 고조시키게 될 것이며 이는 일본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본은 현 동맹체제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sup>60)</sup>

셋째,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일본은 지역내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행동의 폭이 제약받고 있는 바, 예를 들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비통제와 포괄적 안보개념 및 새로운 세계질서에 대한 일본의 구상을 추진하려는 일본의 독자적 노력이 현 체제하에서는 크게 제약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이 일본의 국제적 위상증대를 고려하여 기존의 안보동맹체제에 부분적 수정을 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일안보체제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에게는 동 체제하에서 일정한 부담이 부여되고 있다. 달리 말해 양국간의 동맹체제는 미국이 동 체제를 이용하여 일본의 대외정책의 활동반경을 통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작동하기도 한다.

60) 최근 일본내 미국의 부당한 외교적 압력에 대한 공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본인들은 주요 동맹국인 미국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Japanese Mourn a 'Marvelous Place': The U.S.," *Washington Post*, March 2, 1992; "U.S.-Japanese Ties: A Deepening Anger," *Washington Post*, March 1, 1992.

미·일 안보동맹체제가 가지는 양면성과 마찬가지로, 주일 미군에 대한 유지비용 분담을 확대하라는 미국의 요구는 과거와 달리 불가피하게 주둔국에 방위분담 증대를 촉구하는 미국의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일본의 역할증대 효과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반면, 일본의 독자적 안보정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견제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1990년 당시 주일미군 5만명과 軍屬 4만 5천명에 대한 총 유지비용이 70억달러를 넘어서고 1991년에 일본정부의 재정 지원이 30억달러였으며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1995년에도 약 37억달러에 이르게 될 예정이나, 일본정부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확대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미국 측의 부당한 요구는 1980년대 중반이래 대일 무역적자 폭이 급증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지 못한 상황에서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일본에 대하여 방위부담을 분담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견해가 미 의회를 중심으로 하여 확산되게 되었다.

일본에 대한 미국의 군사·안보분야에서의 책임분담 요구는 주일미군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걸프전과 같은 서방제국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지분쟁의 해결과 국제적 안보유지에 있어 미국이 행사하는 전략을 보완할 목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에 까지 확대된다.

또 한편으로는 지역분쟁에 대한 국제적 해결노력에 참여함으로써 일본이 부담하게 되는 재정적 지원은 부득이 일본의 방위비 가운데 자체 방위력 증강에 투입되는 재원의 감소를 의미하게 되는 측면이 있다. 일본정부는 1991~95년간의 방위계획을 수립하고 5년간에 걸쳐 1,660억달러의 방위비를 책정하고 있는 바, 전기간에 걸쳐 새로운 무기체제에는 방위비의 2.1%가 투입되고 이 가운데 미국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4대의 AWACS 비행기, 2대의 AEGIS함과 36개의 로켓트체제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걸프전 사태에 공여한 예기치 않은 재정적 지원을 보전하기 위해 위에 언급한 무기체제의 일부에 대한 도입연기를 결정하기도 하였다.<sup>61)</sup>

## 2) 첨단기술 이전 통제

미·일 양국간의 민간 및 군수분야에서의 첨단기술 이전과 상품 및 군수분야에서의 공동개발문제는 소위 「技術 民族主義」논의를 둘러싸고 심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본은 외국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자체 개발한 기술과 더불어 고급의 신종상품을 개발하는데 활용함으로써 효과

61)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1992: A Quest for New Roles* (Washington, D.C.: Johns Hopkins University, 1992), pp. 38~39.

적인 경제발전체제를 구축하였는 바, 이 결과 일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첨단기술 공여국 혹은 판매국가로서의 미국과 기타 서방선진국가들의 유사상품이 일본의 상품에 대하여 경쟁력을 상실해 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아울러 일본산 부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미국의 민간 및 방위관련 업체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미 업계뿐 아니라 행정부에서도 점차 고조되어 미국에서 자체 개발된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을 제한함으로써 대일 의존도를 저하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하여 「기술 민족주의」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으며 현대의 국경없는 세계경제의 전개양상을 감안할 때 실현이 불가능한 고립주의적 보호주의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첨단기술의 해외유출이 넓은 의미의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미 행정부내에서는 미국의 기술이전과 유출을 방지 혹은 억제하는 정책을 점차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 대한 외국투자를 엄격히 검토하는 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s in the U.S.)의 활동이다. CFIUS는 미 재무부가 주관하는 관련 행정부서간의 협의기구로서 미국의 기술유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외국인의 대미투자과 미국기업의 구입 혹은 합병등을 검토하는 장치이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일본기업이 미국의 첨단기술 관련업체를 구입함으

로써 미국의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이 일본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 의회도 1991년 제102회기 당시 1990년말로 효력이 상실되는 군수물자생산법(Defense Production Act: P.L. 102-99)에서 CFIUS와 관련된 부분을 분리해내어 동 법안의 폐기에도 불구하고 CFIUS가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CFIUS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 이전 규제를 담당하는 상설기구로 존속할 수 있게 되었다.

미·일 양국간의 첨단무기의 공동생산이나 공동개발계획을 통한 대일 군사기술 이전은 F-15전투기, Patriot미사일, 空對空 미사일 등의 공동무기생산체계등으로 대표되고 있는 바, 방위부문에서의 대일 기술이전이 일본내에서 민간부문에 확산, 활용됨으로써 상품화된 일본제품이 역으로 미국기업의 심각한 경쟁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비난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sup>62)</sup>

1988년 11월 양국간의 각서교환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일본 미쓰비시社와 미국의 General Dynamics社간의 130여대의 F-16 전투기 공동개발계획(FSX)은 미국산 군사장비를 완제품으로 구매하라는 미측 요구와 자체기술개발을 보완할 수 있는 미국측 첨단기술 공여를 주장하는 일본간에 오랜 논란

62) GAO, *U.S. Business Access to Certain Foreign State-of-the-Art Technology* (Washington, D.C.: GAO/NSIAD-91-278, September 1991).

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일본이 각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첨단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 초대형 컴퓨터 및 항공공학분야 등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기술을 공동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전수받으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행정부는 FSX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술조정위원회 (Technological Steering Committee)를 통한 대일본 기술이전을 통제하고 있다.

FSX사업 이외에도 제반 군사기술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권한을 미 상무부에 부여함으로써 미 행정부가 신기술개발과 전략적 산업육성 및 지원, 대외첨단기술 유출에 적극적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비난을 불식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첨단기술의 상당부분이 미국의 군수산업 육성정책과 관련하여 개발되고 촉진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특정 분야에서의 일본의 미국기술 도입노력이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통제가 적어도 당분간은 일본의 자체기술 개발을 통한 방위력 증강에 실효성있는 견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3)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 노력은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으며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외국원조계획을 통한 경제원조, 미·일 안보동맹체제 안에서의 방위분담 확대, 국제

적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 등 이외에도 유엔이라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내에서의 역할 또한 모색되고 있다. 특히 냉전 시대의 종언이후 처음으로 전세계가 경험한 걸프전 사태처리 과정에서 재부각된 유엔의 역할을 목격하면서 일본의 대유엔 외교활동은 강화되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서방선진제국들의 G-7 회담이나 IMF, IBRD 및 ADB 등에서 일본은 경제력에 완전히 상응하는 영향력 행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일본 朝野의 지적에도 힘입어, 일본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들의 일본 책임분담론을 심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노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의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로 나타나고 있는 바, 걸프戰 당시의 외교적 좌절감이 큰 자극이 된 점에는 이론이 없다. 일본의 노력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1992년 6월 일본 의회에서 통과된 유엔 평화유지 활동 협력법안은 장차 유엔평화유지활동을 통한 일본의 대외적 활동과 기여의 정도에 따라 유엔에서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일본의 자위대가 참여하게 됨에 따라 일본의 방위비 항목 가운데 일부가 동 목적으로 활용될지 아니면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실질적인 일본의 방위비가 양적인 팽창을 하게될지 현재로서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유엔이라는 국제기구의 통제하에서, 또한 미·일 안보동맹체제의 테두리안에서 진행될 국제적 평화유지를 위한 일본의 책임분담 활동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독자적 안보구상에 의한 영향력 증대노력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과 국제기구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의 세계적 전략구상에서의 일본의 재정적 협조와 정치적 지원을 댓가로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에 적극 협조할 것임을 미국은 누차 천명하고 있으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확보 노력에 또한 원칙적으로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유엔규정 개정등을 포함하여 방대한 작업이 필요한 까닭에 미국만이 주도하여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다.<sup>63)</sup> 그러나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에 적극 참여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전개될 일본의 유엔내에서의 역할증대 노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는 과정에서 행사될 미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63) 미 하원 외무위 국제활동소위와 인권 국제기구소위는 1992년 3월 25일 볼턴 국무부 국제기구담당 차관보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합동 청문회를 개최하고,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하여 논의하는 가운데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볼턴차관보는 일본이 적절한 시기에 상임이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기본입장이나, 상임이사국 변경에는 유엔 현장개정이 필요하며 현장개정 시도는 또다른 현장개정 요구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지금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우려가 1992년 6월 일본 의회에서의 유엔평화유지활동법안 통과에 따라 증폭되는 상황에서 역내 우방국들의 반응에 대하여 미 행정부가 둔감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64)</sup> 미 행정부가 1991년말 베이커 국무장관의 기고문 가운데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언급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 혹은 「2+4 회의」는 탈냉전시대 동북아시아역내 새로운 질서재편과정에서 가장 분쟁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한반도에 주목하여 지역내 안정을 확보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관련국들간의 안보협의체를 시도하여야 한다는 미국내 학계, 의회 및 정부일각의 지적에 따라 재론되기 시작한 것이다.<sup>65)</sup> 이같은 다자간 협의체 구상이 한반도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제안된 것이라고 이해될 수는 있다. 또한, 미국이 독자적인 외교정책 구사의 폭을 넓혀가려는 일본을 역내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협의체라는 제도에 歸屬시킴으로써, 일본 외교정책의 향방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과 아울러 주변국들의 우려 또한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와같은

64) 일본 의회에서의 PKO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의 환영논평, 러시아 외무부의 일본의 유엔활동에 대한 기여노력을 이해한다는 반응 및 대일경제 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계국들의 환영 내지는 중도적 입장 표명과는 대조적으로 중국, 한국, 필리핀 정부는 일본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촉구하는 대조를 보였다.

65) Baker, "America in Asia," p. 13.

구상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게 될 때 참여하게 될 국가들의 장·단기적 국익계산에 따라 그 구상논의의 진전 속도가 결정될 것인 바, 국내 정치·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안의 폭이 넓지 않음을 감안할 때 동 구상 실현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될 것이다. 아울러 동 구상이 미·일 양국간 기존의 안보조약과 상충되지 않는 선에서 구현된다면 일본의 역내 군사·안보외교에 대한 미국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 4) 미국 및 역내국가들의 대일본 부정적 여론

외교정책 수립과정에서 국민여론이 어느 정도로 무게있게 반영되는가는 국가마다 다르나, 미국의 경우 여타국가들에 비하여 여론의 비중이 높게 취급되고 있는 점만은 분명하다. 더우기 미 행정부의 대일정책에 있어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보다 중요시되는 이유는, 여타 서방제국들과는 대조적으로 일반시민들에게 쉽게 노출되는 자동차, 전자제품 등 일본의 다양한 소비제품이 미국시장을 석권하는 한편, 일본기업의 뉴욕시 록펠러센터 구입, 컬럼비아영화사 구입 및 미국 프로야구단 매입등이 미국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사안들로서 언론에 부정적으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로 일본의 경제력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앞서 미국

익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인식하는 미국민들의 반응이 70%를 넘고 있으며(1991년 3월 해리슨 여론조사), 일본이 미국의 신뢰할 만한 우방이 아니라는 인식이 또한 39%를 차지하고 있는(1991년 갤럽 여론조사) 현상은 미 행정부의 對日정책 입안자들이 간과할 수만은 없는 국민들의 반응이다.

이같은 미국내 대일인식이 부정적인 성향을 띠고 확산되는 현상과 아울러 일본내에서 부각되고 있는 부정적인 대미인식 또한 양국의 국민여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다. 1980년대 말 이래 일본내에서 미국의 대일정책이 불공정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대두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신타로 이시하라 의원의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란 저서를 통해 나타난 미국의 대일 인종적 우월주의에 대한 비판이다.<sup>66)</sup>

아울러 현 주미일본대사 료하이 무라타의 언급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미국인들은 대부분 일본인들이 미국인들과 무엇인가 다르다고 느끼고 있으며, 일본인들 또한 미국의 대일압력이 불합리한 점이 많고 이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두되고 있다.”<sup>67)</sup>는 예들은 모두가 양국 국민들간의

66) Shintaro Ishihara, *The Japan That Can Say No* (New York: Simon & Shuster, 1991).

67) Hiroshi Kitamura, Ryohei Murata and Hisahiko Okazaki, *Between Friends: Japanese Diplomats Look at Japan-U.S. Relations* (New York: Weatherhill, 1985), pp. 111~18.

감정대립이 격화되고 있음을 대변한다.

미국민들의 대일인식 가운데 부정적 측면이 부각될 경우 미 행정부의 대일정책 또한 일본이 구상하는 對美관계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행사에 견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Time*지가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냉전이후시대 아시아의 안보에 관한 토론에서 일본의 역할증대에 관한 역내 국가들의 우려가 또한 표출되었다. 각국의 고위관리 및 정책 입안에 깊숙이 간여하는 연구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아시아제국들이 일본의 상품과 투자에 보다 의존하게 될 전망이나 일본이 역내 지도국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과거 제국주의의 유산이 완전히 청산된 바탕위에서 군사력 행사 및 경제적 지도력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말레이시아의 전략 및 국제문제연구소의 소피(Nordin So-piee)소장은 경제적 Pax Nipponica시대의 도래를 경고하고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 대한 미국의 종합적 개입정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으며 싱가포르의 前주미대사 고(Tommy Koh)대사 또한 미국이 철수한 뒤 아시아지역에서의 일본의 과거 대동아 공영권의 재현을 우려하였다.<sup>68)</sup>

68) *Time*, January 27, 1992, pp. 11~12.

또한 한국사회과학원 김 경원원장도 일본이 진정한 역내 지도국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하고,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위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존중하는 국가로서의 모습을 역내국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sup>69)</sup>

상기와 같이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가 미국의 역내 균형자로서의 역할 필요성에 대한 강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한 미국의 동북아정책의 전개가 일본의 역할증대에는 견제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나) 경제분야

### 1) 무역불균형 해소장치 모색

미·일 양국간의 심화되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으로서 미국 내에서는 管理무역(Managed Trade)정책과 자유무역협상(Free Trade Agreement)의 두가지 상이한 접근방법에 의한 구상이 논의되어 왔으며, 후자의 대안이 시기상조라는 미국 내 업계 및 학계의 지적이 지배적인 까닭에 전자의 방안에 근거한 일련의 협상들이 1989년이래 본격화되었다.<sup>70)</sup> 즉

69) Ibid., p. 15.

70) 관리무역의 이론적 근거와 실현과정에서의 문제점은, Robert Kuttner, *Managed Trade and Economic Sovereignty*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1989)를 참고.

1988년 미 의회 제100회기에서 통과된 종합통상법에 의거한 Super 301조 협상과 「구조조정협약」이 대표적인 미국의 대응 방안이다. 동 협상들이 일본시장의 미국상품에 대한 시장개방을 결과하고 대일무역적자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과 회의론자들의 해석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TR)는 1989년 5월 임산물에 대한 기술적 장벽, 통신위성에 대한 정부입찰 규제 및 대형컴퓨터의 선별적 구매 등 세계 분야에 대하여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일본을 지목함으로써 미 국내법 조치에 따라 일본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단죄하는 첫 사례를 기록하였다.

「구조조정협약」에 있어서도 양국의 거시경제정책과 무역 및 투자장벽 등 기본적 商행위 및 관례를 문제시하게 됨에 따라 미국은 여섯가지 부문에 있어 일본의 구조적 장벽을 지적하고 제약을 철폐하기 위한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 즉, 일본의 분배제도, 토지사용정책, 저축률, 경제연합체, 배타적인 商행위 및 관행과 가격정책 등이 그것이다. 일본 또한 미국의 낮은 저축률, 기업의 투자관행, 미 행정부의 규제 등을 구조적 장애로 지적하였다.

양국간의 「구조조정협약」은 종합통상법에 의한 미 행정부의 일본을 포함한 주요교역 상대국들의 무역관행에 대한 일방적이고 恣意的인 정책구사에 대하여 GATT 다자간 무역협상의 상호주의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유럽제국들의 비난과

쌍무간 무역보복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반영하여 새롭게 창출된 광범위한 협의방식이다.

1990년 4월 잇달은 협상끝에 미·일 양국은 Super 301조에 의해 지목된 상기 세 분야의 장벽철폐에 대한 합의에 도달함으로써 USTR의 힐스(Carla Hills)대표는 동년 4월 Super 301조에 의거한 무역보복조치 대상국 최종결정시 일본을 제외시키고, 이어 6월 28일 양국은 「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거시경제적 문제논의를 통한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으로서 1차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종합통상법에 의한 Super 301조 협상시효는 1990년말 만료되고 미 의회 제102회기 중에 동 법안의 효력을 재차 연장하는 방안과 보다 강력한 조치모색을 위한 입법노력이 지속적으로 시도되었다. 일련의 무역관련 법안들에서 일본이 공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법안제안 설명이나 내용논의시 주요대상국으로 일본을 염두에 두고 있음은 자명하다. 일례로 상원의원 레빈(Carl Levin)이 제안한 S. 301 법안과 하원의원 레빈(Sander Levin)이 제안한 H.R.787 법안 등은 1988년 종합통상법의 301조 조항의 효력을 1995년까지 연장시키려는 의도에서 제안된 것이다. 동 법안들은 특정국가가 불공정한 무역관행국임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복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몬타나주 출신 보커스(Max Baucus)상원의원이 제안한 S.1850 법안 역시

Super 301조의 추인을 요구하고 있다.

Super 301조 내용을 다소 수정하여 미국의 상행위에 부담을 안겨주는 무역관행을 방관하는 국가에 대하여 301조를 발동시킬 수 있게하는 법안이 대셀(Daschle)상원의원과 도간(Dorgan)하원의원 등이 제안한 S.650, H.R.2455 법안 등이다. 아울러 H.R.1115, S.388 등은 미국과 합의한 무역협상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안된 것들로서(Trade Agreement Compliance Act of 1991), 각기 마쯔이(Matsui)하원의원과 보커스 상원의원에 의해 제안된 것이다.

상기 다양한 형태의 무역관련 법안들은 미 업계와 이익단체들의 정치적 압력에 의하여 입법화 과정에 있는 것으로서 미국의 입법절차를 감안할 때 일본과의 무역거래에서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미국내 실업문제, 업체의 경쟁력 상실, 기술우위 상실들의 현상은 미국의 시장을 대상으로 한 일본의 경제적 역량증대 노력에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행사될 수 있는 조치로서 입법화되고 있다.

## 2) 일본주도의 지역경제권 구상 반대

1980년대 아시아와 서태평양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에 대한 자본과 기술 수출국으로서의 일본의 부상과 이들 역내국가들 상품의 중요한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일본을 역내 경제

의 핵심으로 대두시키게 하였다.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인 개입은 역내국가들의 급속한 시장확대를 자극하는 한편, 아시아국가들간의 세력균형을 변화시키고, 장차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블럭의 대두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 또한 불러 일으키게 되었다.

특히 1985년이후 미국 달러 및 여타 화폐에 대한 일본 엔화가치의 상승에 부분적으로 힘입어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반에 걸쳐 자본투자 및 경제원조에 있어 일본은 미국을 능가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 당시 동 지역에 대한 일본기업의 신규투자 규모는 112억달러로서 미국업체의 거의 두배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같은 기간 일본의 역내 경제원조가 41억달러인 바, 이는 미국이 공여하는 원조액의 3배에 이르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태평양국가들에게 정치·군사적으로 안정을 보장하는 세력으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고, 아울러 이들 국가들의 가장 큰 상품시장으로서, 또한 고품질의 공산품 투자원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는 있지만, 일본의 역할증대와 외교역량의 확대는 2차대전 당시 군사력에 의거한 영향력 증대가 실패한 이래, 평화적 수단에 의한 국력의 증대와 영향력 행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인식된다.

일본의 역할증대가 긍정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측면과 함께 일본의 경제적 지배 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많은 아시아국가들이 미국이 역내 균형자

로서의 지도적 역할을 계속 수행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으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수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미·일 간의 효율적인 동반자관계에 균열이 생기게 될 경우 지역내 불안이 증대되고 결국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배적 역할을 수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역내국가들의 심각한 고려사항인 것이다.

미국과 일본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각자의 역할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으로서 정치, 경제, 군사력 균형의 대체적인 모습은 양국간의 긴밀한 접촉과정에서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일본의 지역적 역할과 관련된 일련의 주제들이 교역과 안보협력문제를 둘러싼 일본과 역내 국가들간의 쌍무적 협상에서 논의되어 왔는 바, 필리핀을 대상으로 한 일본과 여타원조 공여국들간의 다자간 원조논의(Multilateral Aid Initiative)와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 등이 좋은 예가 된다.

역내 경제협의체구상에 일본의 적극참여를 상정한 논의는 1992년 1월 제4차 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아시아지역내 지역주의성향과 그 軌를 같이하고 있다. 동 회담에서는 참여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협력 제고를 위해 아시아 자유무역지대(AFTA: Asian Free Trade Area) 설립에 동의하였고 2008년도까지 동남아국가연합제국들간의 교역에서 관세를 5%이하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관세(CEPT: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안에 또한 합의하였다.<sup>71)</sup> 아울러 6개국 동남아국가연합제국들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수상이 1990년 12월에 제의한 동아시아 경제협의체(EAEC: East Asian Economic Caucus)안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하였는데 동 제안은 일본의 적극참여를 상정한 것이었다.

미국은 배타적인 역내 경제협의체 구상에 반대한다는 기본 입장과 동아시아경제협의체안이 기존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을 들어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였다.<sup>72)</sup>

일본은 역내 경제협의체구상에 어느 정도로 간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동남아국가연합제국들과의 교역과 투자면에서 긴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일본의 가장 중요한 투자와 상품시장으로서의 미국의 의사에 반하여 배타적인 지역경제권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예상되는 실질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이같은 일본의 계산은 동아시아경제협의체구상에 대한 참여에 부정적 반응을 보인 사례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바, 미국이 상정하는 동아시아지역의 경제질서가 배타적이고 보호무역주의적 경제권을 반대한

71)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1992*, pp. 61~62.

72) 1991년 3월 아시아협회가 주관한 국제회의에서 주일 미국대사 아마코스트의 연설 참조.

다는 구상하에서 수립됨을 가정한다면 미국이 일본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 주도의 경제권구상에는 실효성있는 견제력을 행사할 것이다.

### 3) 다자간 회의를 통한 국제경제정책 조정

국제사회 및 동아시아지역내에서의 일본의 경제적 역할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쌍무관계의 차원에서는 미국의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모색이며 지역적 차원에서는 일본주도의 배타적 경제권구상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표명된다고 할 때, 일본이 참여하는 서방선진제국들간의 G-7회의 또한 일본의 국제적 역할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된다.

서방선진제국들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환율, 국제경제정책, 대외원조, 환경문제 등 폭넓은 국제적 사안에 관하여 논의를 하기 위한 대화창구로서의 G-7회의는 참여국 어느 한 나라의 독자적 대외경제정책이 회원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경제질서에 파급효과를 갖게 된다는 공통된 인식하에 운용된다. 이점을 감안할 때, 동 회의 및 여타 다자간 경제협의체에서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한 권리를 존중하는 한편 국제적 책임 또한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일본의 독자적 구상에 의한 세계경제질서 주도노력에 均衡感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며 점증되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견제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미국의 대응방안과 미·일관계 전망

#### 가. 미국의 대응방안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는 2차대전후 미국의 세계전략 및 그 하부체제로서의 동북아정책 구상하에서 가능하였으며 향후 일본의 역할증대의 폭과 속도는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정책조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 (1) 안보분야

미국의 대일 안보관계구상은 1952년이후 유지되어온 양국간의 안보동맹체제를 존속시키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의 군비현대화를 통해 서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방위능력을 보완하고, 5만명에 달하는 주일미군의 유지비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분담을 점차 확대하는 내용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다. 안보분야에서의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노력이 이러한 미국의 구상에 배치되지 않는 한 일본의 정책구현과정에 미국의 적극적 간여는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또한 전통적인 미·일안보동맹체제의 존속이 적어도 현시점에서는 일본의 국익에 부합된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걸프전이후 재부각되기 시작하는 국제분쟁해결에서의 유엔의 역할확대에 편승하

여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를 가능케 하는 국내법적 준비절차를 완료하였다. 필리핀의 해·공군기지 철폐로 인하여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수행에 있어 일본의 미군기지의 비중이 증대된 여건에서 역내 안보유지에 일본의 확대된 역할을 상정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역내 분쟁지역의 하나인 캄보디아사태 해결에 유엔평화유지활동의 일부로서 참여하는 일본을 환영한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도되는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용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자적 안보를 염두에 둔 외교노선의 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내 기존이익과 相馳되는 정책이 구사되는 경우 미국의 견제노력은 작동될 것이다. 안보분야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미국의 구체적 대응책의 하나로서, 군수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첨단기술의 대일 유출과 이전을 철저히 통제함으로써 항공산업, 대형컴퓨터 등 분야에서의 기술우위를 유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産 신예병기의 대일수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방안도 상정할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으로부터의 미국의 점진적 철수논의와도 관련하여, 동 지역에 야기될 세력균형의 붕괴과 힘의 공백상태를 사전에 방지하고, 북한을 비롯한 역내 일부세력들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와 기술의 확산 등의 억제를 통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 혹은 한반도 주변국들간의 다

자간 안보협의체안이 캐나다·호주 등에 의해 제의된 바 있다.<sup>73)</sup> 미국 또한 1991년 말 이후 북한의 핵문제 해결노력과 관련하여 이같은 다자간 안보협의체구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으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방향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고려하여 일본을 제도적 장치에 결속시킴으로써 일본의 외교정책 의도에 대한 透明度를 제고하고 향방에 대한 예측을 가능케 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sup>74)</sup>

러시아와 일본간의 북방4개도서 반환문제를 둘러싼 의견대립은 국내정치·경제적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러시아를 상대로 실질적인 경제원조를 공여할 수 있는 일본이 적극적 외교공세를 전개하고는 있으나, 사안의 해결에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시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73) 김국진, “동북아 안보 평화문제에 관한 다자적 협의체 구성 문제,”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씨리즈 91-08 (1991. 10).

74) 미국은 서태평양의 해군과 역내 전진배치된 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전통적인 군사우위와 한국, 일본과의 안보동맹체제가 미 국의 보호에 충분한 것으로 인식해 온 바, 여타국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해야 할 별도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에는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의 위협,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중국의 군사력증강에 대처하고 역내국가들의 방위분담 확대 요구의 불가피성을 감안,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또한 미야자와 총리가 6월 22일 기자회견에서 아시아에서도 유럽의 CSCE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하에 미·중·러 등을 포함한 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안전보장기구를 구상하는 것이 일본외교의 중요과제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최초로 피력하였다. 이는 최근 일본의 PKO법안 통과 등 국제적 역할확대 움직임과 미 행정부의 동 사안에 대한 입장 전환 등과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급격히 쇠퇴해가는 탈냉전시대에 있어서도 러시아를 상정한 미국의 일본에 대한 외교정책상의 영향력은 여전히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요약컨대, 상기 언급한 첨단기술이전의 통제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구상 등은 기존의 미·일안보동맹체제의 범주안에서 혹은 더 나아가 동맹체제의 연장선상에서 논의되고 제안되는 것인만큼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미국의 효율적인 대응방안 또한 전통적 체제의 유지 속에서 양국의 국가이익과 정책목표의 변화를 수용하며 조정되는 과정에서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2) 경제분야

미국의 가장 중요한 교역상대국으로서의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문제 해소가 미국의 대일 경제관계 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사안이다.<sup>75)</sup> 또한,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인정과 함께 이에 상응한 재정적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경제질서 안정을 선도해왔던 미국의 역할을 분담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미국이 제의한 미·일간의 「세계

75) 1992년 1월 동경에서의 미·일정상회담시와 마찬가지로, 7월1일 부시-미야자와 회담에서도 부시 대통령은 경제·통상문제에 있어 자동차 및 부품, 반도체 등에 대한 일본의 시장개방을 촉구하고 수입촉진을 위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재정지출 확대등 필요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일본의 양보를 도출해냄으로써 무역불균형 시정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적 동반자관계」구상의 要諦이기도 하다. 이러한 동반자관계를 근거로 하여 미국은 GATT 자유무역체제의 확립, 러시아, 舊동구권제국 및 제3세계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환경, 마약문제 등의 분야를 포괄하는 전략적 지원에 일본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경제분야에서의 초강대국에 걸맞는 역할행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미국의 대일정책은 G-7 등과 같은 서방선진제국간의 회담등을 통해 환율, 국제경제정책 등의 문제논의에까지 일본을 깊이 간여시킴으로써 경제강국으로서의 위상 또한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외정책 목표와도 부합된다.

미·일 경제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미국이 경험하고 있는 만성적 무역적자와 함께 미국에 유입되는 일본의 잉여자본이 미국의 재정적자를 간접적으로 보전하고 미국내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데 실질적 역할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용인할 수 밖에 없는 면이 있다.

그러나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기업계 및 이익단체들의 노력이 정치적 압력으로 결집되어 나타난 미 의회에서의 다양한 통상관련 법안과 미·일간의 「구조조정협약」 등 법적·제도적 장치는 일본의 시장개방과 불공정무역관행의 개선 혹은 철폐를 통한 미국의 대일무역적자 해소에 다소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다.

일본의 상품시장과 기술 및 자본의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동남아시아지역국가들의 역내 경제권 형성을 위한 노력과 이들로부터의 다양한 제안들이 일본의 적극 참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상에 대하여 미국이 취하고 있는 배타적 지역경제권구상에 대한 일관된 반대입장은 일본 주도의 경제권역 형성에 실질적인 견제역할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행사해온 G-7회의 및 IMF, IBRD 등 국제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경제질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은 일본의 독자적 구상에 의한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역할증대에 직접적인 견제는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결정에 範疇를 설정한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견제책으로서의 역할은 할 것이다.

요약컨대, 2차대전이후 GATT를 통한 자유무역체제 형성과 운영 및 IMF, IBRD 등을 통해 국제통화질서 안정에 지도적 역할을 행사해온 미국이 비록 과거와 같이 압도적인 우위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광범한 시장과 첨단기술이라는 수단을 바탕으로 한 미·일간의 쌍무적 경제관계에서의 영향력과 다자간 경제논의에서의 상대적 우위를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고 할 때,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실효성있는 견제는 여전히 가능하다고 하겠다.

### 나. 미·일관계 전망

미·일관계는 2차대전이후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수직적 관계에 의한 일본의 일방적 의존관계하에서 대소봉쇄라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정책에 따라 전개되어 왔으며, 일본의 전후복구와 경제재건의 기틀마련 및 자위대의 현대화와 군비증강 또한 같은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수직적 관계는 일본의 경제부흥과 외교적 노력에 근거한 일본의 위상제고에 따라 점차 재조정되어 갔으며, 미국 자신이 일본을 「세계적 동반자관계」라고 칭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전통적 역할을 일본이 분담해줄 것을 상정하기에 까지 이르렀다.

이와같이 현재의 미·일 양국관계는 상호 경쟁적인 동시에 보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바, 상호 협의와 절충을 통해 양국은 국제적 역할과 책임분담의 정도를 조정하여 갈 것이며 냉전이후시대에 경제력이 중시되는 세계체제의 운용과정에서 일본외교의 독립성은 필연적으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안보와 경제분야에서의 일본의 국제적 역할확대에 대한 미국의 기대 및 추구하고 이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대응 및 소극적 대처 가운데 야기되는 乖離가 양국간의 긴장과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이다. 종래의 일방적인 대미의존 경향에서 탈피

하여 독자적 정책구상에 의한 외교노선을 추구하려는 일본의 의도와 이 결과 초래될 미국 및 역내국가들의 반발과 우려를 주된 요인으로 하여 야기될 역내 불안정이 국제사회 및 동북아시아지역국가들의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적 노력은 일본이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맞게 될 시련이 될 것이다.

미·일 양국간의 무역불균형이 단기간에 해소될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창구를 통해 시도될 것이나, 미국이 안고 있는 국내정치·경제면에서의 문제점과 대일경제관계에 있어서의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교역분야에 있어서의 균형이 쉽게 이루어질 전망은 어두우며, 이에 따라 미국 업계 및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일 무역제재조치 또한 강도있게 개진될 것이다. 일본을 주된 대상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혹은 管理貿易정신에 근거한 통상관련 법안들이 미 의회내에서 지속적으로 제안될 것이며, 자유무역주의를 신봉하는 미 행정부의 소극적 입장이나 거부권 행사노력은 대일 무역적자폭이 감소되지 않는 한 미국내에서 점차 그 호소력을 상실해 갈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부 차원에서의 무역불균형 해소노력은 「구조조정협약」의 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세밀한 부문에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는 강화되고

보완된 협의의 형태로 지속될 것이며, 일본의 시장개방정도와 불공정무역관행 해소정도에 따라 미·일 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논의가 또다시 대두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캄보디아사태 해결을 위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본격화되는 정치·군사면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는 현단계에서는 독자적 구상에 의한 작전능력이 결여된 상황이나 점차 세계 도처에서의 지역분쟁에 참여할 기회를 확보하고 이에 따라 국제정치적 위상 또한 제고된다고 할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확보를 위한 지속된 노력에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국제적 분쟁해결에 대한 일본의 참여와 기여에 대하여 미국은 긍정적 반응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국제기구의 다자간 협의체제안에 일본을 결속시킴으로써 일본의 독자적 외교정책 구상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미국의 계산은 여전히 그 효력을 발휘할 것이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추세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향후 미군의 점진적 철수를 고려할 때,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구상에 대한 미국의 심각한 재고가 예상되는 바, 이러한 구상 논의 및 실현과정에서 일본의 참여는 중요시 될 것이다.

일본주둔 미군의 유지비용에 대한 일본정부의 분담규모는 확대될 것이며, 동 사안에 대한 미 행정부의 불만의 소지 또

한 점차로 해소되어 가는 과정에서 FSX 차세대전투기 공동 개발사업등 첨단무기체계 개발을 통한 기술교류등을 통해 일본이 첨단기술을 축적해 감으로써 안보분야에서 일본의 대미 의존 또한 상당히 완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이 극복해야 할 국내외적 제약요인과 더불어 역내국가들에 대한 제국주의의 역사적 유산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은 가운데 전개될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노력에는 상당한 도전이 따를 것이며, 이러한 도전을 형성하게 될 실효성있는 견제는 상당기간 역내 이해 관련국들과 함께 미국의 주도로 행사될 것이다.

## IV. 중국의 대응

### 1. 중국의 동북아정책

#### 가. 정책 基調

##### (1) 경제발전과 사회주의체제 강화

1978년 11次 3中全會 이래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대내 경제개혁 심화와 대외 경제개방 확대를 통해 2000년대 초까지 경제중진국으로 부상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毛澤東 死後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毛澤東의 자력갱생적 경제정책이 경제의 효율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중국경제를 피폐케 하였다고 비판하고, 생산성을 증시하는 실용주의적 경제정책을 통해 4개현대화(농업, 공업, 과학·기술, 국방)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장하였다.

중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지닌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實事求是論」(1978. 12) 및 「社會主義 初級段階論」(1987. 10)을 제시하였다. 이들 이론을 배경으로 중국은 자본주의 요소의 장점을 과감히 도입, 경제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개혁·개방정책 채택 이후 중국경제는 연평균 약 10%에 이르는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이는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현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요인이 되었다.

중국은 2030년에서 2050년까지 경제중진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2000년까지 추진할 경제목표를 「국민경제·사회발전 10개년계획」(1991년~2000년)과 「8차 5개년계획」(1991년~1995년)을 통해 밝히고 있다.<sup>1)</sup> 이 계획에 의하면, 첫째, 금세기말까지 1990년 GNP(1조 7,400억원)의 2배 달성, 둘째, 대형 산업프로젝트 완성, 셋째, 연평균 6%의 국민총생산 증가, 넷째, 사회주의 요소인 계획경제기능과 자본주의 요소인 시장조절기능의 혼합형 경제체제 확립 등이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90년대 경제개혁정책 추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公有制를 주체로 삼는 한편 다양한 형태의 소유제를 허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고무하고, 둘째,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시하되 기타의 분배방식도 허용하며, 셋째, 경제발전 여건이 양호한 연안지역이나 일부 이윤창출기업의 성장에 우선권을 두고 낙후지역 경제발전은 차후에 도모하며, 넷째, 중앙권력 축소와 기업의 경영권 확대 등 경제개혁 범위를 확대하고, 다섯째, 에너지, 운송, 통신, 천연자원 분야 및 제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는 것이다.<sup>2)</sup>

1992년초 덩소평의 「南巡講話」(1. 18~2. 21) 이후 중국은 경제건설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증대

---

1) 李鵬, “關於國民經濟和社會發展十年規劃和第八個五年計劃綱要的報告,”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公報」, 1991年 第12號 (1991. 5. 10), pp. 414~48.  
 2) 李鵬, “九十年代的中國經濟—李鵬總理在世界經濟論壇年會上的講話,” 「人民日報」, 1992. 1. 31.

시키는 것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강화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의 확대·심화를 역설한 덩소핑의 「남순강화」 방침은 1992년 10월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14차 당대회에서 중국의 기본 정책노선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은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골자로한 「政治報告」를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 바, 경제적으로는 사실상 자본주의적 요소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경제발전을 도모하고 정치적으로는 기구개편과 인사개혁 등 행정개혁 조치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

과거 냉전체제하에서 중국은 동북아지역의 안정보다는 자국의 안보를 우선시 하였던 바,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을 경우 중국은 주변국가들과의 무력갈등도 불사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초반부터 구소련과의 긴장관계가 해소되기 시작함으로써 중국의 안보위협은 크게 감소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발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경제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내의 평화와 안정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역내 경제강국인 미국, 일본과의 협력관계가 지속되고 주변 강대국들의 이익이 교차되고 있는 한반도에서도 안정이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정책

과 북한의 핵개발 기도가 동북아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인식, 이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선린·우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공군력 중심의 군사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 (3)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증대 모색

중국은 자국의 국가이익에 반하는 동북아질서 재편을 거부하고 지역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 유지·확대를 안보정책의 기조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1970년대에는 「반패권주의」, 1980년대에는 「독립자주의교」를 표방하던 중국은 1990년대에는 「전방위 외교」정책을 표방하면서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함으로써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전략 재조정에 따라 동북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역내에서 역할을 증대하고 역내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심화함으로써 경제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국력을 신장시키는 한편 「全方位外交」라는 명분하에 주변국들과의 실질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게 된 데에도 이러한 정치·경제적 고려가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중국은 새로운 「영해법」을 제정(1992.2)하여 「南沙群島」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아·태지역에서 정치·군

사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며, 해·공군력 증강을 통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나. 정책결정 요인의 변화

##### (1) 대외적 요인

1990년대 세계 및 동북아질서 변화의 특징은 구소련 사회주의체제의 붕괴,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승리에 따른 미국주도하의 신국제질서 형성, 양극체제에서 다극체제로의 변화, 지역국가들의 패권추구 가능성 증대, 경제를 중시하는 하위정치(low politics)의 중요성 증대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특히 동북아질서는 미·러연방의 상대적 약화와 일본의 부상,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블럭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협력체 구상 논의의 활성화 등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과도기에 처해 있다. 한편, 중국은 1990년대 국제질서가 구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 붕괴에 따라 자신의 국제적 고립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제질서 변화의 주된 추세가 단기적으로는 불안정할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sup>3)</sup>

##### (가) 구소련의 붕괴와 美「패권주의」 대두

3) Qian Qichen, "Adhering Independent Foreign Policy," *Beijing Review*, Dec. 30 ~Jan. 5, 1992, pp. 7 10; 陳小功, "世界正處在重要的過渡時期," 「世界知識」, 第1期, 1992, pp. 1~5.

소련 공산당의 해체와 소연방의 붕괴 이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 재편작업이 동북아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바, 이는 중국의 동북아정책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990년대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탈냉전으로 인한 전략재조정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경제대국인 일본의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패권정책이 중국 사회주의체제 강화에 직접적이고도 지속적인 위협요소가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미「패권주의」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일 초강대국으로서의 미국의 패권추구 행위는 중국에게 위협을 줄 것이다.<sup>4)</sup> 둘째, 미 핵공격의 일차목표가 구소련으로부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 등 제3세계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궁극적인 대중국 정책목표는 중국 사회주의체제를 「和平演變」시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일본과 유럽이 미국주도하의 국제질서 재편작업에 협조함으로써 이들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되고는 있으나 미국에 직접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는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연방도 향후 독립국가연합내 각 공화국들간의 정치, 경제, 민족분규문제 등으로

4) 그러나 미국의 국제신질서확립 추구노력은 미국자신의 역부족으로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상한 중국학자도 있다. 潘同文, “布施的世界新秩序初探,” 「國際問題研究」, 第4期, 1991, p. 15.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초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5)</sup>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패권주의 견제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동북아체제의 다극화 추세

중국은 미·러 영향력의 약화와 일본의 부상으로 동북아에서 미·러·일·중에 의한 느슨한 4극체제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 양자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이나 상호간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체제의 다극화 현상으로 강대국간 지역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과 갈등 초래 가능성, 특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기도를 가장 경계하고 있다. 미·러연방간 데탕트와 군사력 감축 등으로 인한 세력균형 및 군사력 균형의 변화로 일부 지역국가들이 군사력을 확대(‘逆裁軍’)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역내에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sup>6)</sup>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기도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무기 판매 확대가 지역분쟁을 유발할 수

5) 陳小功, “世界正處在重要的過渡時期,” pp. 1~5; “關於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國際問題研究」, 第1期, 1992, pp. 1~2; 萬光, “海灣戰爭對世界格局演變的影響,” 「瞭望」, 海外版, 1991. 4. 8, pp. 26~27; 王林, “對世界格局重大變化的幾點看法,” 「瞭望」, 第50期, 1990, pp. 39~40; 「人民日報」, 1991. 12. 16.

6) 杜攻, “對轉換中世界格局的幾點看法,” 「國際問題研究」, 第4期, 1991, pp. 2~9.

있다고 간주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 불안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은 국방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다) 국가간 경제적 경쟁 심화

역내 국가간 경제경쟁의 심화도 중국의 동북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중국은 경제력이 1990년대 국제질서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선진국(주로 미국, 유럽, 일본)간의 경쟁은 경제블럭화 현상, 보호무역주의, 과학과 기술경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시장확보를 위한 선진국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경제마찰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 정치, 과학기술, 군사력 등의 역량과 영토, 지리, 인구, 자원 등 각종 요소들의 종합적인 실체인 「總合國力」에 의해 국가간 경쟁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sup>7)</sup>

중국은 러시아와 베트남 등 역내 구사회주의 국가들이 경제건설을 향해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에서도 경제적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경제건설을 통해 국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국가안보를 유지하

7) 薩本望, “世界各國總合國力競賽加劇,” 「瞭望」, 第4期, 1991, p. 7; 「人民日報」, 1991. 6. 6, p. 2, 1990. 2. 26; Samuel S. Kim, “Mainland China and a New World Order,” *Issues and Studies*, vol. 27, no. 11 (November 1991), p. 27.

는 첩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2) 대내적 요인

1990년대 중국은 사회주의체제를 유지 강화하기 위해 개혁·개방정책을 심화시킴으로써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력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대내 정책목표는 중국의 동북아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하게 투영되고 있다.

### (가) 사회주의체제 위기의식 고조

천안문사태, 걸프전에서의 미국의 승리 및 구소련·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중국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주로 대내적인 요인에서 기인하고 있다. 중국지도부는 천안문사태 발생시 학생과 일부 반체제 인사들이 주도하였던 민주화 운동을 공산당 일당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간주하여 무력진압을 통해 국내안정을 유지하는데 일단 성공하였으나, 학생과 지식층의 민주화 요구는 소멸되지 않고 상존할 것으로 판단하여 경계를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천안문사태 진압과정에서 부각된 인권문제로 인해 미국, 일본 등을 위시한 선진국들이 경제제재를 단행함으로써 중국은 경제적 곤란은 물론 이들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마저 냉각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중국은 서방국들의 인권문제 개선요구를 중국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내정간섭이라고 격렬히 비난하고 있는 바, 중국지도층의 사회주의체제 고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이러한 반응에서도 발견된다.

중국지도층의 사회주의체제 고수 필요성은 구소련의 붕괴로 더욱 강화되었다. 구소련의 사회주의체제 붕괴는 중국공산당 간부들간에 패배주의를 팽배시키게 되었고 국내적으로 사상적, 체제적 위기감을 초래하여 중국지도층간에 논쟁을 가열시켰다. 중국의 개혁파는 경제발전을 통한 국민의 생활수준 제고에 의해서만이 체제붕괴의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李鵬을 위시한 보수파들은 「反和平演變」투쟁에 의해서만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개혁·개방의 속도를 완화하고 사상교육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였다. 사회주의 체제유지와 관련한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논쟁에서 등소평을 중심으로한 개혁파의 주장이 득세하게 됨으로써, 중국은 이념투쟁 강화 보다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체제를 유지·강화하려는 정책을 더욱 강도 높게 전개하고 있다.

#### (나) 개혁·개방 심화

중국의 최고실력자 등소평은 구소련의 붕괴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하고 오직 급진적인 개혁심화와 개방확대를 통한 경제발전만이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등소평은 1989년 이래 지속

되어온 긴축정책은 보수파의 세력을 확대시키고 대외관계의 경색을 초래하는가 하면 경제적 침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 자신의 사후에도 개혁·개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14차 당대회에서 보수파를 권력의 핵심부로부터 축출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등소평은 1992년 초부터 자본주의경제의 장점을 폭넓게 수용하는 급진적인 개혁·개방을 지지하는 한편, 陳雲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의 안정과 통제위주의 경제론을 비난하면서 「防左論」을 주장하였다.<sup>8)</sup> 이러한 등소평의 주장은 1992년 3월 정치국전체회의 및 全人大에서 당의 공식 노선으로 인정됨으로써 급진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고, 현재 개혁파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으며 1992년 10월 개최될 예정으로 있는 14차 黨大會, 1993년 초에 개최될 제8기 全人大에서 개혁파의 권력장악이 예상되는 바 과감한 경제개혁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 다. 정책 내용

### (1) 군사·안보 분야

1990년대 중국의 동북아 군사·안보정책의 주된 내용은 다

8) 이는 등소평의 심천, 주해 경제특구 방문기간 중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FEER)*, March 19, 1992, p. 10; 大公報, 1992. 1. 22, 1. 27, p. 1, 23 & 24; “改革的膽子再大一點,” 「人民日報」, 1992. 2. 24;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rch 22, 1992.

음과 같다. 중국은 평화공존과 선린외교를 추진하여 무엇보다도 미국 주도의 동북아 질서개편 노력과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고, 지역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역내 안정을 위해 소지역적 차원의 다자간 안보협의체 창설 구상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 (가) 평화공존과 「전방위외교」 추진

1982년 중국공산당 제12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독립자주의교」노선이 중국대외활동의 기조로 공식화된 이후, 중국은 미·소 두 초강대국에 대한 중간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소관계 개선을 추구하고 대미 경협관계를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미·소간의 데탕트가 심화되자 중국은 「평화공존 5개원칙」을 강조하여 왔다.<sup>9)</sup> 이는 1990년대의 중국외교가 미·러연방간 중간자적 역할을 도모하기 보다는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면서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의 평화적 공존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걸프전의 종식과 냉전체제의 와해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발전문제가 세계 도처에서 도전받고 있다고 평가하고, 그 주된 이유는 미국이 배타적으로 신국제질서를 구축하려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1990년대의

9) *China Daily*, April 7, 1992.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며, 유엔헌장의 원칙과 중국이 주장해 온 「평화공존 5원칙」이 신국제질서의 기본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이 평화공존 5원칙을 주장하는 배경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첫째, 사회주의 현대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평화적인 국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중국은 이념과 체제의 상이성에 관계없이 향후 어느 국가와도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걸프전 이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노력을 견제하고 중국이 평화적인 대외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을 천명하여 천안문사태 이후 소원해진 서방관계를 원할히 하려는 것이다.<sup>10)</sup>

또한 중국은 자국내 인권상황은 국내정치, 사회, 경제 및 역사적 환경의 특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타국의 간섭은 신국제질서 형성원칙의 하나인 주권 불가침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은 인권문제 등에서 과거보다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바, 이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대서방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서방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이다.

10) 胡繩, “爲了世界的和平發展,”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1991. 6, p. 4.

뿐만 아니라, 중국이 신국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장애요인이 있는 바, 그 주된 이유는 중국이 아직 개도국으로서 「총합국력」면에서 국제정치를 주도할만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적극 저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위한 서방의 지원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인 바, 중국은 인권, 교역 및 무기수출문제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선별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점진적인 대미관계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진국들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얻고 있다. 1991년 가이후 일본총리의 방중, 메이저 영국총리, 안드레오티 이탈리아총리와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방중, 鄒家華, 朱鎔基 중국부총리,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의 영국, 프랑스, 유럽공동체 방문, 1992년 5월 江澤民 중국당총서기의 일본 방문 등 고위지도자의 방문외교를 통하여 중국은 서방국가들과의 관계를 개선하여 왔다.

아울러 중국은 전기침 외교부장의 동구국가 방문(1991. 2. 27~3. 6), 楊尙昆 국가주석의 몽고(1991. 8. 26~29) 및 파키스탄 방문(1991. 10. 26~30), 李鵬 총리의 인도 방문(1991. 12) 그리고 베트남과의 국교정상화 실현(1992. 2. 11)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관계발전을 도모해 왔다. 또한 1992년 1

월 李鵬 총리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회담 참가(옌첸 러연방대통령, 부시 미대통령과의 회담) 등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탈피를 위한 중국의 외교적 노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같이 선린외교를 바탕으로 한 중국의 「독립자주적 평화외교」는 최근 중국이 이념보다 국가이익을 강조하는 「전방위 외교」를 주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 (나) 국방현대화 추진

중국은 1980년대 국방현대화를 「4개현대화」과제의 하나로 책정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천안문사태로 인한 군부의 영향력 강화와 경제개혁 추진에 군부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해, 중국은 1989년부터 대규모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매년 12% 이상 증액시켜 왔으며, 급기야는 1991년 1월 당중앙군사위에서 향후 10년간 국방비를 매년 10% 이상 증액하기로 결정하였다.<sup>11)</sup> 중국은 또한 국방현대화의 재정확보를 위해 제3세계에 대한 미사일 등 무기수출을 적극화하는 한편 역내분쟁 및 대내치안에 대비키 위해 신속한 군사력 배치(rapid deployment) 능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다.

11) 중국은 1992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330.3억원) 대비 12% 증액한 370억원 (67.6억달러)로 책정하였다(1992. 3. 21). 1991년에는 13.7%, 1990년에는 15.4% 증액되었다.

중국이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게 된 대외적 배경은 무엇 보다도 걸프전에서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의 위력이 입증되는 한편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국들과의 영토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군사력 증대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병력감축을 통한 군의 정규화와 군사무기 현대화를 추구하면서 해, 공군력 증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중국 공군은 현재 약 5,000대의 항공기를, 해군은 미국의 로미오 디젤급의 핵잠수함을 포함, 100척이 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으며<sup>12)</sup> 2000년까지 전략 핵 잠수함(SSBN) 12척 건조 목표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과의 군사기술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함에 따라 러연방으로부터 SU-27 전투기 등 무기 수입을 통한 군사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기본적인 핵억지력 제고를 위해 대규모 핵실험을 감행(1992. 5)한 바 있으며, 현재 8기의 장거리미사일, 60기의 중거리 미사일과 1척의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sup>13)</sup>

#### (다) 역내국가의 패권추구 견제

중국은 1980년대 역내국가들의 대중국 패권추구 견제전략

12) James Lilley 국제안보담당 미국방차관보의 World Net Program에서의 발언, 1992. 3. 27.

13) David Shambaugh,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Survival*, vol. 34, no. 2 (Summer 1992), p. 104.

의 일환으로 전형적인 以夷制夷정책과 세력균형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1980년대 중국은 미국과의 연합전략을 통해 소련의 대중 안보위협을 견제하고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력 증대에 억제역할을 해 온 것으로 이해되는 미·일 안보동맹체제를 대소견제전략 차원에서 묵인하여 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은 소련의 와해,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부상 등 미국주도의 동북아질서 재편 가능성을 견제하기 위해 역내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1990년대 새로운 질서 형성을 모색하는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띠고 있는 동북아에서 중국은 한·미·일 전략적 협력관계를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력 증대 기도를 억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李鵬 총리는 “중국은 반패권주의를 지지하며 중국 자신이 동북아 어느 국가나 지역에 대해 위협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력범위의 확대를 모색하지도 않고 타국가에 대해 강권정치를 행사하지 않을 것임”<sup>14)</sup>을 천명하는 등 중국 자신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여 왔다. 중국은 자국의 반패권주의 입장에 대한 러연방과 일본의 지지를 얻어냄으로써 양국이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sup>15)</sup>

14) 이봉총리의 유엔안보리 연설, 「人民日報」, 1992. 2. 2.

15) 중국은 미국과 러연방간 동반자관계를 규정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미·러관계가 여전히 갈등을 보일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다. Pu Qihua, “No Longer Foes, But Still Vigilant,” *Beijing Review*, May 25 31, 1992, pp. 10~11.

중국은 천안문사태 이후 미국의 대중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1990년 초부터 사회주의의 진로에 대한 구소련과의 이데올로기적 견해 차이에도 불구하고<sup>16)</sup> 안보, 경제 및 기술협력 관계 진전을 모색하였다. 이봉 중국총리는 1964년 周恩來 중국 전총리의 방소 이후 처음으로 모스크바를 방문(1990. 4. 23)하여 중·소 국경지대 병력감축 및 향후 10년간 경제·무역·과학 및 기술분야에 걸친 협력에 합의하였다. 또한 1991년 江澤民 당총서기의 방소중 중국은 걸프전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과정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는 미국에 대하여 중·소 양국이 협력하여 대응할 것을 공동성명을 통하여 천명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은 러시아에 대한 경제원조를 확대하고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도입(SU-27 전폭기와 MIG-29 전투기 등)할 것을 약정하였다.

중국은 소연방의 붕괴 이후에도 구소련과 체결한 군사기술 협력협정을 러시아가 승계하기를 주장하여 러시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자국의 국방현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1992년 3월 빅토르 삼소노프 독립국가연합 참모총장의 방중기간중 중국은 24기의 소련전투기 SU-27 구입을 매듭지었으며, 중국

16) 1989년 고르바초프 구소련대통령의 방중으로 중·소간의 국가관계는 정상화되었으나 고르바초프의 대서방 유화정책과 국내정치와 경제개혁정책으로 양국간의 정치관계는 소원하였다. 중국은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의 지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세계 사회주의의 이름을 없애고 “부르조아 자유주의”(bourgeois liberalism)로 전환하고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이러한 구소련의 정치개혁은 자본주의국가들의 화평연변의 전략에 호응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같이 레이다망을 피할 수 있는 최신예전투기 F-10 체제 구축을 위해 고도의 항공기술 획득 문제를 놓고 독립국가연합 방위산업체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sup>17)</sup>

중국은 한·미·일 전략적 협조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1991년 강택민 당총서기의 방소 중에 발표된 중·소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정세의 긴장완화가 동북아 전체의 안정을 위해 중요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sup>18)</sup> 중국이 공동성명에 한반도조항을 삽입한 것은 향후 한반도문제에 관한 한, 러연방의 발언권을 인정하고 러연방과 협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한·미·일간 협력관계를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라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저지에 대해서도 한·미·일에 의한 압력행사 보다는 외교적 설득을 주장하고 IAEA에 의한 북한의 핵사찰수용을 강력히 권고하여 이를 성사시켰으며, 남북한이 상호핵사찰을 실시함으로써 한반도의 비핵화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한·미·일간 전

17) Tai Ming Cheung, "Absence of Trust," *FEER*, March 19, 1992, p. 13.

18) 황병무, "신국제질서와 주변열강의 한반도 전략(II):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표논문, 1992. 5) p. 5.

략적 협력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1992년 8월 한국과 수교하였으며,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한 당사자간의 협상과 더불어 북·미, 북·일간 협의 등 외교적 타협을 요구하고 북·일 수교와 북·미 관계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 (라) 역내 핵확산 방지

중국은 미·소의 획기적인 핵무기 감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방위적 성격의 핵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왔다. 따라서 중국은 美·蘇의 핵확산 억지노력에 동참하지 않고 핵능력을 강화하여 자국의 안보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해 왔다.<sup>19)</sup>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의 핵우산정책이 남북한과 일본의 핵개발을 견제하고, 나아가서 구소련의 팽창주의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 특히 한반도에서의 핵무기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 1991년 12월 소연방 붕괴로 인한 구소련의 대중국 군사위협 감소,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핵기술의 북한 또는 제3세계로의 확산 가능성 등 제요인으로 인해, 중국의 핵전략개념은 대미·소 견제목적에서 지역분쟁 억지목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역내국가들의 핵개발 시도나 핵무

19)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패권추구 견제를 위한 지렛대로 파키스탄 등 친중국 인접국가에게 핵개발에 관련된 기술을 제공한 바 있다.

장노력이 동북아 안보질서에 불안정을 초래하고,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역내 비핵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이나 핵보유국들의 핵확산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1990년초 동북아에서 미·소에 의한 일방적인 핵감축이 추진되자,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 노력에 반대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북한에 대하여 국제기구에 의한 핵사찰 수용을 설득하였다.<sup>20)</sup> 이는 중국이 남북한간 군사력 경쟁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자국의 안정과 경제발전에 필요하며, 일본의 핵개발 및 군사력 증강 노력을 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1991년 10월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은 중국이 남북한 모두의 핵무기 보유를 원치 않는다고 공식 표명한 바 있다. 1991년 11월 9일 徐敦信 중국외교부 부부장도 盧泰愚 대통령의 「한반도비핵화5원칙」선언을 지지하고 중·소회담과 중·일회담 등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게 핵무기 개발기술을 제공한 바 없음을 언명하였다. 아울러 楊尙昆 국가주석도 핵기술의 군사적 목적에의 원용문제와 관련, 「반출불가, 비협조, 비협력, 비확산의 원칙」(Principle of “no transfer, no cooperation, no

20) 1991년 5월 이봉총리 방북시, 중국은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바 있다. 김일성의 방중(1991. 10.~4 10. 13)기간동안 중국과 북한은 부시 미대통령의 한반도 전술핵철폐에 대한 공식적인 언급이나 공동성명이 없는 점으로 보아 이 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鏡報」, December 5, 1991, p. 37. in *FBIS CHI*, December 5, 1991, p. 9 참조.

assistance, and no proliferation”)을 고수한다고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기술 지원 요청을 거절한 바 있다. 중국은 1992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였는 바, 이 결정에는 북한의 핵개발 노력과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사전에 견제하려는 의도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 (마)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참여 구상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고르바초프가 제안한 유럽의 다자간 안보협력방식을 아시아에 적용하는데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왔다. 그 이유는 이러한 구상이 동북아에서 미·소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중국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국측의 입장은 소연방의 붕괴 이후에도 계속되어 미국이 제안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2+4 方式」이나 일본의 「4+2 方式」에도 중국은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의 급격한 군사력 증대에 대처하여 다자간방식에 의한 소지역 차원에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의해서 독일의 영향력 증대 기도를 견제하였던 바와 같이 다자간 안보협력체를 형성하여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 기도를 견제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국은 중·일, 한·중, 남북한 등 역내 양자관계의 진전에 의해 신뢰관계가 축적됨으로써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 형성을 위한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2) 경제분야

중국은 1990년대 세계적 차원의 경제성장 속도는 완만하며, 적지않은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고 있고 특히 소련과 동유럽이 경제적 곤경에 처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아·태지역의 경제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하며, 그 주된 원인은 역내국가들의 국내정치 안정에서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세계경제에서 미국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막대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고 지역경제권의 통합에 따른 경제블럭화 현상으로 경제질서가 다극화 추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sup>21)</sup>

1990년대 중국의 경제정책 대강은 개혁과 개방정책을 과감히 확대 추진하고, 아시아의 양호한 경제상황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이용하기 위하여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것이다. 향후 중국은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국 주도의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을 모색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21) 李楠, “和平與發展面臨挑戰,” 「瞭望」, 第2期, 1992. 1, p. 46; *Beijing Review*, February 17~23, 1992, pp. 8~10.

## (가) 경제개혁과 개방의 심화

중국을 지난 10여년간 「一個中心」(경제건설), 「兩個基本點」(개혁·개방 및 4개 기본원칙 견지)의 정책지침하에 경제 발전을 추진하여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농업부문에서는 집단농장을 해체하고 지방의 「향진기업」을 육성·발전시키며, 도시산업부문에서는 사기업 육성, 국영기업의 민간부문으로의 전환과 대외합작과 외자유치에 있어서 큰 성과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1980년 중반부터는 성장위주의 과잉투자에 따른 경기과열, 높은 인플레이, 당·정관료들의 부정부패 만연 등 사회 불안이 만연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1988년 9월 제13차 3中全會부터 「治理經濟環境, 整頓經濟秩序」라는 경제조정기에 돌입하였으며,<sup>22)</sup> 이러한 경제조정은 천안문사태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제조정 기간중 보수파의 경제통제를 통한 안정위주 논리는 더욱 강화되었고 장기적인 경제침체로 국민들의 불만은 증대되었다.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사회주의의 몰락은 국민들의 불만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성장위주의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과 지

22) 1984~86년 기간중 중국경제는 인플레이 악화, 무역역조 확대 및 외환보유고 감소 등 문제점이 노출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조정정책을 실시하여 경제안정을 도모해 왔다.

도자들은 사회주의 붕괴의 주된 원인이 극심한 경제난과 경제질서의 혼란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폭넓은 경제개혁과 대외 개방정책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이 국민들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의 심화를 위한 주된 정책으로는 지속적인 농업생산력 제고, 국영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반 조치 강화, 경제특구 확대를 통한 수출증대,<sup>23)</sup>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투자유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노동과 자본의 자유이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증권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투자자들에 대한 토지소유 및 임대조건을 개선해 주고, 다양한 형태의 소유권제도를 허용하고, 농산물가격을 일부 자유화한 점 등은 특기할 만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은 생산, 경영, 분배에 대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을 자율경영, 독립채산,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유도하고 국영기업의 규모를 축소

23) 1980년대 연안지역의 수출활성화에 힘입어 중국은 1990년대에도 이 지역의 수출사업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를 내륙지방으로 확대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1979~89년 연안지역은 230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하여 중국 총 수출액의 52.38%를 기록하였으며 1989년 4개 경제특구는 중국 총수출액의 29.8%인 142억달러의 물량을 수출하였다. *China Statistics Almanac*, 1989 참조. 중국은 또한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심천, 천진항, 대련 등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자유무역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이 지역내의 외국투자 기업들이 제품에 대한 수출입관세를 면제받게 하였다. 「朝鮮日報」, 1992. 3. 23 참조.

하고 있다.<sup>24)</sup> 중국은 또한 에너지, 운수업 등 기간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sup>25)</sup> 요컨대 1990년대 중국경제체제는 실질적으로 계획경제체제와 시장자본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혼합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고, 개혁과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자본주의적 요소가 폭 넓게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역내국가와의 경제협력 확대

중국은 자국의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 역내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중시,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sup>26)</sup> 대외무역을 증진시켜 왔다.<sup>27)</sup> 1980년대 중국은 일본, 미국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최우선시하여 왔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한국과의

24) 중국은 1979년 대비 1990년 현재의 정부주도 산업은 50%, 정부 주도의 주요 자원의 단일분배체제는 85%, 정부 주도로 생산된 소비재 품목은 거의 80% 감소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Niu Genying, "An Economy Regulated by a Combination of Plans and Market Force," *Beijing Review*, October 7~13, 1991, p. 18.

25) 1980년대 중국 국민총생산 중 농업 42%, 제조업 38%, 서비스산업 25%였으나, 1990년에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각각 45%, 25%로 증가하고 농업은 30%로 격감하였다. Directorate of Intelligence, *The Chinese Economy in 1990 and 1991: Uncertain Recovery* (Washington, D. C.: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91).

26) 중국은 경제특구에 준하는 경제기술개발구를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와 기술을 유치하고 있다. 1990년 외국과의 합작회사 및 외국인 소유의 중국 기업은 1만 7천개에 달하여 230억달러의 실질투자를 기록하였다. 1991년 외국자본으로 설립된 중국기업의 수는 1990년보다 1만 2,600개가 증가한 3만 7,179개이다. 이중 합작투자기업이 8,497개, 100% 외국자본소유 기업수가 5,901에 달한다. 「文匯報」, 1992. 1. 20.

27) *Beijing Review*, February. 17~23, 1992, p. 11.

경제협력도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천안문사태로 인하여 중국의 대미·일 경제협력관계는 일시 중단되어 경제정책에 차질을 유발하였고, 특히 역내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중국은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감내해야 했다.

결국 중국은 역내국가들과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일본과 미국에 대한 정책자세를 전환시킬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중국은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를 어느 정도 용인해 줄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일본은 대중 경제제재를 해제하게 되었다. 중국은 일본이 경제, 과학 및 기술협력과 원조를 재개한데 대해, 핵확산방지조약 가입 약속 등 일본의 요구를 점차 수용하여 대일 경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인권문제, 무역역조문제, 중국의 군사무기판매 등이 현안문제로 남아있으나, 중국이 미국의 요구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미국은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연장해 주고 일부 첨단기술 수출을 재개해 줌으로써 중·미관계가 점차 개선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대만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 결정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로 중·미관계는 다시 악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마찰 요인을 완화하는 노력과 동시에, 중·미갈등으로 빚어지고 있는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리연방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하고, 한국, 대만,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등과도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 「일국양제」에 의한 통일을 실현하고자 하는 동시에, 대만의 대중국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자 하고 있다.<sup>28)</sup>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에 대해서도 중국이 먼저 가입한 후 대만의 가트 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바 있다.<sup>29)</sup> 중국지도자들이 1990년대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서 선진국들과의 경제, 과학, 기술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중국의 대외 협력관계는 확대될 전망이다.

#### (다) 중국주도의 다자간 지역경제협력체 추진

1990년대 초부터 중국은 현 국제경제질서가 남·북간의 극심한 소득격차로 인해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역설하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국제경제질서 구축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중국은 아·태지역국가들 사이의 자원과 산업구조의 보완성, 정치관계 호전, 경제협력에 대한 의지 성숙<sup>30)</sup> 등 요인이 중국경제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28) 1991년 북경·대북간의 무역규모는 약 50억달러에 달하였고, 대만의 중국 투자규모와 인적교류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 1991년 대만인의 중국 방문자수는 기업인을 포함하여 약 100만명에 달하였고, 2천 3백만건의 서신왕래가 있었다. 「人民日報」, 1992. 2. 1.

29) 李鵬, “九十年代的中國經濟—李鵬總理在世界經濟論壇年會上的講話,” 「人民日報」, 1992. 1. 31.

30) 史敏, “中國沿岸地域的開發戰略,” 「每日經濟新聞」, 1991. 9. 4.

지역경제협력체 형성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우선 황해와 발해경제권 및 두만강유역개발 등 소규모의 경제권을 구축하여 이를 발전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다.<sup>31)</sup> 중국은 한국과 호주가 주창한 바 있는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축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과, 말레이시아가 제창한 아시아경제그룹(EAEG)구상(일본, 중국, 한국, 대만, ASEAN 6개국과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인도차이나 3국을 통합하는 구상으로서 소련, 미국, 호주는 제외됨) 중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관심을 표명, 대만, 홍콩과 함께, 1991년 11월 제3차 서울총회에서 정식회원으로 가입하였다. 특히 중국은 일본경제력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복건성과 광둥성을 주축으로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를 연결하는 「大中華經濟圈」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

##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중국의 입장

1990년대 일본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 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모색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미국과의 동반자관계 구축으로 인한 일본의 안보역할의 세계화이다. 둘째, 유엔평화협력법안 통과를 통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의 정치·군사적 위상

---

31) 위의 글.

제고 노력이다. 셋째, 자위대 예산의 지속적인 증대와 장비 현대화이다. 넷째, 외국원조계획을 확대하여 전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한 미국의 동북아전략 재조정과 러시아 연방의 위상약화 등을 틈탄 이러한 일본의 적극적인 정치, 군사적 역할증대 기도에 대해 중국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가. 중국의 대일 정책환경 변화

1990년대 동북아에서는 구소련의 붕괴와 역내 미군의 감축으로 인해 세력공백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 국제환경속에서 일본은 정치적·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모색하고 있다. 역내에서 일본의 역할 증대 기도는 중국의 대외정책 목표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건설을 이룩하기 위해 외국,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비중을 고려해 볼 때, 개혁·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국은 일본의 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은 중국으로 하여금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어느 정도 용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나. 중국의 대일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

### (1) 안보구상

1970~80년대 중국은 일본이 對蘇 견제전략에 동참하고 중국의 경제건설에 협력해 줄 것을 희망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1978년 8월 일본과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하고 1979년 1월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함으로써 대소 견제를 목적으로한 중·미·일간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 중국이 대일 관계개선의 전제조건으로서 「반패권주의」 조항 준수를 요구하였던 목적중의 하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아울러 중국은 미·일안보체제 존속을 간접 지지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의 독자적 군비증강이나 역할증대를 억제해 주기를 희망해 왔다.

1970~80년대의 원만한 중·일 관계는 1989년 6월 천안문사태로 인하여 일본이 미국을 위시한 서방측의 대중국 경제제재에 참여함으로써 냉각되었으나, 1990년 중반 일본의 대중국 經援再開와 1991년 가을 가이후 일본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중·일관계는 정상을 되찾고 있다. 그러나 미·일관계 재조정기에 따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기도에 직면, 중국은 대일 안보구상을 수정하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의 대일 안보 및 경제전략 기조는 일본의 경제지원을 유도하는 한편, 동북아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을 효율적으로 억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인 미·일 안보체제의 존속과 미군의 일본주둔을 묵인함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억제하고,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역내문제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고 있다.

요컨대, 1990년대 중·일 안보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동시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일 양국이 경제면에서는 경제협력 증진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안보면에서는 상이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일본의 전반적인 외교정책이 미·일동맹체제를 근간으로 하여 정치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해 선택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정치적 역할증대 노력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견제할 것이나, 군사적 역할 증대 기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견제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국의 선택적인 견제전략은 일본과의 경제협력 필요성과 중·일간 전통적 경쟁관계에서 기인하고 있다.

#### (가) 일본의 정치적 역할증대: 중국의 소극적 견제

중국은 일본이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지위획득 및 유엔헌장의 「舊敵國條項」삭제 요구, 역내분쟁 해결에의 참여 등을 통해 국제정치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소극적인 견제자세를 보이고 있다.

## 1) 일본의 유엔평화유지군 파병 견제

결프전 당시 중동지역에 유엔조사단의 일원으로 군 조사단을 파견한 적이 있는 중국은<sup>32)</sup> 일본이 결프지역에 자위대파병을 검토하자 이를 일본이 군국주의로 나가는 심각한 조치라고 비난한 바 있으며, 일본의회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에 우려 입장을 표명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의 비난과 반대의 강도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어 왔다. 일본 소해정의 페르시아만 파견 전에는 신중한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일본 소해정 파견 이후에는 국제해상로 보호를 위한 활동은 양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중국은 캄보디아 내전이 지속되어 온 지난 13년 동안 구소련이 지원하였던 베트남을 견제하고 캄보디아에 친중국 세력을 정착시키기 위해 크메르루즈파를 지원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여 왔다. 그러나 1992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20개국으로 구성된 유엔평화유지군(PKF)의 캄보디아 파병(UNTAC;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32) 중국은 1990~91년 결프전 당시 중동지역에서의 UN PKO활동여부에 대한 유엔안보리 투표에 반대하지 않고 678조항(이라크의 쿠웨이트 무조건 철수를 위한 모든 조치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유엔에 부여하는)과 686조항에 기권하였으며, 20명의 중국군조사단을 쿠웨이트·이라크 국경에 유엔조사단의 일원으로 파견한 바 있다. Hu Yumin, "UN's Role in a New World Order," *Beijing Review*, vol. 34, no. 23(June 10 16, 1991), pp. 12~14; Samuel S. Kim, "Mainland China and a New World Order," pp. 10~13;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London:Brassey's, 1991), p. 149.

Cambodia)에 즈음, 캄보디아 연립정부는 일본의 경제지원을 확보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을 적극적으로 일본정부에 요청하여 왔다. 시하누크 캄보디아 최고국민평의회(Supreme National Council of Cambodia) 의장도 캄보디아를 방문중인 가키자와(柿澤弘治) 일본외무차관에게 일본자위대의 파병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는 캄보디아가 아시아의 강대국인 일본이 캄보디아 평화유지를 위해 적절한 기여를 해야한다는데 지지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sup>33)</sup> 중국은 캄보디아 평화유지군이 이미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캄보디아가 일본자위대의 평화유지군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일·캄보디아간의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오직 유엔의 결정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본의 캄보디아 파병을 경계해 왔다.

그러나 1992년 4월 江澤民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방일에 즈음하여 중국은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기 시작하였다. 江澤民은 일본자위대의 캄보디아 파견 목적이 군사적 성격을 띠 경우에는 반대하고 재해복구 임무나 국제해상로 보호활동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sup>34)</sup> 이와 같이 중

33) *FBIS EAS*, March 23, 1992, pp. 4~5. 훈센총리는 일본의 경찰, 행정관리, 경제자문단의 파견을 요구하였으며 일본의무장관은 일본국회에서 자위대파병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민간인 파병을 고려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캄보디아정부가 일본의 파병을 요구하는 이유로는 다음 두가지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첫째, 캄보디아의 경제부흥을 위해 일본의 경제원조가 필요함으로 일본의 파병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둘째, 캄보디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을 이용하려는 의도에서이다.

34) *FBIS EAS*, April 9, 1992, pp. 1~2.

국이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데에는 다음 두가지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이미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군에 군대를 파견한 중국은<sup>35)</sup> 명분상 일본의 파병을 강력히 저지할 수 없는 입장에 처했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으로부터의 經援 확보 필요성 때문이다.

## 2)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 노력

1990년대 일본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고자 외교적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 남아 있는 미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참여를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입장인 바,<sup>36)</sup>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현단계에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가입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안보리가 개편될 경우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발언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현재의 5개 상임이사국제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은 인도, 브라질, 나이지리아 등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sup>37)</sup>

35) 중국은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에 따라 47명의 군사 관찰단과 4백명의 공병대대를 캄보디아에 파견, 유엔군의 일원으로 평화유지와 도로, 교량공사등의 임무를 수행할 것임을 밝혔다. 1992년 4월 16일 중국외교부 성명 6, 「한국일보」, 1992. 4. 17字에서 인용.

36) 「東亞日報」, 1992. 7. 3.

37) 吳寄南, “目標: 安理會常任理事國 — 日本的聯合國外交初析,” 「國際展望」(上海), 1992年 第4期 (1992. 2. 23), pp. 23~24.

그러나 중국은 장기적으로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상황이 국제기구 운영에 대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고 유엔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가입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비롯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적극 지지할 경우, 중국이 공개적으로 일본의 가입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본은 대외적으로 평화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유엔에서의 위상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엔현장의 구적국조항 삭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은 2차대전 당시의 승전국과 패전국간 구분이 완전히 퇴색된 상황이므로 일본의 「구적국조항」 삭제요구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표명하지는 않고 있다.<sup>38)</sup> 중국이 이와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중·일관계가 진전되고 중국의 경제목표 실현을 위해 일본의 정치적 역할 증대를 어느 정도 용인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 3) 일본의 역내분쟁 해결에의 참여 허용

중국은 역내분쟁 해결에 러시아, 미국, 일본 등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자간 협의

---

38) 위의 글.

방식 보다는 관련국 당사국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중국은 특히 일본의 역할 강화가 역내분쟁 해결과정의 참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 지역문제가 분쟁 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반도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중국은 남·북한 쌍방간의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여 왔다. 중국은 북한 핵개발 저지와 관련 베이커 미국무장관이 1991년말 제안한 「2+4 방식」이나<sup>39)</sup> 1992년 3월 일본이 제안한 「4+2 방식」에<sup>40)</sup>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한반도문제 해결은 남·북한 당사자들간의 합의에 의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던 바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자세도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고려가 작용하였던 측면이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내분쟁 해결에 대한 이러한 기본입장 하에 중국은 일본이 유엔을 통한 역내분쟁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39)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pp. 13~14.

40) 「東亞日報」, 1992. 3. 12. 하마다 다쿠지 일본 자민당 의원은 한반도문제 해결방안의 일환으로 「4+2 방식」을 주창하였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2+4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2+4 방식」은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체가 남북한이며 주변4강은 보조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4+2 방식」은 주변4강이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역내분쟁 해결과정에 일본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가능성을 저지하기 위해, 중국은 역내 다자 안보협의체 창설 구상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중국의 적극적 견제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기도에 대해 중국은 적극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독자적인 군사대국화를 억제키 위해서는 전통적인 미·일 동맹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일본 자위대의 강화에 대비키 위해 해·공군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의 역할 증대를 견제하기 위해 역내 다자간 안보포럼 형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1) 미·일 동맹체제 지속 지지

미·일 동맹체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990년대의 미·일 안보체제가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주어서는 안되며,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을 훼손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일 안보체제가 와해될 경우 동북아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정치, 군사대국화를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미·일 안보체제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중국은 전통적인 미·일 안보체제의 지속을 희망하면서 장

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대 억지책으로서 미군의 일본주둔을 묵인할 것이다. 둘째, 중·미협력관계를 조성하여 미국이 동북아에서 보다 더 잘 조율된 균형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대일 견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많은 장애가 따를 것이다. 중·미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그 중요한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 1990년대 중·미관계는 대립관계가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1970년대 말과 같은 전략적 협조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 특히 미국에서 인권문제를 중시하는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많은 바, 중·미관계는 더욱 악화될 소지가 많다. 다음으로 미국이 일본의 제한적인 역할증대를 지지하고 있는 바, 미국이 중·일관계에 균형자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sup>41)</sup>

## 2) 일본의 자위대 군비 증강과 핵무장 견제

중국은 일본의 방위능력이 이미 일본 본토를 방위할 수 있는 능력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sup>42)</sup> 일본의 핵무기

41)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레이건 미대통령이 일본의 국방비 증대가 역내 어느 국가에도 군사적 위협을 가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국방비 증대를 지지한 것을 비난한 적이 있다.

42) 1988년부터 중국은 일본의 방위비 제한 철폐가 군국주의화의 일환에서 취해진 조치라고 비난해 왔다. *FBIS CHI*, January 11, 1988, pp. 7~8 and January 12, 1988, p. 4.

보유 등 군사력 증강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중국은 일본의 자위대 국방력이 일본 자신의 영토방위에만 국한될 경우에는 우려하지 않았으나, 1980년 중반부터 일본의 방위 범위가 변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경계태세를 보여왔다. 1980년대 초 일본이 「1,000해리 해로방위선언」에 따라 해군력을 증강한 후, 중국해군은 靑島해군기지를 기점으로 대규모 기동훈련을 서태평양까지 확대 실시한 바 있다.<sup>43)</sup>

중국은 1988년 일본의 국방비지출이 약 300억달러로 세계 제3위에 달하자, 일본의 이러한 국방비 증액은 곧 자위대의 군비증강을 위한 것이며 아울러 자위대의 해외진출을 위한 첫 단계라고 비난하기 시작하였다.<sup>44)</sup> 중국은 일본자위대의 국방력은 더욱 현대화되고 군비증강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45)</sup>

일본은 1991~95년 「新中期防衛力整備計劃」(新中期防)의 총소요액을 1,500억달러로 책정하고 있으며,<sup>46)</sup> 핵장비와 원거

43) 김달중, “동북아 해상교통로를 위요한 4강의 해상전략,” 김달중 편, 「한국과 해로안보」(서울: 법문사, 1988), pp. 161~64.

44) Liu Wenyu, “Paving the Way to Send Troops Abroad,” *Beijing Review*, May 2~8, 1988, no. 18, p. 15.

45) 일본은 걸프전과 구소련의 붕괴이후 아직도 국제사회는 민족문제, 영토문제 등에 기인하는 지역분쟁 등의 불안정 요소를 내포하고 있으며 러연방의 극동군의 국방태세는 질적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여 일본의 국방력 강화를 지속하고 있다. 「防衛白書」, 平成 3年版(1991), pp. 118~19 참조.

46) 「防衛白書」, 平成 3年版(1991), pp. 118~19; 이 계획에 따르면, 42기의 요격 전투기(F-15)의 정비, 4기의 조기경보기(AWACs) 도입, 지대공미사일 나이키의 페트리엇 미사일로의 전환 등을 통해 일본의 방공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동아시아에서 탈냉전현상이 유럽에 비해 현저하지 못하며 러시아의 극동해군과 공군력이 그 질적인 면에서 냉전시기와 다를 바 없다.

리 해군, 공군장비 및 30만명의 자위대와 27만톤의 함정 및 1천 여대의 비행기를 보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의 해상방위 범위는 향후 하와이 서부로부터 말라카해협에 이르는 태평양전역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의 동남아 해상진출은 중국의 해상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중국은 해·공군력 강화를 중심으로한 국방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일본의 역할 증대에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특히 일본의 핵보유 잠재능력을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는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의 核雨傘 保護政策에서 탈피하여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추구하도록 할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의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가이후 수상의 방중시(1991. 8) 핵확산금지조약에의 가입을 약속하였던 바 있다.

### 3) 일본주도의 다자간 안보구상 견제

최근까지 일본은 역내분쟁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 보다는 포괄적이고 제도적인 안보기구를 설립할 것을 주장하여왔다. 이와 관련, 1992년 7월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워싱턴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을 포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다자간 안전보장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러한 기구에 중국과 러시아가 '건설적인 동반자'로서 참여

해야 하며, 다자간 안보기구에서 미·일간의 협조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sup>47)</sup>

중국은 현단계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아·태 지역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핵무기확산 방지를 위한 한반도나 동북아시아 등 소지역 수준에서의 안보포럼 구상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대 중국은 일본의 포괄적인 안보기구 구상과는 다른 다자간 안보포럼 창설을 주장하여 일본의 정치, 군사적 역할증대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경제구상

중국의 기본적인 대일 경제구상은 일본의 대중국 무역, 투자 및 원조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경제발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동북아에서 일본의 경제주도권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

### (가) 일본의 대중 경제협력 확대 유도

2050년까지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중진국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은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

47) 미야자와 일본총리의 미국 내셔널 프레스클럽 연설(1992. 7. 2), 「東亞日報」, 1992. 7. 3.

성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세계경제 대국인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 1) 대일무역 확대

1972년 중·일관계 정상화 이후 1987년까지 중·일무역량은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중국의 대일무역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왔다. 중국의 대일수출액은 1972년 11억달러에서 1978년 58억달러로 증가한 반면, 중국의 대일무역적자폭은 1978년 10억달러, 1980년 8억달러에 달했다. 표 1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1980년대 초(1982~1983, 대일 무역흑자 2억달러) 무역흑자를 유지하였으나 중·일 무역량이 늘어남에 따라 1984년부터 다시 무역적자(약 13억달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1985년에는 적자폭이 약 60억달러까지 급증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1986년부터 안정화정책을 실시하고 수입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의 대일무역 적자는 감소하기 시작하여 1986년 42억달러에서 1987년 약 9억달러로 감소하였다.<sup>48)</sup>

중국정부는 만성적인 대일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1988년부터 소비재와 사치성 품목의 수입을 통제하고 수출을 제

48) Japan Tariff Association, *The Summary Report: Trade of Japan*, cited from Laura Newby, *Sino-Japanese Relations: China's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988), p. 10.

속적으로 확대하여 1992년까지 무역흑자를 기록하여 왔다.<sup>49)</sup> 1988년 중·일 무역액은 161억달러(3억달러 흑자)에서 1989년 164억달러(약 22억달러 흑자), 1990년에는 151억달러(약 41억달러 흑자), 1991년에는 178억달러(46억달러 흑자)로 증가하였다.<sup>50)</sup> 중국은 양국간 무역액이 1992년에는 226~3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sup>51)</sup>

중국은 일본의 적극적인 대중 투자 유치를 위해 개혁과 개방정책을 심화시키고 있으나,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일경제 의존도는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은 현재 미국과 무역분제로 인하여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으며,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중·일 양국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쌍방간 무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으로서는 대내 경제 건설에 필요한 외화를 획득하기 위해서도 일본과의 무역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49) 1991년 말 현재 중국의 외채는 약 600억달러에 달하며 중국은 세계 제10대 채무국이다. 중국의 외환보유고와 대미, 대일 무역흑자를 감안하면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재정적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경우 중국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50)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appendix 1.

51) 1991년과 1992년 통계는 강택민 중국총서기의 방일시 발언 참조. *FBIS CHI*, April 9, 1992, pp. 12~13; 鄭鴻業 중국국제무역촉진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회장은 1992년 중·일무역액은 2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The Korea Herald*, July 7, 1992, p. 9 참조.

## &lt;표 1&gt; 중국의 對日 무역

(단위: US\$ 10 million)

년 도	중국의 수출	중국의 수입	합 계	무역수지
1982	535.2	351.1	886.3	184.2
1983	508.7	491.2	999.9	17.5
1984	595.8	721.7	1,317.5	-125.9
1985	648.3	1,247.7	1,896.0	-599.4
1986	565.2	985.6	1,550.8	-420.4
1987	740.1	825.0	1,565.1	-84.9
1988	821.9	790.2	1,612.1	31.7
1989	928.3	709.7	1,638.0	218.6
1990	1,002.0	510.9	1,512.9	419.1
1991	1,119.8	659.7	1,779.5	460.1

출처: Japan Tariff Association, *The Summary Report: Trade of Japan*

## 2) 일본의 대중국 투자 확대 유도

중국은 일본의 대중국 투자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첫째, 일본기업의 대중 투자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지기 시작하여 1987년 113건에서 1988년에는 두배인 237건에 달하였으나 1989년에 발생한 천안문사태로 인해 다시 감소되었다. 중국측 통계에 의하면, 1989년까지 외국의 대중국 투자 건수는 21,777건, 투자액은 336억달러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

본의 대중투자 건수비율은 4.8%(1,060건)에 불과하였는 바, 중국은 일본의 대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중·일간 무역액이 중국 전체 무역액의 20%에 달하고 있는 반면, 외국의 대중 투자총액중 일본의 대중 투자 비율이 8.4%(28.5억 달러)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본의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일본의 대중 투자가 최근까지 호텔, 서비스산업, 부동산 등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경제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판단, 서비스부문과 자원개발 등에 대한 일본의 대중 투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sup>52)</sup>

### 3) 일본의 대중 경제원조 확대 유도

1980년대 중국은 일본의 경제원조 최대 수혜국이었으나 천안문사태로 인하여 1990년 7월까지 일본의 59억달러 규모의 대중 자금대여와 첨단 기술이전이 중단되었다. 그후 중국은 국가계획위 주임 鄒家華 부총리의 일본 방문시 일본의 대중 경제재개를 요청하였으며, 일본 중·소기업의 대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1990년 3월 중·일투자촉진기구(China-Japan Investment Promotion Organization)을 창설하였다. 일본의 대중 경제는 가이후 일본수상이 1991년 가을 중국을 방문한 이

52) *FBIS CHI*, April 9, 1992, p. 11.

후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은 서방국가들 중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중국에 사회간접자본과 자원개발에 필요한 경제지원을 개시하여 1990~94년에 걸쳐 중국에 대여하기로 한 8,100억엔 중 세번째 대여금으로 1,290억엔(9억 4천만달러)의 대외 개발원조를 제공하였다.<sup>53)</sup> 일본이 서구국가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중국 經援을 재개한 배경에는 일본과 서구국가들의 천안문사태 이후 중국 국내상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에서도 기인한다.<sup>54)</sup> 일본은 서구국가들이 요구하는 중국의 인권문제보다 역내안정을 위한 중국의 국내정치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일본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원조를 유도하기 위해 가이후 수상 방중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였던 바 있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인권문제, 무기수출문제 등이 장애가 되어 미국이나 서방국가들의 대중국 차관이나 원조가 감소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원조를 확보하기 위해 중국은

53) 「朝鮮日報」, 1991. 8. 14; *FEER*, August 22, 1991, p. 10.

54) *FEER*, May 7, 1992, p. 49. 또한 일본이 중국에 대해 인권문제를 대중 經援과 연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중국이 과거 일본의 중국인 학살과 인권유린문제를 거론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난처하기 때문이다.

적극적인 대일 경제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2년 4월 江澤民 당총서기의 방일도 중국의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이를 계기로, 일본은 중국에게 52.6억달러 상당의 제3차 에너지차관을 제공한 바 있다.<sup>55)</sup>

#### (나) 일본주도의 경제권 형성노력 견제

일본은 자국 주도하에 「환일본해경제권」을 형성하여 역내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은 중국, 러연방, 남북한, 홍콩과 대만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일본의 경제권 구상에 반대하고 있고, 이를 견제키 위하여 주변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러연방과 국경무역을 활성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력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의 대중국 투자확대를 유도하고자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고 있다.<sup>56)</sup> 또한 중국은 동북3성(吉林省, 遼寧省, 黑龍江省)과 러연

55) 일본은 179년에는 31.5억달러, 1984년에는 43.6억달러 상당의 차관을 중국에 제공한 바 있다. 중국은 일본의 대중국 에너지차관 제공은 일본이 2010년의 에너지 수요가 1988년 대비 38%로 증가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 점과 걸프전 이후 일본의 중동산 석유수입정책이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농간으로 인해 에너지 수급계획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한데 기인한다고 보았다. 陳一心, “90年代中日關係發展趨勢展望,” pp. 15~16.

56) 중국은 한국과 무역협정을 정식 발효(1992. 2. 1)시키고 1992년 5월에는 투

방의 극동지방 및 북한이 서로 인접하는 훈춘지방을 연결하는 다국간 경제협력을 자국 주도하에 추진하고 일본과 한국의 기술과 자본 유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sup>57)</sup>

또한 중국은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을 견제하기 위해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에 정식 가입하였으며,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 구상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반대하지 않는 한편, 일본의 역내 경제권 형성 구상을 보다 개방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자국 주도하의 「中華經濟圈」 또는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실현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대한 일본의 주도권 확보를 견제하려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최근 대만, 싱가포르 및 홍콩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신속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하는 등 역내

---

자보호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중 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중국이 한국상품에 대한 차별관세를 폐지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무역 적자폭이 어느 정도 감소될 전망이며, 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됨으로써 한국기업의 대중국 진출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2년 8월 한·중수교도 이러한 양국간 교역확대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임은 물론이다.

- 57) 중국이 일본의 「환일본해경제권」구상을 반대하는 이유는 일본의 과거 대중국 식민지착취의 역사가 재현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과거 일본은 중국의 동북부지역에 만주국을 건설하는 등 「대동아공영권」을 건설하여 중국을 착취하였다는 기억때문에 중국은 일본 주도하의 경제권 형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민족통일연구원, 연구보고서 91-12, pp. 278~79 참조.

국가들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러한 제반 조치들도 역내에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중국의 정책 대응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된다.

## 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입장

### (1) 역할증대 容認요인

#### (가) 일본과의 경제협력 필요성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역할증대를 용인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다음 두가지 문제를 고려하여 대일경협을 중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중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아울러 1990년대 미국경제는 쇠퇴 기미를 보이는 반면 일본의 경제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미관계가 완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역점을 두고 있는 에너지, 기간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입장이다.

둘째, 일·러간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이 1990년대에 가시화 될 경우 일본의 대러시아 경제원조가 급증하고 대중국 경제원조는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일본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정치적 역할을 증대시키는 데에 대해 선택적으로 용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나) 중·일 협력을 통한 미「패권주의」 견제

냉전이후시대 중국은 미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일본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바, 이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일본의 역할증대를 용인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 동북아안보체제는 미국 주도하에 구축될 것이며 미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에 영향력과 압력을 계속적으로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국은 예상되는 미국의 대중압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간의 잠재적인 갈등이나 의견차이를 이용하고 나아가 국제정치에서 일본의 정치적 역할을 어느 정도 용인함으로써 미국을 견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전략이 실효성이 있을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의문시 된다. 첫째, 1990년대 미·일관계는 무역 마찰 등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지역차원을 넘은 전세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할 전망으로 있는 바, 일본이 중국의 전략에 쉽게 호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경제 건설의 성공적 추진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견제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를 묵인하거나 지지하게 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2) 역할증대 牽制요인

### (가) 중·일간 역사적 경쟁관계와 반일 국민감정 잔존

중국은 역사적으로 동북아에서 일본과 세력권확보를 둘러싸고 경쟁하여 왔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것도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가 작용하였다는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1990년대 초 구소연방의 붕괴로 역내에서 초래될 세력공백을 메우려는 중국은 미군사력 감축에 따른 일본의 지역방위 부담노력을 미세력 약화에 따른 공백을 일본이 차지하려는 시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간의 전통적인 경쟁관계는 더욱 첨예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중국인들은 과거 일본의 대중 침략으로 인하여 심각한 반일감정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서 대국으로 군림하다 18세기말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정복으로 국가의 존엄성이 유린당하는 굴욕의 역사를 중국인들은 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은 중국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하는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기도를 적극 견제하고자 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중국의 역내 「반패권주의」 기조 견지

중국은 1990년대 들어 미·러간의 균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sup>58)</sup> 「반패권주의」를 주창함으로써 역내질서 안정유지에 기여하는 국가가 될 것임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다. 이는 중국이 대외적으로 「평화공존」을 추구하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심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관련된 정책입장 표명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의 역할, 특히 군사적인 영향력 증대를 인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반패권주의」는 과거 중국이 취하였던 군사적 행동으로 인해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견제하는데 큰 호소력을 발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은 사실상 베트남침공 및 중·인도 국경충돌 등을 통해 역내에서 패권을 추구하여 왔다. 중국은 20세기 초 미국,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확대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따라 중국은 역내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국의 위상으로 인해 사실상 중국이 표방하고 있는 「반패권」원칙 견지만으로는 일본의 역할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일

58) 대표적인 예는 부시·엘친 워싱턴 정상회담(1992. 6. 16~17)으로, 동회담에서 미·러 양국은 「신군축협정」에 서명하여 2003년까지 현재 양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60%를 감축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본의 패권추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은 주로 지역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이라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3. 중국의 대응방안과 중·일관계 전망

#### 가. 중국의 대응방안

##### (1) 안보분야

##### (가) 대미·러 선린관계 유지

1990년대 일본이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강력히 추진할 경우 중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러 등 강대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이 미·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형성하여 일본의 역할증대를 견제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러시아가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 우호적인 정책을 전개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중·미관계를 경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무역마찰의 심화, 중국의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수출,<sup>59)</sup> 중국내

59) 중국은 1991년에 프랑스를 제치고 미국, 구소련에 이어 제3위의 무기수출국이 되었다. 중국은 캄보디아 크메르루즈군의 최대 군사무기 공급국이며 이란·이라크전쟁 당시 이란에 실크웜(Silkworm) 미사일을 포함 300억달러 상당의 무기를 수출한 적이 있다.

인권문제 등이 해소될 전망이 크지 않고, 미국에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중·미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나) 국방현대화 추진

중국은 예상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해·공력을 중심으로한 군사력 현대화작업을 적극화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구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약화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는 육군의 중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육군을 위주한 병력감축을 단행할 방침으로 있다. 따라서 중국의 국방정책은 앞으로 병력 감축과 군사력 현대화의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의 해·공군력 증강에 대비하여 2000년까지 전략 핵잠수함(SSBN) 12척 건조목표를 계획하고 있으며,<sup>60)</sup> 러시아의 항공모함인 67,000톤급 바야그의 구입과 항모에 필요한 부품과 최신예 러시아제 해군전투기구입을 타진하고 있다.<sup>61)</sup> 또한 중국은 F-7 전투기를 개량하고 24대의 M-17 육군수송용 헬리콥터를 러연방으로부터 구입하려 하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지대공 미사일 및 전투기 등과 관련

60) 중국은 Xia급 SSBN 추가 건조 계획을 중단하고 현대식 대형 미사일장착용 잠수함 건조를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p. 149.

61) *Jane's Defense Weekly*, February 8, 1992.

된 첨단 기술과 무기를 계속적으로 수입하고 있다.<sup>62)</sup> 중국은 공식적으로 자국의 군사비는 1992년의 경우 70억달러라고 발표하고 있으나 사실상 15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더욱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다)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적극 참여

중국은 지역분쟁 해결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일본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 캄보디아분쟁이나 한반도 핵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다.

중국은 특히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위해 미·북한 수교를 지지하고 한·중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억제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가 중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변화되어 자국의 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것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어느 역내 국가의 세력이 한반도를 독점 지배할 수 없도록 하는 전략적인 대응정책으로 일관할 것이다. 중국이 냉전기의 중·북한 동맹위주 일원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중·북한, 중·한국 양국관계가 동시에 존재하

62) Shambaugh,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pp. 103~104.

는 이원화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를 견제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군비감축과 군비통제를 요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구축을 적극 모색할 것이다.

#### (라)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체 모색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이 증대되어 역내안정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중국은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통한 일본 견제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 및 주변국의 우려를 고려,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다자간 안보기구의 창설보다는 동북아 등 소지역에 한정된 다자간 협의를 통해 일본의 역할 증대노력을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소련과 미국이 제안한 바 있는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에 대해 중국은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으나, 탈냉전에 따른 역내 양자관계 개선 및 일본의 역할 증대기도 심화에 따라 중국은 최근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8월 上海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시 錢其琛 중국외교부장에 의해서도 천명된 바 있다.<sup>63)</sup> 이를 통해서 볼 때, 중국은 질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는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63) Qian Qichen, "On Regional Disarmament and Security," *Beijing Review*, Aug 31~Sep. 6, 1992, pp. 9~12.

위하여 역내 국가들이 축적된 양자관계를 바탕으로 다자적 안보협력체 창설을 모색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2) 경제분야

### (가) 대외 경제협력의 다변화 모색

중국의 수출의존도(1991년 말 현재 16.9%)가 높아지면서 수출수요의 창출이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과거와는 달리 대외무역정책의 운용이 용이해지고 있다.<sup>64)</sup> 그러나 중국경제의 대외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대일본 경제의존도는 더욱 심하다. 이에 따라, 중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상호보완성 극대화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력과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일본과 한국의 선진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고 러시아연방과는 중국의 노동력과 소비재상품을 수출하고 러시아연방의 중간기술을 수입하려 하고 있다. 러연방의 경제개혁이 가속화됨에 따라 중국은 러시아의 시베리아, 극동지방과 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64) 安鐘石, 楊平燮,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1991~199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설 북방지역센터, 조사보고 92-01, 1992. 5, p. 59.

중국은 또한 미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미 무역수지 불균형문제를 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 선진기술의 대중국 수출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2월 한국과 무역협정을 발효하고, 5월 투자보호협정을 체결하는 한편, 8월에는 한국과 국교를 정상화 하였다. 이에 따라 한·중간 경제협력관계는 급속히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은 또한 경제협력의 다변화를 위해 국제경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국은 1986년부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가입을 신청하고 있으며, 1991년 부터는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정도로 중국元貨 평가절하, 수입상품가격에 대한 정부의 간섭완화 등 대외무역체제를 개혁함으로써 가트 가입을 서두르고 있다.<sup>65)</sup>

#### (나) 중국 주도의 경제협의체 적극 모색

중국은 역내 국가간 상이한 경제체제, 경제발전단계의 격차 및 분쟁요인 잠재 등으로 인한 정치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역내에서 당분간 긴밀한 경제통합의 형성이 어려울 것으

65)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p. 29; 중국의 가트가입에 대한 역사적 배경 설명은 Harold K. Jacobson and Michael Oksenberg,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GATT: Toward a Global Economic Order* (Ann Arbor, MI: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참조.

로 판단하고 있다.<sup>66)</sup> 이같은 맥락에서, 중국은 경제협의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ESCAP, ADB, PECC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등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에 정식 가입(1991. 11)하는 등 아·태 지역에서 다자간경제기구 창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조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아·태지역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유지·강화 노력에 대해서는 중국지방의 일부와 지역경제권을 묶는 구상을 통해 견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본이 창설하고자 시도하고 있는 지역경제권 구상은 근본적으로 유럽공동체와 같은 폐쇄적인 블록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적 지역주의(open regionalism)를 지향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일본이 제기하고 있는 「환일본해경제권」 구상에 대해 중국은 「동북아경제권」, 「화남경제권」, 「중화경제권」 구상 등을 제시함으로써 일본 주도의 지역경제협력체가 형성될 가능성을 저지하고자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화남경제권」은 중국의 자원과 노동력, 대만의 자본과 선진공업기술, 홍콩의 금융정보를 서로 연결하는 중국 주도의 경제권 형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66) 申泰容 외, 「동아시아 경제협력 가능성과 한국의 위상」 (서울: 산업연구원, 1989. 12), pp. 14~15.

## 나. 중·일관계 전망

1990년대 중·일 관계는 경제 및 안보전략적 요인으로 인하여 「일면 협력, 일면 경쟁」의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경제발전을 핵심 국가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간 경제적 협력관계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과 일본이 역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중·일관계는 경쟁적인 관계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1) 안보분야

1970~80년대 존속되어 왔던 미·중·일 안보협력관계는 1990년대 초 구소련의 붕괴 및 미·러연방의 데탕트, 러연방의 대일위협 감소 등으로 인해 변화되고 있다. 역내질서 변화 추세에 따라 중·일관계는 점차 경쟁관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시아지역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은 구소련의 붕괴와 미국의 전략 재조정에 따른 역내 세력공백을 차지하려는 노력을 전개할 것으로 보이는 바, 양국간 세력 각축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역할증대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

나 경제협력 필요성으로 인해 역내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어느 정도 용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 군사력을 증강시켜 역내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을 감안, 해·공군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 확대 기도를 저지하기 위해 미군이 역내에 계속 남아 있는 것을 목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북한과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중·북한 동맹관계 강화는 한·미·일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시켜 중국의 안보에 불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 (2) 경제분야

1990년대 중·일간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협력과 갈등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일본의 대중 투자 및 원조 확대를 통해 경제발전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일본 또한 지역 강대국인 중국이 경제건설을 통해 대내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따라서 1990년대 중·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범위가 더욱 확대될 가능

성이 높다.

그러나 중국은 대일 경제의존도 심화 가능성을 우려하여 대외 경제협력을 다변화할 것이며, 일본이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 주도하의 지역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일본은 역내에서 중국과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바, 중국이 요구하는 정도의 대폭적인 기술이전과 경제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따라서 1990년대 중·일간 경제관계가 경쟁적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다.

## V. 러시아연방의 대응

### 1. 러시아연방의 동북아정책

러시아연방은 1991년 12월 21일 독립국가연합의 성립과 더불어 구소련을 법적으로 계승하게 되었다. 소연방이 붕괴되기 이전에 이미 공산당 일당독재의 정치체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를 청산한 러시아연방은 현재 대내적으로는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시장경제체제 확립, 대외적으로는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대내외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창출하여 안보를 공고히 하는 한편, 서방과의 경제협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노력은 동북아지역에서는 이 지역의 안정화와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및 장기적으로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확립이라는 정책기조를 바탕으로 하여 개진되고 있다. 이와같은 러시아연방의 동북아 정책기조는 고르바초프 시대의 동북아 정책기조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은 구소련의 정책들과 구별된다. 이는 소연방의 붕괴와 러시아연방의 급진개혁정책이 대내적 정책결정요인으로, 또한 소연방의 붕괴로 인한 동북아지역 세력균형의 변화가 대외적 정책결정요인으로 각각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연방은 급진적인 개혁정책

을 추진해야 한다는 대내적 요구와 지역세력균형이 변화되었다는 대외적 환경에 직면하여 현재 이념보다는 地政學을 중시하고 ‘戰術的 柔軟性’(tactical flexibility)과 ‘실용주의’(pragmatism)에 기초한 동북아정책을 수행하고 있다.<sup>1)</sup> 곧 러시아 연방의 동북아정책은 군사·안보분야에서는 역내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 확대 및 지역군사데탕트 모색, 경제분야에서는 역내국가들의 경협유도와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로의 편입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 가. 정책 基調

### (1) 지역안정화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정치·경제·군사면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가 교차되고 있는 정치·군사상황이 불안정한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지역을 자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곳으로 간주하고 국내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안정화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동북아지역에는 국제적 안보체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연방은 이 지역에서 군사경쟁의 속도와 규모를 억제시키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군사적 우려는 다음의 세가지 점에 기인한

1)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의 1992년 1월 21일 ROSSIYSKAYA GAZETA (러시아 신문)과의 회견내용 참조.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January 22, 1992, pp. 28~30.

다. 첫째, 여건의 미성숙으로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이 완전히 통제되기는 어렵다는 점, 둘째, 이 지역의 특성이 해군력에 역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해군비는 비용면에서 엄청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 고려에 의한 독자성 때문에 충돌의 위험이 높다는 점, 셋째, 이 지역의 정치·사회적인 이질성이 군사 전략적인 대립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심각한 局地的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sup>2)</sup>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현재 대미·대일관계의 개선에 따라 미국과 일본을 태평양의 주요 적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나 동북아지역에서 군사대치는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군사문제에 대한 관련국간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으며 국경지대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황이 국내경제발전, 접경국가와의 무역,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전제조건이라고 보고 있다.<sup>3)</sup>

## (2)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

러시아연방은 아·태지역에 대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동북아지역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구소련의 연평균 국민총생산 (GNP) 증가율은 1961~

2)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上),” 「國際問題」, 23권 2호(1992년 2월), p. 102 참조.

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February 13, 1992, p. 37.

1975년 기간동안에는 4.2%에 달했으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체제의 한계와 연 550~600억불에 달하는 군사비 지출로 1976~1985년 기간에는 1.8%로 하락되었다.<sup>4)</sup> 1985년 3월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소련경제의 침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1986년 7월 블라디보스톡과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의 연설을 통해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위해 경제, 과학, 기술, 문화,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아·태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sup>5)</sup> 구소련 정부는 국가기업의 임대, 자금경영과 자금재정, 외국의 합자투자 유치 등 새로운 형태의 소유와 경영원칙을 도입하여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개발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냉혹한 자연환경, 지역자체의 재정부족, 철도·도로·항만·주택 등 생산하부구조의 미비, 국내정세 불안으로 인한 외국의 자본과 기술투자 부족 등으로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없었다. 또한 구소련의 아·태지역에 대한 무역중에서 사회주의권에 대한 비중은 1983년 47.3%에서 1989년 60.2%로 증가

4) John S. Pitzer and Andrew P. Baukol, "Recent GNP and Productivity," *Soviet Economy*, vol. 7, no. 1 (January/March 1991), p. 57.; Richard F. Staar, *Foreign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1), pp. 156 & 201.

5)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Verlag der Presseagentur Nowosti, 1986), pp. 10~21; "Dokumente. Au enpolitische Ausf hrungen Michail Gorbatschows in Krasnojarsk," *Sowjetunion Heute*, nr. 10, Oktober 1988, p. V.

된 반면, 자본주의권에 대한 비중은 1983년 45.9%에서 1989년 34.2%로 오히려 감소되었다.<sup>6)</sup>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연방은 아·태지역,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은 현재 「극동지역 사회·경제발전 3단계 계획」을 마련해 놓고 있다. 1990년부터 1995년까지 과도기인 제1단계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소유 및 경영제 도입, 규제된 시장관계, 기업의 특화·재건·현대화, 경제잠재력 개발, 군수산업의 民需轉換 가속화, 사회분야 발전에 우선순위 부여, 자유경제지대 설치와 합작증진 등이 목표로 설정되어 있다. 제2단계인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중에는 수송·통신·동력시설·주택·연구시설 등 지역의 하부구조 발전에 자원과 노력이 집중되고 기업현대화가 완료될 계획이다.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제3단계에서는 다양한 해양자원 이용, 해양기술개발, 해양동력산업개발, 북극지대를 포함한 북방지역의 효과적인 경제개발 등이 계획되고 있다.<sup>7)</sup>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 침체를 회복하고 위와 같은 계획을 달성하며 지역 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위하여 “아·태지역의

6) 1983~89년 기간중 구소련의 대 아·태지역 교역량 및 비율에 대해서는 정한구, “한·소 정상회담과 한·소관계 발전전망,” 『東西研究』, 제4권 (1991년), pp. 139~40.

7) Pyotr Baklanov, “A Concept of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4, 1991, pp. 7~8.

국가들과 정치, 경제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자국에) 이익이 된다”<sup>8)</sup>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특히 자본, 기술, 노동력, 경제원조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미, 일, 중, 남북한, 대만과의 경제관계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

### (3)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확립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는 상이한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태평양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 하고 있다. 구소련은 막강한 군사력을 기초로 동북아를 비롯한 태평양지역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현재 구소련과 서방의 지속적인 대립결과로 인한 경제력 약화와 국가분열 및 지위하락으로 자국이 세계중심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9)</sup> 특히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지리적 소속감과 정치·경제의 유럽중심주의 사이에서의 갈등,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견지 등으로 미국에 비해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과거 군사력 중심의 정책에서 경제와 共存外交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하여 태평양국가로서 앞으로 이 지역에서

8) Boris Jelzin, *Die Alternative: Demokratie statt Diktatur* (Frankfurt, M.: Goldmann Verlag, 1991), pp. 174~75.

9) Andrei Zagorsky, “New Russia in a New World,” *Moscow News Weekly*, no. 9, 1992, p. 12.

일어나는 정치, 경제의 제반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위확립을 동북아외교의 또 다른 기조로 삼고 있다.<sup>10)</sup> 고르바초프도 블라디보스톡을 소련 동방의窓으로 간주하고 태평양지역의 상황개선을 통해 국제무역, 문화, 학술, 스포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 시도한 바가 있다.<sup>11)</sup>

#### 나. 정책결정요인의 변화

##### (1) 대내적 요인: 소연방의 붕괴와 러연방의 급진개혁 정책

구소련체제에 대한 고르바초프의 개혁안은 경제를 비롯한 전사회의 개혁 (페레스트로이카), 사회의 민주화, 정치·경제·사회적 결정과정의 공개 (글라스노스트), 국제긴장의 완화와 국제협력의 확대라는 4가지 분야에 관련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혁안을 갖고 있던 고르바초프는 집권 이후 대외정책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으나 대내정책에서는 경직된 관료제, 공산당과 군부의 권력고수, 보수파와 급진개혁파 사이에서 자신의 미온적 태도, 발트 3국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 등으로 정치 불안정과 경제침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10)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상),” pp. 101~02.

11)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Juli 28, 1986*, p. 44.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공산당의 권력쇠퇴와 지속적인 경제 침체를 야기시키고 있는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 대한 보수 권력엘리트들의 비판과 저항이 1990년 이래로 증가되었다. 또한 옐친을 중심으로 한 급진개혁파들은 민주개혁, 시장경제 도입, 세계시장으로 소련의 편입 등을 주장하였다. 특히 1991년 8월 20일 9개 공화국간에 체결하기로 되어있던 신연방조약은 연방의 권력분산을 규정하고 있어 보수 엘리트들의 권력상실이 예견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야나예프 부통령, 야조프 국방장관, 크루치코프 국가보안위원회 (KGB) 의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보수공산주의자들이 고르바초프가 크림반도에 휴양하고 있던 1991년 8월 19일 소련의 세계적 지위상실과 민족분쟁을 문제삼고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러나 이 쿠데타는 옐친 러시아공화국 대통령과 수만 모스크바 시민들의 반대, 군부의 옐친 지지, 각 공화국 대통령들의 고르바초프 복귀 요구로 3일만에 실패로 끝났다.<sup>12)</sup> 보수파에 의한 쿠데타 실패 이후 옐친 등장과 급진개혁으로의 전환 등으로 발트 3국을 비롯한 구소련의 각 공화국들은 연방으로부터 분리독립하여 독자적인 노선을 취하게 되었다. 또한 소연방과 공산당 존속하에 레닌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고르바초프와 러시아공화국의 정치·경제체제를 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

12) Ulrich Druwe, *Das Ende der Sowjetunion: Krise und Auflösung einer Weltmacht* (Weinheim: Beltz, 1991), pp. 136~41.

로 전환시키고 각 공화국들의 독립을 인정하여 이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려는 엘친 사이에 권력투쟁이 전개되었다. 권력을 장악하게 된 엘친 대통령은 1991년 12월 8일 우크라이나 및 백러시아 대통령과 민스크에서 회합을 갖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인 독립국가연합의 창설을 선언하였다. 구소련의 11개 공화국이 12월 21일 카자흐공화국 수도 알마아타에서 「독립국가연합」 창설협정에 서명함으로써 1922년에 창설된 소연방은 마침내 붕괴되었다.

엘친 대통령은 독립국가연합이 창설되기 이전에 고르바초프의 개혁노선과 점진적인 개혁속도에 반대하고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1년 11월 1일 포고령 선포권, 지방정부 인사권 등 비상대권을 러시아공화국 인민대표대회로부터 인정받았다. 그는 이와 같은 개발독재형 권력을 기초로 11월 6일 러시아공산당 완전해체령을 내리고 러시아공화국의 정부기구를 개편하기 위한 「大統領令」을 공포하고 1년간의 비상친정체제를 구축하였다. 엘친 러시아연방 대통령은 소련의 붕괴 이후에도 개발독재형 권력을 바탕으로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국내 상황은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권력투쟁, 「독립국가연합」의 균열, 가격자유화정책의 부작용, 민영화정책 수행상의 난점, 서방지원의 부족 등으로 정치불안정과 경제혼란의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엘친 대통령은 국내정국 혼란의 원인이 경

제난에 있다고 보고 이를 극복하는데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 (2) 대외적 요인: 지역세력균형의 변화

동서진영간의 냉전체제가 지속되는 동안 1980년대 중반까지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은 미, 일, 한국의 남방 3각체제와 중, 소, 북한의 북방 3각체제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세력균형은 고르바초프의 「신사고」의 교에 의한 국제질서 변화로부터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소연방의 붕괴와 함께 변화되었다. 구소련의 소멸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국으로 남게 되었으며, 역내국가들은 기존의 이념적 결합에 더 이상 이해를 갖지 않고 현재 국제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주의 추세속에서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구소련과 이를 계승한 러시아연방이 국내경제 악화로 안보 부담을 축소하기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 군사적 패권정책을 포기하고 긴장완화를 모색함에 따라, 역내 유일한 초강국으로 남게 된 미국은 기존의 대소 견제정책을 수행하기 보다는 지역세력들간의 균형자로 역할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에게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역할증대를 유도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핵사찰수용 및 핵재처리시설 제거 등을 조건으로 북한과

의 관계개선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아·태지역에서 우월한 경제적 지위를 확보하자 경제면에서도 점차 이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

경제면에서 초강국인 일본은 소련의 붕괴로 인한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경제력에 부합되는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동북아지역의 가장 강력한 권력중심이 일본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일본은 역내 강국의 하나인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여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한·소수교에 따라 북한과 수교교섭을 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동북아지역의 또 다른 강국인 중국은 소련방의 붕괴로 자국에 유리한 안보환경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천안문 사태 이후 국내정치 불안과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과 선린관계를 확대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룩하였다. 동시에 중국은 역내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는 1991년 12월 남북한간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와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어 기존의 적대관계가 평화공존관계로 전환되었다. 남북한간에 잔존하고 있는 불신이 대화진전을 어렵게 하

고 있으나, 주한 미군의 핵철폐와 1992년 1월 북한의 핵안전 협정 서명 및 핵사찰 수용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을 촉진시키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위와 같이 대내적으로는 급진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대외적으로는 변화된 지역세력균형에 적응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역내국가들에 대하여 이념을 초월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 다. 동북아정책

##### (1) 군사·안보분야

##### (가) 역내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 확대

러시아연방은 미, 일, 중 등 강대국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상호 교차되고 있는 동북아 상황이 자국의 국익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나 신국제질서에서 미국과의 냉랭한 정치관계, 일본과의 북방영토문제, 중국과의 국경문제 등 미 해결된 문제들을 舊소련으로부터 이어받게 되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러시아 주변에 善隣地帶를 설치한다는 전략의 틀”<sup>13)</sup>과 동북아지역의 안정화를 위하여 기존 우방국들과는 정상관계를 유지하여 안보를 확고히 하는 한편, 기타 역내국

1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March 20, 1992, p. 30.

가들과는 발전적 협조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엘친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1992년 2월 2일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통해 미·러 양국은 상호 잠재적 적국이 아닌 동반자관계임을 밝힌 이후 러시아연방의 대미 정치관계는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현재 러시아연방은 미국도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판단은, 첫째, 미국은 독립국가연합 중 구소련핵의 최대보유국이며 최대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의 힘을 중립화시키거나 자국측으로 편입시켜야 하며, 둘째, 러시아연방이 지리적으로 중국의 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유라시아 대륙국이라는 점에 기인하고 있다.<sup>14)</sup> 아·태지역문제와 관련하여 미·러 양국정부는 1992년 4월 워싱턴에서 이 지역의 정치, 경제, 안보문제 논의를 위한 첫 회합을 갖고, 상호 정보교환을 확대하고 외무차관과 대사급 정례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연방은 소련이 붕괴된 직후 한, 중, 일에 선린우호관계를 희망하는 엘친 친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1992년 1월 러·중, 러·일간 뉴욕 정상회담에서는 상호 우호관계가 확약되었다. 특히 1992년 3월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의 한·중·일 방문과 9월 엘친 대통령의 아시아국가 방문 계획 등은

14) Alexei Pushkov, "Who wants to ally with the ex-USSR?" *Moscow News Weekly*, no. 8, 1992, p. 12.

러시아연방이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제분야에서 동북아 역내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진지한 의도를 갖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91년 5월 코지레프 외무장관의 방중시 구소련과 중국간에 체결된 동부국경협정에 관한 비준문서가 교환되어 중·소간의 긴장 원인이었던 국경분쟁이 기본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러시아연방이 중국에 1992~93년에 SU-27 전투기 24대를 중국에 판매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군사분야에서도 양국간 협력이 시작되었다. 러·중간 군사협력은 러시아연방의 경제침체 극복과 중국의 군사현대화정책,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일방적 주도권과 대일 견제 등 양국의 안보전략과 경제적 측면에서 이해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오랫동안 구소련의 영향권하에 있다가 사회주의 노선을 포기한 몽골과도 「선린우호협력에 관한 선언」을 하였다. 그러나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만과는 공식적인 정치관계를 수립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sup>15)</sup>

고르바초프는 유럽중심주의 외교와 국내상황 악화로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체현상을 극복하지 못했다. 그러나 엘

15) Vasilij Zakharko, Vladimir Mikheev, "i v rossii vozmozhno ekonomicheskoe chudo," *IZVESTIYA*, Aprelya 15, 1992, p. 7;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January 28, 1992, p. 28.

친 대통령은 동북아정세 안정화와 경협유도를 위하여 일본과 우호관계를 구축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장차 일본을 “동맹 가 능국으로 취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서한을 1992년 2월에 미야자와 일본 수상에게 보낸 바 있다.<sup>16)</sup> 일본도 러시아연방 이 현재는 국내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장차 세계무대 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對러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이 1991년 12월 말에 평화조약 체결시 북방 영토 2개섬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 의 합법성을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양국관계는 개선되기 시작하였다. 러·일 양국은 현재 평화조약을 상정한 동반자관계 수립을 위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나, 양 국간 북방영토문제가 평화조약 체결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남 아 있다.

러시아공화국은 이미 1991년 12월 17일에 북한과 우호관계 및 상호 문화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협력협정을 체결 하였으며, 옐친 대통령의 특사 로가초프가 1992년 1월 북한 을 방문하여 양국관계 발전 및 한반도 상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러시아연방의 북한에 대한 군사원조는 1991년 이래 중단되었으나 군사대표단 교환, 전함대와 전투비행단의 상호방문 등은 지속되고 있다. 1992년 3월에는 독립국가연합

16) Ibid, March 2, 1992, p. 16.

통합군과 북한군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긴급조치 계획문서가 조인되었는 바, 주요내용은 1992~93년에 양국간 군사협력과 무기거래에 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7)</sup> 반면 러시아연방은 1992년 11월 엘친 대통령의 방한시 한국과 과거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선린우호를 다짐하는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다. 러시아연방은 1992년 초 1961년에 체결된 「조·소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을 재검토하고 러시아연방이 한반도 군사분쟁에 항시 휘말려들 소지가 있는 제1조 규정의<sup>18)</sup> 수정이나 폐기를 고려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최근 상기조약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준수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하였다.<sup>19)</sup>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대한반도 정책은 냉전체제의 산물로 성립된 남북한이 과거 40년 동안 각각 독립적으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對남북한관계를 국익에 부합되도록 현실에 맞추어 조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나) 지역군사데탕트 모색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의 안정화를 위하여 역내국가들과 선린우호관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군사데탕트를 모색하고

17) Ibid., March 4, 1992, p. 18.

18) 소·북간 우호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는 소련이나 북한이 제3국과 전쟁시 일방이 타방을 자동적으로 군사원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朝鮮日報」, 1992. 7. 29.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지역군사데탕트를 위하여 역내 군축 및 군비통제를 촉진시키고 다자간 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 1) 역내국가들과의 군축 및 군비통제 노력

미·소 양국은 1990년 8월 이르쿠츠크 외상회담을 통해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더 이상 서로를 군사적국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러시아연방도 서방, 특히 미국과의 군사협력 및 뱅쿠버로부터 블라디보스톡에 이르는 單一 安保體制 구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1992년 1월 25일 러시아 장거리미사일이 더 이상 미국 도시들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는 러시아 군사전략의 대전환을 표명하는 선언을 하였다.<sup>20)</sup> 또한 고르바초프는 구소련의 핵강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고 대미 전략적 균형을 고수하였으나, 러시아연방은 신국방정책 기본지침에 대미 군사균형 유지원칙의 포기 필요성을 명시하였다. 러시아연방은 유럽 및 전세계 규모에서 미국과 군사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군축합의를 이끌어 냈으나 아·태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군축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미국과 평화협의를 촉진시키려 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한국으

20) Sergei Blagovolin, "Russia changes its military Doctrine," *Moscow News Weekly*, no. 5, 1992, p. 2.

로부터 전술핵무기 철수를 단행하였으며, 필리핀 기지폐쇄, 1992년 아시아 주둔미군 13% 감축 예정 등 동북아 및 아·태 지역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쿠나제 러시아연방 외무차관과 솔로몬 미국무부 아·태지역담당 차관보는 1992년 4월 13~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아·태지역 문제에 관한 양국간 첫 협의에서 핵무기기술 비확산문제와 군사데탕트 문제 등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극동 러시아 군 핵체제의 해체를 위한 미·러 양국간 협력이 논의되었다. 러시아연방은 극동에서의 군비경쟁 비용, 군축을 촉구하는 예산상의 고려, 지역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 극동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고조를 피하려는 노력, 일본의 경제적 잠재력과 군사적 잠재력 사이의 간격유지에 대한 관심 등의 면에서 미국과 이해가 일치되고 있어, 미국도 장차 동북아지역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 및 지역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증대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89년 중·소관계 정상화시 국경지대 군병력과 군비감축에 관한 합의에 따라 국경주둔 소련군 20만명과 상당수의 중국군이 감축되었다. 1992년 2월 러·중간 국경지대 군병력 감축과 신뢰구축 회담에서 양국은 장차 전략로켓군과 방공부대 및 해군도 감축키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연방은 대중관계에서 불가침조약과 무력불사용조약의 체결, 적정 수준까지의 군사력 감축, 재래식무기 감축협정 체결, 국경 부근에 비무장지대

설치, 군사활동 계획의 협의와 정보교환에 관한 양측간의 위원회 설치, 양측이 선언한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에 대한 국제법규의 제정 등을 양국간 군비통제를 위한 현실적 방안들로 간주하고 있다.<sup>21)</sup> 또한 러시아연방은 현재 몽고 주둔 6만 병력과 수천대의 탱크, 야포, 350대의 전투기, 헬기 등의 철수를 거의 완료하였다.

러시아연방은 구소련과 마찬가지로 접경지역에서의 핵부재를 국익과 연결시키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남북한간 군사대치의 해소와 무기감축 및 한반도 신뢰구축 문제에 유럽내 핵 및 재래식무기 감축협상 경험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sup>22)</sup> 러시아연방은 1991년 12월 31일 남북한간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 채택, 1992년 1월 31일 북한의 핵안전협정 서명, 북한의 핵사찰 수용으로 한반도 비핵화 계획에 대한 중대한 장애물이 제거되었다고 보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변화가 한국의 군사정치 상황, 즉 미국의 핵무기 철수, 팀스피리트 훈련연기, 미군감축 준비 등으로부터 발생되었다고 보고 있다.<sup>23)</sup> 또한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1992년 3월

21)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 113.

22)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 (CIS군총사령부 제1참모차장),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북한연구소와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공동 주최 한반도 군축 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2. 6. 1), p. 6.

2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February 5, 1992, p. 38.

방한시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의 핵프로그램에 협력하지 않을 것과, 북한의 핵문제를 타국과 함께 계속 제기하고, 필요하다면 유엔안보리를 포함한 국제기구를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정부로부터 핵부재를 확인받고 만족을 표명한 러시아연방은 핵개발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국제기구와 함께 확인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1992년 5월 29일 방한한 「독립국가연합」 오멜리체프 참모차장에 의하면 한·소간 관계정상화 이후 구소련의 대북한 군사기술 제공은 현저히 감소되어 현재는 거의 중단된 상태에 있다.

## 2)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노력

러시아연방은 현재 지역안정화를 위하여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구소련은 이미 제2차세계대전 이전부터 아시아지역의 안보확보를 위하여 集團安全保障體制의 수립을 구상하고 있었다. 아시아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구상은 1960년대 말 브레즈네프의 「아시아 집단안보구상」과 1985년 고르바초프의 「전아시아회의」 제창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난 바 있다.<sup>24)</sup> 러시아연방은 한반도 군비통제

24) 스탈린부터 고르바초프까지 아시아 안보구상에 대해서는 키무라 아키오, 「아시아 안보구상: 스탈린부터 고르바초프까지」, 김달중 편, 「소련의 아세아 정책과 한반도」, 한국공산권연구협의회 연구논총 제6집 (서울: 법문사, 1987), pp. 113~58 참조.

에 관한 다자간 및 양자간 협의들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 러·미·일·중 남북한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안보체제가 생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지역안보체제가 동북아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완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한 전제조건들을 창출해 주고,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한층 엄격한 제한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다자간 안보체제를 통해 동북아 및 아·태지역 안보문제에서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의 안보체제 구축에 있어서 러시아연방이 이 지역으로부터 미국을 축출하려 한다든가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미국을 이간시키려 한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한국과 일본으로부터의 미군 완전철수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sup>25)</sup>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체제 구축이 미국의 이해관계로 단기적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양자간 선린우호관계 구축을 통하여, 또한 경제·문화·학술면에서의 양자간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다자간 안보체제를 형성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과학원 연구위원 M. 노소브 외 3인은 자신들의 논문에서 동북아지역

25)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p. 113~14.

안보체제를 추진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미·러간, 한·러간 등 쌍무적 또는 다자간의 학술교류를 통해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sup>26)</sup> 또한 오멜리체프 독립국가연합 참모차장도 1992년 6월 1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반도 군축4개국 학술회의」 발표논문에서 아·태지역의 안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검토·연구할 수 있는 교섭단체의 설립을 주장하였다.<sup>27)</sup> 러시아연방은 유럽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아시아에서 전반적인 군축이 실현되고 집단안보체제가 형성되면 이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하는 주권국가들의 多角協商體制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이해된다.

## (2) 경제분야

### (가) 역내국가들의 경제협유도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 회복 및 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을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미국, 일본, 한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합작투자, 자유경제지역

26) Ibid., p. 114.

27)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 “군축협상의 경험과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 p. 6.

설치, 보상거래 (compensation deals), 바터무역 (barter trade), 생산제품 배분, 특허, 토지임대와 공탁금제, 수출산업 개발, 연안 및 국경무역, 기계생산제품에서의 협력, 완제품과의 교환조건으로 고객물자의 이용, 외국노동력의 이용 등을 동북아지역에서 가능한 경제협력의 형태로 간주하고 있다.<sup>28)</sup>

구소련의 대미무역은 곡물거래가 중심이었으며 경제협력은 에너지분야와 어업관련 가공·선박수리·모피가공 등 합작투자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현재 미국은 러시아연방의 정치·경제개혁이 실패할 경우 전체주의로의 복귀 위험성 뿐만 아니라, 군사무기와 핵기술의 제3세계 유출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은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기업인들의 투자를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구소련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관료주의, 불안정한 법체계, 외국기업에 대한 세율인상, 러시아연방 천연자원에 대한 소유주와 운영자의 불확실성, 1억 9천만달러에 달하는 미국기업에 대한 구소련의 부채 등으로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sup>29)</sup> 따라서 미국은 현재 러시아연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과 기술지원 및 투자를 자제하고 IMF와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식량, 의약품 등 인도적 원조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

28) V. Savin, "Forms of Economic Cooperation," *Far Eastern Affairs*, no. 4, 1991, pp. 9~17.

29)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28, 1992.

여 옐친 대통령은 1992년 6월 16~17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미·러 정상회담에서 미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을 권장하고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중과세방지 협정과 쌍무투자 협정을 부시대통령과 체결하였다.

러시아연방과 중국은 경제발전 촉진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중국을 상호 지원하고 협력해야 하는 장기적인 경제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 지역간 경제관계를 확대시키려는 러·중의 이해일치로 1992년 2월에 러시아연방의 아무르 자치지역과 중국의 흑룡강성 사이에 일련의 경제협력협정이 체결되어 담배, 섬유, 시멘트 등 5~6개 분야에서 합작투자가 합의되었다. 국가차원에서 러·중간 경제협력의 기본적인 틀은 1992년 3월 5일의 무역경제협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이 협정은 무역에서 최혜국 지위부여와 관세규정 완화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국은 가까운 장래에 이중과세 방지와 투자보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sup>30)</sup> 외화획득을 위하여 종전과 같은 바터제보다는 硬貨결제를 희망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합작투자, 유럽과 아시아간 운송로 연결, 차량·열차·트랙터·의복 등 생산분야 협력, 제3국 참여하에 극동지역개발과 관광사업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 등을

30) Yuriy Savenkov, "Kitay i Rossiya sozdayut novyy mekhanizm torgovykh otnosheniy," *IZVESTIYA*, Marta 7, 1992, p. 4.

통해 중국과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같은 러·중간의 다양한 경제협력 관계는 양국경제의 상호의존성을 높이고 정치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연방은 대만과 정치관계 수립의 의도는 없으나 국내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면에서는 긴밀한 관계를 희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대만을 첨단기술, 군사장비,<sup>31)</sup> 목화 등의 수출시장으로 보고 있으며 대만으로부터 경제원조 또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러·대만 경제관계가 중국과의 안정된 관계를 해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만과의 경제협력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러시아연방과 북한의 경제협력관계는 러시아연방 자체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약화되고 있다. 북한의 대소 무역은 총 무역량의 1/2 수준 이상이었으나 구소련측의 경화결제 요구로 1991년 이후 북한의 수출은 급격히 감소되었다. 또한 북한은 1990년 이전까지 소련으로부터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매년 일정량의 석유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았으나, 1992년 2월 현재 러시아연방의 북한에 대한 석유공급은 1/10 이하 수준에 있다. 이 결과 북한은 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sup>32)</sup> 러시

31) 대만은 현재 1,500대의 탱크를 구매하려고 하고 있으나 러시아연방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팔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Andrei Borodnikov, "Farewell to Arms," *Moscow News Weekly*, no. 7, 1992, p. 11.

32)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February 26, 1992, p. 32.

아연방은 한국의 자본과 비교적 우수한 기술 및 소비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반면 한국은 석유, 천연가스, 목재, 광물 등 러시아연방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경제협력관계의 증진을 모색하고 있는 한·러 양국은 무역, 오호츠크해 어업협정 체결, 「에너지자원 협력위원회」 설치, 산업기술 이전, 현지 합작투자 등을 통해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구소련에 제공기로 한 30억달러 차관 (현금차관 10억달러, 소비재차관 15억달러,<sup>33)</sup> 플랜트 수출차관 5억달러) 문제와 관련 한국이 약속한 현금차관은 전액 제공되었고 1991년도 소비재차관 8억달러중 4억 7천만달러는 이미 수출되었으나, 1991년도 소비재차관 잔여분 3억 3천만달러 수출은 소연방의 붕괴로 인한 지급보증 주체의 불확실로 1991년 12월 27일 이후 중단되었다. 러시아연방은 구소 차관에 대한 연체이자와 차기이자의 적기상환을 약속하고 10억달러 현금차관의 채무승계에 관한 법률문서를 제출할 계획으로 있으나, 한국정부는 러시아연방측의 약속이행 여부를 보아가면서 경협차관을 재개할 방침으로 있다.

#### (나)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로의 편입노력

러시아연방은 자국이 세계공동체로 완전히 편입될 때까지

33) 소비재차관 15억달러는 1991년 8억달러, 1992년 5억달러, 1993년 2억달러를 각각 제공기로 되어 있다.

는 국내상황 안정과 시장경제를 가진 민주사회로의 발전이라는 대내적 과제를 완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sup>34)</sup>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연방은 1992년 2월 세계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촉진하고 대외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대외경제관계부를 신설하였으며 4월에는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6월에는 舊소련이 자본주의국가들의 경제협력체라고 비난하던 국제통화기금 (IMF) 및 세계은행 (IBRD)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시장경제로의 이행 프로그램이 완전히 실현되면 유럽경제공동체 (EC)에도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자국이 현재 세계경제공동체에 편입되는 초기단계에 있다고 보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일본과의 북방영토문제 해결과 일본, 한국, 대만, 홍콩 등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세계경제 체제로의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sup>35)</sup>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 발전과 접경국가와의 무역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위해서도 극동지역의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황을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로의 편입을 위하여 러시아연방은 1992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8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에 참석하여 아·태지역 국가간의 통상과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는데,

34) Konstantin Pleshakov, "Our National Interests in the Transitional Period,"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Nov. 1991, p. 15.

35) Boris Jelzin, *Die Alternative: Demokratie statt Diktatur* (Frankfurt, M: Goldmann Verlag, 1991), p. 171.

이는 러시아연방이 독립주권국가로 참석한 최초의 지역포럼이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같은 달 북경에서 개최된 유엔 개발프로그램 (UNDP)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두만강 유역 러, 중, 북한 국경지대에 홍콩과 유사한 자유경제지역을 설치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다. 러시아연방은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차 아·태지역 경제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

### 가. 러연방의 대일정책환경 변화

현재 러시아연방의 정치상황은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상황은 불황하의 초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 그러나 세계적 차원에서 러시아연방과 미국은 더 이상 상대방을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으며 군사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엘친과 부시 대통령은 1992년 6월 워싱턴 정상회담을 통해 신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호 공동보조와 협력강화, 양국간 우호친선관계 유지, 약 70%의 핵탄두 상호감축, 우주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특히 양국은 경제면에서 이중과세방지 협정과 쌍무투자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장차 미국의 러시아연방에 대한 경제협력이 확대될 전망에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의 국제통화기금과 세

계은행 가입을 통해 경제적 냉전구조가 청산되었다.

지역적 차원에서 러·중관계는 1989년 고르바초프의 방중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된 이후 정치, 경제면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군사분야에서도 협력이 시작되었다. 극동지역 국경의 안전보장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군사전략상 緩衝地帶인 몽고와도 선린우호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남북한간에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북한이 핵안정협정에 서명하여 한반도 비핵화 과정이 과거에 비하여 진전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연방은 한반도의 안정을 동북아지역 안정화의 전제조건으로 보고 한반도의 핵확산 방지, 특히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한 공동보조를 약속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의 대일정책환경 변화는, 첫째 세계적 차원에서는 신국제질서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러시아연방과 미국간의 협조가 동반자관계를 기초로 긴밀해지고 있다는 점과, 둘째 동북아 지역차원에서는 역내국가들과의 선린우호관계 및 지역군사대탕트를 통해 지역안정화가 구축되고 있으며 경제관계가 발전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의 대일관계에서는 기존의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나 근본적인 관계변화는 아직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 이는 첫째, 러시아연방의 북방영토에 대한 입장, 둘째,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러시아

연방의 우려, 셋째,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일본의 의구심, 넷째, 이에 따른 양국의 긴장지속 등에 기인되고 있다. 군사력을 계속 증강시키고 있는 일본은 걸프전 당시 기뢰제거를 위하여 6척의 해상자위대 소해정을 파견한 바 있다. 일본은 1992년 6월 15일 유엔평화유지활동(PKO)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 지역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미야자와 수상은 7월 1일 부시 미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적으로 보다 큰 역할과 책임을 맡기 위한 「세계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러시아연방은 경제성공으로 인한 일본의 국력신장과 국제적 의무를 축소하려는 미국정책 때문에 일본이 이와 같이 국제적 역할의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36)</sup>

#### 나. 러연방의 대일안보 및 경제관계 구상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대일관계 구상은 안보면과 경제면으로 구별될 수 있다. 러시아연방은 대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 스스로의 대일정책으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 한편, 역내국가들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36)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 108.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을 기대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반면 침체상태에 있는 국내경제를 회복·발전시키기 위하여 북방영토문제 해결과 경제적 동반자관계 구축을 통해 일본의 자본과 기술 및 원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 (1) 러연방의 대일안보 구상

#### (가) 일본의 군사력증강에 대한 러연방의 견제

일본의 안보전략은 구소련의 가상적인 공격으로부터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일 안보조약의 틀 안에서 미국의 대소 억제정책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또한 일본자위대는 일본영토 방어, 일본해안선으로부터 1,850 km에 이르는 거리까지의 해상교통 안전확보, 무력충돌 발생시 러시아함대가 태평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해협을 폐쇄라는 3가지 기본임무를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안보전략과 기본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방위비를 증액하고 자위대, 특히 항공자위대와 해상자위대의 장비를 계속 현대화하여 왔기 때문에 구소련은 자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일본자위대의 이러한 방위비 증액과 장비현대화를 우려해 왔다.<sup>37)</sup> 러시아연방도 현재 일본의 군사력증강을

37) Myles L. C. Robertson, *Soviet Policy towards Japan: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1970s and 1980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104~05.

우려하고 이를 견제하려 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일본이 군사비를 매년 6%씩 증액하여 군사 잠재력을 강화하여 왔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약 4%씩 증액할 계획으로 있어 발달된 과학기술과 자본을 결합하면 단기 간내에 세계 군사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이러한 군사 잠재력 강화가 1990년대의 동북아지역 군사균형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군사균형 변화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sup>38)</sup>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가상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sup>39)</sup> 첫째는 미국이 일본방어에 대한 공약을 폐기하고 극동지역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미·일간의 경제, 무역갈등이 고조되는 경우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이다. 러시아연방은 미·일 양국경제의 긴밀한 상호의존성 때문에 이러한 사태발전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둘째는 일본 민족주의가 팽배할 경우 이에 따른 군사대국화 가능성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현재까지 일본에는 확고한 반전 분위기와 군사화 부문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키려는 헌법적·도덕적 의무감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수출지향적인 일본경

38)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 105.

39) Ibid., pp. 107 & 109.

제가 해외시장 없이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의 이러한 경제적 이해를 일본민족주의가 군국주의화되는 것을 제어하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셋째는 러시아연방 군사력 증강의 경우 초래될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이다. 러시아연방은 자국이 실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군축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극동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수준과 현대화계획들이 일본을 자극하고 있으며 러 일 양국간에 상호불신과 영토문제가 존속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군사력의 급속한 증강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능성이 무엇보다도 자국의 극동군사력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sup>40)</sup> 특히 곧 발간될 예정인 일본정부의 1992년도 「防衛白書」는 구소련군의 대일 위협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으며 일본 주변에서 러시아의 군사활동이 줄어들고 있으나 구소련군은 여전히 막강한 전력을 축적한 상태로 있어 지역에 불안정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41)</sup> 일본이 이와같이 러시아 극동군사력과 관련하여 자위대 전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보이자, 러시아연방은 「合理的充分性」의 군사독트린, 「機動防衛」 전략, 대일 신뢰구축 등을

40) 최근 오카자키 주태국 일본대사는 2백년 동안 일본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은 변함이 없으며 여전히 막강한 러시아 극동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이 되고 있어 일본이 이에 대응하는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위대의 능력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朝鮮日報」, 1992. 6. 21 참조.

41) 위의 신문, 1992. 7. 19.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려 하고 있다.

<표1>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러시아 군사력 현황 (1991년)<sup>42)</sup>

지 상 군	42개 사단(7개 전차사단, 35개 자동소총사단) 3개 기관총/포병사단 4개 포병사단
방 공 군	450대 전투기(MiG-31, MiG-25, MiG-23, Su-15) 215기 지대공 미사일(SA-2, SA-3, SA-5, SA-10)
공 군	710대 전투기 및 정찰기(MiG-29, MiG-27, MiG-25, MiG-23, MiG-21, Su-27, Su-25, Su-24)
태평양함대 <sup>43)</sup>	98척 잠수함(24척 전략핵, 70척 전술, 4척 기타) 63척 주요 해상함(2척 항공모함, 14척 순양함, 7척 구축함, 40척 소형구축함) 418척 기타 해상함(65척 해안순시선, 102척 기뢰정, 21척 수륙양용정, 230척 기타 함정) 80대 폭격기(60 Tu-26, 20 Tu-16) 160대 전투기(50 Yak-38, 35 Su-17, 10 Su-24, 15 Tu-142, 17 Il-38, 33 Be-12) 99대 헬기 해병대(1개 사단본부, 3개 보병연대, 1개 전차연대, 1개 포병연대) 해안방위대(1개 자동소총 사단)

출처: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London: IISS, 1991), pp. 44~45.

42) 전략핵군은 제외되어 있다.

43) 태평양함대의 관할구역은 태평양과 인도양이다.

(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역내국가와의 공동  
대응

러시아연방은 대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국이 스스로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는 방도이외에도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군사잠재력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신국제질서에서 자국의 안보상황이 구소련의 위협감소, 미국의 군사력 감축, 한반도의 긴장완화 등으로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갈등으로 동북아시아에는 아직도 안정과 평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군사력 현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도 적극 대처하려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의 정치대국화는 수용하되, 군사대국화는 반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도 과거의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는 일본자위대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비해 중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관련국가들과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도 1992년 6월 15일 일본 중의원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하여 “일본군국주의 세력은 군사적인 팽창과 나라의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다그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sup>44)</sup> 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은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이용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방안의 하나가 지역안보체제의 구축이다. 러시아연방은 미, 일, 러, 중, 남북한이 참여하는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한층 엄격히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sup>45)</sup>

#### (다)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미국의 억제력 기대

미국은 냉전시대의 주요 적국이었던 소련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지 않기 때문에 약 13만 5천명에 달하는 극동지역 전진배치군 수준을 자국 이해에 기초하여 계속 재평가하면서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은 미국이 일본에게 보다 많은 독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미·일동맹을 유지·발전시킬 것이나 현재 미국은 일본의 군사잠재력에 대한 통제의 불가피성과 일본의 국제적 지위인정이라는 양자 사이에서 균형을 취해야 하는 복잡미묘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일관계에서 경제면에서 보다는 안보면에서 통제력을 갖고

44) 「로동신문」, 1992. 6. 17.

45)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 114.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미국이 일본의 군사비를 GNP 2~3% 까지 증가시켜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날 정도로 일본 군사잠재력을 증강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과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일안보조약의 지속적인 효력과 일본내 미군의 계속적인 주둔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sup>46)</sup>

## (2) 러연방의 대일경제관계 구상

### (가)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통한 일본의 경협유도

러시아연방의 경제상황 악화는 미국의 경제침체와 독일의 통일비용 부담 등으로 현재 러시아에게 일본의 자본과 기술 및 원조 확보문제를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 이미 고르바초프도 대일정책의 주요목표를 경제관계 확대에 두고 일본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구소련 경제의 발전을 촉진시키려 시도하였다. 1982년에 37억루블에 달했던 일·소간 무역이 1987년에는 26억루블로 축소되어 1987년도 일본의 총수출과 총수입에서 구소련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1%와 1.6%에 불과하였다. 또한 일·소간 합작투자는 1989년 말까지 13건이 이루어졌으나 액수로는 총 4,700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이는 합작투자가 주로 목재가공, 호텔건설, 스포츠센터 건립, 어업

46) Ibid., pp. 107 & 109.

등의 분야에 한정되고 고도기술과 관련된 대규모 기업에 대한 합작투자 합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대일 경제관계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구소련 정부의 노력은 1986, 1988, 1990년 3차에 걸친 세바르드나제 외상의 방일과 1991년 4월 국내경제 위기 및 정치 불안정 속에서 행해진 고르바초프의 방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소련의 대일 경제관계는 북방영토문제, 미·일 동맹관계에 따른 일본의 안보적 고려, 구소련의 대일 수출품목 부족, 시베리아 투자의 여러가지 난점, 합작투자 조건에 대한 일본의 불만 등으로 정체상태를 벗어날 수 없었다.<sup>47)</sup> 그러나 일본을 자국에 대한 최대의 투자국이며 원조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일본의 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려 하고 있다.

#### (나) 경제적 동반자관계 구축

러시아연방은 현재 세계공동체로의 편입정책의 일환으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협력체 구상에 동참하여 일본과 경제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일본도 러시아연방을 여전히 태평양의 강국으로 간주하고 러시아연방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동아시아

47) Rajan Menon, "Gorbachev's Japan policy," *Survival*, vol. XXXIII, no. 2 (March/April 1991), pp. 165~66.

지역국가들의 경제공동체에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sup>48)</sup> 일본은 1989년 이래 남북한과 중국 및 러시아연방을 포함하는 「환일본해 경제권 구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환일본해 경제권 구상」은 러시아연방의 극동지역 개발 필요성, 북한과 중국의 동 지역 경제개발전략, 한국의 북방정책, 일본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노력 등 각국의 이해일치로 구체화 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에 일본은 시장, 자본, 기술을, 러시아연방은 천연자원, 에너지, 토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연방과의 북방영토문제가 해결되면 지역간 교류를 기반으로 하여 시베리아, 러시아 극동지역, 중국 동북부, 한반도, 북해도, 동북일본해 연안, 알래스카, 캐나다의 태평양 연안 등을 포괄하는 「북태평양 경제개발구상」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sup>49)</sup> 이외에도 일본은 시베리아-중국-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에 가스파이프 라인을 연결하는 「아시아 에너지공동체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극동지방의 자원개발과 일차상품 가공, 경공업, 기계공업 부문 등의 발전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은 일본이 주도하는 이와같은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공동체에 적극 동참

48) Aleksandr Anichkin, "Rossiya i Yaponiya mogut stat partnerami i soyuzhnikami," *IZVESTIYA*, Maya 7, 1992, p. 6.

49) "변모하는 소련과 일본의 대응: 일·소 신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방침," 「國際問題」, 22권 3호 (1991년 6월), p. 125.

함으로써 경제면에서 일본과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 다.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입장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 모색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면에서는 미·일동맹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일본으로부터의 경험유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제한적으로 용인하고 있으나, 군사, 안보면에서는 일본과의 역사적 적대관계 및 역내 패권국가의 등장 견제라는 측면에서 역할증대를 억제하고 있다.

#### (1) 정치·경제적 역할증대 容認요인

##### (가) 미·일동맹체제의 성격변화

러시아연방 외무부는 일본의 전후 역사상 최초로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자위대 파병을 합법화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중의원 통과와 관련하여 이를 완전히 일본국내문제로 간주하는 한편, “이 법안 이행이 일본으로 하여금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것이며 군사력의 사용이나 사용위협을 의미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지도층의 성명을 고려해 볼 때, 이 법안 채택이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야기할지도 모른다는 다수 국가들의 우려가 근거없는

것이기를 희망한다”<sup>50)</sup>고 밝혔다. 또한 라브로프 러시아연방 외무부 차관은 1992년 6월 방일중 “러시아 외무부가 일본의 회에 의한 이 법안의 채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 법안이 조직과 재정면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돕기를 희망한다”<sup>51)</sup>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연방 정부가 신국제질서하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역할수행을 용인하나 이러한 정치적 역할수행이 군사대국으로 발전되는 것은 반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연방이 이와 같이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증대를 용인하는 것은 일본으로부터 경제협력과 원조를 유도하려는 데 주목적이 있지만 미·일동맹체제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인식과도 관련되어 있다.

러시아연방은 미국이 그동안 구소련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하여 아·태지역에 전략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군사보다는 경제가 더 중시되고 있는 신국제질서에서는 양자간 무역과 경제관계를 중시하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경제를 위해 아·태지역을 점차 중시하고 있다. 이는 1980년대 초까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자유세계국가들의 제1의 무역국이었으나 현재는 일본이 그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sup>52)</sup> 또한 부시 미대통령은

5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June 24, 1992, p. 25.

51) *Ibid.*, June 26, 1992, p. 23.

52) Patrick M. Cronin, ed., “Perspectives on Policy and Strategy,” *Strategic Review* (Spring 1992), pp. 70~71.

1992년 1월 오스트레일리아, 싱가포르, 한국, 일본의 순방시 여행의 주요목적이 미국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이 지역의 수출증대 등 경제문제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연방은 부시 대통령이 미국 대외무역 적자 700억달러의 약 2/3인 4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을 방문하여 「도쿄선언」과 「세계경제성장 증진에 관한 미·일 공동선언」을 채택하자 미·일관계가 군사·정치 동맹으로부터 무역·경제 라이벌로 전환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53)</sup> 즉 러시아연방은 신국제질서의 형성, 특히 러·미, 러·일간의 관계개선에 따라 러시아 견제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던 미·일 동맹체제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이와 같이 미·일 동맹체제로부터 종전과 같은 정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길을 택하지 않는 한 일본의 국제정치적 역할증대를 용인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 (나) 대규모 경협 유도의 필요성

1986년에 채택된 구소련의 5개년 경제계획안은 생산국민소득, 공업생산, 농업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을 각각 4.2%, 4.6%, 2.7%로 책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르바초프의 개혁정책에도

53) Vsevolod Ovchinnikov, "vzglyad iz Moskvy: Predvybornaya diplomatiya," PRAVDA, Yanvarya 11, 1992, p. 4.

불구하고 1986~1990년 기간중 실제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3%, 2.5%, 1.1% 이었으며 특히 1990년도에는 -4.0%, -1.2%, -2.3%의 성장율을 기록하였다.<sup>54)</sup> 이러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구소련정부는 독일, 미국, 한국 등 14개국으로부터 총 809억 달러에 달하는 경협자금의 지원약속을 받았다. 이 당시 일본은 구소련의 정치적·경제적 불안정을 우려하여 대규모 투자나 원조를 자제하고 단지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편으로 극동 사할린주 당국을 원조창구로 명시하여 25억달러 원조를 약속하였다. 소연방의 붕괴로 경제파국 현상을 그대로 이어받게된 러시아연방은 서방선진 7개국(G-7)으로부터 총 240억 달러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약속받았다. 그러나 1992년 1월 1일 현재 러시아를 비롯한 「독립국가연합」의 외채는 810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1992년 상환해야 할 금액은 209억달러이다.<sup>55)</sup> 또한 러시아연방내 530여개의 합작기업중 현재 약 1/3만이 가동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업들은 러시아의 정치, 경제상황을 관망하고 있거나 경화결재를 요구하고 있다.<sup>56)</sup> 다행히 러·일간에 정치관계가 호전되자 일본 기업들이 유전개발, 통신, 호텔, 어업, 항만시설 등에 조심

54) Stephen White, *Gorbachev and after*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117.

55) *Die Welt*, April 7, 1992.

56) Irina Georgiyeva, "Joint Ventures decreasing in number," *Moscow News Weekly*, no. 9, 1992, p. 10.

스럽게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선 북방영토문제 해결, 후 원조라는 「政經不可分の 원칙」과 독립국가연합 장래의 불투명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원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원조를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경제 혼란을 극복하고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을 신속히 개발해야 하는 러시아연방은 세계경제대국인 일본으로부터 직접적인 대규모 경제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면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를 용인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

## (2) 군사적 역할증대 抑制요인

### (가) 역사적 적대관계

러시아인과 일본인은 금세기 전반에 1904~5년의 러·일전쟁, 1918~22년 러시아 내전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일본군의 출병, 제2차세계대전을 통해 세차례 전쟁을 치렀다. 따라서 러·일 양국민 사이에는 깊은 상호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1890년대에 극동지역에 대한 제정러시아의 팽창정책과 동아시아에서 영향권을 확대하려는 일본 제국주의정책은 만주와 부동항 여순이 소재한 요동반도의 관할권을 둘러싸고 긴장을 야기시켰다. 제정러시아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

권을 인정하지 않자 일본은 1904년 2월에 여순항에 정박중인 제정러시아함대를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되었다. 제정러시아는 쓰시마 해협을 비롯한 일련의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1905년 9월의 「포츠머스 조약」을 통해 일본에 요동반도의租借權과 남만주철도에 대한 특권을 양도해야 하였다. 일본은 이외에 사할린섬 남부에 대한 관할권을 얻고 한반도를 보호령화 할 수 있게 되었다. 대일전 패배는 제정러시아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다.

볼셰비키들은 1917년의 10월혁명이 성공하자 제1차세계대전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1918년 3월에 독일 및 그 동맹국들과 「브레스트-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였다. 독일군이 발틱제국과 핀란드를 점령하자 페터스부르크로의 공격 가능성, 독일과 볼셰비키의 협력 가능성, 바쿠 유전지대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한 영국과 프랑스 등은 赤軍과 白軍간의 러시아 내전에서 백군을 원조하기 위하여 군대를 파견하였다. 이 때 일본도 약 7만 병력을 블라디보스톡에 상륙시켜 1922년까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백군을 지원한 바가 있다.<sup>57)</sup>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인들은 극동지역에서 일본의 무력개입 가능성을 항상 우려하게 되었다.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우려는 히틀러 독일의 소련공격을 앞두고 스탈린이 양면전을

57) Georg von Rauch, *Geschichte der Sowjetunion*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69), pp. 106~13.

피하기 위하여 1941년 4월 일본과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러시아인들은 제2차세계대전 말에 일본인들과 또 한번의 전쟁을 치러야 했다.

또한 구소련은 볼셰비키혁명 이후부터 고르바초프 등장 이전까지 전세계에서 공산주의 팽창정책을 지속적으로 수행했다. 특히 구소련은 극동지역에서 일본을 잠재적 적국으로 간주하고 자국의 안보확보와 초강국으로서의 지위유지를 위하여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 일본도 이에 대항하여 소련을 가상적국으로 보고 미·일동맹체제의 틀 속에서 자위대 군사력을 방어전략 중심으로 증강시켜 왔다. 비록 러·일관계가 현재 동반자관계로 진전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양국의 역사로부터 러시아인들은 일본인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막강한 경제력과 고도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일본이 세계무대에서 군사적으로 역할을 증대하는 것을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 (나) 지역패권국가 등장견제

동북아지역은 미, 러, 중, 일 강대국들의 정치·군사·경제적 이해가 본질적으로 교차되고 있는 지역이다. 따라서 러시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을 국가안보에 중요한 곳으로 간주하고 어느 한 강대국이 역내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려고 노력하여 왔다.

제정러시아와 구소련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동북아지역에 대한 일본의 배타적인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고 하였다. 특히 스탈린은 일본이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킨 후 소련의 극동지역 안보를 위협하자 일·소 불가침협정 체결제의(1931. 12. 31), 장개석 정부와의 외교관계 회복(1932. 12. 12), 소·몽간 동맹관계 수립(1936. 3. 12), 중·소 불가침협정 체결(1937.8. 21) 등을 통해 일본 군국주의의 팽창정책을 저지하려 하였다.<sup>58)</sup> 제2차세계대전의 종료와 더불어 일본이 패망하고 냉전체제가 대두되자 구소련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때로는 경쟁관계에 있던 중국과 협력하여 견제하면서 공산화정책을 수행하였다. 또한 세계공산화정책을 포기한 고르바초프도 21세기에 세계정치의 중심지가 될 아·태지역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모든 국가들의 이익이 균형있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지역이 어느 한 강대국의 배타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sup>59)</sup> 냉전종식 이후 신국제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과도기에서 미국이 세계경제에서 우월한 지위를 상실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자 공업, 무역, 교육, 과학, 기술면에서 제1급의 강대국으로 발전된 일본이 현재

58) A.A. Gromyko and B.N. Ponomarev, *Soviet Foreign Policy 1917~1980*, vol. I 1917~1945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pp. 271~76, 320~22.

59) Michail Gorbatschow, *Perestroika: Die zweite russische Revolution* (München: Droemer Knauer, 1987), pp. 235~36.

세계의 '힘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재부상은 동북아시아 군사·안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이익과 배치되어 왔다고 보는 러시아연방은<sup>60)</sup> 일본이 정치와 경제면에서 국제적 역할을 증대하려는 것을 용인하더라도 군사력을 기초로 지역패권국가로 등장하는 것은 견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 3. 러연방의 대응방안과 러·일관계 전망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하여 국가차원에서는 「合理的 充分性」의 군사독트린과 「機動防衛」전략, 지역차원에서는 역내국가들과의 공동군축이나 지역안보체제의 형성, 대일관계에서는 신뢰구축을 통해 대응하려 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연방은 미·일안보조약이 계속 유효하는 한 미국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하리라고 기대하면서 경협과 대규모 원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치와 경제면에서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계속 인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6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March 24, 1992, p. 37.

## 가. 러연방의 대응방안

### (1) 「合理的 充分性」의 군사독트린과 「機動防衛」전략

러시아연방은 구소련의 군사부문에 대한 과도한 투자가 국가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구소련과 같은 정도의 군사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연방은 신국제질서에서 대외적인 적국을 갖고 있지 않아 국경지대에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연방의 신군사 독트린은 고도의 기동성과 충분성의 방어원칙에 기초될 전망이다.<sup>61)</sup>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 사정과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군사력 감축을 점진적으로 추구할 것이나 군사면에서 국제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에 대하여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과 「기동방위」 전략으로써 대응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 엘친정부의 충분성의 방어원칙은 고르바초프에 의해 정립된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답습한 것이다. 국방에서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고르바초프의 개념은 핵무기의 군사적 유용성 약화와 최신 재래식무기들의 전투능력 고조를 배경으로 정립될 수 있었다. 구소련의 정치, 군사지도자들은

61) Ibid., June 2, 1992, p. 14.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에 미국과 핵균형이 이루어지자 핵전쟁이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으며 인류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핵무기의 주요역할은 억제력으로 간주되었고, 구소련의 군사전략도 핵전쟁으로부터 재래식전쟁을 위한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최신 재래식무기들이 핵무기를 대신하여 대량파괴를 가능케 하는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중에 집권한 고르바초프는 「신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안보정책을 수립하여 「합리적 충분성」이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 개념은 방어에 충분한 정도까지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의 감축을 의미한다. 고르바초프는 핵차원에서는 최대 수준의 전략균형이 아니라 최소 수준의 전략균형에 의해 보장되는 공동안보와 상호신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재래식차원에서는 공격보다는 방어가 중시되고 방어도 전술적 차원에서의 방어에서 전략적 차원에서의 방어로 전환되었다. 또한 고르바초프는 공격작전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것이 아니라 침략 가능성을 배제하는데 충분하게 군사력이 재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62)</sup> 고르바초프는 군사비 부담을 줄이고 동서간 긴장완화를 통해 서방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침체된 소련경제를 회복시키기

62) Mary C. Fitz Gerald, "Gorbachev's Concept of Reasonable Sufficiency in National Defense," in George E. Hudson, e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pp. 175~95.

위하여 안보개념을 국가안보로부터 공동안보로 전환시키고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정립하여 이를 실현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러시아연방도 국내경제 회복과 발전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합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을 바탕으로 안보정책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

러시아연방은 현재 해군력과 공군력은 거의 현수준으로 유지한 채 지상군의 재편성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지상군은 다음과 같은 3단계로 6~8년 내에 재편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제1단계 러시아연방 국방부 창설; 제2단계 2~3년 동안 구사회주의국가들로부터 전 러시아군의 철수와 1995년까지 약 210만 명으로 군편성; 제3단계 구소련 공화국들로부터 러시아군 철수와 150만 명으로 병력감축. 또한 과도기 동안 전략핵군은 독립국가연합 통합군사령부의 통제하에 놓여질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러시아연방은 1990년대 말까지 지상군 수는 감축시키되 해군력과 공군력은 현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군축효과를 이루는 동시에 극동지역 안보를 공고히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주변상황 변화에 따른 기동방위를 위하여 최신무기를 보유한 공정대, 자동소총부대, 해병대로 구성되는 신속배치군을 러시아 군사력의 根幹으로 삼으려고 계획하고 있다.<sup>63)</sup> 따라서 러시아연방은 이러한 「합

63)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June 2, 1992, p. 15.

리적 충분성」의 군사독트린과 해·공군력의 현 수준 유지 및 신속배치군의 창설을 통해 일본의 군사력 증대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 (2) 역내국가들과의 공동군축 또는 지역안보체제의 형성

러시아연방이 역내차원에서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나 군사대국화에 대응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은 역내국가들과의 공동군축이나 지역안보체제를 통해 일본의 군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코지레프 러시아연방 외무장관은 1992년 3월 방일시 러시아군 70만명 감축선언이 아시아에도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연방은 주일미군 수준도 러시아 군사력 감축과 연계하여 축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군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극동지역의 군사력 제한과 감축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1992년 3월 9일 「핵확산 금지조약」에 서명하는 등 군비축소협상 과정에 일부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북한의 핵문제가 국제적 현안문제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서 핵무기를 철수함으로써 한반도에서는 비핵화 과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러시아연방은 러시아의 군사위협 문제가 미·일동맹에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다면 일본도 동북아지역의 군사력

균형저하를 위한 지지자가 될 수 있고, 이는 경제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국의 정치적 역할 제고면에서도 일본에 이익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sup>64)</sup>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견제하기 위한 양자간 접근방안이 역내국가들과의 공동군축 노력이라면 다자간 접근방안은 지역안보체제의 형성이라 할 수 있다. 지역안보체제는 역내 국가들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 군축을 통해 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이 구소련과 러시아연방은 아시아지역의 안보를 중시하고 다자간 안보체제나 동북아에서의 지역안보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라프롭프 러시아연방 외무차관은 1992년 6월 이타르타스통신과의 회견에서 “러시아는 유럽에서 축적한 긍정적인 경험을 이용해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보체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sup>65)</sup>고 밝혔다. 최근 미국은 냉전 이후의 아·태지역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集團安保體制의 형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또한 미야자와 일본수상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나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 등을 유럽 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기구로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에반스 호주외무장관도 신안보협력체제의 창설을 주

64)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p. 107~108.

65) 「東亞日報」, 1992. 6. 25.

장한 바 있다. 그동안 아·태지역내 안보협의체 추진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온 한국정부도 역내 안보협의체의 창설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지역안보체제는 러시아연방을 비롯한 기타 역내국가들이 일본의 군사력증강이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러시아연방은 동북아지역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북한과 기존의 군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캄란만 해군기지를 계속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3) 대일 신뢰구축

러시아연방은 현재 대일관계에서 ‘敵國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선린우호관계 및 동반자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연방이 러시아의 극동군사력을 구실로 삼은 일본의 군사력 증대를 억제할 수 있고 일본의 경협과 원조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냉전체제가 종식되고 신국제질서가 형성되자 러시아 지식인들은 대다수 일본인이 ‘소련의 위협’을 인식하고 있지만 소련이 일본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판단하고 소련에 대한 일본의 ‘적국 이미지’를 해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었다.<sup>66)</sup> 고르바초프는 「신사고」 외교정책을 수행하면서

66) 러시아인들의 이러한 입장은 이미 1988년에 소련과학원 산하 여러 연구소의 대표들에 의해 주장된 바 있다. “The Vladivostok Initiatives. Two Years On,”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August 1988, p. 148 참조.

아·태지역의 안보와 평화를 중시하였으나 소련에 대한 일본의 ‘적국 이미지’를 해소시키지는 못했다.

구소련은 대일 신뢰구축을 위하여 1985년 이래 해군 기동 훈련의 횟수 및 규모 제한, 대잠수함전 자유지역 설치, 지역 안보질서를 위한 협상, 육·해·공군력 축소 등 여러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소련의도의 진지함과 공평성 및 지역안보체제 가치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소련의 제안을 거부하였다.<sup>67)</sup>

반면 옌친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일본의 ‘적국 이미지’ 해소와 관계 증진을 위하여 1992년 2월 말에 미야자와 일본 수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를 수립할 시간이 되었으며 장차 일본을 ‘가능성 있는 동맹국’(a possible ally)으로 간주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다. 일본정부는 이를 환영하였다.<sup>68)</sup> 또한 와다나베 일본 외상은 5월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연방 정부와 양국간 및 국제문제를 논의하고 양국이 상호 적대관계가 아니라는데 동의하였다.<sup>69)</sup> 러·일 양국은 현재 평화조약을 상정한 동반자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으나 북방영토문제가 여전히 큰 장애가 되고 있다. 구소련은 1960년 「미·일안보조약」의 갱신

67) Rajan Menon, "Gorbachev's Japan policy," *Survival*, vol. XXXIII, no. 2 (March/April 1991), p. 159.

68)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March 2, 1992, p. 16.

69) *Ibid.*, May 4, 1992, p. 14.

이후 일·소간에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소연방이 붕괴되자 미야자와 일본수상은 1991년 12월 27일 옐친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일본정부가 러시아연방을 구소련의 법적 繼承國으로 공식 인정한다는 것을 밝히고 북방영토문제의 해결을 촉구하였다.

러시아연방도 대일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조약 체결의 경우 북방영토 2개섬 (하보마이와 시코탄)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1956년 10월 19일 「일·소간 공동선언」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북방영토 문제가 러시아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에 양국 정부는 수차례 걸친 실무자협상을 갖고 ‘합법성과 정의’를 기초로 북방영토와 평화조약 문제를 1990년대 말까지 해결하기로 합의하였다.<sup>70)</sup> 그러나 북방영토 문제에 대한 양국간 입장차이가 평화조약 체결과 일본의 대러 경협에 대한 최대 장애요인으로 아직도 남아 있다. 북방영토문제 해결을 위하여 옐친은 대통령이 되기 전인 1990년 1월 동경 방문시 소련에 의한 영토문제 존재인정, 자유무역지대로의 전환, 비군사화, 평화조약 체결, 차세대에 의한 전면적 해결이라는 「5단계 해결방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sup>71)</sup> 반면 일본은 북방 4도에 대한 러시아연

70)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March 2, 1992, p. 16.

71) Vladimir Ovsyannikov, "USSR-Japan," *New Times* (Moscow), no. 6, February 6~12, 1990, pp. 20~21.

방의 일본주권 인정과 평화조약 체결시 시코탄·하보마이 2개 섬 양도 및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섬 이양일자 명시, 쿠나시리·에토로후 2개섬 양도라는 「2단계 공식」을 제시하고 있다.<sup>72)</sup>

러시아연방은 북방영토문제의 해결 이외에도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조약의 체결, 러시아연방의 대일 핵무기 불사용 선언, 군비통제에 관한 합의 (합당한 수준의 군사력 감축, 최신 군사기술의 이용 제한, 공격용 중무기 생산 금지, 군사비 지출 증액 제한 등),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을 대일 신뢰구축에 필요한 제반사항으로 간주하고 있다.<sup>73)</sup>

#### 나. 러·일관계 전망

구소련이 대일관계에서 갖고 있던 세가지의 주요문제는 양국간 차원에서 북방영토문제, 지역적 차원에서 ‘소련의 위협’ 문제, 세계적 차원에서 미·일동맹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들이었다. 고르바초프는 자신의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일본이 민족적인 질서규율, 자기훈련, 활동력, 대외정책에서의 「비핵 3원칙」으로 정치와 군사면을 제외한 제분야에서 강국으로 발전되었음을 인정하고 대일정책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그는 유럽중심주의 외교와 국내상황 악화로 일본과의 정체적

72) Sergey Agafonov, “V Tokio nastaiavayut: snachala ostrova, potom pomoshch,” *IZVESTIYA*, Aprelya 20, 1992, p. 4.

73)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 110.

관계를 극복할 수 없었다. 러시아연방은 자국 주변에 善隣地帶를 설치한다는 전략과 동북아 정세안정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자본과 기술 및 원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본과의 제반 관계를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연방의 이러한 노력의 성패는 북방영토문제 해결여부에 달려 있다.

러·일 양국은 현재 북방영토 문제를 ‘합법성과 정의’를 기초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상태에 있다. 그러나 러·일관계의 진전이 북방영토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는 일본은 러시아연방이 자국경제의 어려움과 일본의 기술 및 투자에 대한 열망으로 결국은 북방영토를 양보할 것으로 가정하면서 「政經不可分の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북방영토문제에 대한 러시아연방의 입장은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 러시아연방정부는 러시아에 의한 「일·소공동선언」의 합법성 인정이 2개섬의 자동적, 또는 즉각적인 이양을 의미하지는 않으나 「일·소 공동선언」의 원칙에 따라 타협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과 보수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 및 군부는 민족정서, 4개섬의 전략적 가치 등을 이유로 북방영토 반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반대로 1992년 9월로 예정된 엘친 대통령의 방일이 12월로 연기되었다. 따라서 러·일간에 북방영토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북방영토문제에 관한 협상진전의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러

시아연방 외무부가 작성한 내부분서에 의하면 러시아는 북방 영토에 대한 구소련의 입장을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하고 완전주권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sup>74)</sup> 둘째 러시아연방이 북방영토를 일본에 이양하도록 서방으로부터 압력을 받고 있다는 점, 셋째 러시아연방의 경제난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구소련과 일본 양국 정부는 1956년 「일·소 공동선언」의 채택 당시 공동선언 조인으로부터 평화조약 체결시까지 과도기 동안 양국이 취해야 할 행위를 규정한 각서를 교환한 바 있다. 이 각서에 의하면 양국은 제1단계로써 시코탄과 하보마이 2개 섬의 이전에 관한 합의를 하고, 제2단계로써 평화조약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쿠나시리와 에토로 후 2개 섬의 귀속을 결정하기로 되어 있다.<sup>75)</sup> 따라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연방은 이를 근거로 국내경제문제 해결을 위하여 일정한 경제지원을 받는 댓가로 시코탄과 하보마이 2개 섬의 이양이나 공동관리를 일본측에 제안하는 등 영토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의 러·일관계 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또 다른 점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이다. 러시아연방은 일본의 정치적·군사적 독자성 추구를 시사해주는 많은

74) 「한국일보」, 1992. 7. 30.

75) Aleksandr Anichkin, "kurilskiy eskiz: mozhno li dogovoritsya s yapontsami," *IZVESTIYA*, Fevralya 19, 1992, p. 5.

징후들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의 군사적 의존을 벗어나 독자적인 안보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은 미·일 양국이 보다 평등한 동반자관계를 위하여 안보조약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으나 일본이 세계정치·군사대국으로 가는 길에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제약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sup>76)</sup>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러시아연방은 1990년대에 자국의 군사정책, 역내국가들과의 공동협력, 대일 신뢰구축을 통해, 또한 현재의 미·일 안보조약이 계속 유효하는 한 미국의 억제역할을 기대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자본과 기술 및 원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경제대국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는 이것이 군사대국화로 발전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76) M. 노소브 외 3인, “극동의 안보강화 및 군사적 긴장완화(하),” pp. 108~109.

### 제3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한반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 제3편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한반도

#### VI. 동북아질서 변화전망

1990년대 동북아질서는 역내 국가간 상호 협력과 갈등이 병존하는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연방은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서구자본주의 경제로의 편입을 모색하고 있는 등 과거 역내안정 위협세력이었던 두나라는 모두 동북아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보다 유연한 외교적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보여 역내 국가간 화해무드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반도문제와 북방영토문제 등 지역분쟁 요인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러시아와 미국의 쇠퇴에 따른 세력공백을 메우려는 일본과 중국간의 경쟁과 鄧小平과 김일성 사후 예상되는 중국과 북한의 정치·사회적 변혁가능성은 동북아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같은 세력균형 변화에 따른 지역국 특히 중·일의 전략적 우위선점 노력 및 군비증강 등 지역적 불안요인에 대응하고 지역안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국가들간에 다자간 안보협력체의 창설 구상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사력보다도 경제력이 중시되는 냉전이후시대(post

-Cold War era)에서는 국가간 경제적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적인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는 경제블록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하여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개방된 지역경제협력체를 형성하여 경제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경제협력체 형성과 중국의 개혁·개방 및 러시아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일본의 발언권 강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동북아 4강간의 관계는 미국을 정점으로 하면서도 미·일·러·중의 4강구조로 정착되는 多極化 현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1. 정치·안보질서 변화

### 가. 미·일의 세계적 동반자관계와 일본의 국제적 역할 증대

미·일 양국은 「도쿄선언」(1992. 1. 9)을 통해 양국관계를 세계적 동반자관계로 발전시킨다고 천명하고 안보 및 경제정책 전반에 걸친 상호협조와 시장개방 촉진, 주일미군 경비부담 확대, 미·일·유럽 3자대화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경제 및 안보면에서 일본 역할의 세계화를 미국이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은 세계 GNP의 15%를 점하는 세계 제2위의 경제력을 배경으로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을 위해 미국을 인적·물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는 등 실질적 이득을 얻어내고 있다. 일본은 뮌헨 서방선진7개국(G-7) 정상회담에서

북방영토반환 문제를 정상회담의 「政治宣言」에 반영시켰으며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에도 참석하여 유럽안보문제 토의에 참가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하였다.

일본은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 구상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 축소로 야기되는 세력공백을 메우려는 의도하에 이 지역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은 군사력 증강 및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의회통과, 캄보디아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참가 그리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 확보노력 등을 통해 아·태지역에서의 분쟁해결 및 역내의 정치·안보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정치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일본을 안정유지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자국의 지역안보부담을 감소시키려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미국의 정책은 아·태지역에서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면에서 일본의 영향력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1990년대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용인하에 동북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정치무대에서 일본이 차지할 비중을 감안해 볼 때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미국과 주변국들은 일본의 경제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일본의 역할증대를 선별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주변국가들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발언권 증대를 수용할 것이나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는 과거 군국주의적 역사의 미청산과 안보위협을 우려하여 적극 반대할 것이다. 또한 일본도 자국의 경제구조가 해외의 자원과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주변국의 우려를 무릅쓰고 급격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국내정치의 다원화 추세로 인하여 군사대국화를 위한 승의를 이끌어 내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일본의 역대 군사대국화 노력은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 나.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와 集團的 介入정책

냉전이후시대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는 국제질서 재편과정에서 유일 강대국 지위와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면서 안정된 국제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국제사회 및 동맹국의 역할과 책임을 확대 분담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대외정책 기조는 미국의 「1994~1999회계년도 국방계획 지침(Defence Planning Guidance for the Fiscal Years 1994-1999)」(1992. 5. 24)에 잘 나타나 있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전략목표로서 미국에 대한 공격 억제, 우방국과의 공동방위체제 확대·강화, 미국 이해지역에 대한 적대국가의 지배를 방지하고, 둘째, 지역안보 위협에 대해 미국은 동맹국과의 책임분담원칙하에 선별적 대처능력을 유지하며, 셋째,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 유엔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共同防衛體制를 적극

강화하고, 넷째, 아·태지역 안보와 관련, 미국의 군사적 우위 유지하에 한·일 양국의 점진적 책임분담 확대를 촉구하는 것이다.<sup>1)</sup>

이와 같은 외교정책 기조는 국내 경기침체와 과다한 방위비부담에 대한 국내의 반대여론에 따른 것이며, 전세계에서 정치·군사적 리더쉽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질서 유지를 위한 비용과 부담을 미국, 러시아연방, 유럽공동체(EC) 및 일본 등이 분담하는 국제적 협조체제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미국 주도하의 국제적 협조체제는 20세기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에서 미·일간 역할분담에 따른 미군주둔 비용이 일본에 의해 분담되고 지역안보를 위한 미군주둔 필요성이 지역국가들에 의해 인정되는 한, 자국의 전진배치전략을 계속 유지하면서 지역안정을 위한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전망되나, 이 과정에서 일본의 점진적인 역할증대를 추구하고 지역강대세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 다. 미·러간 동반자관계 구축 및 러시아연방의 서방경제 에로의 편입

1991년 12월 소련의 해체와 러시아연방의 자유민주주의로

1) *New York Times*, March 8, 1992; *Washington Post*, May 24, 1992.

의 변혁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반세기 이상 계속된 미·소 양극적 냉전구조의 종언과 새로운 국제질서의 태동을 의미한다.

엘친 러시아연방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은 두차례의 정상회담(1992. 2. 22 및 1992. 6. 16~17)을 통해 상대방을 假想敵國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전략핵의 대폭적인 감축과 미사일 공동방위시스템의 공동개발에 합의하였다. 이와 같이 미국은 러시아연방을 세계방어체제에 참여시키게 되어 러시아연방과의 안보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간에는 여전히 쌍방의 국가이익과 전략적 입장차가 존재하고 있는 바, 세계 및 동북아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양국이 진정한 동반자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연방은 국내 경제난으로 고르바초프 전소련대통령의 「신사고」 외교기조를 유지하면서 국내 정치·경제체제를 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킴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연방은 서방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원조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의 협조를 바라고 있다. 미국은 러시아연방의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IBRD) 가입과 서방선진7개국에 의한 240억달러의 대러차관제공에 협조함으로써 러시아연방이 이들 국제기구로부터 경제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연방은 경제적으로 서방경제에 편입 및 경

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연방의 경제건설에 일본의 경제 지원이 필수적인 바, 1990년대 러시아연방은 북방도서에 대한 주권을 일본에 이양하는 등 북방영토문제를 매듭짓는데 적극성을 보일 것이다. 미·일관계의 재조정을 통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 엘친의 권력기반 강화, 그리고 러시아 경제의 혼란가중 여부에 따라 북방도서의 대일 반환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다.

1990년대 미·러간 협력관계는 더욱 심화되고 강화될 것이며, 러시아연방의 대서방 경제권への 편입속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추세는 세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의 화해와 긴장완화에 또한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연방은 구소련의 후계자로서 아·태 및 동북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유지를 희망하고 있어서 1990년대에도 여전히 지역내 주요세력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 라. 중국의 개혁·개방 심화와 아·태지역국가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

중국은 천안문사건 이후 심각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여 왔다. 첫째, 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중국은 유일한 사회주의 대국으로 남게 되었다. 둘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제국의 對중국 제재조치에 따른 고립화이다. 중국은 이

두가지 고립화에 이율배반적 정책으로 대응하였는 바, 한편으로는 대내 체제강화를 위한 반「和平演變」투쟁을 강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내경제 발전을 위하여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노력을 경주하여 고립화로부터 탈출을 기도하고 있다.

1991년 8월 소련의 붕괴 및 공산당 해체로 중국은 과도기적으로 반「화평연변」투쟁강화를 주장하기도 했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이제 본 궤도에 들어서서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 및 주변 안보환경의 개선을 위해 주변국 및 서방선진국들과의 관계회복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기술통제장치」(MTCR)가입 의사 표명, 「핵확산금지조약」서명, 인권 및 무역문제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에 대한 最惠國待遇를 연장하는 등 미·중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또한 대일 관계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함께 일본이 요청한 미사일기술 확산방지를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의 조기 가입을 약속하였으며 일본 소해정의 걸프지역 파견에 대해서는 이해의 뜻을 표명한 바 있다. 중국은 자신의 대외채무잔고의 60% 이상을 일본의 엔차관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중국경제의 대일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개혁·개방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중국은 대미·일관계에서 보다 유연한 외교적 자세를 견지할 것으로 전

망되며, 이는 동북아질서 안정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아·태지역의 대국으로서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경제력과 미·일 동반자관계를 기반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정치·안보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려는 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역 강대세력인 일·중간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협조관계 지속과 함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경쟁 및 상호견제 노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마. 지역분쟁의 평화적 해결추세

냉전의 종식에 따른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냉전체제하에서 잠재되었던 민족, 종교, 영토문제에 기인한 지역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나, 강대국들간 세력경쟁 완화와 상호의존성 증대로 지역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협상 및 국제기구에 의한 중재나 조정으로 억제 혹은 해결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은 자신의 직접적인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역 분쟁에 대하여 개입을 자제하고 있으며 지역적 강대세력 혹은 초국가적 국제기구에 대해 지역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유고 및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의 민족분쟁이 일어나 유엔, 유럽공동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회의 등을 통하여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태지역에서는 한반도문제, 캄보디아문제, 일본의 북방도서문

제, 대만해협문제, 南沙群島문제 등에서 당사자간 타협 및 협상과 주변 강대세력간 타협 권고 등으로 지역분쟁이 해결 혹은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문제와 관련, 1990년대 한반도에서는 남북한간의 화해·협력과 주변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의 국제적 공존관계가 남북한간 국내적 공존관계로 발전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를 통한 대북 경제지원으로 남북한에 공히 영향력 확보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양상은 역내국가들이 과거보다는 국내문제, 특히 경제문제 해결에 치중하고, 분쟁개입을 자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적 초강대국인 일본의 영향력이 아·태지역에서 신장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일본은 국제적 역할증대를 위한 국내여건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 바. 군축 필요성 증대

미·러간 전략 핵무기의 대폭적인 감축 합의와 프랑스에 이은 중국의 핵확산금지조약 가입 결정 등 전세계적인 범위에서 핵무기와 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감축 및 확산억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으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의 가입압력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제3세계에 대한 핵확산금지 및 미사일기술확산 통제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바, 동북아에

서는 북한의 핵문제가 지역안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미·일·러 등은 긴밀한 협력아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유엔을 통한 국제적 제재 조치 등 다자적 접근노력도 구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미사일기술의 개발 및 해외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북한을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규제완화 대상국에서 제외시킴으로써 북한에의 선진기술 및 전략물자 유입을 봉쇄하여 북한의 핵 및 미사일개발 계획을 사전에 봉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유지하려 하고 있다.

한편 화학무기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유엔군축회의가 1992년 6월 제네바에서 열려 「화학무기금지협약」 초안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화학무기 폐기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군사기지 등 의심지역에 대한 강제사찰을 명문화하고 있어서 이 협약이 12월부터 서명되기 시작하면 제3세계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학무기가 제약대상이 될 것이고 북한에 대한 가입압력도 강화될 전망이다.

동북아에서는 미국의 전략구조 재조정(미군 전진배치 축소), 러시아연방의 극동군 감축(주로 육군) 및 중국의 감군 등 주요 역내국가들은 자국 이익을 고려하여 일방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군사력의 현대화도 병행되고 있는 바, 일본과 중국은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지역내 세력공백을 메우고 지역분쟁 재발 등

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전략적 우위선점을 위한 군비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은 이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군사력의 현대화 및 증강추세는 이 지역의 군축분위기를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국가들은 점차 유럽에서와 같은 군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 사. 역내 안보협력회의 창설 가능성 증대

아시아지역에서는 전략의 비대칭성과 이익의 다양성으로 인해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다자적 협력체가 즉각 실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무기 확산 위험, 일·중간 군비경쟁 및 영토분쟁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 혹은 완화하기 위하여 소지역적 다자간 안보구상에 대한 필요성이 지역국가들 사이에 확대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기구 창설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은 미국과 러시아가 지역강대세력으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쟁당사자의 직접협상 노력과 지도적 강대세력의 지역안보관리 노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다.

물론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상은 내재적 비효율성, 과도한 유지비용 및 현안문제 해결 지연 등으로 지역불안요인 억제에 단기적으로 큰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핵개발 및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그리고 지역분쟁 발생 가능

성이 부각되는 시점에서 지역국가들은 한반도 비핵화 및 동북아안보 그리고 지역내 신뢰구축 및 군축을 위한 토론의 장으로서 다자간안보협의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 양자간 동맹관계에 기초한 기존이익과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우려하여 다자간 접근을 반대하여 왔으나 최근 냉전이후시대의 국제조류와 국내 경제난 등으로 「集團介入政策」을 통한 국제사회의 책임분담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미국은 한반도문제 특히 한반도의 핵 및 군축문제에 대하여 다자간 안보협의체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본도 정치대국으로서 아시아 안보문제에 대한 자신의 발언권을 제도화하고 일본의 국제적 영향력 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다자간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러시아연방도 구소련의 「신사고」 외교노선을 답습하여 다자간 접근노력에 적극적이며, 중국은 과거 다자간 안보포럼에 회의적 태도를 보여 왔으나 일본의 군사역할 증대, 러시아연방의 불안정, 북한의 핵개발 및 이와 관련한 남북한 군비경쟁 등으로 향후 나타날 수 있는 지역불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지역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포럼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한반도문제 해결과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를 남북한 양자간 협상에 부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리고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다자간 안보포럼을 제의하고 있다.

아시아 안보협의체 구상과 관련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 확대외무장관회의(PMC: Post-ministerial Conference)가 아시아안보협력회의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구들의 지역적 개방성에 대한 입장과 이 기구들에 대한 미·일 등 관련국의 시각을 고려할 때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가 아시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회의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 및 동북아안보에 대한 논의를 위한 남북한 및 미·일·중·러 등의 소지역적인 동북아안보협의회가 소지역적 회의운영에 따른 효율성으로 인해 먼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 아. 미·일·중·러 4강구조 정착

1990년대 동북아에서는 미·일·중·러 4강이 상호의존적인 협력관계를 심화시키는 동시에 상호 견제하는 균형된 세력균형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상대적인 국력약화로 인하여 전진배치 축소등 전략구조 재조정을 통해 자신의 지역내 역할을 축소하는 반면, 동맹국들의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확보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지역적 균형자 역할을 담당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주도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이다. 러시아연방은 국내경제문제 해결에 몰두하여야 할 상황이므로 지역안정화와 주변국가와의 경제

관계발전을 모색하면서 기존의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 급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국은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처하고 동북아지역 세력균형 변화로 인한 세력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사력 현대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한 개혁·개방정책 및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가며 동북아지역의 안보문제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취지에서 군사력 강화, 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통과 및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 등 지역분쟁 해결 노력에 대한 참여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지역내 강대국의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역내 양자관계에 있어서 영토문제 미해결 및 일·중의 부분적인 군비경쟁 등 과도기적인 불안요인에도 불구하고 상호의존과 협력관계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는 바, 동북아질서는 화해와 긴장완화의 방향에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동북아 4강간의 세력균형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미국과 국내적 대변혁으로 쇠퇴한 러시아연방,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하는 중국 및 경제대국에 걸맞는 정치·군사적 역할증대를 모색하는 일본의 4강구조로 정착될 전망이다. 이러한 4강구조가 역내 국가간에 상호경쟁을 유발시켜 세력균형을 불안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현재와 같은 역내국가간 화해와 협력 추세가 심화될 경우 이러한 4강구조는 지역안정을 위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경제질서 변화

### 가. 자유무역체제속의 개방적 지역경제협력체 형성

세계적으로 공통의 경제·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인접국가들 간에 국경을 넘는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은 국제기구나 경제협력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공동체의 시장통합이 진전되고 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에 타결되었으며 동 협정은 협정체결 당사국들의 국내 비준절차를 거쳐 199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동남아국가연합은 1992년 1월 정상회담<sup>2)</sup>에서 동남아국가연합이 아시아자유무역연합(AFTA: Asian Free Trade Association)을 만들기로 합의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는 지역주의가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태지역 국가들은 블럭화를 선택하는 것보다 개방된 지역협력체를 구성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국가들의 최대시장인 미국도 폐쇄적인 지역적 경제블럭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유럽공동

2) 이 정상회담에서는 동남아국가연합 역외국가와의 협력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각국 및 지역에 공통된 문제를 필요에 따라 토의하는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East Asian Economic Caucus)를 개척한다고 합의하였다. 이 합의에 따르면 동아시아경제협의체는 1990년 12월 말레이시아 마하티르수상이 제시한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East Asian Economic Group)보다 느슨한 형태로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세계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설기관으로 하지 않고 무역블럭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체와 북미자유무역연합을 견제하기 위한 동남아국가들의 지역적 블록형성 움직임(AFTA 혹은 EAEC)과 자유무역주의 및 개방적인 지역경제권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서 압력을 받고 있고, 이러한 딜레마 속에서 일본은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해 주는 架橋역할을 하려고 한다. 즉 일본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시장경제원리를 전제로 한 기존의 자유무역체제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는 동시에 미·일간 협조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미국의 노력에 동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일본은 동남아국가들의 배타적인 지역적 경제통합 움직임에 대해 개방성을 지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미·일 등은 역내 경제문제의 협의 조정을 위해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를 개방적이고 유연한 형태의 지역협력기구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는 유럽공동체와 같이 공식적인 조약과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배타적인 지역적 경제통합기구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역내 15개국의 외무 및 통상장관들이 참가하는 유일한 다자간 회의로서 장차 영구적 사무국을 두는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같이 아시아·태평양국가들 사이에 다변적인 정책조정기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나. 양자적 경제관계 강화와 사회주의권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1990년대 동북아지역에서는 역내국가간 경제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활발한 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과 일본은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 협의를 계속하여 구조적 무역장벽 완화를 통한 무역역조 시정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한·일간에도 무역역조 시정과 일본의 대한 기술이전 문제가 중점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 관련, 중국은 개혁·개방을 심화하여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경제발전을 모색할 것이며, 러시아도 시장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혼란극복 노력 및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얻기 위한 국내 개혁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발전정책은 일본에 대한 경제의존도를 심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역내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도 증대될 것이다.

또한 북한도 핵문제의 해결을 통해 대서방 관계개선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신의 경제난 해결을 위한 서방자본 유인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국내적인 동요를 최소화하는데 정책적 우선권을 둘 것으로 보인다.

#### 다. 소지역적 경제권 대두와 일본의 지역경제 주도권 확보노력 강화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경제중시추세는 자본, 노동, 자원 및 기술의 국경을 초월한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으며, 타지역에서의 경제블럭화 추세에 대응하여 동북아시아에서도 지역경제권의 형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와같은 구상은, 첫째, 대만, 홍콩 그리고 중국의 광둥성과 복건성을 연결하는 華南經濟圈, 둘째, 남북한과 일본, 러시아의 극동 그리고 중국의 동북지역 등을 연결하는 환동해(일본해)경제권, 셋째, 중국의 황해에 면한 지역과 남북한의 서해안지역 및 일본의 구주지역을 포함하는 황해경제권, 넷째, 동남아국가연합국가들을 주축으로 하는 아시아자유무역연합 또는 동아시아경제그룹(EAEG) 및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EC) 등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두만강유역에 대한 개발 문제를 국제연합개발기구가 주관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는 등 실천단계로 발전되고 있어서 지역개발 및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국가들간의 국경을 넘는 투자 및 교역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역내국가들간 자본과 기술의 이동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역내 유일 선진국인 일본의 경제적 주도권 확대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최근 무역흑자가 대폭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저축도 증가하고 있으며 미·일간 세계적 규모에서의 동반자관계를 모색하고 있어서 국제

적인 공헌을 위해 외국원조계획(ODA) 제공을 증대시킬 전망이다. 또한 일본의 자본과 기술은 동남아는 물론 한국과 중국 등에 집중 투입되고 있어서 논의되고 있는 소지역적 경제권 구상이 실현되면 일본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이상의 경제권 구상에서 자신의 경제적 지도력 확대와 함께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의 다자간 협의체인 동남아 국가연합 확대외무장관회의(PMC),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민간주도) 등을 이용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려 하고 있다. 또한 종래 일본의 아시아·태평양 협력은 경제중심이었으나, 최근 일본은 동남아국가연합과의 대화를 정치·안보 문제에까지 확대함으로써 태평양협력의 틀을 이용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강화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VII.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와 대한반도정책

일본은 냉전종식의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제초강국으로서의 부상을 배경으로 전세계와 아시아 지역에서 새로운 역할 수행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한반도에 대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변화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역할증대의 일환으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에서 정치적 역할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아키히토 일본국왕의 동남아시아 순방(1991년 9월)과 중국방문(1992년 10월 예정), 그리고 가이후수상 및 미야자와수상의 한국방문(1991년 1월 및 1992년 1월), 가이후수상의 동남아시아 방문(1991년 4월) 등을 통해 일본은 아시아에서 헤이세이(平成)시대 일본의 새로운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을 일본의 아시아 진출을 위한 출발지 혹은 시험대로서 인식하고 한반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1990년 9월 가네마루 전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사회당 공동대표단의 평양방문을 계기로 일본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 한반도에서 남·북한 양측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1. 일본안보와 대한반도 인식

한반도는 일본에게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큐슈(九州)

와 불과 200km의 바다를 사이에 둔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일본의 아시아 대륙으로의 침략경로 혹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緩衝地帶로서 존재해 왔다. 일본인은 오랫동안 한반도를 「일본의 옆구리에 들이대는 단도」로 보아 왔으며 일본에 적대적인 세력이 한반도에서 패권을 잡는 것을 가장 우려하였다. 이 때문에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평화적이고 일본에 우호적인 정권이 한반도에 존속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인식과 입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일본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한반도의 전쟁으로 야기될 수 있는 중국 및 소련과의 대립 가능성을 우려한다. 둘째, 일본에 적대적인 정부가 한반도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한다. 셋째, 일본은 한반도에서 최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를 바란다.<sup>3)</sup> 이렇게 볼 때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의 주안점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장차 일본의 환일본해경제권구상하에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및 지도력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두개의 한국」이라는 평화공존상태의 유지가 일본의 이익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바람

3)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p. 33.

직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의 통일노력 및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도 위의 세가지 대한반도 인식이 보장되는 선에서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위와 같은 대한반도 인식 위에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첫째,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의 유산을 청산하기 위한 만족할 만한 선행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남한과 전통적인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해야 한다. 셋째, 미국과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의 지도력을 확대하여야 하며, 남한과도 미·일 동맹관계의 연장 이상의 독자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sup>4)</sup>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서 일본은 한반도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취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식민지배의 역사적 유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사과 및 경제지원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남한의 점증하는 국제적 지위향상과 북방정책 성공으로 남한을 동북아지역 및 아·태지역에서 일본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치·경제적 파트너 혹은 경쟁자(對중·소 및 對태평양국가

4) Byong-joon Ahn, "Japanese Policy Toward Korea," a paper prepared for the Korea-Japan Bilateral Workshop "Korea-Jap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June 7~9, 1991, Seoul, Korea, pp. 1~4.

접근에 있어서)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판단하에 남한과 정치·경제 및 안보면에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독립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셋째, 미국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서 일본과의 역할분담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역할분담 차원에서 동 지역에서의 정치·안보적 역할을 점차 적극적으로 증대시키고 있다.

## 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일본은 전후 미·일 안보조약에 의하여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여 왔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한반도정책도 미국정부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의 틀안에서 전개될 수 밖에 없었다. 일본은 전후 미·소간 냉전이 격화되고 중·소·북한 진영과 한·미·일 진영간의 대립이 첨예화됨에 따라 대외정책에서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sup>5)</sup> 한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한국에 대한 배려에서 북한과의 경제 및 인적교류를 자제하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일본은 남한이 미국과의 긴

5) 石井修, 「冷戦と日米關係」(東京: ジャパンタイムズ, 1989), pp. 98~122. 일본은 1950년대 냉전상황 속에서 제한적이거나 북한과의 무역을 인정하고 사회당의원을 비롯한 진보계 인사들의 방북을 허용하였지만, 이것은 국내 좌익계 요구를 무마시키고 북한과의 대화채널 유지 및 북한사회의 정보를 얻기 위한 제한적인 수준이었으며 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 및 인적교류를 허용한 것이었다.

밀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고 간주하였다. 즉 1969년 사토·닉슨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긴요하다”는 소위 「韓國條項」을 포함시킨 이래 1975년 미키·포드 공동선언, 1977년 후쿠다·카터 공동선언, 1981년 스즈키·레이건 공동선언에서 한반도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인정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한국의 안전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의 축으로서 미국의 안보에 불가결하다”는 미국의 인식과 일치되는 것이며,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된 소련의 극동군사력 증강과 1979년 소련군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으로 인해 미·일 양국간에 공통된 대한반도 안보의식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후 일본은 1983년 1월 나카소네수상의 방한시 40억달러 상당의 차관 제공 등을 통해 일본의 안보를 위한 한국의 방위노력을 평가함으로써 한·일관계는 보상차원에서 안보차원으로 발전되고 그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다.<sup>6)</sup> 즉 일본은 남한을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불가결한 정치·안보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또

6) 일본은 아시아 방위를 위한 미·일간 국제적 역할 분담정책의 일환으로서 나카소네 수상의 방한시 40억달러의 경제차관을 한국에 제공하기로 하였는 바, 이같은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협력은 한국의 경제발전에 기여, 결과적으로 한국의 방위능력제고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도모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본은 포괄적인 차원의 안보협력을 한국에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카소네 수상 방한시 한일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의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한국의 방위력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군사력증강을 지지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한영구, “한국 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권 5호 (1990년 5월), pp. 60~65.

한 경제적으로도 동북아에서 두번째로 큰 시장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우선 안보적인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상호방위조약 및 안보조약을 체결하여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을 매개로 한·일 양국은 공동의 안보의식으로 연결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안보분야에 있어서 상호연계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으나 동북아에서 미국과 우호관계에 있다는 점,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공유한다는 점, 그리고 지정학적으로 상호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의 공통요인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중요하다는 공통된 입장과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은 북한이 자신에 대해서도 잠재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본이 안보면에서 미국과 연결되어 있는 한 남한과 공동의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sup>7)</sup> 이와 같은 인식하에 일본은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초로 삼고 있다.<sup>8)</sup>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은 남한과 협력관계를 증대시킴으로

7) 그러나 이것이 한반도에서 일본의 방위역할을 높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남한지역에서 일본군인이 남한군인들과 공동행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양국간의 과거 역사적 유산에 따른 감정상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비록 미국과 일본이 1980년대 초이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지만 일본의 공헌은 남한에 대해 방위공약을 수행하는 미군에게 기지를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제한되어 있다.

8) 日本外務省編, 「外交青書」(平成 3年版), 第35號, p. 208.

써 양국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심화되었다. 첨단기술을 지닌 경제적 초강대국 일본과 중진신흥공업국인 한국사이의 구조적 차이로 남한은 심각한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sup>9)</sup> 한·일간의 경제협력관계는 시장, 자본, 기술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을 추구해 왔으며 금후에도 더욱 긴밀해질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그러나 이와같은 일본의 대남한 우선시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회있을 때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모두를 고려하는 대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남북한 양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1970년대 초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려고 시도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남북한 평화공존 및 현상유지의 대한반도 정책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sup>11)</sup> 또한 일본은 1970년대

9) 한·일간의 무역 수지는 1985년 9월에 통화에 대한 플라자협정 이래 일본은 남한으로부터 수입을 늘려 남한의 무역수지에 도움을 주었으나 1988년 이래의 엔평가절하로 다시 악화되었다(1990년 60억달러 적자). 또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투자는 임금상승때문에 감소하고 있으며, 한국의 기술이전 요구에 대해서 일본은 기술이전이 민간부문에 의해 우선적으로 조정되고 있다는 핑계로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鳥羽欽一郎, 「10年後 韓國と 北朝鮮は こう 変わる」, pp. 80~108; 『毎日經濟新聞』, 1992. 6. 9, 6. 12.

10) Rob Steven, *Japan's New Imperialism* (London: Macmillan Press, 1990), pp. 146~67.

11) 1971년 미·중화해로 인한 동북아시아 데탕트 분위기 속에서 일본은 북한의 對韓 위협이 감소되었다는 정세인식 하에 1970년대 초 북한과의 정경분리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자민당의 일부인사와 일본사회당이 북·일간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움직임에 적극성을 보였다. 1971년 11월 자민당의 구 노슈지(久野

일련의 미·일정상간 공동선언을 통해 대한반도정책에 있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기본으로 한다고 발표하면서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일본은 1971년 9월에 개최된 미·일각료회담에서 1969년 사토·닉슨 공동선언의 「한국조항」때문에 한반도 유사시에 자국이 한반도사태에 개입될 것과 중·소·북한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이 「한국조항」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75년 포드·미키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조항」이 「한국」을 「한반도」로 대체하려는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은 한반도의 안전이며 한반도의 안전은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신한국조항」으로 절충되었다. 이 「신한국조항」은 1977년 후쿠다·카터 공동선언에서 “일본 및 동아시아의 안전을 위하여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가 계속해서 중요하다는 것에 유의하였다”고 하는 소위 「한반도조항」으로 바뀌었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반도정책을 한국 일변도로부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음을 의미하며, 남북한 평화공존체제의 확립과

---

忠治)의원을 포함 240명의 초당파의원들로 구성된 「일·조우호촉진의원연맹」이 발족되었고, 1972년 남북 「7·4 공동성명」으로 남북한의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1973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으로 할슈타인원칙이 포기되자 다나가 내각은 문화, 스포츠로 한정된 북한과의 인사교류를 경제·기술교류에로 확대하는 정책전환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일본의 북한과의 무역은 1974년 수출 2억 5천만달러, 수입 1억달러에 달하여, 일본이 북한에 있어서 자유주의국가중 최대의 교역상대국이 되었다. 유석렬, 「남북한관계론」(서울: 정음사, 1985), pp. 361~72.

미·일·중·소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을 목표로 한반도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의도로 평가된다.<sup>12)</sup>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미·소간 신냉전 추세에 따라 남북한 等距離政策으로부터 후퇴하여 한국과의 안보유대를 강화하는 정책전환을 이루었으나,<sup>13)</sup> 최근 소련붕괴로 인한 탈냉전 기운이 본격화되고, 주한 및 주일미군 철수등 미국의 아시아 전진배치전략이 재조정됨에 따라, 일본은 자신의 대한반도정책을 다시 남북한 등거리외교로 전환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초강대국간의 대결이 사라져 가는 시기에 지역분쟁을 지역주의 기반위에서 억제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을 내세워 북한을 포함하는 분쟁유발 가능 당사국들과의 대화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12) 강태훈, “일본의 대북한정책,” 「한국정치학회보」, 25집 2호 (1992년 겨울), pp. 377~78.

13) 1970년대 중반이후 한반도에서는 남북대화가 사실상 중단되었고 북한에 의한 해상도발 및 비무장지대 터널 발견 그리고 1975년 봄 베트남 공산화 및 그에 뒤이은 김일성의 호전성 북경발언 등 남한에 대한 북한의 위협 증대를 나타내 주는 사건이 속출하였으며, 한·일관계도 김대중, 문세광사건, 기무라발언 등으로 국교정상화 이후 최악의 상태가 되자 일본은 자국의 안보이익의 견지에서 남북한 균형정책 혹은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일본은 미야자와 외상을 1975년 4월 워싱턴에 파견하여 닉슨-사토 공동성명의 한국조항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한국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준수를 요청하였으며, 미끼 수상도 8월 미국을 방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하였다. 한편, 일본은 1975년 8월 한·일의원연맹 설립 및 조총련에 대한 규제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한국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에 전력을 다하였다. 뒤를 이은 후쿠다정권도 한반도 나아가 아시아의 세력균형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우려하여 카터의 주한미군철수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였다. 위의 논문, pp. 379~80.

한반도의 정치·안보문제에 대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소 및 한·중수교로 일본은 한반도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증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3. 일·북한 관계개선

최근 일본은 아시아에서의 미군감축과 남한의 북방정책 성공 그리고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영향력 증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하였다.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하여 한반도에서 남북한에 대한 외교적 조정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 가. 북한의 대일입장

북한의 대외정책목표는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며,<sup>14)</sup> 이

14) 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 제5기 1차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 제5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적 기초위에서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조선로동당규약」 전문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원,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0), p. 483, 499. 이러한 북한의 대외적 목표 및

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은 첫째, 국제적 혁명역량과의 유대강화의 일환으로서 대중·소 동맹관계 유지정책과 둘째, 反帝反美鬪爭政策 및 대한지원세력 약화를 위한 한·미·일 3각동맹을 반대하는 정책을 추구하여 왔다.<sup>15)</sup> 북한은 미국을 “현대의 가장 야만적이고 흉악한 제국주의이며 인류공동의 원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을 “미제국주의와 종속적 동맹관계에 얽혀 있는 위험한 침략세력” 혹은 “미제의 아시아 전략에 편승하여 미제를 등에 업고 대동아 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 보려고 망상하고 있는 군국주의 세력”으로 비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반제반미주의와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경계를 기초로 하여 북한은 한반도의 분단 및 새로운 전쟁위험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에 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여 일본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또한 북한은 일본의 정치군

---

정책은 공산체제유지라는 대내적 목표와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통일이라는 주제를 이용하여 자국민들을 반미 및 반남한정책에 동원하는 데에 이용하여 왔으며 국내적으로 통제와 동원정책을 정당화하는 데에 이용하였다. Byung Chul Koh, “Is North Korea Changing Its Southward Strateg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2 (Summer 1991), pp. 60-61; Rinn-Sup Shinn, “North Korea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Pas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onsored by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Korea, May 31~June 2, 1992, p. 3.

- 15) 북한이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의 형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한일회담의 개최시 부터이며, 한·일조약의 체결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인식한다. 小此木政夫, 「日本と北朝鮮」(東京: PHP研究所, 1991), pp. 93~101.

사대국화에 대해 “미제국주의자들이 일본을 군사대국화의 길로 떠밀어 침략적인 아세아·태평양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미·일동맹,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 준수 및 핵우산보호를 통해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체제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공식적인 대일 적대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인적·물적 교류증대 촉구 등 대일접근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일본이 중·소 등 대공산권국가들과 관계개선 노력을 한 것을 계기로 1955년 남일외교부장의 발표문을 통해 일본에 대하여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을 제안하였고,<sup>17)</sup> 대일 「인민외교」를 적극 추진하여 정당 내지 민간교류를 확대시켜 나갔다.<sup>18)</sup> 1960년대 북한의 대일관

16) 윤우철,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적 군사빨력강화책동,” 「로동신문」, 1992. 10. 30; 황진석, “평화적 이행전략은 제국주의 위기의 산물이다,” 「로동신문」, 1990. 7. 27. 특히 북한은 1992년 6월 7일 일본의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의 참의원 특별위원회 가결과 관련, “이 법안의 통과로 제2차세계대전 후 억제되어 왔던 자위대 무력의 해외파견을 실현하기 위한 법적기초가 이루어지고 일본이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으로 줄달음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비난하였다. 리석윤, “굴레벗은 군국주의,” 「로동신문」, 1992. 6. 10.

17) 그러나 일본은 1955년 남일 북한 외교부장이 제의한 양국간 관계정상화를 위한 정부간 교섭을 「남북한 쌍방승인불가」 원칙을 내세워 거절하였다.

18) 일·북한간의 민간교류는 1953년 11월 오오야마(大山郁夫)가 일본인민평화친선 사절단으로 북한을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하토야마(鳩山)정권이 등장한 이후인 1955년부터 활기를 띠었다. 일본 사회당과 일부 진보계 단체들은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적극적이었으며, 북한도 소위 인민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정당 내지 민간교류를 확대시켜 나갔다. 또한 무역 면에서도 이케다(池田) 내각이 政經分離 원칙에 따라 공산권과의 교역확대와 동시에 1961년 북한과의 직접무역을 허용하여 1963년 일·북한간 무역총액은 1,5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정규섭, “북한외교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pp. 48~50.

계는 공식적으로는 1965년의 한·일회담 및 한·일국교정상화에 따른 한·미·일 안보결속강화로 적대관계를 유지하였던 반면, 민간교류에서는 일본과의 인사교류를 통한 소위 「인민외교」를 꾸준히 해 나가 일본내 좌익계 정당 및 사회단체와의 연계성을 유지하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1970년대를 전후하여서도 닉슨독트린 선언과 1972년 2월 닉슨의 방중, 1972년 9월 일·중 국교정상화 등을 계기로 동북아 국제질서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자 북한은 대일접근을 위한 여건이 호전되었다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대일접근정책을 취하였으며, 1971년 시작된 6개년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각종 플랜트 수입을 위하여 조총련을 통해 재계지도자에게 접근하였다.<sup>19)</sup> 비록 일·북한관계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악화되었지만<sup>20)</sup> 북한은 기본

19) Robert A. Scalapino, "North Korean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Cal.: 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pp. 334-41; Tamaki Moto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4 (Winter 1991), pp. 70~72.

20) 1970년대 후반 일·북한간 경제관계는 한·일간의 정치경제적 협력이 증대하고 북한이 80억엔에 달하는 외채를 갚지 못하게 되자 악화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일·북한관계는 북한의 남한에 대한 테러공격으로 일본이 제재조치들을 취하게 되자 더욱 악화되었다. 일본은 1983년 10월 랑군 폭파테러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고(1985년 1월 해제) 1987년 북한의 요원이 KAL항공기에 폭발물을 설치하여 인명 피해를 입히자 같은 제재조치를 취했다. 1988년 9월 일본이 두번째 제재조치를 해제했지만 일·북한접촉은 더 진전되지 않았다. 경제면에서 북한이 일본에게 외채를 갚지 않자 일본정부는 1986년 북한에 대한 무역 보험프로그램을 중지하였다. 이러한 보험중지로 북한은 일본과 현금 결제로 교역하지 않을 수 없게 됨으로써 북·일관계는 더욱 제약되었다. 山本剛士, "日朝不正常關係史," 「世界」, 臨時增刊, 1992年 4月, pp. 171~96.

적으로 일본에 대해 관계개선을 통한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바라면서 대일접근을 시도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은 대일접근을 통해 한·미·일간의 정치·군사적 유대관계를 이완시키려고 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일본으로 하여금 남북한에 대해서 등거리정책을 취하도록 하여 한반도문제 특히 통일문제에 있어서 중립적 자세를 취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다. 셋째, 북한은 일본의 영향력 있는 좌익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일본의 재무장 및 방위력 강화를 억지시키기를 희망하고 있다. 넷째, 북한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한 선진자본기술의 도입통로 마련이라는 경제적 목적과 비정치적교류를 통한 우호관계 증진 및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나. 일·북한 수교교섭의 현황 및 전망

이상과 같은 북한의 일본에 대한 접근노력과 함께 국제정치의 탈냉전 상황 및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환경의 변화로 인해 1990년 여름 북한과 일본은 양국간 관계개선에 새로운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북한이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요인이 있다. 첫째, 북한은 1990년 6월 4일 노태우대통령과 고르바초프대통령사이에 정상회담이 열리자 충격을 받았다. 이 정상회담에서 한·소 양국은

외교관계를 맺을 것을 밝혔는 바, 북한은 대일국교정상화를 통해 한·소 수교에 따른 외교적 손실을 만회하려 하였다. 둘째, 북한은 자신의 정체된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외국 특히 일본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하였다. 북한경제는 매년 2%의 낮은 성장율을 기록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고 최근에는 마이너스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sup>21)</sup> 여기에 소련이 붕괴되고 러시아연방과 중국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북한과의 무역에 대해 硬貨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으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도입은 북한이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대안이었다. 셋째, 김일성은 김정일 후계체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하여 국제관계의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sup>22)</sup> 넷째, 북한은 자민당이 1990년 2월에 중의원선거에서 무난히 과반수를 획득함으로써 리쿠르트 스캔들에 의해 시작된 정치적 위기로 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자 일본의 집권당과 거래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sup>23)</sup>

한편, 일본도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1988. 7. 7)과

21)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p. 14~27.

22) 小牧輝夫, “北朝鮮は何た のめに どこまで”變わる,” 「世界週報」, 1992年 5月 19日, pp. 22~23.

23) 북한지도자들은 1989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자 처음에는 자민당이 사회당이 지도하는 연합에 의해 대체될 것으로 믿었었다. Hong Nack Kim,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urrent History*, vol. 90, no. 555 (April 1991), p. 165.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의 전개로 대북한관계에서 행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1990년 9월 가네마루 신 전부수상을 대표로 한 자민당·사회당 대표단의 평양 방문을 통해 일·북한 관계개선 교섭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일본이 1990년 9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진하게 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다. 첫째, 북한처럼 일본도 한·소정상회담에 의해 충격을 받았다. 일본은 한·소간의 관계 급진전을 예상하지 못했으며 더구나 1990년 5월 24~26일 사이에 노태우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할 당시만 하여도 노대통령은 가이후수상에게 이와 같은 계획을 알려주지 않았다.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이 회합을 환영했지만 일본과의 사전협약이 없었던 것에 대해 불쾌해 했다. 특히 일본 지도자들은 일본이 소련과 평화조약을 체결하는 데에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대소 이니셔티브에 의해 소외감을 느꼈다. 둘째, 국내적으로 가네마루가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위해 각별히 독자적 행동을 했으며, 가이후 당시 수상이 외교적 돌파구 마련 및 사회당과의 타협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를 받아들였다. 셋째, 외무성이 아시아에서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폭넓은 노력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조치들을 환영했다.<sup>24)</sup>

24) 일본의무성이 정당외교에 대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결백을 주장하지만 외무성이 가네마루의 동의를 있기 전부터 조심스럽게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수

가네마루 前부수상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사회당 공동대표단의 평양 방문(1990. 9. 24~28)을 계기로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원조를 얻기 위하여 양국간 국교정상화 문제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단을 맞이한 북한은 두명의 일본 후지산마루(富士山丸) 선원을 석방하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sup>25)</sup> 국교정상화 의지를 밝혔다. 일본측 대표들은 예상 밖으로 적극적인 북한측 제의에 대한 응답으로서 일본인에 대한 북한 여행금지 해제, 양국간 위성통신 개방 등을 북한측에 약속하였다. 또한 일본측은 식민지배기간 동안에 북한에 입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양국간 정상화 이전에 할 것과 2차대전 이후 45년간 북한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것을 약속했으며 “조선은 하나다”라는 북한의 주장을

---

행해 왔던 점으로 미루어 일·북한접촉 및 관계개선 노력은 외무성의 협조 혹은 묵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가네마루를 평양에 동반했던 아시아국 부국장 가와시마는 3월 파리에서 북한과 첫번째 비밀 접촉을 가졌고 7월 초에는 도쿄에서 두번째 유사한 회합을 가졌으며, 7월 말에는 교토에서 세번째 회의를 가졌다. 「조선일보」, 1990. 12. 5, p. 2.

- 25) 이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1983년 10월 30일 북한의 남포항에 정박 중이던 화물선 제18호 후지산마루(富士山丸) 선박에 북한군 병사 민홍구가 몰래 숨어 타서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그후 11월 15일 화물수송을 위해 다시 남포로 입항하였을 때, 북한은 이 배의 선장과 기관장을 억류하였다. 일본은 북경과 비엔나에서 북한의외교관들과 선원 2명의 석방을 위한 교섭을 벌였으나, 북한은 민홍구를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는 한 일본인 선원을 석방할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1987년 1월 김만철 일행 망명사건 및 11월 대한항공기 폭파사건이 일어나고 1987년 11월 일본정부가 민홍구를 가석방하자, 북한은 12월 24일 일본인 선원 2명에게 계획적인 스파이 활동과 민홍구 납치를 이유로 15년간의 교화노동형의 판결을 내렸다. 山本剛士, “日朝不正常關係史,” pp. 175~77.

승인한다고 약속하였다.<sup>26)</sup>

가네마루 방문시의 양측의 합의중 전후보상 합의와 「하나의 조선」논리에 대한 합의는 일본의무성의 공식적인 정책 입장을 넘는 것이어서 한국의 반발을 일으켰고, 미국도 북한이 핵안전협정 조인을 거부하고 남북관계진전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와 같은 급속한 합의가 이루어진 데에 대해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sup>27)</sup> 비록 한국은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을 통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 관계개선하는 데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바 있지만, 일본의 이중협상 태도를 보면서 일·북한 정상화가 남북한의 대화 진전 및 통일과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였다. 한국 정부는 1990년 10월 초 자신의 방북의도를 설명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한 가네마루를 통해서 일본이 북한을 대하는데 있어서 5개원칙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후에 정기적인 외교채널과 1991년 1월 노·가이후 회담을 통해 이 원칙들을 재확인하였다.<sup>28)</sup>

26) *Korea Herald*, September 29, 1990, p. 1.

27) 주일 미국대사 아마코스트는 일본관리들 및 가네마루와 일·북한 국교정상화 문제에 대해 협의하였다. 미국이 일본관리들에 대한 충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의 핵사찰문제였으며, 1990년 10월 30일 솔로몬 (Richard Solomon) 미국무성차관보는 “한반도 핵확산이 동아시아에서의 안정에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小此木政夫, “朝鮮統一問題と 日朝國交渉,” 「國際問題」, 1991年 3月, pp. 29~30.

28) 일·북한수교협상 5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협상에 대해서 남한과 광범위하게 협의할 것, 둘째, 일본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설립하기 전까지는 북한에 경제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과 이 원조는 북한의 군사적인 목적

일본외무성은 북한과의 공식적인 협상관할권을 정당으로부터 인수하기를 바라던 차에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됨으로써 정당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sup>29)</sup> 외무성 본연의 신중한 태도로 협상을 진행시켰다.<sup>30)</sup> 일·북한수교협상은 1992년 5월까지 모두 7차에 걸쳐 회담이 열렸으나, 회담결과는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sup>31)</sup> 본 회담에서 북한은 조기 수교를 목표로 협상진전을 위해 노력하였던 반면, 일본정부

---

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셋째, 일본은 남북한대화 진전에 주의를 기울일 것, 넷째, 일본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핵사찰 협정에 조인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것, 다섯째, 일본은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유도할 것 등이다.

- 29) 일본외무성은 이제 정당으로부터 압력을 덜 받게 되었으며 협상을 자신의 속도대로 이끌어 가는 데 성공하였다. 자민당과 일본사회당간의 관계는 1990~1991년사이의 겨울에 걸프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놓고 현격히 악화되었고 이것이 대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협조체계에 악영향을 미쳤다. 한편, 일본사회당은 타나베 부위원장이 개인자격으로 일·북한 관계개선을 위해 중재 역할을 시도하지만 일본사회당의 영향력은 대중의 지지 쇠퇴로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가네마루의 미·북한간 관계개선 중재 노력도 미국의 거부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북한은 일본의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서기 김용순이 이끄는 대표단을 일본에 파견하였으나(1991. 2)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였고, 한·일의원연맹 의장인 다케시타를 평양에 초청하였으나 실패하였다.
- 30) 일·북한수교협상은 1991년 1월 말 제1차 평양본회담이 열리기 이전에 세 차례에 걸쳐(1990년 10~11월) 북경에서 일정 및 협상 주제에 대한 예비회담이 열렸는 바, 일본의 예비협상 대표 다니노 사구타로(谷野作太郎)는 예비협상종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북한의 정당대표들이 발표한 1990년 9월 28일 공동성명이 구속력이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讀賣新聞」, 1990. 12. 18.
- 31) 1991년 5월 3차 북경협상에서 일본대표인 나카히라대사는 일본은 북한이 핵 시설에 대한 국제사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외교관계를 설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혔다.

는 7차에 걸친 회담에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머물렀을 뿐 실제협상과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일·북한수교협상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주요 의제가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협상진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32)</sup> 첫째가 IAEA 핵사찰문제이고, 둘째가 전후시기에 대한 보상문제이다.<sup>33)</sup> 핵문제와 관련, 일본은 과거 자신의 핵피폭 경험때문에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자국의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sup>34)</sup> 더구나 미국은 일본정부에 대해 북한과의 교섭시 핵문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아 줄 것을 요구하였다.<sup>35)</sup>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일·북한협상에서 북한의 IAEA사찰수락을 국교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북한은 1991년 미국의 대북 핵불사용 의사 전달 및 해외배치된 전술핵 철수선언, 노태우대통령의 핵부재선언 및 한·미 양국의 팀스피리트 중지발표 등으로 핵사찰을 받을 수 있는

32) 각 회담별 쟁점 및 경과와 의제별 타결 현황에 대해서는 허문영, “북한 의 대일·미 교섭 현황과 수교전망,” 「통일연구논총」, 창간호 (1992년 6월), pp. 66~71; 김용호, 「북한과 일본의 수교회담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pp. 34~39

33) 관할권문제는 북한의 관할권이 휴전선 이북에만 미친다는 데에 양측이 양해한 상태이고 제3차 일·북한 수교회담을 난관에 봉착시켰던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여자 이은혜(김현희의 일본어 선생) 문제는 단기적인 논란거리 는 되어도 장기적으로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4) Koji Kakizawa,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pp. 61~65

35) 菊池正人, “オリフ”と核: 日朝交渉 見つめる アメリカの眼, 「現代 ユリア」, 第 308號 (1991年 1月), p. 27.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1992년 1월 30일 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였고 1992년 5월 IAEA에 핵시설에 대한 보고서 제출 및 6월 핵사찰을 받았다. 그러나 IAEA 핵사찰에서 북한의 핵재처리 시설이 확인됨에 따라 일본은 제7차 일·북한회담(5월 13일~15일)에 이어 앞으로 남북한간의 상호사찰까지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일 북한관계 개선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sup>36)</sup>

한편, 보상문제와 관련 나카히라 일본측 협상대표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전후손실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을 것임을 누차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북한은 점차 협상 논의의 초점이 전후기간에 대한 보상으로부터 식민지배기간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하는 보상방식문제로 이전시켰다.

이처럼 일·북한 수교협상은 핵문제와 보상문제로 난관을 맞고 있는 바, 협상 난관의 이면에는 막후 조정자로서의 미국의 입김이 작용하였다. 미국은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실질적인 압력수단을 갖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일본에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하였으며 일·북한간의 관계개선이 아시아 전체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북한수교 교섭 초기에는 제기되지 않았던 핵문제를 국교정상화의 실질적 전제로 제시하였으며, 미야자와(宮澤)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본정부의 입장

36) 일본은 7차 일·북한수교회담에서 핵문제에 대해 국제사회 및 일본사회에 북한의 핵의혹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朝日新聞」, 1992. 5. 16.

은 더욱 미국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노력에 의해 일·북한간 수교협상에 진전이 없자 북한은 대일관계에서 미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제반 이니셔티브를 취하였으나,<sup>37)</sup> 미국은 대북 관계개선을 위한 5개 전제조건과 더불어 북한의 인권문제와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해외판매에 대해서도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일본의 대북접근을 억제시키고 있다.<sup>38)</sup>

일·북한 수교협상이 북한의 핵문제와 賠償문제 그리고 한국 및 미국의 압력에 의해 지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일·북한 국교정상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와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한국정부가 제시한 5개원칙 중 몇가지를 이미 지키지 않고 독자적으로 일·북한수교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일·북한간 수교협상을 남북대화 진전과 연계시키는 문제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일간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바,

37) 북한은 미국의 경직된 대북자세에도 불구하고 1991년 6월 중순 미군유해를 반환하였으며, 북한은 대북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일본을 따라잡지 않을까 하는 일본의 우려(1971년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처럼)를 이용하려고 하였다. 예를 들면, 1991년 5월 21일 북·일 협상이 중단되었을 때 북한언론매체들은 1989년이래 북경에서 미국과 북한간에 수차례 열린 참사관급 접촉 수준을 올릴 것을 요구함으로써 일본의 경쟁심을 자극하려 하였다. 「内外通信」, 1991. 5. 23.

38) 미국은 1) 핵사찰문제해결 2) 남북대화의 진전 3) 테러리즘 포기선언 4) 대미 중상 선동중지 5) 한국전쟁당시 미군의 유해반환문제해결 등 5개항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북한이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경우에 한해서 고위급접촉을 포함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관계개선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남한 입장은 일·북한간 관계가 남북대화의 의미있는 진전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정상화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입장은 비록 남북한 대화가 다시금 중단되더라도 일·북한 정상화협상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39)</sup> 특히 최근 한·중 수교는 일·북한 관계정상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수교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본의 대북한 수교협상과정상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일본은 한반도통일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에 입각한 독자적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 4. 통일에 대한 일본의 입장 및 전망

일본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반도통일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지지하여 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일본의 대한반도 인식에 비추어 볼 때, 일본정부는 공산주의 통일한국의 등장과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력분쟁 등 한반도의 불안정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남북한 평화공존을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인의 노력으로 실현될 경우 통일과정이 완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sup>40)</sup>

39) 1991년 1월 남북한 고위급회담을 북한이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남북한대화를 재개시키는 데에 일·북한관계정상화 교섭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일·북한교섭을 진행시켰다.

40) Brian Bridges,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ward Norm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2 (Winter 1991), p. 190.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한반도의 통일은 한국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형식적 지지입장을 표명하면서도, 남북한 사이에 화해와 평화공존을 촉진하는 것이 궁극적인 통일로 향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는 논리로 남북한관계의 안정화 혹은 남북한 평화공존체제 유지에 외교적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 및 중국과의 협의를 통해 한국 상황에 대하여 대화분위기를 형성하는 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sup>41)</sup>

일본인 중에는 남북한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인사들이 있다. 그들은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 초래될 수 있는 지역불안정에 대한 우려때문에 한국의 통일보다는 남북한의 현상유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제시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군사력이 일본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이다.<sup>42)</sup> 더욱이 우려되는 것은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한반도의 남과 북 모두는 오늘날 남북한 대립 및 남북한의 대일본 경제의존으로 상당히 완화되기는 했지만 일본을 혐오하고 있으며, 만일 한국이 통일되면 反日感情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인 면에서

41) Yukio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p. 104.

42) 통일한국은 북한의 110만과 한국의 60만을 합한 170만의 병력을 보유하게 되며, 이는 25만 정도의 일본자위대병력을 훨씬 능가하는 규모이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한국과 무역경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일본내 일부 언론 및 재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통일한국은 근면한 노동력과 6,500만 인구의 높은 교육수준 및 방위비 감소를 바탕으로 강력한 경제강국으로 부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재벌은 러시아나 중국이 투자를 바라고 있는 분야, 즉 자동차를 포함한 소비재분야와 건설분야 그리고 중공업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일본에 위협이 되며, 미국의 대일견제 또는 대일 압력을 위한 대안적 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은 일본이익에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한반도를 통제하기 위해 통일된 한국보다 분단된 남북한의 상태가 일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다.<sup>43)</sup>

그러나 위 논거에 대한 반론에 따르면, 통일한국이 공산주의를 택한다면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분단을 선호할 수 있지만, 세계조류에 비추어 공산화 통일의 가능성이 희박한 오늘날의 현실을 고려할 때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를 채택할 한반도의 통일을 특별히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즉 이들 한국통일 불반대론자들에 따르면, 한반도통일을 우려하는 논자들은 통일한국이 현재 수준의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는 가정과 통일한국이 군사적 관심의 초점을 동쪽의 일본에게 향할 것이라는 잘못된 가정에 입각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43) 이러한 우려는 일본의 평론가 다케무라 켄 이치(竹村健一)의 저서 「日本の悲劇」(東京: 祥傳社, 1991)에 잘 나타나 있다.

그들에 따르면 이 가정은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첫째, 통일한국이 통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병력을 보유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통일한국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다면 통일한국이 정권의 유지를 위해 막강한 병력을 보유할 가능성도 있지만, 민주주의적 통일한국에서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지도자들이—물론 지리적 조건에 따라 한국이 금후도 상당수의 병력을 보유할 필요는 인정되겠지만<sup>44)</sup>—남북한 대결 해소 및 이에 따른 직접적인 위협 소멸로 기존의 많은 병력을 비생산적인 업무에 계속 투입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둘째, 통일한국이 그 군사적 관심의 초점을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향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대해, 이 반론자들은 통일한국이 러시아연방 및 사회주의대국 중국과 국경을 접하게 됨으로써 양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일본에 대한 적대적 행위를 취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유지할 경우 서방측의 일부로 잔류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산주의로부터의 위협전선이 400km 북상하는 결과가 되어 일본에게는 오히려 바람직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sup>45)</sup>

44) 인구의 1%정도의 병력의 전통적인 표준비율을 상정할 때 한국은 65만정도의 방위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45) Mark T. Fitzpatrick, “그리아統一을 日本は 何故 歡迎するか,” 「國防」, vol. 40, no. 9 (1992年 9月), pp. 12~17; 사토 세이자부로(佐藤誠三郎), “한반도의 통일과 일본의 역할,” 「일본평론」, 제4집(1990 가을), pp. 146~50.

또한 경제적 위협론에 대해서도 일본의 한반도통일 불반대론자들에 따르면, 비록 한국인은 일본을 따라잡고 싶어하고 이러한 욕구가 통일을 이루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지만, 통일 후의 수년간은 북한의 再建에 몰두하여 일본이 확고한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북미나 유럽의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기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한국의 경제는 일본과 비교하여 규모가 작고 낮은 기술수준으로부터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넘기 어려운 장애가 있다고 평가한다.<sup>46)</sup> 또한 일본과 통일한국의 경제적 경쟁은 일본 경제 및 자유시장체제에 있어서 불가결하고 건전한 것으로서, 일본과 한국은 세계무역에 의존하여 경제발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통일 후에도 경제적 동반자가 되어 세계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sup>47)</sup>

이러한 한국통일에 대한 불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두개의 분단된 국가를 통제하는 편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지배하는 것 보다 상대적으로 쉽다는 이유에서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의 평화적인 (분단된) 공존상태 유지를 바라고 있으며 급격한 통일과정과 군사적으로 강력한 통일한국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남북한 등거

46) 현재 한국경제의 규모는 일본의 1/14이고 운영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제를 포함시켜도 그 비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47) 오노 마사아키, "일본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란다." 「월간조선」, 1992년 1월호, pp. 382~83.

리외교와 남북한 긴장완화 및 평화공존체제 유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민족에 의한 한반도통일이 역사의 불가피한 대세로 굳어질 경우 통일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하면서 한반도 통일 상황에 적응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sup>48)</sup>

일본은 한국의 통일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통일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째, 민주적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기를 희망한다. 이를 위해 우선 국제원자력기구가 현재 한국의 핵시설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찰 권한을 북한의 핵시설에 대해서도 가짐으로써 한반도의 완전한 非核保障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일본은 통일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통일 과정에서 설립될 수 있는 주변 강대국들에 의한 국제적 안전보장의 틀이 한국의 핵문제에도 적용되기를 바라며, 이 틀이 우선 북한의 핵시설 제거에 적용되기를 바라고 있다.

둘째, 일본은 한국의 통일이 17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한 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안전보장의 틀 속에서 핵

---

48) 일본은 현재 대북 관계개선 협상을 진행시킴으로써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는 북한입장 강화를 통한 남북한 공존체제 유지정책인 동시에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한 양지역에서 대화채널을 확보함으로써 통일 후에도 한국내 정치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이다.

및 생화학 병기의 폐기와 총병력의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한국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양국과 미·일·중·소간의 「2+4」회담 혹은 다른 형식의 다자간 협의체 등 다자간 안보장치가 한반도 및 동북아의 군축문제 및 안보문제를 관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셋째, 일본은 통일한국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통일 이행기에 북한 김일성체제의 붕괴로 야기될 지도 모르는 한반도의 혼란과 전쟁 위험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을 없애서는 안될 중요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민주적 통일한국이 탄생된 이후에도 동북아 안정을 위해 미군이 당분간 주둔, 지역안정자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가상위협에 대한 일본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逆으로 일본의 역할증대에 따른 일본과 한국 및 주변국간의 대립 혹은 그 군사경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sup>49)</sup>

49) Satoh,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 110.

## VIII. 한국의 대응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인 외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바, 이는 미·일간의 협조체제를 통하여 아·태 지역정세를 주도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판단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하면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 1.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은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를 경제적으로 성장한 일본이 미국 및 유럽의 권유와 묵인하에 정치대국화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결과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가 급격한 군사적 영향력 증대 및 지역패권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주변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견제를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정치적 역할증대 및 유엔 등 국제기구하의 군사적 역할증대를 과거사만을 연상하면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이라는 우려를 내세워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은 한·일간의 관계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남북한관계개선과 통일과정에서 증대된 일본의 정치·경제적 능력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정치·경제적 역할증대에 대하여는 한·일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으로 용인하지만 군사적인 역할증대에 대하여는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신축적 입장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의 아태 지역내 역할증대는 일본의 거대한 경제력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한 상황이고 미국의 거시적 전략구상하에 진행되는 것인 까닭에 한국은 일본의 지역내 정치·경제적 역할증대를 선별적으로 용인함으로써 한·일간의 우호선린관계를 유지 확보하는 것을 대일관계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대외전략을 거시적으로 볼 때 미국은 한국보다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이므로 한국의 「미국카드」 활용에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은 미국을 통해 일본에 대한 외압을 가하는 형식의 발상보다는 일본과의 직접대화로 한국의 우려를 일본에 전달하는 형식의 대일 대화 및 협조체제 유지가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미국과의 협의와 한·미·일 3국간 정책협의회를 통해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일본의 군사적 역할증대에 대한 우려의 뜻을 미국 및 일본에 전달하고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교적으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 등 과거

일본의 침략대상국이었던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非군사적이고 인도적인 분야에 국한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유엔기구에서도 일본의 평화유지활동 참여가 유엔의 엄격한 통제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은 통일한국을 상정한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전략구상을 가지고 주변 강대국들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세력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군사전력을 대북한 방위를 염두에 둔 육군위주의 방위력개념으로부터 주변국 전력을 고려한 해 공군위주의 방위개념으로 전환해 나가는 노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 증대 및 군사대국화를 견제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관계를 중심으로 한 안보체제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이와 병행하여 다자간 안보체제를 모색하는 노력도 함께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 등 소지역 차원에서 다자간 안보신뢰구축 방안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으로서 동북아안보협력회의(CSCNEA)를 고려해 볼 수 있는 바, 동북아 관련 4강 및 남북한의 이해가 교차되는 한반도의 신뢰구축 및 군축문제, 동북아 군축문제 그리고 다자간 안보협력문제들을 다루는 협의체 구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1988년에 이미 「동북아평화협의회의」를 제의한

한국으로서는 한반도 군비통제문제와 군축문제를 다루고 이를 확대 발전시켜 동북아의 군축 및 비핵화문제 등을 논의하는 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구상은 주한미군 감축의 가시화, 일본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증대 및 군사력 증강, 중국과 북한의 국내정치 상황의 불확실성,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 격감 등 동북아 지역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그 실현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아·태지역에서 한반도만이 유일하게 유럽방식의 군축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저지 등 대북전제를 위해서도 이 구상에 관심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 구상을 통해 미국은 동북아에서 자신의 역할을 위축시키지 않고 새로운 동북아질서의 구축에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sup>50)</sup>

한편 경제적인 측면의 대응과 관련하여, 현재 동북아지역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과 개방과 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전면적인 개혁을 통한 자본주의 세계경제로의 편입을 추구하고 있는 러시아연방이 각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고도성장을 바탕으로 신흥공업국의 대열에 진입한 한국과 대만이 선진국으로

50) Stefen W. Bosworth, "The United States And Asia," *Foreign Affairs*, vol. 71, no. 1 (Winter 1991/92), pp. 115~18.

발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인하여 동북아국가들은 역내 유일 선진국인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중요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각국은 경제적 상호의존성 제고를 통하여 일본의 국제적 역할증대가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쌍무적인 경제관계의 심화를 통하여 일본이 동북아 경제번영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둘째, 일본에 대한 역내 중진국과 개도국의 경제적 의존심화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내 중진국인 한국과 개도국인 중국간 경제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992년 8월 한·중 국교수립으로 양국간의 교역 및 경제관계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양국관계가 경제적 측면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에 均衡을 부여하는 의미도 있다고 판단된다. 동북아지역 경제협력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은 역내국간 경제관계를 보다 균형적인 상태로 발전시켜 편중된 경제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동북아지역 역내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협력을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본의 압도적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미국의 참여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역내국가들의 경제발전전략이 수출주도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동북아 역내국가간 경제협력기구는 폐쇄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와 관련, 아·태경제협력각료회의(APEC)를 지역내 안보 및 경제문

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협의체로 발전시켜 일본의 역할증대가 역내국가들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2. 일본의 한반도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한국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분쟁위험지역을 제거한다는 단순한 차원을 넘어서 동북아지역의 장기적인 안정을 정착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통일에 수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국제적 안전보장들은 동북아의 신질서 형성의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탈냉전의 국제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한 남북한 관계진전으로 인해 한반도에서 불안정(혹은 급속한 통일) 상태가 유발될 것과 일본의 영향력이 여타 강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對북한 관계개선을 통한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증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본은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였고, 이 때문에 일본이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를 바라는 것이 아닌가 라는 한국인의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도 하였다. 비록 일본이 한국 및 미국의 압력과 핵문제에 대한 일본 자신의 자각에 따라 일·북한 협상속도를 조절하였지만, 일본은 동북아지역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적 지도력을 미국과 공유하기를 바라고 있으므로 한반도에서도 영향력 확대를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

로서 일본은 한반도에 대해 남북한 등거리정책 혹은 分割管理(divide and rule)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의 대남북한 등거리정책에 대비하여야 할 것인 바, 일·북한수교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일본과의 긴밀한 협의와 협력을 통하여 일본의 대북한 접근이 한국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일·북한 수교협상 진행시 한국이 제시한 5개 조건을 최대한 고려해 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와 한·미·일간 정책협의체제를 최대한 활용하여 일·북한 수교협상시 한국의 기본입장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은 일·북한 수교이후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증대 노력이 초래할 정치·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파급효과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일·북한 수교후에 예상되는 일본의 대북한 경제지원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한반도 및 동북아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전적으로 북한의 경제를 재건하는 데에만 사용되도록 일본측에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은 일본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한·미·일간 정책협의를 통하여 일본의 대북한 경제원조가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일본

의 대북한 경제원조의 수준을 남북한 관계진전과 연계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향후 일본이 한반도에서 한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대북한 정책을 추진할 것에 대비하여 한국은 중국 및 러시아연방과 일정 수준의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기존의 한·일 우호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것이지만 한반도문제, 특히 대북한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일본의 과도한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중·러 양국과의 대화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향후 한반도에서 남북한간 신뢰구축 및 군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한반도에 있어서 제고된 입지를 바탕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한국은 한반도 신뢰구축 및 군축논의를 위한 동북아에서의 다자간 안보협약체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이를 통하여 일본의 안보역할 증대 시도를 견제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다각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은 일본과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모색을 중요시하여야 하며 특히 통일과정에서 나타날 많은 경제적 비용 조달에 일본의 기여 또한 상정해야 할 것이다.<sup>51)</sup> 이와 같은 양국간 긴

51) 남북한 경제가 조화되는 데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걸릴 것이다. 통일한국은 몇십만이나 되는 이주자에게 주택과 식량을 공급하고 100만의 제대자를 포함 몇백만의 실업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공장을 근대화하고 사회기반을 향상시킬 필요도 있을 것이며, 북한노동자의 재교육 또한 필요할 것이다.

밀한 협력은 양국의 이익에 기반을 둔 진정한 우호협력관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경제협력을 통해 일본은 자신의 안보에 긴요한 한반도에서의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안보이익을 보장하고 또한 한반도에서 적절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일본 자신에게도 실질적 이익이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통일과정에서의 일본의 대한 경제협력은 과거 식민지시대에 일본이 행한 역사적 과오에 대한 효과적인 보상책이 됨과 동시에 한·일간의 경제마찰을 해소하는 방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관계의 긍정적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sup>52)</sup>

---

52) 김국진, 「동북아 안보평화문제에 관한 다자적 협의체 구성문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pp. 40~44.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가. 일본관련

- 金達中 編. 「韓國과 海路安保」. 서울: 法文社, 1988.
- 大前研一. 「平成維新」.
- 防衛廳 編. 「防衛白書」. 東京: 防衛廳, 1990.
- 船橋洋一. 「日本戰略宣言: シビリアン大國をぬぞして」. 東京: 講談社, 1992.
- 植松忠博. 「日本の選擇」. 東京: 同文館, 1990.
- 鈴木宗男. 「世界が變わる, 日本の變わる」. 東京: 講談社, 1992.
- 五十岡武士. 「對日講和の冷戰: 戰後 日米關係の 形成」. 東京: 東京大學校出版會, 1986.
- 日本貿易振興會. 「ジェットロ白書: 世界と日本の貿易」. 東京: 日本貿易振興會, 1991.
- 日本防衛廳. 「防衛白書 1991」. 東京: 防衛廳, 1991.
- 佐藤和正. 「これか “日本の 防衛隊た”」. 東京: 講談社, 1983.
-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 中曾根康弘, 佐藤誠三郎, 村上泰亮, 西部遭. 「冷戰 以後」. 東京: 文藝春秋社, 1992.

Cohen, Steven D. *Uneasy Partnership: Competition and Conflict in U.S.-Japan Trade Relations*. 山田進一 譯. 「日米 經濟摩擦: 아메리카의主張」. 東京: ティードーエヌ ブリタリカ, 1985.

Carter, Jimmy and Yasuhiro, Nakasone. *Ensuring Alliance in an Unsure World: The U.S.-Japanese Global Partnership in the 1990's*.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September, 1991).

Chan, Steve. *East Asian Dynamism: Growth, Order, and Security in the Pacific Region*. Boulder, Colo.: Westview Press, 1990.

Wilcox, Wayne, Rose, Leo, and Boyd, Gavin. *Asia and International System*. Cambridge, Mass.: Winthrop, 1972.

#### 나. 미국관련

吉炆宇.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 4個國 巡訪結果 分析」. 民族統一研究院, 統一情勢分析 92-01 (1992. 1).

民族統一研究院.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1. 12.

Cheney, Dick. *Report of the Secretary of Defense to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January 1991.

- GAO. U.S. *Business Access to Certain Foreign State-of-the-Art Technology*. Washington, D.C. : GAO/SIAD-91-278, September 1991.
- Hiroshi, Kitamura, Rhyohei, Murata and Hisahiko, Okazaki. *Between Friends: Japanese Diplomats Look at Japan-U.S. Relations*. New York: Weatherhill, 1985.
- Hiroyuki, Kishino. *Managing the Japan-U.S. Alliance in a Rapidly Changing World*.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November 1991.
- Kuttner, Robert. *Managed Trade and Economic Sovereignty*. Washign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1989.
- Reischauer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n 1992: A Quest for New Roles*. Washington, D.C. : Johns Hopkins University, 1992.
- Shintaro, Ishihara. *The Japan That Can Say No*. New York: Simon & Shuster, 1991.
-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forward the 21st Century*. Washign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Trade Net Data Retrieval System*.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 1991.

#### 다. 중국관련

民族統一 研究院.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 I )」. 研究報告書 91-12. 1991.

申泰容 외. 「東아시아 經濟協力 可能性과 韓國의 位相」. 서울 : 산업연구원, 1989.

安鐘石, 楊平燮. 「中國의 經濟實績과 展望(1991/1992)」. 서울 : 對外經濟政策研究院附設 北方地域센터, 조사보고 92-01, 1992.

日本防衛廳. 「防衛白書」, 平成 3年版(1991).

Directorate of Intelligence. *The Chinese Economy in 1990 and 1991 : Uncertain Recovery*. Washington, D. C. : Central Intelligence Agency, 1991.

Drifte, Reinhard. *Japan's Rise to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The Case of Arms Control*. Atlantic Highlands, NJ : The Athlone Press, 1990.

Economic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 China, North Korea*. London : Business International Limited, 1992.

Jacobson, Harold K. and Oksenberg, Michael. *China's Participation in the IMF, the World Bank, and GATT: Toward a Global Economic Order*. Ann Arbor, MI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0.

Japan Tariff Association. *The Summary Report: Trade of Japan*, cited from Laura Newby, *Sino-Japanese Relations: China's Perspective*. London: Routledge, 1988.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1~1992*. London: Brassey's, 1991.

Odom, William E., ed. *Trial after triumph: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dianapolis, IN : Hudson Institute Inc., 1992.

#### 라. 러시아연방관련

Druwe, Ulrich. *Das Ende der Sowjetunion: Krise und Auflösung einer Weltmacht*. Weinheim: Beltz, 1991.

Gorbatschow, Michail. *Perestroika: Die zweite russische Revolution*. München: Droemer Knaur, 1987.

Gromyko, A.A. and Ponomarev, B.N. *Soviet Foreign Policy 1917~1980*, vol. I 1917~1945. Moscow: Progress Publishers, 1981.

Jelzin, Boris. *Die Alternative: Demokratie statt Diktatur*. Frankfurt, M: Goldmann Verlag, 1991.

Rauch, Georg von. *Geschichte der Sowjetunion*.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69.

*Rede von Michail Gorbatschow in Wladiwostok 28 Juli, 1986*.  
Moskau: erlag der Presseagentur Nowosti, 1986.

Robertson, Myles L. C. *Soviet Policy towards Japan: An analysis of trends in the 1970s and 1980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Staar, Richard F. *Foreign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Stanford, California: Hoover Institution Press, 1991.

White, Stephen. *Gorbachev and after*.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 마. 남북한관계관련

김국진. 「동북아 안보평화문제에 관한 다자적 협의체 구성문제」.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김용호. 「북한과 일본의 수교회담분석」.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1991.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서울: 정음사, 1985.

통일원.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0.

石井修. 「冷戦と日米關係」. 東京: ジャペン タイムズ, 1989.

小此木政夫. 「日本と北朝鮮」. 東京: PHP研究所, 1991.

竹村健一. 「日本の悲劇」. 東京: 祥傳社, 1991.

鳥羽欽一郎. 「10年後 韓國と北朝鮮はこう変わる」.

日本外務省 編. 「外交青書」平成 3年版, 第35號.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Shinn, Rob. *Japan's New Imperialism*. London: Macmillan

Press, 1990.

## 2. 논문

### 가. 일본관련

길승흠. “미·일안보의 변화와 일본의 선택.” 대한정책개발  
연구소 세미나 발표 논문 (1990. 10. 30).

安清市. “太平洋地域 協力體制 構想에 대한 主要 當事者  
들의 立場과 利害關係.” 「第5回 合同學術大會 論文  
集」. 서울: 韓國政治學會, 1983.

尹正錫. “大平政權의 權力構造와 日本外交課題 優先順位.”  
「政策研究」(1979. 1).

Ijiri, Hidenori. “東北亞에서의 脫冷戰體制的 등장.” 「統一  
問題研究」, 第2卷 第3號 (1990 가을).

高坂正堯. “90年代 日本의 防衛構想.” *Voice* (September  
1990).

大嶽秀夫. “中曾根政治의 이테 오키어とその國內政治的背  
景.” 「同人誌レウアイサン特輯: 新保守主義의 擡頭」,  
第1號 (1987).

大外宏. “日本의 ODA와 國際政治.” 五十風武士 編. 「日本의  
ODA와 國際秩序」. 東京: 日本國際問題研究所, 1990.

アン・テイ・バク・チェエット. “日本의 對外援助直接投資  
와 아시아諸國의 經濟發展.” 「世界經濟評論」(1992. 6).

伊藤誠. “新世界秩序のなかの国際貢献.” 「世界」(1992. 7).

前田哲南. “軍事費1%構突破の構造.” 「世界」(1985. 1).

———. “日本の軍産複合體.” 「軍縮問題資料」(1991. 10).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高坂正堯. “90年代 日本の 防衛構想.” *Voice* (September 1990).

Akada, Tsuno.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XXXI, no. 4 (April 1991).

Bhagwati, Jagdish. “Jumpstarting GATT.” *Current Views*, vol. 11, no. 3 (1991).

Buzan, Barry. “Japan’s Future: Old History versus New Roles.” *International Affairs*, vol. 64, no. 4 (Autumn 1988).

Crowley, James B. “Intellectuals vs Visionaries of the New Asian Order.” in Morly, James B. *Dilemmas of Growth in Pre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1.

Funabashi, Yoichi. “Japan and the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0, no. 3 (Winter 1991/92).

Gelman, Harry. “Continuity versus Change in Soviet Policy in Asia.”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4, no. 2 (Summer 1985).

Gorden, Bernard K. "Asia—Pacific Rim: Success at a Price." *Foreign Affairs*, vol. 70, no. 1 (Winter 1990/91).

———. "Japan and the Pacific Basin Proposal." *Korea and World Affairs*, vol. 5, no. 2 (Summer 1981).

Inoguchi, Takeshi. "Four Japanese Scenarios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Affairs* (Winter 1988/89).

Kojima, Kiyoshi. "An Organization for Pacific Trade, Aid and Development: A Proposal." A paper published under the Direction of the Australian Committee of the Australia—Japan Economic Relations Research Project (September 1976).

Kosaka, Masataka. "Japan's Nuclear Option." in G. Kemp R., Pfaltzgraff Jr., and Ra'anan, U., ed. *The Superpower in a Multinuclear World*.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74.

Langer, Paul. "Soviet Military Power in Asia." in Zagoria, Donald, ed., *Soviet Policy in East Asi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Mendl, Wolf. "Stuck in a Mould: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Soviet Union." *Millenium*, vol. 18, no. 3 (Winter 1989).

Taira, Koji. "Japan'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Japanese Perspectiv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3 (January 1991).

———. "Japan, an Immient Hegemon?."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vol. 513 (January 1991).

Velde, J. Van de. "Japan's Nuclear Umbrella: U.S. Extended Nuclear Deterrence for Japan."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vol. 7, no. 4 (Winter 1988).

Yasutomo, Dennis T. "Japan's Comprehensive Security Policy." *Asian Survey*, vol. 31, no.4 (April 1991).

———. "Why Aid? : Japan as an 'Aid Great Power'." *Pacific Affairs*, vol. 62, no. 4 (Winter 1989/90).

Zhou, Xiaming. "Japan'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 *Asian Survey*, vol. 321, no. 4 (April 1991)

## 나. 미국관련

김국진. “동북아 安保 平和문제에 관한 多者的 協議體 구성 문제.” 외교안보연구원, 정책연구씨리즈 91-08, 1991. 10.

한승주. “탈냉전시대의 韓·美안보관계.”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1991. 10. 19.

長尾 悟. “日·美摩擦: 日本の 對應.” 「海外事情」(1992. 1).

花井 等. “日·美摩擦: 過去と 90年代の 展望.” 「海外事情」(1992. 1).

Auer, James E. “Defense Burdensharing and the U.S. -Japan Alliance.”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Troubled Partners in a Changing World*. Special Report. Cambridge, MA :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alysis, 1991.

Baker III, James A. “America in Asia :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Bandow, Dong. “Leaving Korea.” *Foreign Policy* (Winter 1989/90).

Brzezinski, Zbigniew. “Selective Global Commitment.” *Foreign Affairs* (Fall 1991).

- Buchanan, Patrick. "America First—and Second, and Third." *The National Interest* (Spring 1990).
- Ford Jr., Carl. Testimony at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ctober 30, 1991).
- . Testimony at the Sub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S Senate (April 1, 1992).
- Bush, George. Speech at the Asia Society. November 12, 1991.
- Gold, Peter L. and Nanto, Dick K. "Japan—U.S. Trade : U.S. Exports of Negotiated Products, 1985—1990." Washington, D.C. : CRS,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1990.
- Hayes, Peter. "American Nuclear Hegemony in Korea."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25, no. 4 (1988).
- Holbrooke, Richard. "Japan and the United States: Ending the Unequal Partnership." *Foreign Affairs* (Winter 1991/92).
-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 *Survival* (January/February 1991).
- Kirkpatrick, Jeane J. "A Normal Country in a Normal Time." *National Interest* (Fall 1990).

- Krauthammer, Charles. "The Unipolar Moment." *Foreign Affairs: America and the World 1990/91* (1991).
- Nelson, Douglas. "Domestic Political Precondition of U. S. Trade Policy: Liberal Structure and Protectionist Dynamics." *Journal of Public Policy* (January/March 1989).
- Nguyen, Trien T., Perroni, Carlo, and Wigle, Randale. "The Value of a Uruguay Round Success." *The World Economy*, vol. 14, no. 4 (December 1991).
- Niksch, Larry. "Defense Cooperation and Burden Sharing with the U.S." in *Japan-U.S. Relations: A Briefing Book*. Washington, D.C.: CRS, Library of Congress, November 1991.
- Solomon, Richard H. "From Cold War to Hot Economies: America and Asian Security in an Era of Geoeconomics." Speech at Pacific Rim Forum (San Diego, California), May 15, 1992.
- Kawakami, Takashi. "America's New Strategy toward Japan." *Policy Paper 78E*.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March 1992.
- The Johns Hopkins Foreign Policy Institute. "The

Future of U.S.—Japan Relations.” *Special Report 69E*.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1991.

\_\_\_\_\_. “Strengthening the Global Partnership.” *Special Report 69E*. Tokyo: International Institute for Global Peace, 1991.

RisCassi, Robert W. Testimony at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S Senate (March 4, 1992).

Wolforen, Karel van. “The Japan Problem Revisited.” *Foreign Affairs* (Fall 1990).

Yoichi, Funabashi. “Japan and the America: Global Partner.” *Foreign Policy* (Spring 1992).

#### 다. 중국관련

金達中. “동북아 해상교통로를 위요한 4강의 해상전략.” 김달중 편. 「한국과 해로안보」. 서울: 법문사, 1988.  
황병무. “신국제질서와 주변열강의 한반도 전략(Ⅱ):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 전망.” 한국전략문제연구소 발표논문. 1992. 5.

石原 享一. “中國の經濟調整政策の終焉.” 「國際問題」, no. 382 (1992年 1 月).

- Cheung, Tai Ming. "Absence of Trus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19, 1992).
- Qian, Qichen. "Adhering Independent Foreign Policy." *Beijing Review* (Dec. 30/Jan. 5, 1992).
- . "Establishing a Just and Equitable New International Order." *Beijing Review* (October 7/13, 1991).
- Hu, Yumin. "UN's Role in a New World Order." *Beijing Review*, vol. 34, no. 23 (June 10/16, 1991).
- Yu, Qing. "Japan's Diplomacy Gives Prominence to Asia." 「人民日報」 (1991. 12. 26) in *FBIS CHI* (January 15, 1992).
- Baker, James A.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Winter 1991/1992).
- Cronin, Patrick M. "Multilateral Security Approaches Toward Asia." *Strategic Review* (Spring 1992).
- Niu, Genying. "An Economy Regulated by a Combination of Plans and Market Force." *Beijing Review* (October 7/13, 1991).
- Kim, Samuel S. "Mainland China and a New World Order." *Issues and Studies*, vol. 27, no. 11 (November 1991).

Perkins, Dwight H. "China's Approach to Economic Reform." 경남대 극동 문제연구소, 1992. 3. 26.

Shambaugh, David. "China's security policy in the post-Cold War era." *Survival*, vol. 34, no. 2 (Summer 1992).

Vogel, Ezra F. "The Guangdong-Hong Kong Region."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2. 3. 26.

Liu, Wenyu. "Paving the Way to Send Troops Abroad." *Beijing Review* (May 28, 1988).

Yan, Andrew Y. "Japan's Strategic Role in Nor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in Odom, William E., ed. *Trial after triumph: East Asia after the Cold War*. Indianapolis, Indiana: Hudson Institute Inc., 1992.

杜攻. "對轉換中世界格局的幾點看法." 「國際問題研究」, 第4期, 1991.

萬光. "海灣戰爭對世界格局演變的影響." 「瞭望」, 海外版, 1991. 4. 8.

番同文. "布施的世界新秩序初探." 「國際問題研究」, 第4期, 1991.

史敏. "中國沿岸地域的開發戰略." 「每日經濟新聞」, 1991. 9. 4.

薩本望. “世界各國總合國力競賽加劇.” 「瞭望」, 第4期, 1991.

吳奇南. “目標: 安理會常任理事國 日本的聯合國外交初析.” 「國際展望」, 第4期, 1992.

王林. “對世界格局重大變化的幾點看法.” 「瞭望」, 第50期, 1990.

友吉泰. “日本通過派兵法案說明什麼.” 「文匯報」, 1992. 5. 15.

李楠. “和平與發展面臨挑戰.” 「瞭望」, 第2期, 1992. 1.

李鵬. “九十年代的中國經濟—李鵬總理在世界經濟論壇年會上的講話.” 「人民日報」, 1992. 1. 31.

陳小功. “世界正處在重要的過度時期.” 「世界知識」, 第1期, 1992.

陳一心. “90年代 中日關係發展趨勢展望.” 「國際展望」(北京), 第1期, 1992.

胡繩. “爲了世界的和平發展.” 「世界經濟與政治」, 第10期, 1991. 6.

#### 라. 러시아연방관련

“變貌하는 蘇聯과 日本의 對應: 日·蘇 新時代에 대응하기 위한 外交方針.” 「國際問題」, 第22卷 第3號 (1991. 6).

브로니슬라브 오멜리체프. “軍縮協商의 經驗과 韓半島에  
서의 適用可能性.” 北韓研究所와 延世大學校 社會科  
學研究所 共同主催 韓半島 軍縮 4個國 學術會議 발  
표논문, 1992. 6. 1.

M. 노소브 外 3人. “極東의 安保強化 및 軍事的 緊張緩  
和(上) (下).” 「國際問題」, 第23卷 第2號 (1992. 2).

정한구. “한·소 정상회담과 한·소관계 발전전망.” 「東西  
研究」, 第4卷 (1991).

키무라 아키오. “아시아 安保構想: 스탈린부터 고르바초  
프까지.” 金達中 編 「蘇聯의 亞細亞政策과 韓半島」.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研究論叢 6輯. 서울: 法文社,  
1987.

Baklanov, Pyotr. “A Concept of the Development of  
the Soviet Far East.” *Far Eastern Affairs*, no. 4  
(1991).

Cronin, Patrick M., ed., “Perspectives on Policy and  
Strategy.” *Strategic Review* (Spring 1992).

“Dokumente. Au enpolitische Ausf hrungen Michail  
Gorbatschows in Krasnojarsk.” *Sowjetunion Heute*,  
nr. 10 (Oktober 1988).

Gerald, Mary C. Fitz. “Gorbachev’s Concept of Rea-  
sonable Sufficiency in National Defense.” in

- Hudson, George E., ed. *Soviet National Security Policy under Perestroika*. Boston: Unwin Hyman, 1990.
- Menon, Rajan. "Gorbachev's Japan policy." *Survival*, vol. XXXIII, no. 2 (March/April 1991).
- Ovsyannikov, Vladimir. "USSR—Japan." *New Times* (Moscow), no. 6 (February 6~12, 1990).
- Pitzer, John S. and Baukol, Andrew P. "Recent GNP and Productivity." *Soviet Economy*, vol. 7, no. 1 (January/March 1991)
- Pleshakov, Konstantin. "Our National Interests in the Transitional Period."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November 1991.
- Savin, V. "Forms of Economic Cooperation." *Far Eastern Affairs*, no. 4 (1991).
- "The Vladivostok Initiatives. Two Years On." *International Affairs* (Moscow). August 1988.

#### 마. 남북한관계관련

- 강태훈. "일본의 대북한정책." 「한국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1992 겨울).
- 정규섭. "북한외교정책의 환경요인과 변화과정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1.

한영구. “한국 대일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제2권 제5호 (1990. 5).

허문영. “북한의 대일·미 교섭 현황과 수교전망.” 「통일연구논총」, 창간호 (1992. 6).

小此木政夫. “朝鮮統一問題と 日朝國交渉.” 「國際問題」 (1991. 3).

菊池正人. “‘オリフと’と 核: 日朝交渉は 見つめる アメリカの 眼.” 「現代 ユリア」, 第308號 (1991. 1).

山本剛士. “日朝不正常關係史.” 「世界」, 臨時增刊 (1992. 4).

Fitzpatrick, Mark T. “ユリア 統一を 日本は 何故 歡迎するか.” 「國防」, vol. 40, no. 9 (1992. 9).

Ahn, Byong-joon. “Japanese Policy Toward Korea.” A paper prepared for the Korea-Japan Bilateral Workshop “Korea-Japan Relations in the 21st Century” by The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June 7~9, 1991).

Bosworth, Stefen W. “The United States And Asia.” *Foreign Affairs*, vol. 71, no. 1 (Winter 1991/92).

Bridges, Brian.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Toward Normal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2 (Winter 1991).

- Kakizawa, Koji. "Japan's Position on Suspecte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by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V, no. 1 (Summer 1992).
- Kim, Hong Nack. "Japan's Relations with North Korea." *Current History*, vol. 90, no. 555 (April 1991).
- Koh, Byung Chul. "Is North Korea Changing Its Southward Strateg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2 (Summer 1991).
- Motoi, Tamaki. "Japan's Role in the North Korean Economy." *East Asian Review*, vol. III, no. 4 (Winter 1991).
- Satoh, Yukio. "Reduction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A Japanese View."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I, no. 1 (Summer 1991).
- Scalapino, Robert A. "North Korean Relations with Japan and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Today: Strategic and Domestic Issues*. Berkeley, Cal.:University of California, 1983.
- Shinn, Rob. "North Korean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Past and Future." A paper prepared for a Conference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sponsored by the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Relations,

Seoul, Korea (May 31 June 2, 1992).

Youn, Jungsuk.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 3. 其 他

「内外通信」.

「東亞日報」.

「로동신문」.

「每日經濟新聞」.

「산업경제정보」.

「月刊朝鮮」.

「朝鮮日報」.

「中央日報」.

「한국일보」.

「讀賣新聞」.

「世界週報」.

「ソ聯東歐貿易調査月報」.

「日經新聞」.

「朝日新聞」.

「外交青書」.

「日本經濟新聞」.

「政府開發援助(ODA)白書」.

「政策研究」.

「朝日年鑑」.

「韓日經協」.

*Asian Wall Street Journal.*

*Christian Science Monitor.*

*Daily Report: Central Eurasia.*

*Daily Yomiuri.*

*Far Eastern Economic Review.*

*IZBESTIA.*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oscow News Weekly.*

*Newsweek.*

*PRAVDA.*

*The Korea Herald.*

*The New York Times.*

*Time.*

*U.S. News&World Report.*

*Washington Post.*